

# 2008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영호 · 정은미

# IPUS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4

# 2008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영호 · 정은미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4

## 2008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08. 11. 27

발 행 2008. 11. 27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발행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장

편집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연구실

등 록 119-82-67975 (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4052-4, 874-730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 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가 격 10,000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  
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08 통일의식조사 / 박명규, 김병로, 김병조, 박영호, 정은미  
[지].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p. ; cm. —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 4)

ISBN 978-89-959656-3-4 93330 : ₩10000

통일의식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8003302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4

# 2008 통일외식조사



# 목차

서론	1. 조사목적	3
	2. 조사내용	5
	3. 조사방법	7
제1부 기초분석	I. 통일에 대한 인식	13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4
	2. 통일 가능 시기와 추진 속도	18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22
	4. 통일 후 사회문제개선 기대수준	26
	5. 통일과 민주주의의	29
	6. 소결	33
	II. 북한에 대한 인식	36
	1. 북한의 존재 인식	37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41
	3.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44
	4.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48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55
	6. 소결	63
	III.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66
	1. 남북교류의 통일기여도	67
	2. 통일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	73
	3.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80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86
	5. 소결	93
IV. 새터민에 대한 인식	98	
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99	
2.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101	

	3.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103
	4.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06
	5. 소결	110
	<b>V.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b>	112
	1.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	113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18
	3.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124
	4. 한반도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133
	5.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태도	139
	6.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협조 필요성	142
	7. 소결	145
<b>제2부 심층분석</b>		
	<b>I. 대북정책 평가와 통일인식의 변화</b>	153
	1. 대북사업의 통일기여 수준과 통일인식	154
	2.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통일 인식	161
	3.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과 통일 인식	165
	4. 통일인식의 경제적 접근	167
	5. 소결	170
	<b>II. 대북인식 변화의 시계열 비교분석</b>	173
	1. 서론	173
	2.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의 시계열 추이	174
	3. 전쟁위기의식의 증감 프로세스	182
	4. 대북인식 변화의 배경 요인	186
	5. 소결	191
	<b>III. 민주화 선호집단의 통일의식 분석</b>	194
	1. 머리말	194
	2. 민주화 선호집단의 추출과 기본 특성	196

	3. 민주화 선호 집단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204
	4. 민주화 선호 집단의 북한에 대한 인식	207
	5. 민주화 선호 집단의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211
	6. 소결	218
	<b>IV. 새터민에 대한 인식과 대북·통일 인식의 상호성</b>	<b>220</b>
	1. 대북인식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222
	2.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226
	3. 북한사회의 인지도와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228
	4. 통일 인식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230
	5. 소결	233
	<b>V.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현실주의적 변화</b>	<b>236</b>
	1. '민족주의적' 정서의 변화와 주변국 관계 인식의 차이	236
	2.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과 주변국의 위협 인식 관계	243
	3. 소결	250
<b>결론</b>	1. 변화의 특징과 성격	255
	2. 변화의 요인	257
	3. 현실정책적 함의	261
<b>부록</b>	1. 응답자 특성	267
	2.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268
	3. 설문지	360



# 표목차

[표 1-Ⅲ-1]	대북정책이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68
[표 1-Ⅲ-2]	통일이 되려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항	75
[표 1-Ⅲ-3]	하위집단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교	88
[표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113
[표 1-V-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19
[표 1-V-3]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124
[표 1-V-4]	연령별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128
[표 1-V-5]	교육수준별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130
[표 1-V-6]	정치적 성향별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131
[표 1-V-7]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주변 4국의 예상 대처 방식	133
[표 1-V-8]	연령별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주변 4국의 예상 대처 방식	136
[표 1-V-9]	정치적 성향별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주변 4국의 예상 대처 방식	138
[표 1-V-10]	남북한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태도	140
[표 1-V-11]	연령별 남북한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태도	141
[표 1-V-1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협조 필요성	143
[표 1-V-13]	주변 4국 국가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 필요성	144
[표 2-I-1]	대북사업의 통일기여도와 통일의 필요성	156
[표 2-I-2]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도와 통일추진 속도	160
[표 2-I-3]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통일의 필요성	162
[표 2-I-4]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통일의 추진속도	164
[표 2-I-5]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과 통일의 필요성	166
[표 2-I-6]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 계승과 통일의 추진속도	167

# 2008 통일인식조사

[표 2-I-7]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과 통일의 필요성	168
[표 2-I-8]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과 통일의 추진속도	170
[표 2-III-1]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197
[표 2-III-2]	요인분석 : 설명된 총 분산	198
[표 2-III-3]	성분행렬	198
[표 2-III-4]	민주화 선호 집단의 특성	200
[표 2-III-5]	‘민주화 선호’ 및 ‘정치성향’ 별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202
[표 2-III-6]	정치에 대한 관심	204
[표 2-III-7]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205
[표 2-III-8]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207
[표 2-III-9]	북한에 대한 인식	208
[표 2-III-10]	북한 체제 및 정권에 대한 인식	209
[표 2-III-11]	남북한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	211
[표 2-III-12]	통일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사안별 시급성	212
[표 2-III-13]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14
[표 2-III-14]	대북 정책 현안 관련 찬반의견	215
[표 2-III-15]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217
[표 2-IV-1]	대북인식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223
[표 2-IV-2]	대북인식과 새터민 수용	225
[표 2-IV-3]	대북인식과 새터민 지원정책	226
[표 2-IV-4]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227
[표 2-IV-5]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 지원정책	228
[표 2-IV-6]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 지원정책	230

[표 2-IV-7]	통일의 필요성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231
[표 2-IV-8]	통일의 필요성과 새터민 수용	232
[표 2-V-1]	북·미 간 월드컵 축구시합 시 응원 국가	238
[표 2-V-2]	지역별 북·미 간 월드컵 축구시합 시 응원 국가	240
[표 2-V-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태도	242
[표 2-V-4]	지역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태도	243
[표 2-V-5]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244
[표 2-V-6]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 및 주변국의 위협 인식 관계	248

## 그림목차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15
[그림 1-I-2]	통일의 이유	17
[그림 1-I-3]	통일의 가능 시기	19
[그림 1-I-4]	통일의 추진속도	21
[그림 1-I-5]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도	23
[그림 1-I-6]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도	25
[그림 1-I-7]	통일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수준	28
[그림 1-I-8]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30
[그림 1-I-9]	통일한국의 이념체제	32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39
[그림 1-II-2]	북한의 변화 정도	43
[그림 1-II-3]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45
[그림 1-II-4]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48
[그림 1-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50
[그림 1-II-6]	한반도 전쟁 가능성	55
[그림 1-II-7]	북한사회 인지도	57
[그림 1-III-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80
[그림 1-III-2]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절성	82
[그림 1-III-3]	대북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83
[그림 1-III-4]	대북지원의 효과와 대북지원규모 간의 관계	84
[그림 1-III-5]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	85
[그림 1-III-6]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86
[그림 1-III-7]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89

[그림 1-Ⅲ-8]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90
[그림 1-Ⅲ-9]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	91
[그림 1-Ⅲ-10]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93
[그림 1-Ⅳ-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100
[그림 1-Ⅳ-2]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102
[그림 1-Ⅳ-3]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105
[그림 1-Ⅳ-4]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08
[그림 2-Ⅱ-1]	대북인식의 변화	176
[그림 2-Ⅱ-2]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	178
[그림 2-Ⅱ-3]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83
[그림 2-Ⅱ-4]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세대별 인식	188
[그림 2-Ⅲ-1]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후)	199



2008

통일의식조사

# 서론

---









## 1. 조사목적

2008년은 남북한 모두 건국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남북한 건국은 모두 반쪽짜리 건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여전히 분단 극복과 통일 달성은 남북한에게 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은 모두 매우 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였다. 2000년과 2006년에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공동선언과 10.4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간 왕래인원은 약 43만명으로 분단 이후 총 왕래수의 99.3%를 차지하며, 남북교역의 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르고, 금강산과 개성을 다녀온 일반 관광객 인원은 이미 백만명을 훌쩍 넘었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100여개의 남한기업들이 가동중에 있으며 2008년 8월 현재 3만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관계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지구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사회는 8년만에 보수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시민사회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 또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계승 여부와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10개월 가까이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북미관계는 핵신고 검증문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로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있었으며 부시 정부 말기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레임덕 상태의 부시정부는 북미관계를 더 진전시킬 모멘텀(momentum)을 상실했고,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민주

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명칭 변경 시도 해프닝으로 동북아시아에서 3각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미국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정권교체는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이라는 10년의 대북포용정책 시대의 마감과 실용주의를 기조로 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 한반도 차원에서, 미국사회의 정권교체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 속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의 종료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오바마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금융시장에 쓰나미가 되어 실물경제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도산, 대량의 실업자 발생,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의 장기화, 경제성장률 하락,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급격한 소비위축 등 경제침체는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에 결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미국최고기 수입 및 한미FTA체결, 한반도 대운하 건설, 국제중 설립, 쌀직불금 부정지급,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계급갈등 등 심각한 남남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처럼 지난 1년 사이에 급변한 한반도 및 주변국 정세 속에서 통일, 북한, 대북정책, 탈북자(새터민), 한반도 주변국 등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의식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2008통일외식조사는 2007년과 거의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지난 1년 사이에 북한, 남북



관계, 통일 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를 확인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한 사회의 집합적인 의식은 단기간에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어떤 역사적 전환기에는 비교적 단기간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발견된다. 2007년과 2008년은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 전환기였다. 따라서 의식상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통일의식조사가 진행되었다.

2008통일의식조사는 국민의 통일의식 변화에 나타나는 특징과 성격을 설명하고,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현실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도출된 함의가 향후 의제의 개발과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반영되고, 효율적인 통일 논의를 창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조사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년 통일의식조사는 크게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인식,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새터민에 대한 인식,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등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통일에 대한 견해 부문에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 통일가능 시기와 추진속도, 대북정책별 통일의 기여도, 대북사안별 시급성, 통일의 이익이 남한과 개인 자신에게 미치는 이익 정도,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체계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북인식은 남북관계 인식, 남북한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의 신뢰도, 통일 희망 정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 북한 관련 경험 유무, 남북한 간의 이질성, 북핵의 위협의식, 한반도 전쟁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는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 여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대북 정책 결정시 국민의견 반영 정도, 지난 정부의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동의,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 주체 등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해당된다.

네 번째,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와 새터민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은 주변국의 우호 또는 위협의식, 북·미 월드컵 대결시 응원하고 싶은 팀, 주변국과의 관계 규정, 한반도 전쟁 발발시 주변국의 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기대, 통일에 있어 주변국과의 공조 필요성,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간의 우선순위 등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일외식조사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구성하여 설문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변동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통일 및 대북 정책, 대북 인식,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등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인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2000년



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평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평가, 1970년대 이룩한 경제 발전에 대한 평가, 주요 사회 문제들(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반미정서)의 심각성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현실에 대한 평가는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적 성향,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집합행위에 대한 견해, 촛불 시위의 영향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1부에서 다섯 가지 부문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를 중심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2007년 통일의식조사(조사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많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쟁점이 될만한 특정 주제에 대해 각종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심층 분석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함의들을 도출하였다. 심층 분석의 부문별 주제는 대북정책 평가태도에 따른 통일인식의 변화, 민주화 선호집단에 따른 통일의식 분석, 대북인식의 시계열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응답자 특성,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그리고 설문지를 실었다.

### 3. 조사방법

이 통일의식조사는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 동안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전국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16개의 시도(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6개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제주도 9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 분포의 구체적인 특성은 부록을 참조할 것).

조사표본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하고 난 후 각, 지역별로 모집 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 지점 (통/반)을 추출하는 다단계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그리고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작성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해온 타 기관들의 설문들을 사전에 철저히 비교 검토함으로써, 본 통일외식조사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일부 조사항목들을 구성했으며, 기존에 실시한 타기관의 조사들이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룬 중요한 조사항목들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통일, 북한, 대북 정책, 새터민, 주변국 인식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 항목들 외에도 남한의 사회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 구성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면밀하게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를 하였다. 조사 전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원 교육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원 교육은 조사방법과 조사 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 면접을 실시하였고,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를 최소화 하여 실사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2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한국갤럽의 검증원이 전화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



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전산처리 하였다. 그리고 질문항목별로 기본 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연령·교육수준·직업·가구소득·지역·결혼여부·사회계층·정치적 성향 등의 배경변수에 따른 조사결과를 집계하였다. 이 조사보고서 부록에는 지면의 한계 상 성별·연령·교육수준·직업·가구소득·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에 따른 조사 결과만을 실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2.8\%$ 를 넘지 않으며, 보고서에 사용된 교차분석은  $P < 0.001$ 의 유의도가 있는 것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2부 심층 분석에서는 질문항목에 따라 다양한 분석기법 (교차분석, 요인분석, 중분류분석, ANOVA, 회귀분석 등)들을 사용하였다.





2008  
통일의식조사

제1부  
기초분석

---







## I. 통일에 대한 인식

2008년은 남북한 모두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남북한 건국은 모두 반쪽짜리 건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여전히 분단 극복과 통일 달성은 남북한에게 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은 역사상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였다. 화해와 협력,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공유하였고, 과도기적 통일단계로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상호 수용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공동선언과 10.4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간 왕래인원은 약 43만명으로 분단 이후 총 왕래수의 99.3%를 차지하며, 남북교역의 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르며, 금강산과 개성을 다녀온 일반 관광객 인원은 이미 백만명을 훌쩍 넘었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100여개의 남한기업들이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3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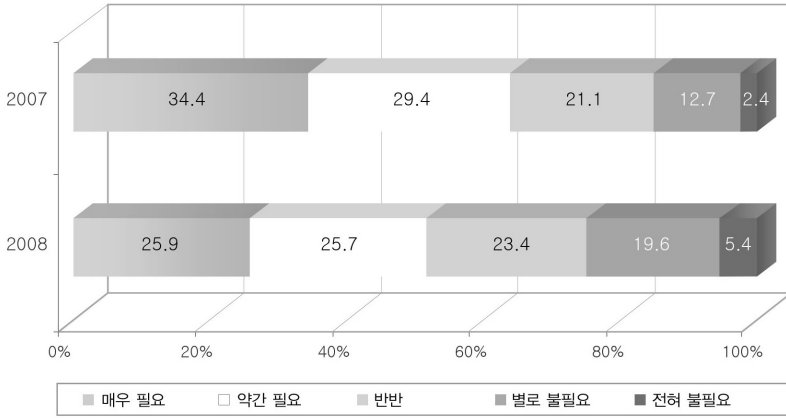
여전히 남북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적인 남북대화는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집권과 함께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도 긴 여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추진되어온 대북포용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각 질문의 결과를 2007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1.6%를 차지해, 반반이라는 응답(23.4%)과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24.9%) 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7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8%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무려 12.2%나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통일의식의 약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감소한데는 2007년 12월 정권 교체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및 북한의 비핵화 지연, 남남갈등의 심화 등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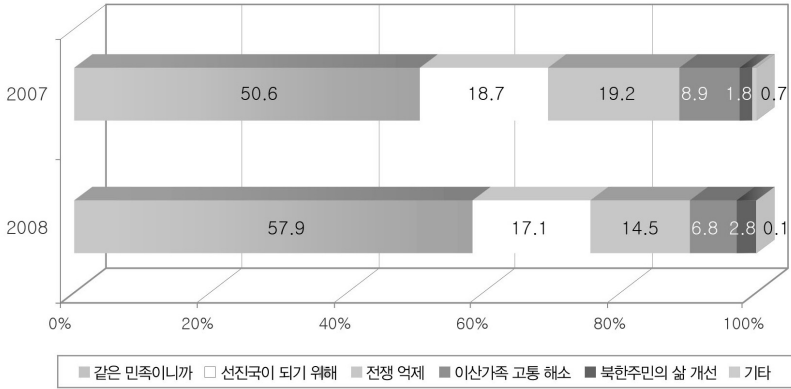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2007년에 비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보수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7년에는 50대 이상의 전체 응답자 중 7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2008년에는 55.6%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50대이상의 응답률은 2007년에 가장 낮았던 20대 연령층의 응답률(53.3%)과 17.7%의 격차가 낮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의 응답률(45.6%)과 10%밖에 격차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통일에 우호적이었던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경직된 대남 태도 및 비핵화의 지연, 남북 관계의 경색 등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변수에서도 2007년과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08년에는 수도권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도권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007년에는 62.1%였던 반면에, 2008년에는 47.2%로 약15%가 떨어졌다. 또한 2007년에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던 호남권(78.2%)과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던 영남권

(59.8%) 간에 18.4%의 격차가 났던 것에 반해, 2008년에는 가장 높은 응답률인 호남권(69.1%)과 가장 낮은 응답률인 수도권(47.2%) 간에 약 22%의 격차가 났다. 이 결과는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수도권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면서 대선의 학습효과가 통일외식조사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2) 통일의 이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이 제일 많이 꼽은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57.9%)였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7.1%),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14.5%),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6.8%) 순서로 나타났다. 2007년 통일외식조사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 까’(50.6%)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일관되지만, 그 다음 순서로는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19.2%) 응답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8.7%) 응답보다 앞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데는 올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강조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I-2] 통일의 이유

연령별로, 젊을수록 통일을 경제적 접근이나 안보적 접근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고,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18.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의 경우 남북한 간의 역사공유가 부재하고, 남북관계를 실용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며, 또한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안보적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2007년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생긴 곳은 수도권과 강원도이다. 수도권은 2007년에 17.3%에서 2008년에 11.3%로 6% 줄어들었고 강원도는 2007년에 38.9%에서 22.5%로 무려 16.4%나 줄어들었다. 2008년에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 북핵 6자회담의 교착상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통일의 환경으로 안보적 측면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환경이 일시적으로 조성되더라도 이미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적 우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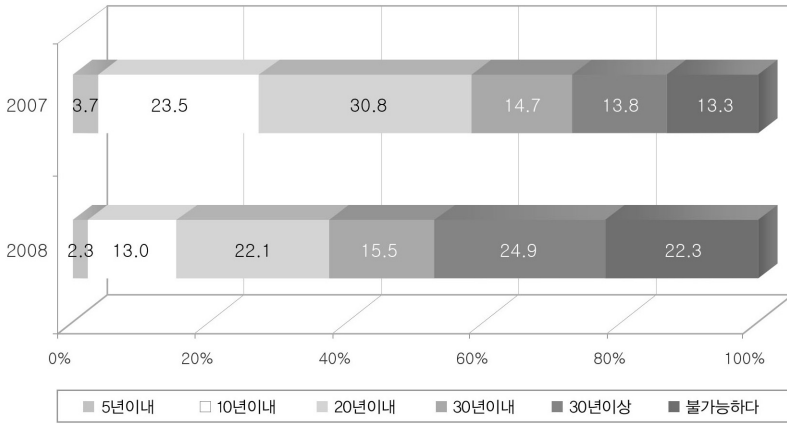
그러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 집단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안보문제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서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한 사람들은 2007년 15.3%였으나, 2008년에는 17.3%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이나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 비중은 모두 줄어들었다.

## 2. 통일 가능 시기와 추진 속도

### 1) 통일의 가능 시기

남북한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우리 국민은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처럼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각각 2.3%, 13.0%로 나타났으며, 반면 ‘20년 이내’ 또는 ‘30년 이내’처럼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22.1%, 15.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24.9%)와 함께 남북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22.3%)가 2007년에 비해 각각 11.1%, 9%(2007년 각각 13.8%, 13.3%)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탈북자 간첩사건, 북핵 불능화 이행의 지연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국제정세가 크게 경색 또는 교착된 데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I-3] 통일의 가능 시기

성별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07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남자는 10%에 불과한 반면에, 2008년에는 20.3%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여자는 2007년에는 16.8%에서 2008년에는 24.3%로 7.5% 증가하였다. 연령층에서는 50대 이상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층은 20대(17.5%)였던 반면에 2008년에는 50대 이상의 응답률(24.8%)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에는 고령에서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이 모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통일과 관련된 다른 질문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일 가능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수도권의 보수

화 경향은 크게 증가했다. 2007년에는 수도권외의 전체 응답자 중 12.4%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2008년에는 무려 25.3%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중 4명 중 1명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으로 통일에 대해 우호적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인 호남권에서도 보수화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호남권의 전체 응답자 중 7.6%만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2008년에는 14.8%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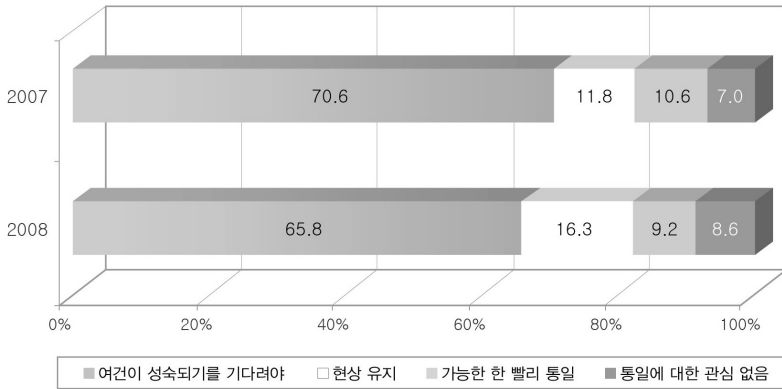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에서는 통일 관련 다른 질문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도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보수화 경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중에서 진보적 성향에서는 2007년 11.2%에서 2008년에는 15.6%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중도적 성향에서는 2007년 13.7%에서 2008년 23.6%, 보수적 성향에서는 2007년 14.7%에서 2008년 25.6%로 크게 증가하였다.

## 2) 통일의 추진속도

남북한의 통일을 추진해가는 속도와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국민 과반수가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대로가 좋다’(16.3%),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9.2%),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8.6%) 순서로 결과가 나타났다. 2007년 통일외식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은 4.8%가 감소(2007년 70.6%)한 반면에, 반대로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4.5%가 증가(2007년 11.8%)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앞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감소와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비율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통일이 되기보다 분단된 상태이지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현재 상태도 좋다는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I-4] 통일의 추진속도

연령층에서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07년에는 통일보다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30대에서는 11.1%, 50대 이상에서는 8.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에, 2008년에는 30대에서 17.5%, 50대 이상에서는 16.6%로 크게 많아졌다. 지역 변수에서는 앞의 질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7년에는 통일보다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수도권 12.7%, 중부권 9.3%이었던 반면에, 2008년에는 수도권 20.3%, 중부권 18.0%로 모두 약 8% 가까이 많아졌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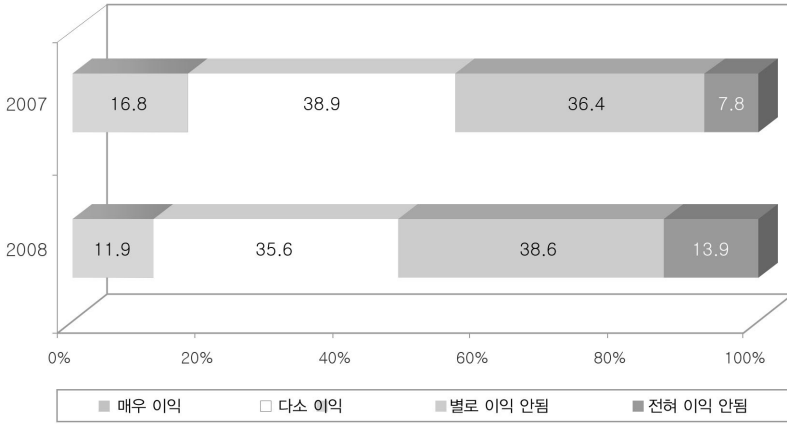
치적 성향에서는 보수진영의 보수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보수적 성향에서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률은 9.5%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6.9%로 7.4%가 높아졌다.

###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 1)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도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를 묻는 질문은 통일이 가져올 이익과 불이익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문화적인 것 등 매우 다면적인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익이란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제한한다.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47.5%인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2.5%로 긍정적인 기대감보다 부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2007년 조사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 55.8%,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44.2%의 결과와 정반대이다. 특히,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부정적 인식태도가 2007년 7.8%에서 2008년 13.9%로 무려 6.1%나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의 가능 시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I-5]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도

여자의 경우보다 남자의 경우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여자의 경우는 2007년 48.9%에서 2008년 43.2%로 5.7%가 줄었지만, 남자의 경우는 2007년 62.5%에서 2008년 51.9%로 무려 10.6%가 줄었다. 또한 소득계층간에 수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는 최하 소득계층과 최상 소득계층 간에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기대감 격차가 43.1%에 달했는데, 2008년에는 양 소득계층 간에 격차가 0.3%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상실되었음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에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통일무용론 증대 경향은 중산층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월소득 300~399만원 계층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2007년 41.8%에서 2008년 53.8%로 12%가 늘었고,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도 2007년 32.5%에서 2008년 51.6%로 무려

19.1%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들어 고유가, 고환율, 미국의 경제위기 등 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중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경제 불안감이 증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59.2%에서 2008년 45.6%로 무려 13.6%나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지역인 호남권에서도 2007년에 63.9%에서 2008년 53.2%로 10.7%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대선 전후에 집권당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무용론이 크게 강조되면서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성향별로는 통일 무용론 응답비율이 중도와 보수 진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진보적 성향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모두 매우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지만, 중도적 성향에서는 2007년 46.1%에서 2008년 55.7%로 9.6%가 증가했고, 보수적 성향에서도 2007년 50.2%에서 2008년 61.7%로 무려 11.5%나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보수적 성향의 집단에서 통일 무용론이 매우 넓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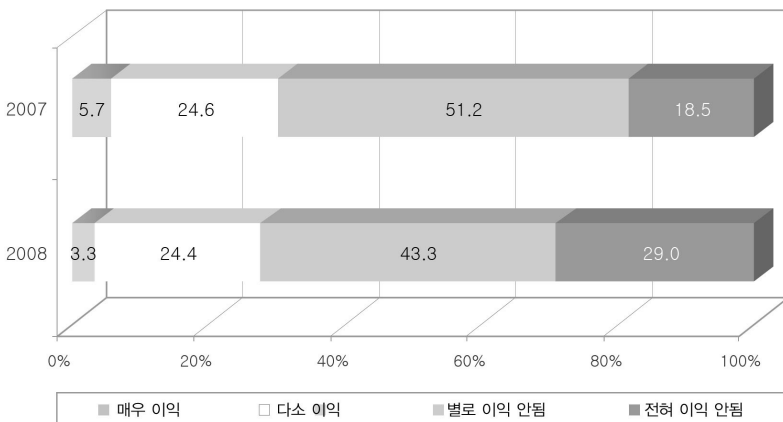
## 2)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도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7%,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2.3%로 부정적인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이 사회전체 즉, 집단과 개인에게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 비록 개인의 이익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의 이익 증대에는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의 필요에 의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비록 통일이 개인의 이해에는 크게 관계가 없을 지라도,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조사에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3%,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9.7%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08년 조사에서 이익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약 3% 감소하고, 반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약 3% 증가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무려 10.5%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부정적 인식은 7.8% 감소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부정적 인식태도의 큰 폭의 증가 또는 통일의 기대감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통일인식의 약화를 초래했다.



[그림 1-I-6]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도

소득계층은, 중산층 계층에서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감이 크게 줄었다. 2007년에는 저소득층일수록 통일에 대한 개인 이익 기대감이 높았고, 고소득일수록 기대감이 낮았다. 특히 월소득 300만원~399만원 소득집단의 경우 2007년에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64.6%로 가장 낮았지만, 2008년에는 74.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들어 남한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중산소득계층의 경제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이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산소득계층의 경제 불안감의 증대가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사회전체 혹은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기대감은 남한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4. 통일 후 사회문제개선 기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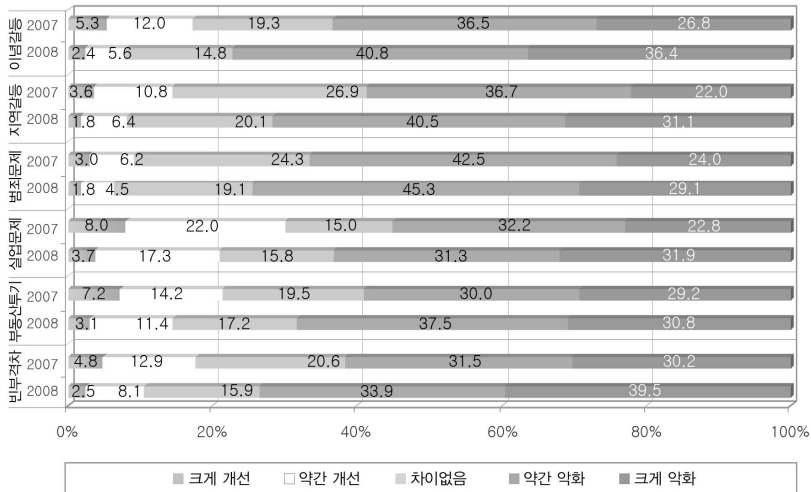
통일 후 한국의 사회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현재 남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얼마나 개선되거나 반대로 악화되리라고 예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질문에 포함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6가지이다. 통일 이전에 사회문제란 일차적으로 남한사회에 한정된 것이라면, 반면에 통일 이후 사회문제란 남북한 모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은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인식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대하고, 기대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줄어들 것이다.





조사결과, 모든 사회문제에서 대체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나 실업문제에 비해 이념갈등, 범죄, 빈부격차에서 더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6가지의 사회문제 중에서 실업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21.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범죄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6.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빈부격차 문제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73.4%)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수준(10.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투기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14.5%)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68.3%)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갈등과 이념갈등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수준이 각각 8.2%, 8.0%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에,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각각 71.6%, 77.2%로 약 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007년 조사 때보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6가지의 사회문제 중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008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이념갈등 문제로 2007년에 17.3%였던 것에 비해 무려 9.3%나 줄어들었다. 가장 적게 줄어든 것은 범죄문제로 2007년에 9.2%로 신뢰오차±2.8에 근접한 2.9% 줄어들었다. 반대로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이념갈등으로 2007년에 63.3%로 2008년에 무려 13.9%나 증가하였다.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은 범죄문제로 2007년에 66.5%로 2008년에는 7.9%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통일 이후 이념갈등 문제가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I -7] 통일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수준

통일무용론과 마찬가지로 통일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중위소득계층 이상에서 통일 이후 사회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빈부격차 문제에서 월소득 300~399만원인 소득계층의 경우, 2007년 61.6%에서 2008년 74.7%로 13.1%가 증가했고,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의 경우도 2007년 65.0%에서 2008년 78.1%로 13.1% 증가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는, 전자의 경우 2007년 59.9%에서 2008년 68%로 8.1%가 증가했고, 후자의 경우 2007년 64.2%에서 2008년 75.5%로 11.3%가 증가했다.

범죄문제에서는 월소득 300~399만원인 소득계층의 경우 2007년 66.3%에서 2008년 75.1%로 8.8% 증가했고,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의 경우는 2007년 70.3%에서 2008년 80.8%로 9.5% 증가했다. 지역갈등 문제에서는 전자의 경우 2007년 54.2%에서 2008년 71%로 무려 16.8%가 증가했으며, 후자의 경우 2007년 63%에서 2008년 77.5%로 1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념갈등 문제에서는 전자의 경우



2007년 58.6%에서 2008년 76.5%로 무려 17.9% 증가했고, 후자의 경우 2007년 67.9%에서 2008년 81.1%로 13.2% 증가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배경변수들에 비해, 소득변수가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도에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들어 국내외의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중위소득계층 이상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의 고조가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5. 통일과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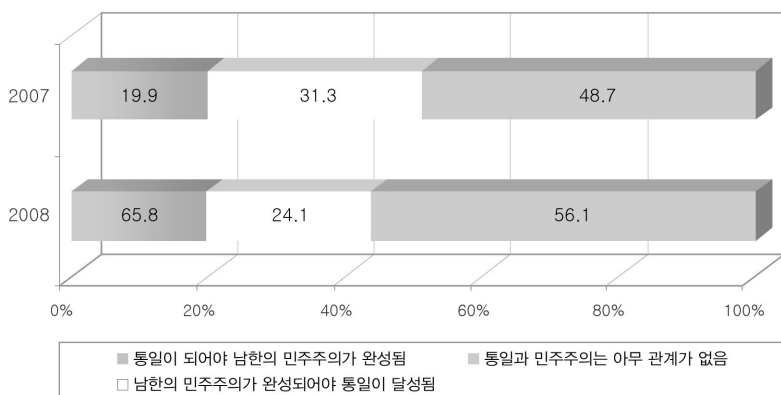
### 1)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 관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과 북 모두에게 통일과 민주주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민족적·시대적 과제이다. 분단은 남북한 양측 모두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을 가로막아 왔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해왔다. 분단과 군사적 대치, 그리고 이념적 대립은 남북한의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존재를 정당화해주고,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도구로 오랫동안 기능해왔다. 반대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민족의 통합뿐만 아니라 참된 민주주의의 성취와도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시민사회는 본격적인 분화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민주화가 성취되었고, 냉전체제의 해체, 문민정부의 등장,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등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크게 변화하여 다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조사에서는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았는데,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4.1%로 뒤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19.7%로 가장 적었다. 이 결과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통일과 민주주의가 무관하다는 응답은 약 8% 증가한 것이고, 반대로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이 통일 달성을 가능케 한다고 보는 응답은 약 8% 감소한 것이다.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 응답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통일에 대한 냉소적 인식은 증대한 반면에 남한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이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리하여 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은 크게 변화한 반면에, 미국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장기화로 민주주의 문제 공론장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한 사회적 변화가 남한의 민주주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를 상호결합된 것으로 보는 인식을 분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I -8]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연령별 변수에서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2007년의 경우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40대(28.9%)였던 반면에, 2008년에는 50대 이상(15.9%)이 가장 낮았다. 또한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007년의 경우 가장 많았던 연령층은 40대(51.5%)였던 반면에 2008년에는 50대 이상(6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통일과 민주주의의 무관론 입장이 2007년과 비교하여 15.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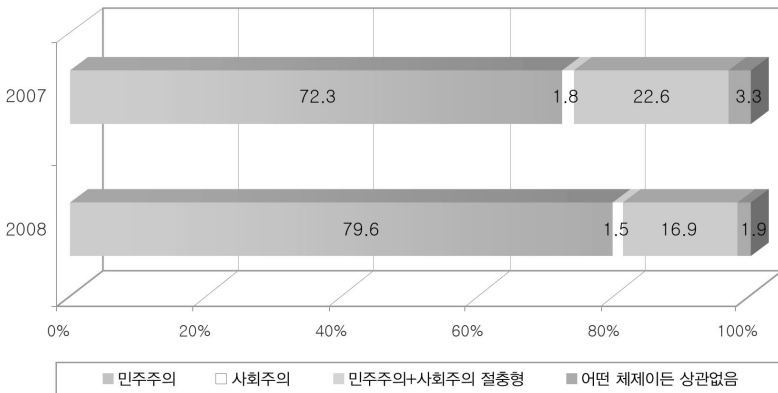
지역적으로는 중부권(충청권)과 영남권의 변화가 눈에 띈다. 통일과 민주주의의 무관론에 대해 중부권의 경우 2007년에는 가장 낮은 응답률(40.7%)을 나타낸 반면에, 2008년에는 58.4%로 무려 17.7%의 격차가 나타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영남권의 경우 역시 2007년에는 47.4%에 불과했던 응답률이, 2008년에는 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정치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통일과 민주주의의 무관론에 대해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 경우 소폭 상승(43.6%→48.6%)한 반면에,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50.7%→57.1%, 49.8%→60.9%)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와 중도 진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 2) 통일한국의 이념체제

통일 한국은 어떤 이념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체제라는 응답이 79.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은 16.9%,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1.9%, 사회주의는 1.5%

순서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는 통일한국의 이념체제가 민주주의 여야 한다는 응답이 72.3%로 2008년에는 79.6% 증가하였고, 반대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은 2007년에 22.6%로, 2008년에는 16.9% 감소하였다.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제회생이 늦어지고 북한의 식량난이나 인권 문제 등이 날로 악화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인식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I-9] 통일한국의 이념체제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 증대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대의 연령층에서는 2007년과 2008년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30대의 경우는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7.2%에서 75.5%로 크게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에서도 각각 74.8%→85.2%, 77.1%→84.9%로 크게 늘어났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과 중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을 선택한 응답이 모두 크게 줄었다. 반면에 호남권은 2007년(18.3%)과 2008년(18.7%)간의 격차가 거의 없으며, 특이하게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2007년(23.7%)에 비해 2008년(31.2%)에 더 늘어났다. 중부권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한 결과인지 좀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이한 경향은 정치적 성향에서도 발견된다. 통일한국의 이념체계로서 절충형을 선택한 응답률이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에서는 2007년과 2008년간의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은(24.1%→21.8%, 20.2%→19.1%) 반면에, 중도적 성향에서만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 절충형을 선택한 응답률은 2007년 23.2%에서 2008년 13.3%로 약 10% 줄어들었다.

## 6. 소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통일에 대한 인식은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 대북포용정책의 무용론 증가, 강경적인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경색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통일인식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통일인식에 대한 보수화 경향은 특이하게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에, 젊은 층보다는 고연령층에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에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중도적 성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무려 12.2%나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통일의식의 약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감소한데는 2007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및 북한의 비핵화 지연, 남남갈등의 심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통일에 우호적이었던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경직된 대남태도 및 비핵화의 지연, 남북관계의 경색 등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연령층에서는 통일 문제를 경제적이거나 안보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크게 확대되었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30년 이상'이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통일의 기대감이나 통일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태도가 늘어나 전반적으로 통일인식의 악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분단된 상태이지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남북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외적 경제 환경의 악화가 통일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중위계층 이상에서 보수화 경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일무용론과 함께 통일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중위소득계층 이상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위소득계층 이상에서 경제 불안감의 증대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한 경제적 사고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중도적 성향 집단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인 수도권과 중도적 성향의 집단의 많은 유권자들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





---

책에 대한 보수정당의 비판에 학습된 효과가 통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II.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 안에서 이념의 지형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북한을 적이나 위협적 존재로 느끼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김정일 정권을 적대적이거나 위협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그만큼 통일문제나 대북지원정책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반대로 북한과 김정일 정권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통일을 위한 협상이나 대북지원정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북한의 존재나 변화에 대한 관점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햇볕정책’ 혹은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문제도 재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정부 당국간 대립이 격화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남



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다. 이러한 정책과 상황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의식과 태도는 존재할 것이며, 영역별, 사회집단별로도 인식변화의 속도는 다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배경변수별로 검토하고 작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본다.

## 1. 북한의 존재 인식

한국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대상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57.6%로 가장 많았고, 지원대상 21.9%, 경계대상 11.3%, 적대대상 5.3%, 경쟁대상 3.8%로 각각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며,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에서 미미한 변화만 있을 뿐이다.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1.0% 높아졌고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1.3%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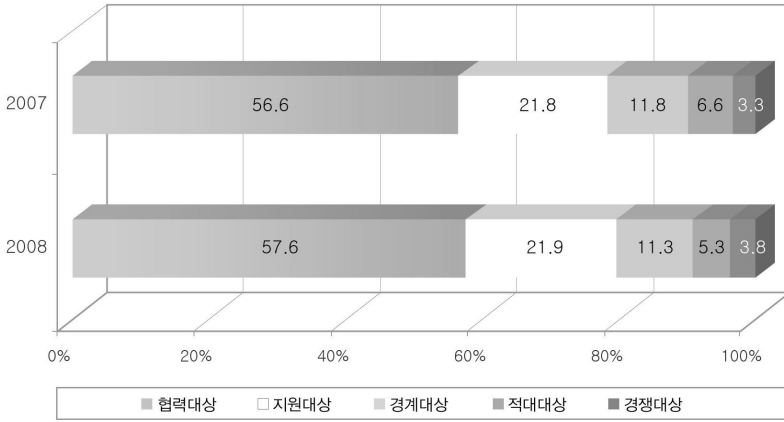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을 긍정적 인식으로 묶고,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을 부정적 인식으로 묶는다면, 응답자의 79.5%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16.6%가 북한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을 ‘경쟁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에 불과하여 한국인은 더 이상 북한을 우리의 경쟁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78.4%에서 79.5%로 1.1% 늘었고, 부정적 인식은 18.4%에서 16.6%로 1.8%가 줄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들의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새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증가 폭이 더 컸을 수도 있었을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30대와 40~50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20대(59.0%)와 30대(60.0%)가 40대(57.6%)나 50대(53.3%)에 비해 높았으며,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에서도 20대와 30대는 각각 5.2%, 5.4%로 40대(2.5%)와 50대이상(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7.3%, 4.6%로 40대(14.1%)나 50대이상(14.3%)에 비해 낮았다. 즉 20~30대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북한을 우리의 협력대상이나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적다.

이러한 인식의 경향은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1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20대와 50대이상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협력대상’이라는 전체응답은 57.6%로 작년과 비슷하지만, 연령층 내부를 들여다보면 20대가 61.6%→59.0%로 감소한 반면, 50대이상은 45.2%→53.3%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원대상’이라는 응답도 마찬가지로 전체응답은 비슷하지만, 20대에서는 16.9%→19.1%로 늘어난 반면, 50대이상에서는 28.3%→26.3%로 줄었다.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20대는 7.3%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독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이상은 8.2%→4.2%로 크게 줄어들었다. 종합해보면 30대~40대의 대북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20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변했고, 50대이상은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지원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은 낮았다. 즉 중졸이하(50.0%)<고졸(57.1%)<대졸이상(60.2%)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자는 중졸이하(26.3%)>고졸(22.0%)>대졸이상(20.6%)의 순이었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도 중졸이하(15.6%)>고졸(13.1%)>대졸이상(8.4%) 순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컸다.

교육수준별 대북인식의 경향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학력간 인식의 차이가 대폭 좁혀진 것이 특징이다.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작년에는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평균이 21.3% 포인트 격차가 있었으나 올해는 10.2% 포인트의 차이에 불과하였으며,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에서도 두 집단간에 작년의 9.9% 포인트 차이에서 올해는 5.7% 포인트로 격차가 줄었다. 중졸이하의 학력층은 작년에 비해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경계

대상,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줄었고,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늘었다. 반면, 대졸이상의 학력층은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줄었고,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은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52.7%로 가장 낮았으며, 수도권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8.7%로 강원지역(14.3%)과 함께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영남권과 수도권의 대북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증거다. 작년과 비교하면, 중부권과 수도권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권은 '협력대상'에서 66.1%→60.8%로 대폭 줄고, '지원대상'에서는 14.4%→24.9%로 크게 늘었다. 반면, 수도권은 '협력대상'에서 55.5%→59.1%로 늘어난 반면, '지원대상'에서는 23.2%→18.7%로 현격히 줄었다. 즉 중부권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커진 반면, 수도권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많이 돌아섰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진보(64.6%)>중도(57.5%)>보수(51.7%)의 순으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보수의 응답이 48.9%→51.7%로 2.8% 포인트 늘어난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은 보수가 29.7%→19.7%로 10.0% 포인트 줄었다. 또 보수적일수록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 혹은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작년과 비교할 때 보수층의 경계대상(11.6%→15.1%) 인식과 경쟁대상(2.4%→6.0%)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 보수층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에서 10.0%나 줄었으며, 진보층은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15.8%→20.6%로 4.8% 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보수층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돌아섰음을 의미하며, 협력대상이나 경쟁대상, 혹은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



음을 말해준다.

작년조사와 비교할 때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사람과 ‘지원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진보-보수의 지형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즉 작년까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적극 추진되는 과정에서 북한을 대등한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진보적 인식으로 여긴 반면, 지원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을 열등한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보수적 인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인도주의 대북지원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된 이념공간에서 정치적 진보층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보수층은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을 단순히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 아닌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도주의 지원문제가 대북정책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함으로써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연 변화했다고 보는가,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과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50.48%, 49.6%로 비슷하게 엇갈렸다. 작년의 조사에서는 ‘변하고 있다’는 응답(68.8%)이 ‘변하지 않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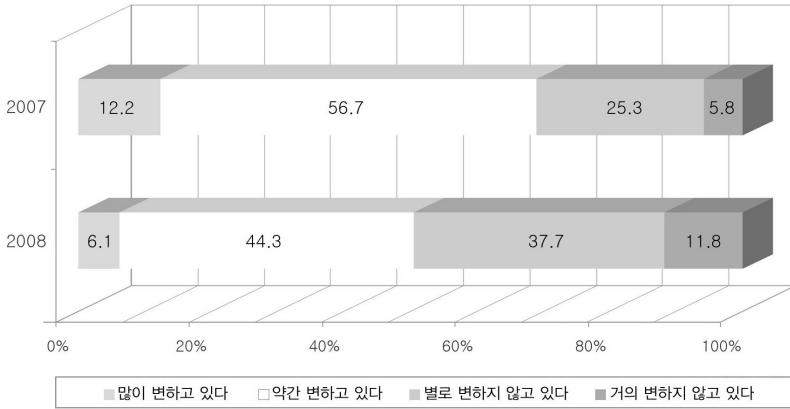
다’는 응답(31.2%) 보다 2배나 많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18.4% 포인트 줄어든 반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18.4% 포인트나 늘어났다. 즉 북한이 최근 들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배경에는 20~40대의 연령층이 북한을 변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비판의식이 1년 사이에 크게 늘었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권과 중부권, 제주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반면, 20대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54.8%로, ‘변하고 있다’는 의견(45.2%)보다 9.6% 포인트나 많았다. 40대는 54.8%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다른 연령층(45.2%, 50.4%, 51.3%)에 비해 북한의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20~40대 연령층이 작년에 비해 북한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가진데 비해, 50대이상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40.6%)과 제주지역(37.2%)이 수도권(49.7%)이나 호남권(56.5%), 영남권(53.2%)에 비해 북한의 변화를 더 낮게 인식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호남권에서의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이 81.5%→56.5%로 25.0% 포인트나 크게 감소했고, 중부권과 제주지역에서도 각각 27.2%, 29.7% 포인트씩 감소하여 평균 감소율 18.4%보다 월등히 컸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58.1%)가 중도(47.5%)나 보수(49.0%)보다 북한의 변화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였다. 진보가 중도나 보수보다 북한의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은 작년과 동일하다.





[그림 1-11-2] 북한의 변화 정도

한편, 남북한 사회를 비민주적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선택지의 스케일 1~3을 ‘비민주적’, 4~7을 ‘보통’, 8~10을 ‘민주적’으로 분류했는데, 87.6%가 북한을 ‘비민주적’, 11.8%가 ‘보통’, 0.6%만이 ‘민주적’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남한에 대해서는 39.0%가 ‘민주적’, 56.4%가 ‘보통’, 4.5%는 ‘비민주적’ 사회라고 응답했다. 작년에 비해 북한에 대한 ‘비민주적’ 평가는 82.5%→87.6%로 늘었고, 남한사회에 대해서도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은 2.4%→4.5%로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북한을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20대(80.9%)<30대(86.2%)<40대(90.4%)<50대이상(93.3%)의 순으로 북한을 ‘비민주적’으로 응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을 비민주적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한을 비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대(6.7%)가 40대(2.3%)나 20대(4.0%), 50대이상(5.0%)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에 대한 ‘비민주적’ 응답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높아졌으며, 남한사회를 ‘비민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0대

와 50대이상에서 각각 2.0%→4.0%, 1.1%→5.0%로 높아졌다.

### 3.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 1) 통일을 논의할 상대로서 김정일 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김정일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북인식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응답은 6.6%만이 신뢰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3.4%로 압도적이었다. 북한에 대해 79.5%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비해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가 불신과 부정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라는 일반적 이미지와 정치적 실체로서의 김정일 정권을 국민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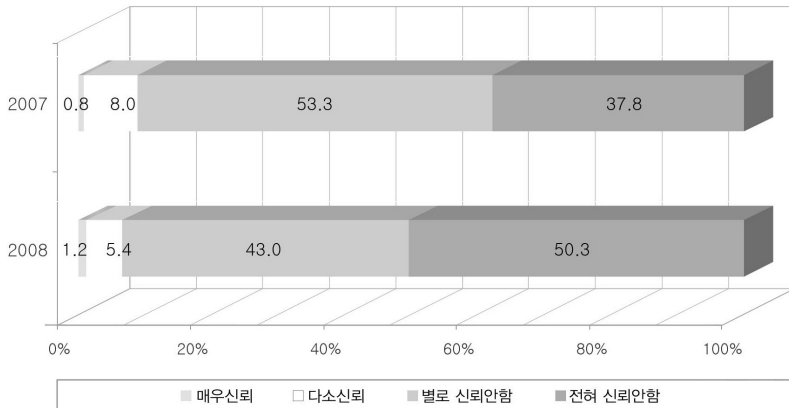
작년과 비교해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 포인트 증가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1년 사이에 더 늘었다. 그 가운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이 37.8%→50.3%로 12.5% 포인트나 늘어나,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1년 사이에 급속도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비판적 의식은 20대와 50대이상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서 빠르게 확대되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신은 ‘보수’일수록 높지만, 지난 1년 사이의 불신을 키운 것은 진보층이 김정일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 인식에서 30대와 40대가 각각 7.5%, 8.8%로 20대(5.0%)나 50대이상(5.0%)에 비해 다소 높은 신뢰를 보였고,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제주지역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12.7%, 15.4%로 수도권(5.0%)이나 중부권(7.5%), 영남권(6.7%), 강원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타 지역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21.0%→12.7%로 8.3% 포인트가 낮아졌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가 각각 7.6%→5.0%, 8.5%→7.5%, 7.1%→6.7%로 낮아졌으며, 강원과 제주에서는 각각 2.8%→6.9%, 7.7%→15.4%로 높아졌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10.5%)>중도(5.8%)>보수(4.8%) 순이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89.5%)<중도(94.2%)<보수(95.2%) 순으로,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통일 논의 상대로서 김정일 정권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보수나 중도층은 4.6%→4.8%(보수), 7.2%→5.8%(중도)로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진보층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16.2%→10.5%로 5.7% 포인트나 낮아져 진보적 정치성향의 사람들 사이에 1년 동안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II-3]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 2) 김정일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원한다” 1.2%, “다소 원한다” 8.4%, “별로 원하지 않는다” 42.4%, “전혀 원하지 않는다” 48.0% 등으로 “원한다”와 “원하지 않는다”가 9.6% 대 90.4%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3.4% 포인트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이 작년에 비해 32.2%→48.0%로 15.8% 포인트나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1년 사이에 약간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커졌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과 제주는 각각 19.3%, 28.2%로 수도권(9.4%)이나 중부권(7.5%), 영남권(6.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호남권과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작년과 비교할 때 타지역은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진데 반해, 호남권과 강원, 제주지역에서는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는 인식이 19.3%로 불변(호남권)이거나 8.3%→9.2%(강원), 7.7%→28.2%(제주)로 높아졌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았고, 보수적일수록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진보’는 ‘중도’(8.4%)나 ‘보수’(6.8%)에 비해 2배가량 많은 15.3%나 된다. 반면,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보수’는 93.2%인데 비해, ‘진보’는 84.7%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이 정치



성향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진보’의 의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인식에서 ‘중도’와 ‘보수’가 10.9%→8.4%, 9.5%→6.8%로 각각 2.5%, 2.7% 포인트씩 낮아진 반면, ‘진보’는 20.8%→15.3%로 5.5% 포인트가 낮아졌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진보’의 비관적 인식변화가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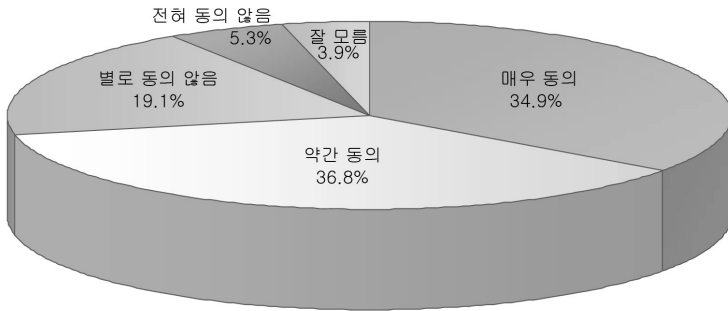
### 3)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이 질문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시도한 질문인데, 김정일 정권이 아닌 ‘북한’에 대해 물어본 것이지만, 초점이 ‘핵무기’라는 군사적 이슈이기 때문에 보편적 북한인식이 아닌 정권과 체제의 문제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아닌 정치적 문제, 정권과 체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71.7%로 ‘포기할 것’(24.4%)이라는 의견보다 3배나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 34.9%, “다소 동의” 36.8%, “별로 동의 않음” 19.1%, “전혀 동의 않음” 5.3%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30대가 75.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71.1%)가 그 다음으로 높고, 50대이상과 40대는 각각 69.9%, 69.6%로 비슷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76.1%)이 중졸이하(68.0%)나 고졸(68.4%)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높게 피력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핵무기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개발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제주(87.2%)와 중부권(80.0%)이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75.5%), 호남권(70.7%), 강원(68.9%), 수도권(68.0%)의 순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주와 중부권에서 높고 강원과 수도권에서 낮은 것은 다음 절에서 서술하겠지만, 수도권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이 낮은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림 1-II-4]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 4.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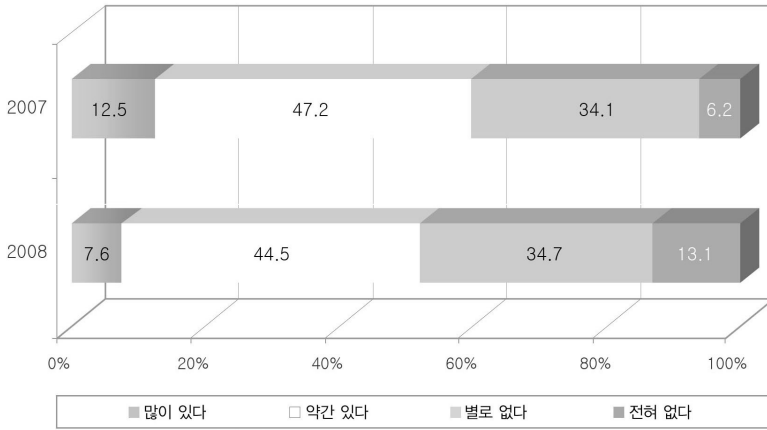
##### 1)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52.2%)는 응답이 “없다”(47.8%)는 응답보다 약간(4.4%)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7.6%, “약간 있다”가 44.5%, “별로 없다” 34.7%, “전혀 없다” 13.1% 등이다. 작년과 비교할 때 북한



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59.7%→52.2%로 낮아졌다. 이는 작년의 경우 그 전해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심각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기감이 상당히 누그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보다는 ‘있다’는 의견이 더 많다. 남북 군사당국 간의 설전과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48.1%)에 비해 여자(56.3%)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여자가 남자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즉, 20대는 64.1%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30대는 51.8%, 40대는 48.9%, 50대이상은 43.2%로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했다.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50대이상의 연령층에서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없다’는 인식변화의 폭이 42.3%→56.8%로 14.5% 포인트나 크게 늘었다. 이러한 연령별 인식차이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북한이 선불리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 판단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 39.5%, 고졸 50.3%, 대졸이상 57.7%로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바꾸어 말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졸이상 학력자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있다'(57.7%)고 보는 응답이 '없다'(42.3%)는 응답보다 많았으나, 중졸이하 학력자는 '없다'(60.5%)는 응답이 '있다'(39.5%)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이러한 교육수준별 인식차이의 양상은 비슷하다. 그러나 대졸이상과 고졸 학력자의 인식변화가 각각 5.6%, 6.9% 포인트에 그친 반면, 중졸이하 학력자의 인식변화는 16.5% 포인트로 그 폭이 매우 컸다.

지역별로는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 지역의 경우 71.6%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수도권은 46.1%로 가장 낮았다. 중부권과 호남권, 제주는 각각 66.2%, 65.1%, 59.0%로 높은 편이고, 영남권은 51.2%로 낮았다. 강원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비해, 중부권과 호남권은 높게 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했고,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었다. 금년에는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영남권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며, 반대로 보수적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보(57.1%)>중도(52.3%)>보수(47.8%)로 나타났고,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진보(42.9%)<중도(47.7%)<보수(52.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의 조사와 완전히 반대다. 작년에는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무력도발 가능성을 ‘없다’고 보았고, 보수적일수록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해 보자면, 보수집단은 작년의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잘못된 싸인을 줌으로써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 올해에는 보수집단이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보’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올해는 남북간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칫 북한군부의 무력도발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도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61.3%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38.6%) 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위협을 느낀다” 15.9%, “다소 위협을 느낀다” 45.5%,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30.2%,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8.4% 등으로 응답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성별로 보면, 여자(66.2%)가 남자(56.5%)에 비해 북한에 대한 위협의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8.8%)>50대이상(61.3%)>40대(60.5%)>30대(55.0%) 순으로 20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30대는 가장 낮게 느끼고 있으며, 40대이상 연령층은 중간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20대의 위협의식은 69.9%→68.8%로 1.1% 포인트 감소되었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8~9% 포인트씩 감소되었다. 20대의 위협의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20대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복무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연령층으로서 핵무기와 같은 군사문제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30대의 위협의식이 가장 낮은 이유는 30대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로 가장 분주한 시기로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같은 정치적, 국제적 이슈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수도권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의 위협의식은 54.1%로 중부권(65.2%),



호남권(66.5%), 영남권(69.5%)에 비해 낮으며, 강원(74.0%)과 제주(74.4%)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다른 지역은 큰 변화가 없으나, 수도권은 68.9%→54.1%로 14.8% 포인트 낮아진 반면, 제주는 61.5%→74.4%로 높아졌다. 핵무기에 대한 수도권의 위협의식이 낮은 것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근접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래식 무기에도 이미 최대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위협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지역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중도(58.8%)<진보(59.6%)<보수(67.2%) 순으로 ‘중도’나 ‘진보’에 비해 ‘보수’는 북핵위협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중도’는 69.9%→58.8%로 11.1% 포인트 떨어진 반면, ‘진보’와 ‘보수’는 63.0%→59.6%, 70.3%→67.2%로 각각 3.4%, 3.1% 포인트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진보와 보수처럼 정치적 이념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북핵위협에 대한 인식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중립적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황변화에 따라 북핵위협에 대한 인식변화가 크게 좌우됨을 발견할 수 있다.

### 3) 한반도 전쟁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없다’는 견해가 더 많았으며, 작년과 비교할 때 ‘없다’는 의견은 더 늘었다. 조사대상자의 56.8%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쟁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이 4.4%, “약간 있다” 38.5%, “별로 없다” 41.2%, “전혀 없다” 15.7%로 응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쟁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53.4→42.9%로 10.5%

포인트 낮아졌고, “없다”는 응답은 46.6%→56.8%로 10.5% 포인트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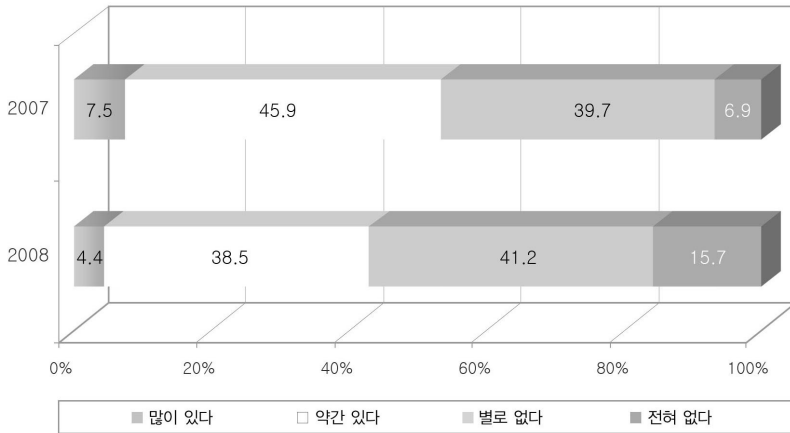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여자(47.6%)가 남자(38.1%)보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1.4%)>30대(42.1%)>40대(40.8%)>50대이상(36.7%) 순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48.8%)>고졸(39.3%)>중졸이하(34.7%)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식차이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38.1%, 42.1%로 중부권(56.7%), 호남권(50.8%), 강원(54.6%), 제주(51.3%)에 비해 낮았다. 수도권과 영남권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별로 없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작년에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 인접해 있는 휴전선 지역에 가까울수록 전쟁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낮게 인식했다. 즉 작년의 조사에서는 지리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데 비해 올해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정치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수도권과 영남권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낸 지역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이념지형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진보(45.6%)>중도(42.1%)>보수(41.1%) 순으로 ‘진보’가 ‘보수’에 비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그러나 작년에는 보수(56.0%)>중도(53.3%)>진보(51.2%)로, 보수가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았었다. 앞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보수는 작년의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로 간주하여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보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여 안보측면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 반면 진보는 작년까지는 남북교류협력이 진행 중이어서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 군사적 마찰을 빚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II-6] 한반도 전쟁 가능성

## 5. 북한 사회에 대한 친숙성

###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대체로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 꽃제비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주체사상과 천리마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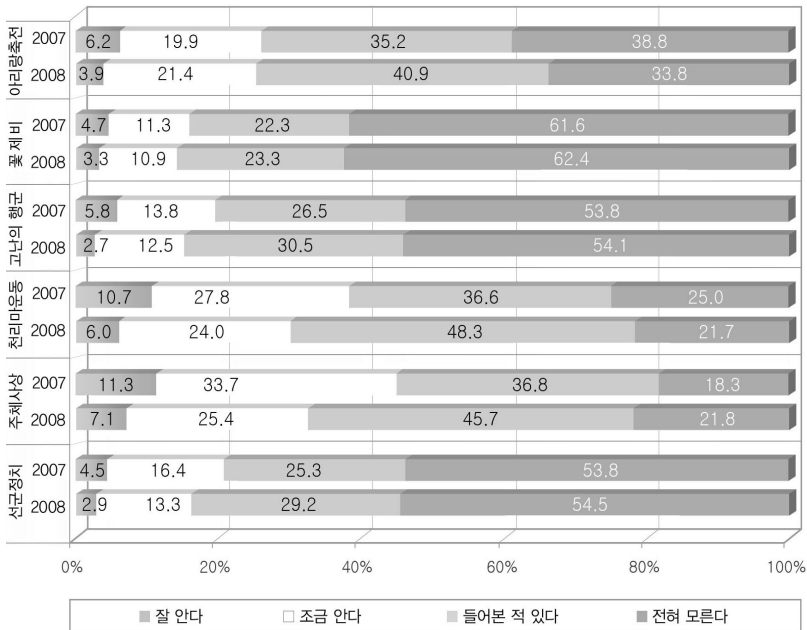
동, 아리랑축전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였다.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개념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천리마운동(78.3%)≍주체사상(78.2%)>아리랑축전(66.2%)>고난의행군(45.7%)≍선군정치(45.4)>꽃제비(37.5%) 등으로 열거된다.

제시된 북한의 용어들 가운데, 천리마운동과 주체사상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전체응답자의 30.0%가 천리마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48.3%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하여 78.3%가 북한의 천리마운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32.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45.7%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 78.2%가 주체사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꽃제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62.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잘 안다”(3.3%)거나 “조금 안다”(10.9%)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꽃제비’라는 용어가 방송을 통해 상당히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른 용어보다도 오히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군정치나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도 각각 54.5%, 54.1%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안다”는 응답은 각각 16.2%, 15.2%에 지나지 않았다.

작년에 비해 아리랑축전과 천리마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61.2%→66.2%, 75.0%→78.3%로 각각 높아졌으나,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도는 81.7%→78.2%로 3.5% 포인트 낮아졌고, 선군정치, 고난의행군, 꽃제비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6.2%→45.4%, 46.2%→45.7%, 38.4%→37.5%로 조금씩 낮아졌다. 특징적인 현상은 작년과 비교할 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늘어난 반면, “잘 안다”거나 “조금 안다” 등 ‘알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6.8%→45.7%로 늘어났지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0%→32.5%로 12.5% 포인트 줄었다.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6.6%→48.3%로 늘어난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5%→30.0%로 8.5% 포인트 감소했다. 즉 작년과 비교할 때 강한 인지도는 줄었고, 대신 약한 인지도는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탈북자 간첩사건 등 안보환경이 달라짐으로써 그동안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북한관련 지식들에 대해 자기검열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으로 활발할 때에는 응답자들이 어렵듯이 아는 내용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안다”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고 경색된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에 관한 사건·개념을 ‘안다’고 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개인적 불이익의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들어본 적 있다’는 정도로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싶다.



[그림 1-11-7]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관련 지식에 있어서 성별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안다’는 의견이 2배 가량 높았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남자는 23.7%인데 비해 여자는 8.6%에 불과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가 38.1%인데 비해 여자는 26.6%에 불과했다. 천리마 운동과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에 대해서도 여자는 각각 25.6%, 62.2%, 68.3%, 38.3%가 “전혀 모른다”고 답한데 비해 남자는 각각 17.9%, 46.0%, 56.7%, 29.3% 정도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20대는 북한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리마운동과 고난의 행군, 꽃제비 등의 인지도에서 40대가 가장 많이 알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20대 순이었다. 천리마운동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40대(85.1%)>30대(84.6%)>50대이상(77.4%)>20대(65.5%)의 순이었고,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도 40대(53.3%)>30대(48.3%)>50대이상(42.1%)>20대(39.4%)였고, 꽃제비에 대해서도 40대(45.1%)>30대(37.6%)>50대이상(36.1%)>20대(31.3%)의 순이었다.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20대보다 50대이상의 연령층의 인지도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20대가 북한을 가장 모르고, 40대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연령층의 북한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40대는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연령층으로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에 대학·청년시절을 보낸 세대다. 따라서 40대는 북한과 관련한 이념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40대가 북한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관련 지식도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선군정치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들은 중졸이하(70.4%)>고졸(56.1%)>대졸이상(48.6%)이었고, 주체사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중졸이하(44.3%)>고졸(22.4%)>대졸이상(15.1%)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천리마운동과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북한관련 지식수준도 높았다.

지역별로는 중부권이 일관되게 타지역에 비해 북한사회 인지도가 높게 나왔다. 선군정치에 대한 인지도가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이 각각 42.3%, 44.8%, 45.1%에 비해 중부권은 58.6%로 14~5% 포인트 가량 높게 나왔다.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인지도는 중부권이 59.6%로 영남권(48.8%)보다 10% 포인트가 높았고, 수도권(40.4%)과 호남권(40.4%)과 비교하면 20% 포인트가 높게 나왔다.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 꽃제비에 대한 인지도도 중부권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다. 중부권의 대북 인지도가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중부권 주민들이 북한관련 정보를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접했기 때문일 텐데, 중부권에서 새터민 접촉경험이 1년 사이에 9.1% 늘어난 것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어떤 경로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나 ‘보수’가 ‘중도’보다 위에 제시한 6개의 북한관련 개념과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와 ‘보수’ 둘 가운데는 ‘진보’가 ‘보수’보다 조금 더 북한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진보>중도≒보수의 양상을 보였는데, 금년에는 진보≒보수>중도로 바뀌었다. 즉 작년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들

이 ‘보수’나 ‘중도’보다 북한에 대해 잘 안다고 대답했었는데, 올해는 보수성향의 응답자의 북한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반대로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북한인지도가 낮아졌다. 선군정치에 대한 인지도에서 이러한 변화의 전형을 볼 수 있는데, ‘중도’는 42.3%→42.7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진보’는 58.4%→47.2%로 낮아진데 비해, ‘보수’는 41.6%→48.8%로 높아졌다.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에서도 ‘보수’의 인지도가 2.3%, 6.6% 포인트씩 높아진 반면, ‘진보’의 인지도는 1.5%, 3.7% 포인트씩 낮아졌다. 이처럼 1년 사이에 ‘보수’의 북한인지도가 높아지고, ‘진보’의 북한관련 인지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남북교류와 인적 왕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북경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관련 경험이 공중파를 통해 전달되는 북한방송을 듣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 금강산관광을 다녀오거나 평양, 개성을 방문하고, 탈북자(새터민) 정착을 돕는 등 북한관련 경험이 늘어났고 방법도 다양화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31.2%였으며, 북한을 방문(3.5%)했거나 탈북자(새터민)를 만나본 경험(9.3%), 혹은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2.4%)에 불과하였다. TV의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방송이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영화, 예술 등 북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탈북자를 접해본 경험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북한관련 접촉 경험은 작년과 비교할 때 약간 줄어들었다. 북한방송·소설을 접해본 경험자는 40.8%→31.2%로 낮아졌고, 북한방문 경험자는 4.5%→3.5%로, 지원단체참여 경험자는 2.8%→2.4%로 각각



줄었다. 객관적인 북한관련 경험자는 분명히 늘었을텐데 1년 사이에 수치가 줄어든 것은 표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거나, 아니면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과장 또는 축소하여 응답했기 때문일 것이다.

평양, 금강산, 개성 등 북한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중산층 이상에서 방북 유경험자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가구소득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로는 작년에는 남자(5.1%)가 여자(3.9%)보다 많았는데, 올해는 여자(3.8%)가 남자(3.1%)보다 조금 많았다. 연령별로는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50대이상(5.6%)과 20대(4.1%)의 젊은 연령층이 많았다. 정치성향은 '보수'(2.3)가 진보(3.8%)와 중도(3.9%)보다 북한지역 방문경험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작년과 동일하다.

탈북자(새터민)을 만나본 사람들은 작년과 유사하게 남자(11.3%)가 여자(7.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10.6%)와 50대이상(10.5%)이 20대(7.9%)와 30대(8.2%)보다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새터민 접촉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새터민 접촉경험은 작년과 올해 크게 달라졌다. 작년에는 중산층보다 하층민과 상류층에서 접촉경험이 많았는데, 올해는 소득이 높을수록 새터민 접촉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새터민 접촉경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탈북자 지원과 관련하여 접촉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적으로는 중부권(14.2%)과 호남권(12.2%)이 수도권(8.1%)이나 영남권(7.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정치적 진보나 보수가 중도보다 새터민 접촉경험이 많았다. 작년과 비교할 때, 수도권은 2.2% 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부권과 강원,

제주는 각각 9.1%, 14.6%, 5.1% 포인트씩 상승하였다.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한 경험은 20대(33.3%)와 30대(35.9%), 40대(31.3%)가 50대이상(23.6%)이 보다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46.3%)이 수도권(26.2%)과 중부권(36.4%), 영남권(33.4%)보다 많았고, 정치성향은 진보(39.8%)>보수(31.2%)>중도(27.0%)의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 남북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어사용과 생활풍습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4.2%가 남북간에 선거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며, 생활수준과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95.4%, 95.1%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남북간에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82.4%였으며, 관혼상제 등 생활풍습이 다르다는 응답은 82.4%였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국민들의 남북동질성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남북간 언어사용과 생활풍습 면에서 남북간에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작년과 비교할 때 7.4%→17.5%, 11.2%→17.6%로 각각 높아져 남북간 문화적 동질의식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선거방식과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도 2.8%→5.7%, 1.7%→4.6%, 3.3%→4.9%로 각각 높아졌다.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남북동질의식이 큰 폭으로 높아진 현상이 특이하다. 언어사용과 생활풍습에서 수도권은 작년과 비교하여 9.5%→27.5%, 14.0%→26.8%로 대폭 상승했으며, 영남권도 5.0%→11.4%, 9.3%→11.6%로 남북동질의식이 확대되었다.



## 6. 소결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인식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북한을 바라보는 이념적 지형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진보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았고 보수가 ‘지원대상’으로 북한을 간주한데 반해, 올해는 보수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진보가 ‘지원대상’으로 인식했다. 지역적으로는 중부권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수도권은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의견에 쏠림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인식을 각각 견인했다. 이는 현 정부들어 인도주의 지원문제가 대북정책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진보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졌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18.4%나 확대되어 ‘변화’와 ‘불변’의 견해가 50 대 50으로 엇갈렸다. 북한을 비민주적이라고 보는 의식도 높아졌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71.7%로,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3배나 많았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93.4%로 높았으며, 특히 작년과 비교할 때 김정일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이 37.8%→50.3%로 1년 사이에 12.5% 포인트나 늘어났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급속도로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의식은 20대와 50대이상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서 빠르게 확대되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신은 보수일수록 높지만 지난 1년 사이의 불신을 키운 것은 진보층이 김정일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낮아졌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있다’(52.2%)와 ‘없다’(47.8%)로 양분화 현상을 보이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7.5% 포인트 높아졌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도 61.3%로 여전히 높지만, 작년에 비해 6.8% 포인트 낮아졌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있다’와 ‘없다’가 42.9% 대 56.8%로 전쟁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 위기의식이 낮아진 것은 50대이상 연령층의 인식변화가 주효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역할이 컸다. 이는 50대 연령층이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북핵실험 이후 안정감을 빠르게 회복하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수도권과 영남권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변화는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작년에는 보수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았는데, 금년에는 진보가 높게 보는 것으로 뒤바뀌었다. 그 이유는 작년의 경우, 보수집단이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잘못된 싸인을 줌으로써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올해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안보문제에 대해 심리적 안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남북교류협력력이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올해는 남북간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칫 북한군부가 무력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남북간에 선거방식, 생활수준, 법률제도, 언어사용, 생활풍습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국민들의 남북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는 95%



의 국민이 이질적일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고, 문화적 환경에는 82%의 국민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남북간 문화적 동질의식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남북동질 의식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 특이하다.

다섯째, 작년과 마찬가지로 20대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부정적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20대는 북한을 적대대상이나 경쟁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거나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다. 그런가 하면 20대는 북한관련 지식이 가장 약했다. 386세대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북인식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상황변화와 친미-반북, 친북-반미 등 특히 미국과의 대쌍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인식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추이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으로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7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이전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북한 체제변화 원인에 대한 시각 차이이다. 북한 체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점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대동소이하다. 그렇지만, 평화변영정책은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비핵 개방 3000은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변화의 주요 동인이었다고 파악한다. 오히려 대북지원과 남북 경제협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과의 6·15공동선언 및 노무현 대통령과의 10·4 정상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을 시도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8년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북한 정권의 한국정부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상태에서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모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입장이 변화한 시점에서 일반국민들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08년 조사결과를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서 알아보 고자 한다.

## 1. 남북교류의 통일기여도

### 1) 남북교류 각 측면별 비교

대부분의 학자들이 통일이 되려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역 으로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남북교류를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인·예술 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등 4개의 측면으 로 구분하고, 국민들이 이들 남북교류 각각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1-Ⅲ-1>은 4개 측면에 대한 2008년 조사결과를 ‘통일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다소 도움)’는 의견이 많은 순서로 배열 한 것이다. 국 민들은 2008년 조사에서 남북교류 각각에 대해 최소 51.8%에서 최대

64.3%까지 통일에 도움(매우 도움+다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든 교류에 대해 과반수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분야의 교류에 대해 35%이상의 국민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특히 2008년 조사결과를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측면의 교류에 대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줄었고,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국민들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중에서도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줄었다. 대통령 선거과정이나 이후의 비핵개발 3000 구상을 통해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언급된 것이,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III-1 대북정책이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2008년 (매우 도움+다소 도움)	2007년 (매우 도움+다소 도움)	변화%
정기적 남북간 회담	64.3	74.7	-10.4
사회문화교류	59.9	69.7	-9.8
남북한 경제 협력	57.3	72.5	-14.7
인도적 지원	51.8	57.4	-5.6

하지만 2007년 조사와 2008년 조사에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는데, 이는 비록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 대북정책 중에서는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정치교류에 이어 경제교류 > 사회·문화교류 > 인도적 지원순이 었지만, 2008년에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정치교류 > 사회·문화교류 > 경제교류 > 인도적 지원 순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각 분야 별로 해당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다소 도움)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로 구분해서 2008년 조사결과에 나타난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인도적 지원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통일에 도움이 된다’ 51.8%,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8.2%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작년에 비해 줄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해졌다.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통일과는 무관한 순수한 ‘인도적 정책’이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와 더불어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정권이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국민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한편, 2008년 조사에서도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배경변수 별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 주는 정도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56.6%)들 중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여자(47.0%)보다 많았다. 교육수준 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중학이하 42.4%, 고등학교 46.9%, 대학이상 59.6%).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

해 호남권(63.0%)에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고, 이어서 수도권(54.0%)이며, 상대적으로 영남권(47.7%)과 충청권(46.1%)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오히려 적다.<sup>1</sup>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65.4%)가 중도(49.0%)나 보수(45.21%)보다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특히, 중도와 보수의 경우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반대로 진보의 경우, 인도적 지원·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지만, 그 비율이 2007년 77.2%에서 2008년 74.3%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진보와 중도 및 보수 사이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평가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에 있어 연령별 차이는 경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50세 이상(46.7%)의 경우 인도적 지원이 통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3) 사회문화 교류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통일에 도움이 된다(59.9%)’,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40.1%)’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모든 하위집단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2007년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2008년 조사결과를 배경변수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의견 차이가 나타났고, 그 경향은 2007년도와 유사하다. 사회문화 교류에 대

<sup>1</sup> 표본 수가 작은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해서 남자(62.8%)가 여자(57.0%)보다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고,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50.6%), 고등학교(56.2%), 대학 이상(66.4)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지역별로는 호남권(73.3%)과 충청권(69.9%)에서 영남권(58.8%)이나 수도권(54.4%)보다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74.3%)가 중도(54.0%)나 보수(57.8%)보다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보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2007년 77.2%에서 2008년 74.3%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 4) 남북한 경제협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 57.3%,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2.7%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크게 줄고,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면 남북한에 경제적 의존성이 생기고 이점이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남북한 경제교류가 남북한 경제를 서로 연계시키는 데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2008년도에도 2007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경제 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61.4%)가 여자(53.2%)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

(51.3%), 고등학교(55.3%), 대학이상(61.0)이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지하는 집단이 많다. 한편 지역별로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호남권(66.7%)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2007년도의 경우는 충청권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적었는데, 2008년의 경우 수도권(54.1%)과 영남권(55.5%)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진보(72.4%)가 중도(53.1%)나 보수(51.7%)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으며, 줄어든 폭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 5) 남북한 정기 회담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에 대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 64.3%,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5.7%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다. 2007년도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다른 분야보다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비록 2008년도 남북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남북회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이 되려면 남북 회담을 통해 남북한 간에 법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하는 듯하다.

2008년 조사에서도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성별, 교육수준별, 정치성향별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68.5%)가 여자(60.1%)보다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68.9%)에서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60.9%)나 고등학교(60.3%) 보다 대학이상(69.5%)에서 남북 정기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76.9%)가 중도(58.5%)나 보수(63.7%)보다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8년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연령별, 지역별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2007년도에는 20대 이하와 30대 이상이 구분되어 30대 이상에서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2008년도의 경우 연령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2007년도의 경우 호남권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2008년에는 호남권(77.4%)과 충청권(76.0%)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높았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2007년도 70.3%에서 2008년 76.0%로 오히려 상승한 예외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sup>2</sup>

## 2. 통일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

### 1) 사안별 비교

남북이 적대적 분단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통일 과정에서 해결 되어야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정

---

<sup>2</sup>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권 국민들이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찾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례화', '북한의 개혁과 개방', '군사적 긴장 해소',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의 인권개선'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표 1-III-2>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2008년도 조사에서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보면 남북 간에 내정간섭 등의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 수준에서는 그와 같은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이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도 넓게 보면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두 가지 모두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제시한 정책들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언론의 노출빈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7년도의 경우 가장 시급한 의제로 꼽혔던 '군사적 긴장 해소' 문제가 2007년도에는 그 비율도 낮아지고 순위도 낮아졌다. 남북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군사적 긴장해소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 북한의 개혁과 개방 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이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III-2 통일이 되려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항

(단위 :%)

	2008년 (매우 도움+다소 도움)	2007년 (매우 도움+다소 도움)	변화%
북한의 인권개선	76.0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72.2	79.9	-7.7
군사적 긴장해소	70.6	79.9	-9.3
북한의 개방과 개혁	68.9	78.3	-9.4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61.7	66.8	-5.1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30.3	31.1	-0.9

2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의 경우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소수였다. 일반 국민 수준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통일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각 사안별로 통일에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시급하다(매우 시급+다소 시급)’와 ‘시급하지 않다(별로+전혀)’로 구분해서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 ‘시급하다’는 의견이 61.7%,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38.2%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크게 많지만 2007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상태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해서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그 시급성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성별로 남자(64.5%)가 여자(58.8%)보다 남북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이상(67.0%)에서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 호남권(82.3%)에서 다른 주요 지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보다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정치성향 면에서는 진보(72.7%)가 중도(58.4%)나 보수(58.4%) 보다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007년도에 비해 200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66.8%에서 61.7%로 5.1% 줄었지만, 대재이상(70.9%→67.0%), 호남권(83.2%→82.3%), 진보(74.3%→72.7%)는 그 변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다.

### 3) 북한의 개방과 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가 68.9%, ‘시급하지 않다’가 31.0%이다. 비록 작년에 비해 10%정도 낮은 수치이나 여전히 북한이 폐쇄나 고립정책을 고수하는 한, 남북이 통일되기는 힘들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개혁 개방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은 성별, 교육수준, 지역별, 정치성향별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71.7%)가 여자(66.1%)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수준 별로는 대재이상(72.9%)이 고등학교(66.5%)나 중학이하(63.8%)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3.4%)에서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수도권(57.2%)에서는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07년도에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77.8%였는데, 2008년에는 20%이상이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매우 많았는데, 2008년도에는 진보를 제외한 중도, 보수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줄었다(진보 80.2%→78.1%, 중도 78.2%→64.9%, 보수 76.1%→68.2%). 특히 중도의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크게 줄었는데, 정치성향으로 중도를 택한 국민들이 여론 동향에 보다 민감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4) 군사적 긴장 해소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가 70.6%, ‘시급하지 않다’가 29.0%이다.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성에 대한 배경변수 별 의견 차이는 교육수준과 지역, 그리고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성별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이상(76.6%)에서 중학이하(69.9%)나 고등학교(65.2%)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3.6%), 충청권(82.3%), 영남권(80.3%)에 비해 수도권(58.5%)에서 다른 지역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다. 수도권 의 경우 2007년도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81.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는데, 2008년 58.5%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1.5%)가 중도(64.5%)나 보수(71.6%)보다 군사적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2007년도와 비교하면 진보(84.8%→81.5%)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도(78.2%→64.7%)와 보수(78.3%→68.2%)는 군사적 긴장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줄어든 결과이다.<sup>3</sup>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년 국면에서 중도

3- ‘매우 시급’과 ‘다소 시급’을 구분하면 진보의 경우도 ‘매우 시급’ 비율이 2007년도 47.9%에서 2008년 37.5%로 줄어들었다,

나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 중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남한에서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가 30.6%, ‘시급하지 않다’가 69.1%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시급하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다. 주한미군이 통일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북한과 남한의 일부 시민이 주장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국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성별로는 의견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50대 이상(26.2%)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한미군 철수의 시급성에 대해 의견이 적었고, 교육수준은 역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34.4%)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충청권(34.9%)에서 타 지역에서 보다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36.3%)가 중도(29.3%)나 보수(28.1%) 보다 남한에서 미군철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의 경우, 2007년에는 46.2%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으나 2008년도에는 36.3%로 그 비율이 10%이상 감소했다.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을 미국 탓으로 보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6)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72.2%,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27.8%이다. 비록 2007년 조사에 비해 시급하



다는 의견이 줄어들었지만, 70%이상이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통일과 관련된 제도적인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분단의 고통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의견차이 격차가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수도권(64.1%)에서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낮았으며,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80.9%)에서 시급하다는 의견이 중도(68.2%)나 보수(71.6%)보다 많았다.

## 7) 북한의 인권개선

북한의 인권개선이 시급한 지에 대한 의견조사는 2007년에는 없었으나, 2008년 조사에서 추가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시급하다’ 76.0%, ‘시급하지 않다’ 23.9%로 응답하였다. 북한의 인권개선이 매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근 들어 남한 사회에서 ‘인권 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sup>4</sup>

북한인권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성이나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이상(79.9%)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치성향 별로는 진보(85.1%)가 중도(73.0%)나 보수(73.4%)보다 북한 인권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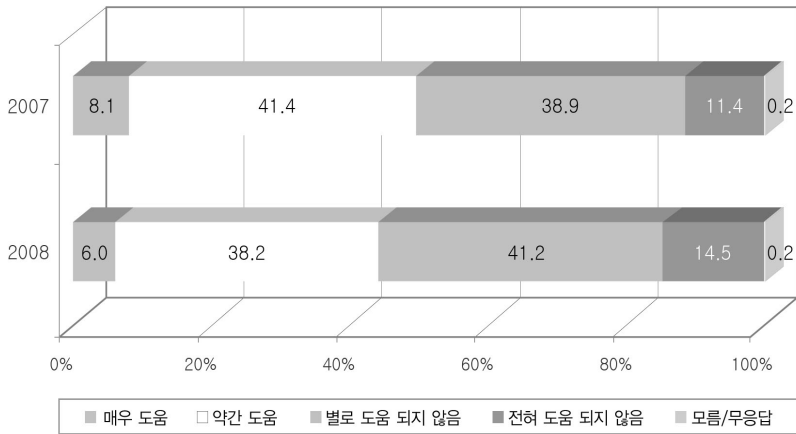
---

<sup>4</sup> 대표적인 것이 군대에서 인권이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이며 최근에는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인권문제가 논의되었다.

### 3.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 1) 대북지원의 효과성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이후 연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쌀이나 비료 등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1-Ⅲ-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2008년 조사에서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6.0%, ‘약간 도움이 된다’ 38.2%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4.1%이다. 반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5%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7%이다.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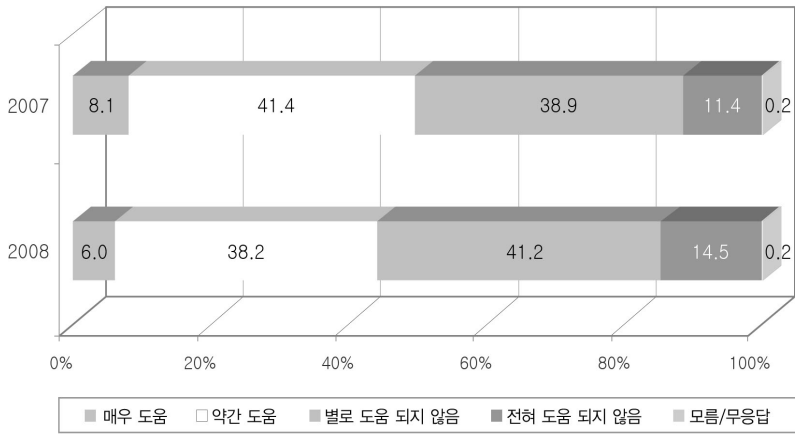


한편,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의견차이가 존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49.4%)가 여자(38.8%) 보다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7.6%) 및 30대(47.4%)에서 40대(41.2%) 및 50대 이상(40.0%)보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51.0%)이 중학이하(42.1%)나 고등학교(38.1%)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호남권(53.2%)에서 다른 지역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53.0%)가 중도(41.2%)나 보수(41.5%)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 2) 대북지원 규모의 적절성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로 다수인 가운데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15.4%, ‘줄여야 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39.3%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이상과 같은 평가는 2007년도 조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1-Ⅲ-2]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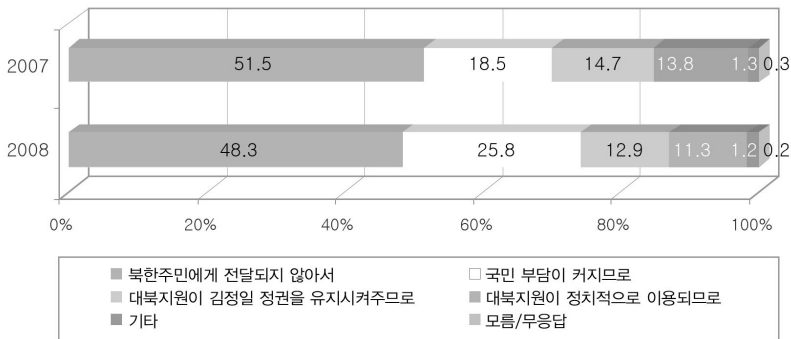
배경변수별로는 전체적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모든 집단에서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위집단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18.1%)가 여자(12.7%)보다 대북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10.6%)에서 대북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었다. 교육수준은 중학이하(10.8%), 고등학교(12.6%), 대학이상(19.3%)의 순으로 대북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호남권(24.1%)에서 대북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24.9%)가 중도(13.1%)나 보수(11.3%)보다 대북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3) 대북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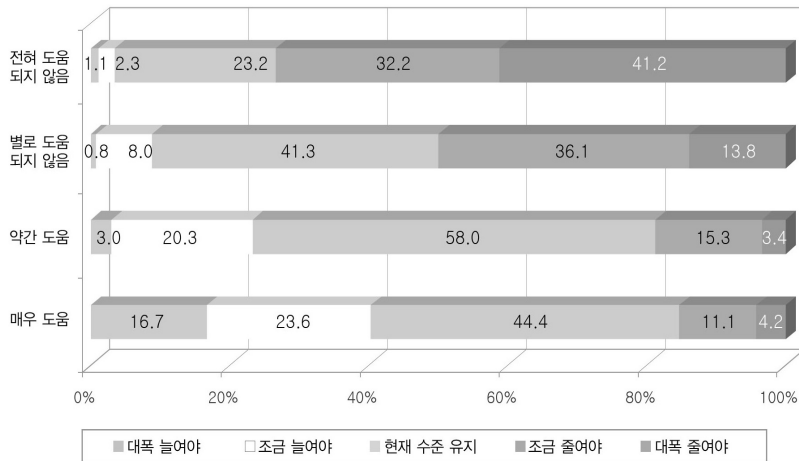
대북지원을 줄여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그렇다면 왜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알아보면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8.3%로 절반정도이다. 그리고 ‘대북지원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25.8%)’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1/4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준다(12.9%)’, ‘대북지원이 국내 정치에 이용된다(11.3%)’로 나뉘었다.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대북지원이 국민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III-3] 대북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대북지원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의견과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의견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국민 중에서는 대북지원을 증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이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경우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40.3%이며, ‘다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늘려야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23.3%이다. 하지만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서는 ‘늘려야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8.8%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사람은 ‘늘려야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3.4%에 불과하다. 결국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림 1-III-4] 대북지원의 효과와 대북지원규모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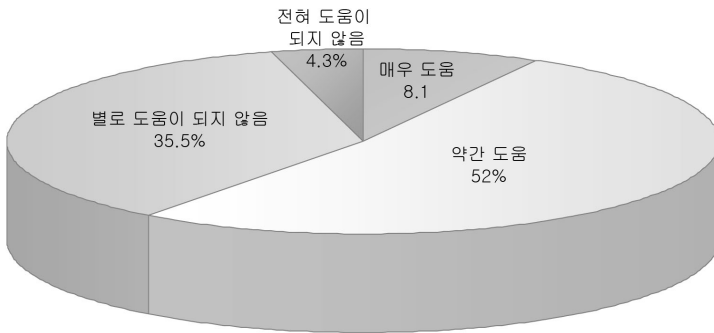


#### 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1990년대 중반이후 남북경제협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순수 경제적 목적과 함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수록 북한이 개혁·개방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을 기대하고 추진한 정책이었다.

이에 2008년도 조사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교류가 북한을 개혁·개방 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1-Ⅲ-5>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8.1%)’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3%)’와 같은 극단적인 응답은 적다. ‘약간 도움이 된다(52.0%)’는 응답이 다수인 가운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5.5%)’ 응답도 상당히 많다.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60.2%)’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39.8)’는 응답보다 다소 많다.



[그림 1-Ⅲ-5]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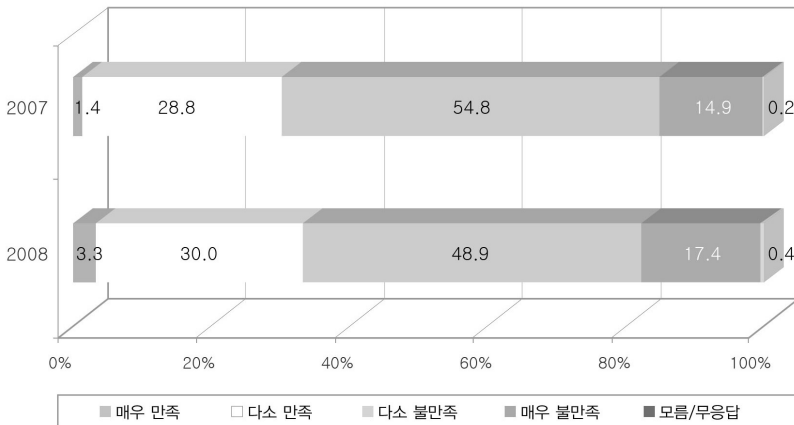
배경변수 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난 부분을 지적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70.1%)이 중학이하(53.0%)나 고등학교(52.3%) 보다 남

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호남권(77.7%)에서, 정치지향별로는 진보(72.1%)가 중도(55.5%)나 보수(58.1%)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 1)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일반 국민들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이 3.3%, ‘다소 만족’이 30.0%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33.2%이다. 반면에 ‘다소 불만족’이 48.9%로 전반 정도이며, ‘매우 불만족’이 17.4%로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66.3%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III-6]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가운데, 하위집단 별로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작은 차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다.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조금 높다.

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지역 및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 때는 호남권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권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 노무현 정부 때는 ‘진보 > 중도 > 보수’ 순으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 > 중도 > 진보’ 순으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다.

표 1-III-3 하위집단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교\*

	2008년		2007년	
	만족 (매우+다소)	불만족 (다소+매우)	만족 (매우+다소)	불만족 (다소+매우)
성별				
남자	28.6	67.3	32.3	67.5
여자	31.4	65.4	28.0	71.9
연령별				
20대이하	28.0	71.6	30.8	68.5
30대	30.3	68.4	34.4	65.6
40대	34.8	64.7	22.3	75.1
50대이상	40.7	59.0	29.0	69.5
교육수준				
중졸이하	36.5	63.5	28.9	71.1
고졸	35.6	63.7	28.1	71.7
대재이상	29.9	69.8	32.4	67.4
지역별				
수도권	29.0	70.2	26.7	72.9
충청권	29.8	70.2	28.8	71.2
호남권	16.1	83.9	43.7	56.4
영남권	49.6	50.4	31.3	68.7
정치성향				
진보	27.6	72.4	40.6	58.7
중도	32.2	67.1	29.2	70.8
보수	40.0	59.8	22.0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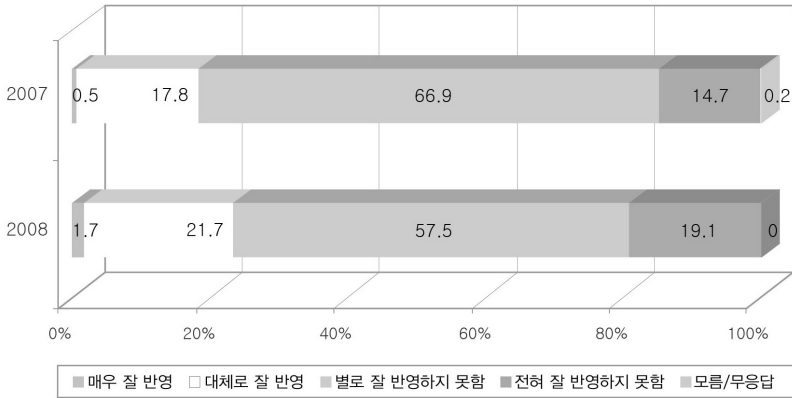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합이 100.0%가 되지 않음.

## 2)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대북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 반영’ 1.7%, ‘대체로 잘 반영’ 21.7%로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는 의견이 23.4%에 불과하다. 반대로 국민의 의견을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7.5%로 매우 많으며,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19.1%를 합하면 76.6%이다. 2007년에 비하면 정부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가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북 정책 결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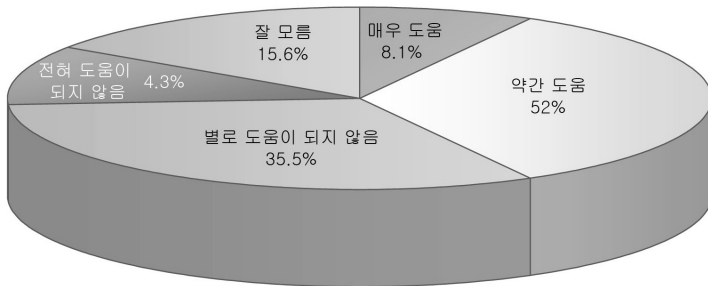


[그림 1-III-7]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그러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정권교체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많은 50대 이상,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집단에서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이 다소 많다. 이러한 경향은 정권교체 이전인 2007년과는 다른 경향이다.

정권교체의 효과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전체적

으로는 전 정부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계승해야한다는 응답이 ‘매우 동의’ 8.1%와 ‘다소 동의’ 33.9%를 합치면 42.0%이다. 반면에 전 정부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계승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1.8%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6%를 합치면 42.4%이다. 남북한 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그림 1-Ⅲ-8]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하지만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구분해보면 선호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다른 지역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승할 필요없다는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에, 호남권은 ‘계승해야한다’ 65.1%, ‘계승할 필요 없다’ 22.1%로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명백하게 많다. 그리고 정치성향 별로 구분해보면, 진보는 ‘계승해야한다’ 57.9%, ‘계승할 필요 없다’ 33.7%로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중도는 ‘계승해야한다’ 38.7%, ‘계승할 필요 없다’ 41.6%로 두 가지 의견이 매우 비슷하고, 보수는 ‘계승해야한다’ 34.1%, ‘계승할 필요 없다’ 51.2%로 계승할 필요없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 결국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대북정책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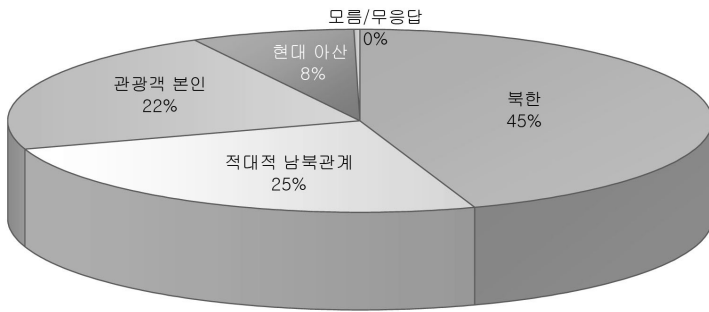




### 3)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2008년 가을까지 남북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동결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금강산에 관광갔던 한국 중년여성이 산책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44.7%가 북한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25.1%는 적대적인 남북관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22.2%는 관광객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강산 광관을 운영하는 현대 아산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7.7%로 소수였다. 배경변수별로 구분해보아도 모든 집단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 1-III-9]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

결국 국민들은 북한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때 까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매우+다소)’이 62.9%였다. 그리고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때 까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배경변수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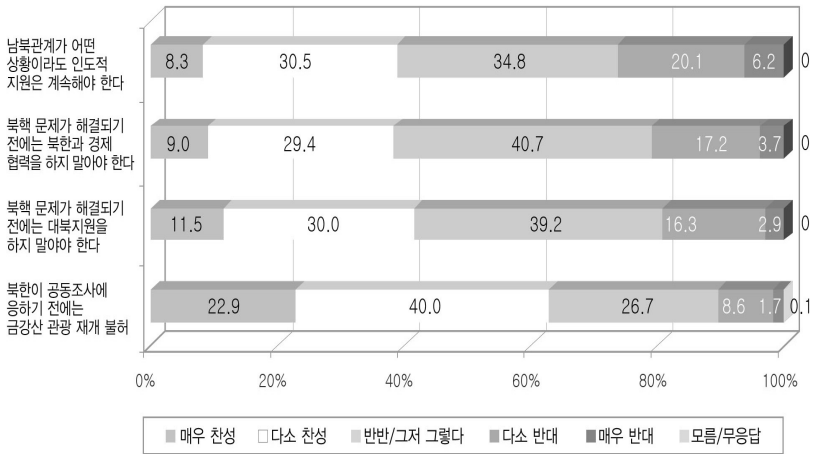
한편,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연계해야한다(매우 찬성+다소 찬성)는 의견이 각각 41.5%, 38.4%로, 연계할 필요가 없다(다소 반대+매우 반대)는 의견 19.1%, 20.2%보다 많았다. 정치성향별로 보수가 진보나 중도보다 북한 핵문제와 대북 지원,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는 경향이 좀 더 강했지만, 진보나 중도의 경우에도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연계할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한다(38.8%)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26.3%) 보다 많다. 그리고 배경변수별로 구분하면, 여성(36.9%)보다 남성(40.8%)이, 대재이상(45.4%)이 중졸이하(33.9%)나 고졸이하(33.8%) 보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남북관계와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권(51.6%)이 정치성향 별로는 진보(49.9%)가 중도(33.7%)나 보수(38.4%) 보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남북관계와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집단에서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남북관계와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연계해야한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점이 중요한 듯하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면,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정책이나 대 남한정책과 조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층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아닌 ‘반반/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상당수임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쟁점을 제외하면 찬성이나 반대 모두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반반/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III-10]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 5. 소결

이 절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선거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효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이에 대신하여 ‘비핵 개방 3000 구상’

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인 ‘남북 상생·공영정책’의 기본 틀이 되었다. 결국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08년 남북관계는 남북 당국 간 공식 회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경색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 호응하지 않았으며, 북핵 불능화 추진과정은 정상적인 궤도를 상실한 채 아직 북한 핵 신고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구나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남측 여성이 산책하는 도중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상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도에 비해 남북관계가 소원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상과 같은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식으로 변하였다. 정기적 남북간 회담,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교류 제반 분야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2007년도에 비해 적게는 5.6%(인도적지원), 많게는 14.7%(남북한 경제협력) 줄어들었다. 비록 모든 측면의 교류에 대해 과반수의 국민들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남북교류=통일에 기여’라는 일반적 관념은 이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통일이 남측의 일반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북측의 호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선의에 바탕을 둔 대북 정책이라도 북한 측이 거부하는 한 남북통일은 매우 어렵다고 일반국민들이 생



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상과 같은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통일이 되려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북한인권개선,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개혁과 개방,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한에서의미군 철수 중에서 일반국민들은 ‘북한의 인권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한체제 및 김정일 정권 통치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할 만한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국민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인 통일보다 통일할 만한 체제나 제도와 통일을 원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교류가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의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은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일반국민들의 평가는 양분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에 대해 늘여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인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존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상의 여러 조사항목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은 높은 집단에서,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배경변수별 선호도가 크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대북정책

에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전체적인 응답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하위집단별로 찬반 형태가 반대방향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채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하위집단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수준은 낮은 층에서,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 중도 > 진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나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합의사항을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정권교체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일반국민들은 남북관계나 통일이 진전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북한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국민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유화정책 보다는 보다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는 듯하지만, ‘반반/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매우 많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체 보다는 대북정책의 ‘결과’를 중시한 것 같다. 대북정책의 기초나 방향을 중시하기보다 정책의 결과로 인해 남북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통일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국민들이 대북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본 잣대는 ‘실용주의’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남북교류와 통일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한다. 북한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변해야한다는 점이다.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성패가 한국



---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북한정권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IV. 새터민에 대한 인식

2007년 12월 현재 통일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은 총 12,254명에 이르며, 2007년 한해 동안 2천5백명이 넘는 새터민이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으며, 2007년 9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발주하여 새터민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84%의 새터민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그러나 정착 새터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시선은 매우 이중적이다. 가난과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서 그들에 대한 동포애적 시선과 그들의 정착을 위해 납부하는 세금부담의 증가와 함께 높은 실업률 시대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자로서 경계의 시선이 그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발

5- 통일부, 『통일백서 2008』, 통일부, 2008, p.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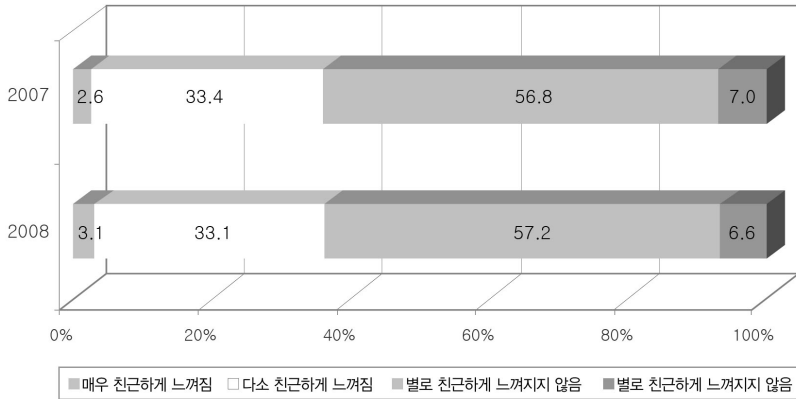
생한 새터민 간첩 사건이나 범죄율의 증가 등과 같은 소식은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 문제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반드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통합·정체성 통합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과 ‘더불어 살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측정해 보고, 새터민 정책은 물론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준비와 문제 진단과 개선점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새터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3.5%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36.2%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1-IV-1>에서 보이듯 2007년 조사와 거의 동일하다.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새터민의 자립·자활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정착 남한주민들과 통합하는 데는 그와 같은 지원정책 프로그램들이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새터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새터민의 진정한 정착과 사회통합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1-IV-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저소득층일수록 새터민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서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47.3%로 상위소득층의 응답률보다 13~16%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새터민이 대체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사회적으로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37.2%)과 영남권(38.5%)이 다른 지역보다 새터민에게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들에는 새터민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터민을 더 자주 접할 수 있어 덜 생소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2007년과 비교해서 호남권의 응답률이 크게 낮아졌다. 2007년에는 호남권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응답률이 48.7%로 가장 높았으나, 2008년에는 32.5%로 크게 낮



아저 중부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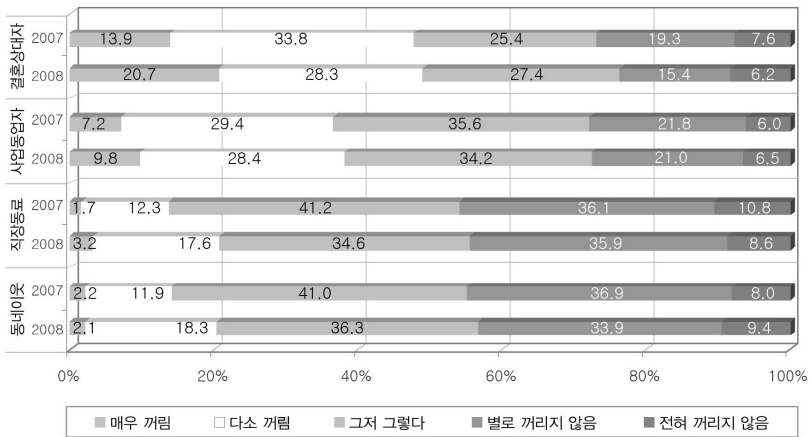
## 2.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새터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새터민이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와 같이 1차적 관계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새터민에 대해 덜 배타적인 데 반해, 사업동업자나 결혼 상대자와 같이 1차적 관계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배타적 인식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이 동네이웃인 경우 매우 또는 다소 꺼려진다는 응답자는 20.4%에 불과하고 43.3%는 별로 또는 전혀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새터민이 직장동료인 경우 매우 또는 다소 꺼려진다는 응답자는 20.9%에 불과한 반면, 44.5%의 응답자는 별로 또는 전혀 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터민이 사업동업자인 경우 매우 또는 다소 꺼려진다는 응답의 비중은 38.2%를 차지해 크게 많아졌고,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은 27.5%로 크게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 매우 또는 다소 꺼려진다는 응답의 비중은 49.0%로 훨씬 더 많아졌고,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은 23.7%에 불과했다.

200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08년에 조사한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졌다. 특히 1차적 관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동네 이웃이나 직장 동료인 경우가 사업동업자나 결혼 상대자와 같이 1차적 관계의 대상인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007년 조사에서 새터민이 동네 이웃인

경우 꺼려진다는 응답은 14.1%로 2008년 조사에서는 6.3%가 증가했고, 직장동료인 경우 역시 꺼려진다는 응답이 14.0%에서 2008년 조사에서는 6.9%가 증가했다. 반면에 새터민이 사업동업자인 경우 꺼려진다는 응답률이 36.6%에서 2008년에는 불과 1.6%만이 증가했고, 결혼상대자인 경우에는 꺼려진다는 응답률이 47.7%에서 2008년에는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변화는 새터민과의 관계에서 배타성은 1차적 관계 영역에서 점차 2차 관계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IV-2]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남자 응답자에 비해 여자 응답자가 훨씬 더 새터민과 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여자와 남자 응답률의 격차는 새터민이 동네 이웃일 경우 7.4%, 직장동료일 경우 4.8%, 사업동업자일 경우 12%, 결혼상대자일 경우 19.7%로 나타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 새터민이 배우자일 경우에 다른 관계에 비해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새터민에게 배타적인 양극



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 경우 2명 중 1명은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으로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다른 직업종사자들에 비해 2배 가까이 새터민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 직업적 보수성이 새터민과 관계를 꺼리는데 영향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전업주부의 경우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에 대해 58.4%가 꺼리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원도의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새터민과 관계를 맺는데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64.1%)를 보여, 일반적으로 결혼문제에서 지역적 배타성이 두드러졌던 제주도는 새터민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소득변수에서는 중위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새터민과의 관계맺기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또한 새터민이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일 경우보다 사업동업자일 경우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경제적 관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새터민이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인 경우에 진보, 중도, 보수 집단 간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으나,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에는 큰 격차를 보였다.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에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응답률은 각각 41.7%, 53.3%로 약 12% 가까이 격차가 나타나, 보수적 성향이 새터민과 결혼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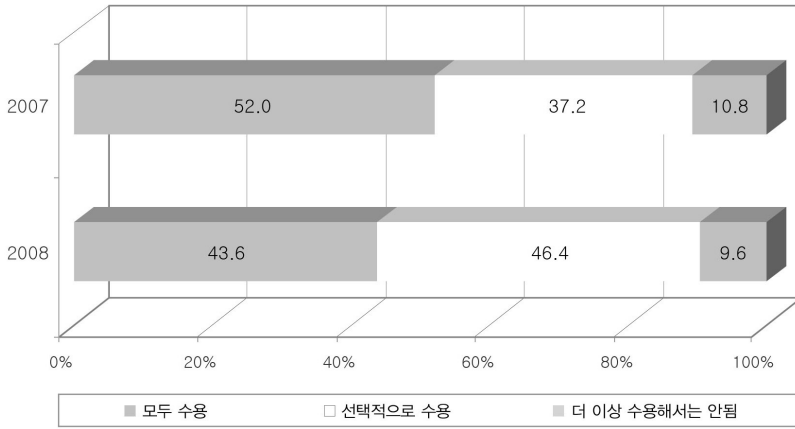
### 3.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새터민 1만명 시대’에 새터민의 입국소식은 더 이상 언론에서조차 주목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한해 2천여 명이 넘는 새터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안에도 새터민이 함께 살고 있다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터민의 입국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사정과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터민의 입국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며 점차 이것은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사회통합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매년 수 천명 규모의 새터민 입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6%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46.4%는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9.6%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200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탈북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07년 조사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적극적 수용 입장은 52.0%,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한적 수용 입장은 37.2%를 차지했다. 그리고 10.8%가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적극적 불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2008년 조사에서는 적극적 수용입장은 무려 8.4%가 감소한 반면에, 반대로 선택적 수용입장(또는 제한적 수용 입장)은 9%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들어 탈북자 범죄율이나 간첩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보도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된 것이 새터민 수용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IV-3]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연령별 변수에서도 새터민 수용에 대해 양극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새터민의 무조건 수용보다는 선택적 수용을 더 선호했다. 또한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새터민을 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선택적 수용에 대한 응답률이 2007년 42.4%에서 2008년 55.3%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교육수준 변수에서는 대졸 이상의 응답자가 다른 교육수준의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의 선택적 수용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수용을 원하는 대졸 이상의 응답자는 2007년 39.9%에서 2008년 51.9%로 크게 늘어나 2명 중 1명이 새터민의 선택적 수용을 원하였다. 그러나 새터민의 수용불가에 대해서는 대졸 이상의 응답자는 다른 교육수준의 응답자에 비해 별로 원하지 않았다.

소득변수에서는 월소득 300~399만원인 중위소득층 경우에 새터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2007년에

33.7%에서 2008년에 47.7%로, 14%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보였다. 호남권의 경우 새터민의 선택적 수용이 2007년 37.8%에서 2008년 66.7%로, 무려 28.9%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새터민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호남권이 비우호적인 태도로 변하게 된 이유가 새터민 정책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새터민 간첩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새터민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이 컸기 때문인지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진보적 성향과 중도적 성향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새터민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진보적 성향에서는 2007년 30.7%에서 2008년 47.4%로 무려 16.7%나 줄었으며, 중도적 성향에서는 2007년 41.4%에서 2008년 50.7%로 9.3%가 줄었다. 반면 보수적 성향에서는 2007년 35.5%에서 2008년 38.1%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새터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의 경우 진보적 성향은 5.3%로 중도적 성향(10.3%)과 보수적 성향(12%)에 비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4.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새터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중적 시선은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새터민 정책에 대한 상반된 의견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을 소수자 혹은 약자로서 보호하고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조직에서는 동등한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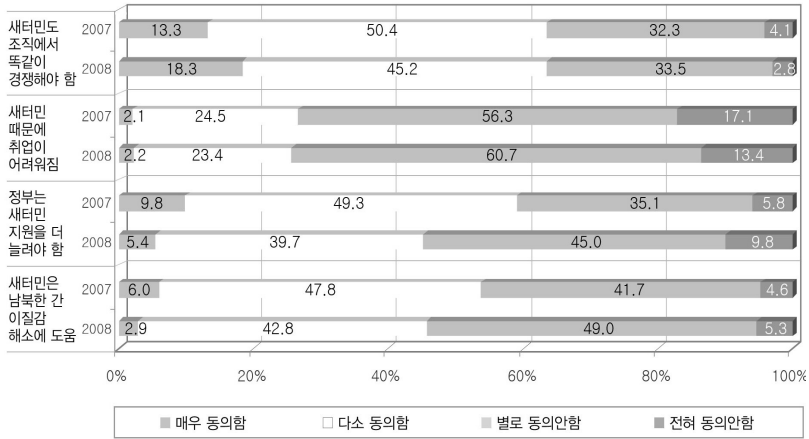
먼저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6%가 매우 또는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54.4%는 별로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는 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54.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5.7%만이 동의한 반면에, 74.1%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3.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반면에 36.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이다. 2007년 조사에서는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이 53.8%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동의하는 응답이 8.2%나 감소하였다. 또 정부가 새터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2007년에 59.2%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14%나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하는 새터민 지원에 따른 세금 부담 및 새터민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 보도가 자주 노출되면서 새터민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새터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은 2007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이 거의 동일했다. 또 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2007년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새터민에 높은 경쟁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IV-4]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여자(40.8%) 보다는 남자(50.4%)가 훨씬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학력일 수록 더 동의비율이 높았으며, 블루칼라 종사자에 비해 화이트칼라 종사자가 더 동의비율이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가장 낮은 동의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에는 동의비율이 2007년 63.9%에서 2008년 45.4%로 무려 18.6%가 줄어들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보수적 성향(39.9%)이 진보적 성향(58.3%)에 비해 동의비율이 크게 낮았다. 특히 보수적 성향은 동의비율이 2007년 52.9%에서 2008년 39.9%로 13%가 줄어들어 진보와 중도적 성향에 비해 큰 폭으로 변화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새터민 지원정책에 대해 우호적이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2명중 1명이 새터민의 지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였지만, 30대 부터는 2명중 1명이 이상이 새터민의 지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 정부가 지역적으로



는 영남권(40.1%)이 새터민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 제주(73.1%)가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은 경우 새터민 지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2007년 62.4%에서 2008년 44.0%로 무려 18.4%가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영남권이 새터민 지원정책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율로 보면 수도권의 보수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경우(55.4%)가 중도적 성향(40.5%)과 보수적 성향(44.5%)에 비해 10~1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문제에 민감한 연령층인 20대의 경우와 경제적 지위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40대의 경우 새터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8.8%→24.7%, 26.9%→22.9%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에, 30대의 경우에는 2007년 23.2%에서 27.0%로 늘어났다. 직업변수에서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다른 직업종사자들의 응답률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새터민조차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40대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해지는 연령층인 40대의 경우 새터민을 조직에서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층보다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새터민을 더 경쟁적으로 인식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각각 81.4%, 94.9%가 새터민도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20~30% 정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의 응답률은 2007년에 비해 20~30% 정도 더 높아

졌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경우에 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2007년 66.3%에서 60.8%로 5.5%가 줄었으며, 반면에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은 200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 5. 소결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0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08년에 오히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새터민에 대한 보수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등 모든 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 채 거리감을 갖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책이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책이 보호와 정착 지원에 대해 치중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고,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새터민 지원정책이나 새터민의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새터민과의 관계맺기에서도 관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서 배타적인 태도가 더 증가하였다. 취업이나 조직생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새터민을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로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지역적으로 새터민에게 우호적이던 호남권과 진보적 성향의 집단에서도 새터민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인 인식이 증가하였다. 1년 사이에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데는 최근에 일어난 새터민 간첩사건과 새터민의 높은 범죄율로 인해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스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었고, 한국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늘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심과 동포애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터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은 우리 국민 100명중 불과 9명 정도만이 새터민을 만나본적이 있다는 것이다(동 조사 질문 20-2항의 결과).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은 수치이다. 매년 새터민의 입국 인원수는 늘어나고 누적되는 새터민의 수도 늘어나는데,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새터민 정책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터민을 만나 볼 경험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이 늘거나 새터민과 관계맺기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터민과 일반국민이 더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V.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북핵 문제가 보여주듯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지역질서의 현상 변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은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일 뿐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나가는 과정이다. 한반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 대한 주변국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이 있다면 통일의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1.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자 한반도문제에 참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이다. 한편, 우리의 헌법 이념에 따른 통일국가의 달성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상대방이다. 한반도 주변4국과 북한 등 5개 나라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에 대해 물어보았다.

표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단위: %)

구분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없다	무응답
2007	53.0	23.8	11.5	10.1	0.9	0.4	0.3
2008	59.9	20.3	9.6	7.7	1.6	0.5	0.3

<표 1-V-1>에서 보듯이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응답자의 59.9%가 미국을 들었는데, 2007년에 비해 약 7%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뚜렷한 현상으로 부각된 ‘반미정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의 전개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격렬한 반대 시위와 ‘반미정서’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한·미 동맹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관련하여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 국민은 미국 다음으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순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순서는 2007년과 변함

이 없다. 그러나 북한, 일본, 중국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은 2007년에 비해 각각 3.5%, 1.9%, 2.4% 낮아졌다. 러시아를 가깝게 느낀 응답자는 약간 늘었으나 여전히 1.6%로 매우 적었다.

성별에 따라 주변국에 대해 느낀 친밀감의 비중은 2007년도와 2008년도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북한의 경우 2007년에는 북한을 더 가깝게 느낀 남자의 비중이 여자에 비해 3% 이상 높았던데 반해, 2008년에는 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0.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으나 그 비중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의 한국인은 다른 연령대보다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비율이 2007년 68.1%, 2008년 75.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2007년에는 40대, 30대, 20대의 순이었으나, 2008년에는 20대(19세 포함), 40대, 30대의 순으로 변했다. 2008년도에 전 연령대에서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늘어났으나, 2007년에 비해 20대에서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10.4%)한 점이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친근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에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 응답자의 상대적 비율은 40대, 3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을 제외하곤 모두 20%대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30대와 40대가 26~7% 안팎으로 2007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대의 경우는 2007년 21.5%에서 2008년 13.8%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비율은 50대 이상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 응답자의 비율인 13.0%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20대 및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30대 및 40대의 연령층 간에는 북한에 대한 친근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진 가운데서도,





20대에서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2007년과 2008년에 모두 가장 높았으며, 중국의 경우는 두 해에 걸쳐 모두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의 비율이 2007년과 2008에 모두 가장 낮았다.

5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의 1, 2위로 꼽고 있으나, 20대 및 30대와 40대 이상의 연령층 간에는 다소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모두 40대 이상에서 일본과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 나라로 든 응답자의 비율은 최소 7.3%, 최대 8.9%로 한 자리에 머물렀다. 이 연령층에서는 미국과 북한 이외의 다른 주변국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007년에 20대와 30대에서 일본과 중국을 선호한 비율은 모두 두 자리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일본: 19.5%, 13.1%, 중국: 10.6%, 12.4%). 2008년에는 20대에서 일본을 선호한 비율이 두 자리(18.0%)이면서 동시에 북한을 선호한 비율보다 4.2% 높았으며, 중국을 선호한 비율은 30대에서만 두 자리(11.3%)로 나타났다. 즉 20대에서는 미국, 북한과 더불어 일본이, 30대에서는 미국, 북한과 더불어 중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 모두 근 20%의 비율로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들고 있는데, 독도문제나 과거사 왜곡 일본교과서문제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에서는 일본이 친밀감을 느끼는 중요 국가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의미 있는 시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식조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우리나라 선거법상의 성인 연령은 만 19세로 낮아졌으며, 민법상의 성년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만 19세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에 재학할 나이이다. 따라서 교육 수준은 연령

별 효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은 미국에 대해서는 2007년과 2008년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의 차이가 21.1%로 매우 컸으나, 2008년에는 대재 이상과 중졸 이하의 간격이 5.7%로 대폭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2007년에는 대졸 이상의 응답자 중 48.6%가 미국을 선택한 반면, 2008년에는 10%가 증가한 58.6%가 미국을 선택하였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교육 수준별로 2007년의 경향과 2008년의 경향이 크게 차이가 났다. 2007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비율인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의 변화는 직업별 기준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7년에 화이트칼라 군에서 미국과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50.7%와 27.6%였으나, 2008년에는 각각 64.7%와 18.3%를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 군에 속할 것이라고 본다면, 대재 이상의 교육 수준으로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낀 나라로 북한대신에 미국으로 선택을 변경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또는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에 줄어들었으나, 일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군과 무직/기타 군에서 일본을 선호하는 비율이 2007년과 2008년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의 차이는 2007년에는 뚜



렸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낮아지고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수준별로 각각 미국과 북한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정치에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지역 간 갈등이다.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도 이 문제의 극복은 매우 중요하다. 대상 국가에 대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국내정치과정에 투영됨으로써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7년에 광주, 전남, 전북의 호남권에서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에 머물렀으나, 그 밖의 지역은 모두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비율이 31.9%로 강원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8년에 호남권에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50.7%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등에 비해 최소 10%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기준에서 2008년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중부권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중부권은 2007년에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18.6%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08년에는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45.4%로 가장 낮았고,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들이 모두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늘어나고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미국과 북한 간의 선택 비율 차이가 최소 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대전, 충남, 충북을 포함하는 중부권이 보여준 정반대의 경향과 10% 정도의 차이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연관된 지역정서나 특정한 정치적 사안(예: 행정 중심복합도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종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경향

의 하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에서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에서보다 미국에 대한 친근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07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 공히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진보적 계층은 중도 또는 보수적 계층과는 달리 큰 변화가 탐지된다. 즉 2007년에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42.9%였으나 2008년에는 55.7%로 약 13%의 증가를 보였고,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1년 사이에 7%정도 줄어들었다. 다른 정치적 성향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한편,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로 분류한 응답자들이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진보적 계층은 물론 보수적 계층보다도 낮았다.

##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 4국과 북한 등 5개 중에서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앞서 주변국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물어보았는데, 가장 가깝게 느끼지 않는 국가라면 아마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주변국의 일원이자 한반도문제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덜하며, 또 그 나라에 대한 정보의 소통도 훨씬 적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강도도 매우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역시 러시아는 2007년과 2008년에 응답자의 1% 정도만 지적함으로써 위협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표 1-V-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구분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없다	무응답
2007	21.1	36.0	25.8	15.5	1.3	0.1	0.3
2008	16.2	33.6	34.1	15.0	1.0	0.1	0.2

중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한 비율은 2007년과 2008년이 15%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는 북한이 2007년에 36.0%로 가장 높았으며 2008년에는 33.6%로 비율은 약간 낮아졌으나, 역시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선두로 지적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은 어떤 주변국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긴밀한 경제·통상관계가 발전하고 정치·사회적 관계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경험, 과거사 왜곡, 독도문제 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다. 2007년에 일본은 25.8%의 비율로 북한에 이어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2008년에는 34.1%로서 8.3%가 증가하였으며, 비록 근소한 차이이지만 북한보다도 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되었다. 2008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 크게 부각된 독도문제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어떤 주변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은 2007년 21.1%에서 2008년에는 16.2%로 5% 정도 낮아졌다. 앞의 질문에서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응답한

비율이 7%정도 늘어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에 더 위협적인 나라로서 인식되고 있는 점은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선택하는데 남녀 성별의 차이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에 각각의 나라들에 대한 남녀 간의 비율 차이는 1-2%정도에 불과하다. 연령별 기준을 보면, 2007년에는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 11.5%, 40대 15.4%, 30대 22.9%, 20대 33.8%로 연령이 낮을수록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에도 50대 이상 9.9%, 40대 15.6%, 30대 17.8%, 20대 20.9%로 그대로 재현되었으나 전체적인 비율은 낮아졌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20대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이 주목된다.

2007년에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로 지적된 비율은 일본이 40대에서(31.5%), 북한은 50대 이상에서(44.8%), 미국은 20대에서(33.8%) 각각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와 최소 11%, 최대 22%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40대(18.4%)와 50대 이상(19%)이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지적한 나라에 차이가 난 특징은 2008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은 전 연령대가 약31%-36%대에 분포하였고, 북한은 전 연령대가 약32%-36%대에 분포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전 연령대가 약14%-17%대에 분포하였다. 즉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 북한, 중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지적하는 비율에서 연령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으나, 그 간격은 2008년에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는 중졸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았는데, 2007년 46.1%, 2008년 38.9%였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08년에는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중졸 이하와 고졸의 교육수준 응답자의 비율이 37%대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대재 이상도 29.7%의 비율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직업별로 보면, 2007년에 농/수/축산업 종사자 중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으나 2008년에는 3.7%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이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지적한 비율이 2007년에는 20.7%로 여러 직업군 중에서 가장 낮았으나 2008년에는 40.9%로 가장 높았다.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도 39.9%로 매우 높았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종사자의 수가 적은 농/수/축산업을 제외하면, 2008년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한 비율은 자영업 직업군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직업군(무직/기타 포함)은 모두 31-33% 범위 내로 나타났다.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한 비율은 블루칼라(39.9%), 자영업(37.1%), 전업주부(35.1%) 군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전업주부 군의 경우, 2007년에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48.9%로 타 직업군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일본을 선택한 비율은 23.2%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008년에는 북한 32.3%, 일본 35.1%로, 북한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매우 높았다.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은 2007년에는 자영업(20.3%)과 화이트칼라(18.9%) 군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08년에는 화이트칼라(20.4%)와 전업주부(18.2%) 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위협국가의 선택은 2007년에는 의미 있는 특징이 없었으며, 2008년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가구소득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최대 20%(200만원 미만), 최소 13.1%(200-299만원)로 가구소득수준이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에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이 특히 높아진 상황에서 대전, 충남 및 충북의 중부권이 52.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 지역에서 북한, 미국, 중국은 모두 15%대의 분포를 보였다. 중부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33% 이상의 비율로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지적하였음을 볼 때, 중부권은 예외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부권에서 2007년 중부권에서의 각 나라에 대한 비율은 북한(39.0%), 일본(24.6%), 중국(20.3%), 미국(14.4%)의 순이었다. 광주, 전북 및 전남의 호남권은 2007년에는 일본(29.4%), 북한(28.6%), 미국(27.7%)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응답하였는데, 2008년에는 북한(33.3%)과 일본(32.4%)이 각각 4% 정도 증대된 비율로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지적된 데 반해 미국은 22.7%로 두 나라에 비해 10%정도 차이를 보였다. 강원과 제주는 2007년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지적한 비율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8년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각각 45.6%, 55.1%).

탈냉전시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미국 또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관계는,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해 '친화적'이며, 보수적일수록 미국에 대해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과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선택 간의 관계를 ‘친화성’의 반대 현상으로 본다면, 2007년의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가 있었다. 즉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본 사람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40.4%)이 진보적이라고 본 사람의 응답 비율(26.4%)보다 높았고,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한 비율은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27.7%)가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17.4%)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는 잘못된 것임을 2007년도의 다른 지표는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의 조사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일본(28.7%), 미국(27.7%), 북한(26.7%)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지적하였다. 2008년의 조사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분류하던 간에 우리 국민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진보 34.3%, 중도 33.3%, 보수 33.2%) 북한을 가장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들고 있다. 또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일본을 지적한 비율이 북한보다 2-3% 높는데 반하여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북한을 지적한 비율(34.4%)이 일본을 지적한 비율(28.0%)보다 6%이상 높았으며 미국은 22.1%로서 북한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은 중도 36.4%, 보수 35.2%, 진보 28.0%의 순이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진보 22.1%, 중도 14.8%, 보수 13.7%의 순이었다. 자신을 진보적 성향이라고 분류한 응답자가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중도와 보수의 차는 큰 의미가 없다. 요컨대 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보수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해 ‘친화적’이며, 진보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북한에 ‘친화적’이라는 평가는 객관적

인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본 우리 국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두 지표를 종합하면,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우리 국민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크게 증가한데 반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국민들이 중도 또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국민들보다 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진보적 성향으로 보는 국민들 사이에 미국이 가까워진 반면에 북한은 멀어졌다. 2008년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다는 점이다.

### 3.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 국가는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통일외교정책 입안과정에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 국민에게 어떤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가.

표 1-V-3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미국

(단위: %)

구분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53.1	21.9	21.9	2.9
2008	70.2	13.0	14.7	2.1



## 일본

(단위: %)

구분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14.6	46.4	30.2	8.5
2008	17.1	35.7	30.4	16.6

## 중국

(단위: %)

구분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19.3	46.3	30.9	3.3
2008	24.3	38.2	32.3	4.9

## 러시아

(단위: %)

구분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22.8	40.2	32.0	4.7
2008	29.4	35.2	31.1	4.0

2008년의 조사에서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 가장 특징인 현상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응답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7년에도 미국은 다른 주변국에 비해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8년에는 그 비율이 17%이상 증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협력국가로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을 경쟁대상 또는 경계대상으로 본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7-9% 정도 줄어들었으며, 적대대상으로 본 비율은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미국과의 관계를

‘자주권’ 확립의 관계로 본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동맹의 회복·강화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로 국내정치 지형이 변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경쟁대상 또는 경계대상의 국가로 보고 있다. 다만 2007년과 2008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세 나라를 경계대상으로 본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경쟁대상으로 본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동시에 세 나라를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늘어났다. 미국 이외의 세 나라 중에서는 러시아가 29.4%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24.3%, 일본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 주변 4국 중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을 협력대상으로 본 응답자의 비율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15% 안팎에 지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대대상으로 인식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약 17%에 달했다. 러시아의 경우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또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항목에서 1% 안팎의 응답 비율을 보인데 반해, 우리 국민이 협력대상 국가로 본 비율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았다.

경제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고,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한 국력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 오랫동안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을 주로 협력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주변국을 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은 협력대상으로서보다는 경쟁과 경계의 대상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통일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과제로 부여한다.

2007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 모두 주변국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남



녀 성별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모두 협력, 경쟁, 경계, 또는 적대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5% 높았고 경쟁대상으로 본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8.2% 높았던 것 이외에는 각 나라별로 모든 경우에 0-4% 사이의 폭을 보였다. 2008년에는 더욱 그 폭이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중국의 경우인 데, 여자가 남자보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비율이 3.4% 높은 반면, 경계대상으로 본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3.1% 높았다.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1-2% 안팎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2007년에 연령별 기준에 따른 주변 4국에 대한 인식의 차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비율은 50대 이상에서 60.4%였던 반면 30대에서는 45.7%로 그 차이는 약 15%에 달했다. 30대는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본 비율(28.4%)이 50대 이상(17.6%)보다 약9% 높았다. 두 세대 간에 미국을 보는 시각이 다른 세대 간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대상으로 본 비율은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각각 23.8%, 28.8%), 5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각각 12.6%, 15.2%).

표 1-V-4 연령별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	연령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미국	20대(19-29)	64.7	16.6	15.1	3.6
	30대	65.2	16.2	17.1	1.5
	40대	74.0	9.3	14.9	1.8
	50대 이상	77.7	9.6	11.2	1.5
일본	20대(19-29)	0.0	37.3	24.3	18.3
	30대	6.0	38.4	30.8	14.8
	40대	7.4	33.8	32.2	16.3
	50대 이상	5.0	32.9	34.6	17.2
중국	20대(19-29)	23.5	37.5	33.1	5.6
	30대	26.3	40.9	29.8	3.0
	40대	25.1	39.4	28.4	6.5
	50대 이상	22.2	34.6	38.4	4.4
러시아	20대(19-29)	31.3	35.2	28.6	4.6
	30대	32.1	36.9	28.3	2.7
	40대	31.4	33.4	30.9	3.9
	50대 이상	22.2	35.0	37.4	4.7

2008년에 연령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특징은 미국을 보는 30대의 인식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점이다. 2007년에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2008년에는 전년보다 약20% 증대하여 20대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미국을 경쟁대상 또는 경계 대상으로 본 비율의 합이 2007년 51.1%에서 2008년 33.3%로 약18% 감소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30대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2008년에는 연령의 증가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비율의 증가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국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와 30대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며, 40대와 50대 이상이 역시 한 클러스터를 이룬다.



일본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세대 간의 비율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 일본을 적대대상으로 본 비율이 특히 증가하였는데 연령층 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본 비율에서도 연령별 차이는 별로 없다.

중국을 우리 국민들이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중국 상품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제활동의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에서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본 비율이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후자의 연령층에서는 전자의 연령층보다 중국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에서 22.2%가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반면에,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30%를 조금 넘는 비율을 보였다. 50대 이상은 러시아를 경계대상으로 본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러시아를 경쟁대상으로 본 비율은 연령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V-5 교육수준별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	교육수준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미국	중졸 이하	73.2	11.0	13.0	2.7
	고졸	72.3	12.8	13.8	1.0
	대재 이상	67.2	13.8	16.0	3.0
일본	중졸 이하	11.3	27.4	41.6	19.7
	고졸	15.0	34.7	31.8	18.2
	대재 이상	21.0	39.0	25.9	14.2
중국	중졸 이하	22.9	37.6	34.1	5.4
	고졸	20.0	39.4	35.9	4.1
	대재 이상	29.3	37.1	27.9	5.5
러시아	중졸 이하	22.6	34.8	36.5	6.1
	고졸	24.9	35.7	35.8	3.1
	대재 이상	36.0	34.7	24.8	4.3

교육수준별로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갖는 인식을 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된다. 각 나라를 협력대상으로 본 응답자의 경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전반적인 비율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대재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은 그 밖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각 나라를 경쟁,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본 응답자의 경향에서는, 일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을 적대대상으로 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가





운데서도 특히 중졸 이하의 학력층에서는 그 비율이 약20%에 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국가를 경쟁대상으로 본 응답에서는 교육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경계대상으로 본 응답에서는 대재 이상과 그 밖의 교육수준 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V-6 정치적 성향별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	정치적 성향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미국	진보	62.3	14.7	20.5	2.5
	중도	72.4	13.1	11.9	2.6
	보수	73.3	11.5	14.5	0.8
일본	진보	18.3	38.4	27.0	16.4
	중도	16.9	33.6	31.5	17.7
	보수	16.6	37.0	31.5	15.0
중국	진보	26.7	35.0	33.7	4.6
	중도	22.7	40.3	31.7	4.6
	보수	25.2	37.3	32.0	5.6
러시아	진보	33.9	32.8	29.1	4.2
	중도	26.6	36.4	32.0	4.3
	보수	30.4	34.9	31.4	3.2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주변 4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 자신의 성향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일본, 중국, 러시아를 어떠한 대상으로 보든지, 각 분류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협력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과 적대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향을 중도로 평가한 사람들은 진보 또는 보수로 평

가한 사람들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쟁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은 높았다.

앞서 분석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2007년보다 2008년에 17% 증대하였다. 그중에서도 진보층의 증가율(19.9%)이 중도층이나 보수층의 증가율(각각 16%, 15.8%)보다 컸다. 특히 미국을 부정적으로(경계 또는 적대대상)보거나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보수층과 진보층의 차이도 2007년의 14.6%에서 2008년에는 11%로 줄어들었다. 다만, 미국을 경쟁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보층의 비율이 보수층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과 주변 4국에 대한 인식에서 2007년과 비교해서 2008년에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그에 비례하는 만큼 나빠진 것은 아니다. 2008년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변했고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여전히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지만, 2007년과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자신을 진보적으로 분류한 응답자 층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을 경계 또는 적대 대상이라고 본 비율이 2007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 및 보수적으로 분류한 층에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친미-반북, 친북-반미로 분류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보수-친미, 진보-반미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한반도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체제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2007년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변 4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1-V-7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주변 4국의 예상 대처 방식

(단위: %)

구분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미국	50.6	56.8	1.3	1.4	45.5	37.9	2.6	3.9
일본	16.2	15.3	3.3	4.4	72.7	68.5	7.9	11.6
중국	5.3	4.6	26.8	29.4	56.4	52.9	11.4	13.0
러시아	3.7	6.5	19.0	20.4	59.1	54.0	18.2	19.0

<표 1-V-7>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2007년보다 6% 이상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였는데, 2007년에 비해 7.5% 감소하였다. 미국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거나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본 응답은 극히 낮았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라는 응답은 ‘한국 지원’, ‘북한 지원’ 또는 ‘중립 유지’의 선택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국이 상황에 따라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한다면 전쟁 발생 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15.3%로 매우 낮았다. 반면에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68.5%)와 중립을 지킬 것이다(11.6%)라는 응답이 80.1%로 2007년의 80.6%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자주 거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에게 일본이 적대대상이라고 본 응답이 2008년에 높아진 것과 상통한다.

냉전시대에 중국과 러시아(구소련)는 북한의 동맹국이었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1992년 국교를 수립했고,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는 1990년 국교를 수립했다. 이후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는 인적, 물적 교류 양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중 관계는 중국이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 되고 많은 관광객과 유학생이 교류하는 등 급속하게 신장되었으며, 2008년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가 근30%에 달하며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5%



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3명은 한·중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북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응답이 52.9%,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13.0%로 전체 응답자의 2/3 정도는 중국이 일반적으로 북한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도 일본이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충실하게 따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이 중립을 지킬 것으로 보는 비율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본에 대해서보다 높다. 2007년에도 거의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54.0%)이 가장 높았다. 또 러시아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7년과 2008년 모두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을 돕기(6.5%)보다는 북한을 도울 것(20.4%)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폭은 2007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2007년과 비교하면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줄어든 반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다소 늘어났다.

한국 현대사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은 미국,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 4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그러한 세대 간 차이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1-V-8>은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다. 즉 전 연령대에 걸쳐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54-59%). 2007년에는 20대 41.4%, 30대 46.5%로 40%대에 머문 반면, 40대 54.45%, 50대 이상은 60.9%였다. 반면 자국의 이익을 따

를 것이라는 응답은 20대 54.6%, 30대 51.0%, 40대 40.3%, 50대 이상에서 35.1%였다. 2008년에 40대와 50대 이상에서의 응답이 2007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 반해 20대와 30대의 응답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20대와 30대의 평균치가 2007년 44%에서 2008년 55%로 11%의 증가를 보이면서 40대와 50대 이상의 생각과 유사해진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2007년에는 미국의 대처 방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이 20대 및 30대와 40대 및 50대 이상의 연령 간, 즉 세대 간 차이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세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보다 우호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V-8 연령별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주변 4국의 예상 대처 방식 (단위: %)

국가	연령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미국	20대(19-29)	54.0	2.5	38.2	5.4
	30대	55.9	0.3	40.3	3.5
	40대	58.7	1.4	37.2	2.7
	50대 이상	59.0	1.5	35.5	4.0
일본	20대(19-29)	19.6	7.7	60.9	11.8
	30대	13.8	3.6	72.2	10.4
	40대	17.0	3.2	68.8	10.7
	50대 이상	10.6	3.2	72.3	13.6
중국	20대(19-29)	5.2	30.5	49.5	14.9
	30대	4.2	24.0	58.8	13.0
	40대	4.3	34.8	49.5	11.2
	50대 이상	5.0	28.4	53.6	13.0
러시아	20대(19-29)	7.4	20.5	49.1	23.0
	30대	7.7	18.1	59.7	14.4
	40대	4.6	23.0	53.7	18.4
	50대 이상	6.1	20.2	53.2	20.2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는 2007년에 연령별 차이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2008년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가 간의 차이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나타난다. 일본이 러시아, 중국, 미국에 비해 가장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계속 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이 2007년에 70.2%였는데, 2008년에는 10%정도 줄어든 60.9%이며,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2007년보다 약 6% 증가하였다. 50대 이상에서는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과 중립을 지킬 것이란 응답이 2007년에 비해 각각 6%와 7%정도 늘어났다.

중국의 경우 2008년에도 30대 연령층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07년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20대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20대 연령층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은 2007년 59.9%에서 2008년 49.5%로 10%정도 줄었다. 반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7.3% 늘어난 30.5%, 중립을 지킬 것으로 본 응답은 5%가 늘어난 14.9%를 기록했다.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2%정도 줄었다. 종합하면 20대 연령층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2007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란 응답이 2007년에 비해 늘어났는데, 어느 특정 연령층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2007년에 비해 7.6% 늘어났으며 동시에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도 2.6% 늘어났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으로 본 응답은 49.1%로 10.2% 줄어든 것이

다. 한국을 도울 것이란 응답율과 북한을 도울 것이란 응답율의 합과 같다.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거의 변화가 없다.

표 1-V-9 정치적 성향별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주변 4국의 예상 대처 방식

(단위: %)

국가	정치적 성향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미국	진보	55.8	1.5	40.5	2.3
	중도	55.7	1.6	37.6	5.1
	보수	59.7	1.0	36.0	3.2
일본	진보	16.6	5.3	66.9	11.2
	중도	14.1	4.4	68.2	13.1
	보수	16.4	3.7	70.5	9.1
중국	진보	2.6	31.7	51.9	13.8
	중도	4.6	28.6	53.6	12.9
	보수	6.4	28.7	52.4	12.4
러시아	진보	7.3	19.5	51.4	21.8
	중도	6.7	19.4	56.7	17.1
	보수	5.3	23.1	51.7	19.8

다음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4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1-V-9>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은 정치적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보수층의 응답률이 진보층보다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진보층과 보수층의 응답률이 거의 동일하였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진보층과 보수층의 차이가 크지 않다.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에 있어서도 정치적 성향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7년에도 일





본,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2007년과 2008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 진보층은 43.6%가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본 반면, 51.2%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2008년에는 그 비율이 대폭으로 역전되어 55.8%가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0.5%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보았다. 스스로 진보적 성향이라고 분류한 층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온 것이다. 보수층에서는 2007년에 비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줄어든 반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늘어났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동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다.

## 5.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태도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으며 해양과 대륙의 교차적인 위치에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말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주변 4국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변 4국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주변 4국이 과연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표 1-V-10 남북한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태도

(단위: %)

구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미국	4.6	5.4	25.3	21.7	53.7	50.8	16.3	22.2
일본	1.3	1.3	14.7	8.7	59.6	55.9	24.3	34.0
중국	1.3	2.2	14.8	10.9	63.3	58.4	20.5	28.4
러시아	1.4	2.1	15.9	12.9	64.6	60.0	17.9	24.8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한반도 주변 4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과 2008년에 모두 해당하며, 2008년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2007년에 응답자들의 16~17% 정도만이 일본, 중국, 러시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매우 원한다 + 원하는 편이다)고 보았으며, 83~84%는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원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국은 다른 주변국에 비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한 응답이 높았으나 30%정도에 머물렀다.

2008년에는 응답자들의 90%정도가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중국은 응답자들의 87%가, 러시아는 응답자들의 85%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73%로 2007년에 비해 3% 늘어났다. 그런데 200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원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약간 줄어든 반면,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그보다 더 늘어났다. 즉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주변 4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강도가 더 증대되



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은 2007년에 비해 6% 줄어들었고, 반면에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나 늘어나 34%에 달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4명은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주변 4국에 대해 매우 높은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V-11 연령별 남북한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태도

(단위: %)

국가	연령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미국	20대(19-29)	4.8	22.4	48.3	24.6
	30대	4.3	21.7	49.4	24.6
	40대	4.6	23.0	50.4	22.0
	50대 이상	7.9	19.5	55.4	17.2
일본	20대(19-29)	2.1	11.2	51.9	34.9
	30대	0.3	10.0	55.5	34.2
	40대	1.0	7.9	56.7	34.1
	50대 이상	1.9	5.4	59.9	32.9
중국	20대(19-29)	2.4	14.7	54.5	28.4
	30대	2.4	11.6	58.0	28.0
	40대	2.2	8.1	58.5	31.0
	50대 이상	1.6	9.3	63.1	26.0
러시아	20대(19-29)	2.1	17.0	57.0	23.9
	30대	2.1	14.3	58.9	24.7
	40대	2.6	10.3	59.3	27.3
	50대 이상	1.8	9.5	65.5	23.1

2007년의 조사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변 4국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그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

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변 4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줄어들었다. 또한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일관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일본의 경우 연령층에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2007년에 비해 20대와 30대 및 50대 이상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 정도 증가한데 반해, 40대에서는 11.2%에서 22%로 11%정도 증가했다. 또 2007년에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원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2008년에는 연령층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50대 이상에서 ‘매우 원한다’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에서 연령층에 따라 2007년과 2008년간에 차이가 발견된다.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40대와 50대 이상에서 2007년에는 15-16%의 비율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중국의 경우 8-9%대로, 러시아의 경우 9-10%대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20대 및 30대보다는 40대 및 50대 이상에서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협조 필요성

한반도 주변 4국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강대국이다. 주변 4국은 모두 한국에 비해 우월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태도는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변 4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일이 통일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표 1-V-1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07	35.8	46.7	14.8	2.8
2008	34.8	53.0	9.6	2.6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7년에 ‘매우 필요하다’가 35.8%, ‘약간 필요하다’가 46.7%로 전체 응답자의 82.5%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008년에는 더욱 늘어나 전체 응답자의 87.8%가 남북한이 통일 하는데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근 9명이 통일을 하는데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매우 필요하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양 극단의 응답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2% 줄어든 대신,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이 거의 압도적인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우리 국민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 평균 87%의 비율로(미국은 73%)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거의 같은 비율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큰 의구심을 갖고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

해서는 그 국가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의 의식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국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약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령, 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교육수준은 필요성의 정도에 대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조사에서 ‘매우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 27.6%, 고졸 34.5%, 대재 이상 39.5%였는데, 2008년에도 중졸 이하 26.6%, 고졸 30.2%, 대재 이상 41.9%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V-13** 주변 4국 국가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미국	42.3	48.6	7.1	2.0
일본	18.7	53.0	22.2	6.1
중국	25.7	55.4	14.9	4.0
러시아	17.2	58.1	20.7	3.9

2008년에는 주변 4국의 국가별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는 앞서 주변 4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매우 필요하다 + 약간 필요하다)이 90.9%로 가장 높았고, 중국 81.1%, 러시아 75.3%, 일본 71.7%로 일본



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미국 42.3%, 중국 25.7%, 일본 18.7%, 러시아 17.2%로, 우리 국민들은 미국으로부터 협조가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가 각 나라로부터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미친 영향은 대체적으로 크지 않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아주 적었다. 다만, 주변 4국 모두에 있어서 연령변수에서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교육수준변수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변수에서는 중부권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권보다 15% 안팎의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났다.

## 7. 소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주로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2007년과 2008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북한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의 대상이자 동시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상대방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항목으로 주변 4국과 함께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분석의 결과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 2007년에 응답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로 한반도 주변 4국과 북한의 5개국 가운데 미국을 가장 가깝게 인식하였는데, 그 정도가 증대하여 2008년에는 10명 중 6명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부각된 ‘반미정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극렬한 반대 운동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전 연령층에서 미국에 대한 친근감이 증대했으며, 그 중 20대에서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 교육수준에 따른 미국에 대한 친근감의 차이가 2007년에는 20% 이상으로 컸으나, 2008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2007년에 호남권에서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에는 중부권이 가장 낮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미국에 대한 친근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보적 계층에서 나타났다. 중도 또는 보수적 계층에서는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다소의 증가를 보였는데 반해 진보적 계층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 다음으로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보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그 비율은 2008년에 다소 줄어들었다. 2007년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7년 호남권에서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2008년에는 중부권이 가장 높았다. 그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는 진보적 계층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전반적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2007년에는 북한을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8년에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북한과 일본을 지적한 응답 비율 간의 차이는 매우 적었으나, 2008년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북한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더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르며 따라서 예외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한국의 대일관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중부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들었으며 동시에 전년도의 비율보다 24%나 줄어든 비율로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들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지역의 응답률 변화가 지나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는 인식에 있어서 연령의 차이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8년에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한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인식하는 응답이 증대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변화로부터 나왔다. 2007년에 진보적 계층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면에 미국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8년에는 오히려 진보적 계층이 보수나 중도 계층보다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한 비율이 1% 높았으며,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한 비율은 진보 계층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셋째,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주변 4국 중에서 미국을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의 국가로 보고 있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그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미국을 협력대상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중국, 러시아는 협력대상이기보다는 경쟁대상 또는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일본의 경우

는 2008년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적대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본 인식과 상통한다. 다만,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이 세 나라를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총체적 국력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주변국을 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이 협력대상으로서보다는 경쟁과 경계의 대상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통일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넷째,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으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늘어난 반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 응답이 줄어들어 2007년에 그 차이가 5%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0%정도로 늘어났다. 특히 2007년에는 20대 및 30대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비율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2008년에는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젊은 층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보다 우호적으로 변했다. 또한 2007년에 진보 계층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2008년에는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아진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분류한 층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온 것이다.

우리 국민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은 압도적인 비율로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북한을 도울 것으로 보는 인식도 여전히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주변 4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변 4국 중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비율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85-90%의 비율로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보다 2008년에 더욱 그러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악화되어, 우리 국민 10명 중 3-4명은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주변 4국에 대해 매우 높은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그 필요성에 대한 비율이 더 늘어났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통일을 하는데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변 4국 중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협조가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그 국가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외교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통일외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주변 4국에 대해 갖는 인식과 실제적인 정책 수행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2008  
통일의식조사

제2부  
심층분석

---







## I. 대북정책 평가와 통일인식의 변화

한반도의 분단이 6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통일은 ‘우리의 소원’에 그치고 있다. 세계체제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지도 어느덧 20여년 가까이 되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직 냉전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불거진 북핵문제는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은 정권교체와 함께 냉엄한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 해에 수십만 명의 남북주민들이 왕래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금강산과 개성시를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과 이후 총리회담, 그리고 수많은 실무급회담들을 통해 남북한 당국은 수많은 합의들을 체결하였으나, 12월 정권교체 이후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분단체제론이 지적하듯이 분단은 자기완결성을 갖는 유기적 체제로서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며 자기 재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사회간에 상호연관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통일인식의 변화는 행위자의 심리적 변덕이 아닌 구조적 요인들의 결과로 표출된다. 앞서 기초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년 통일인식은 2007년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통일인식이 갑자기 일년 사이에 크게 변화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일년 사이에 남한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의 하나가 정권교체라고 할 때,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 통일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지난 과거 정부의 대북사업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의 추진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 1. 대북사업의 통일기여 수준과 통일인식

### 1) 대북사업의 통일기여도와 통일의 필요성

조사 결과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I -1>에서 보이듯 대북사업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대부분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북사업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경우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쪽이 반반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대북사업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인 긍정의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모든 대북사업의 항목에서 70%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대북사업이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인 부정의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모든 대북사업의 항목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북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통일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대북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통일인식에 부정적인 인식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사업의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쌀·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5.8%,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62.9%로 나타난 반면에,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8.6%,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3.4%로 나타났다.

학술·예술·체육·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2.4%,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7.9%인 반면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8.2%,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1.8%,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8.3%인 반면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9.8%,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7.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남북한 간 회담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3.8%,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5.1%인 반면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4.8%,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8.2%에 불과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북사업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항목별 대북사업에서도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대북사업의 통일기여도와 통일의 필요성

(단위: %, 명)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도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함	반반/그저그렇다	필요하지 않음	
쌀·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매우 도움됨	75.8	17.1	7.1	103
	다소 도움됨	62.9	22.4	14.7	525
	별로 도움안됨	38.6	25.9	35.5	425
	전혀 도움안됨	33.4	24.4	42.3	159
		$\chi^2=238.044$		$p<0.001$	
학술·예술·체육·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	매우 도움됨	72.4	17.5	10.1	152
	다소 도움됨	57.9	22.9	19.2	575
	별로 도움안됨	38.2	26.1	35.9	345
	전혀 도움안됨	36.6	25.1	38.3	141
		$\chi^2=159.383$		$p<0.001$	

(계속)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도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함	반반/그저그렇다	필요하지 않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매우 도움됨	71.8	16.9	11.4	146
	다소 도움됨	58.3	22.3	19.4	549
	별로 도움안됨	39.8	27.0	33.2	358
	전혀 도움안됨	37.0	25.3	37.7	160
		$\chi^2=116.788$	$p<0.001$		
정기적인 남 북간 회담	매우 도움됨	73.8	15.7	10.5	223
	다소 도움됨	55.1	22.5	22.4	557
	별로 도움안됨	34.8	31.6	33.6	319
	전혀 도움안됨	38.2	20.3	41.5	114
		$\chi^2=176.562$	$p<0.001$		

## 2)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도와 통일추진 속도

분석 결과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의 추진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I -2>에서 나타나듯, 우리 국민은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반대로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을수록 현상유지나 통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대북사업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인 긍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경우, 통일의 추진 속도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대북사업이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적극적인 부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경우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대북사업이 통일에 ‘다소 도움이 된다’

고 소극적인 긍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경우는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진적 통일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북사업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쌀·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중 28.3%가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3.6%는 현재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2.7%만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적극적인 부정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 불과 2.5%만이 통일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32.3%는 현재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17.7%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학술·예술·체육·종교 등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인 긍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에서는 23.2%가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7.3%만이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불과 0.6%만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적극적인 부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에서는 불과 3.2%만이 통일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32.5%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19.8%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긍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에서는 23.7%가 가능한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6.1%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불과 1.6%만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경제협력이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적극적인 긍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에서는 불과 1.1%만이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30.2%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15.0%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



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긍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에서 17.5%는 통일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6.1%는 현재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2.3%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적극적인 부정 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에서는 4.6%가 통일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30.9%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고, 무려 21.7%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북사업 중 인도적 지원사업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통일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또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 남북간 회담의 통일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에 통일에 관심이 없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사회문화교류사업은 경제협력이나 남북회담 보다 상대적으로 통일의 추진 속도의 긍정적인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도와 통일추진 속도

(단위: %, 명)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도		통일의 추진 속도				N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되면 통일	현재 상태가 좋음	통일에 관심 없음	
쌀·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매우 도움됨	28.3	65.4	3.6	2.7	104
	다소 도움됨	11.4	72.6	12.1	3.9	525
	별로 도움안됨	4.3	64.5	18.7	12.5	424
	전혀 도움안됨					159
		$\chi^2=154.658$		$p<0.001$		
학술·예술·체육·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	매우 도움됨	23.2	68.9	7.3	0.6	151
	다소 도움됨	9.0	73.9	11.4	5.7	575
	별로 도움안됨	5.7	59.8	21.9	12.5	345
	전혀 도움안됨	3.2	44.5	32.5	19.8	142
		$\chi^2=147.520$		$p<0.001$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매우 도움됨	23.7	68.6	6.1	1.6	146
	다소 도움됨	9.1	72.6	12.2	6.1	549
	별로 도움안됨	7.0	59.8	20.8	12.5	358
	전혀 도움안됨	1.1	53.7	30.2	15.0	160
		$\chi^2=120.769$		$p<0.001$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매우 도움됨	17.5	74.1	6.1	2.3	223
	다소 도움됨	8.7	72.4	12.3	6.6	557
	별로 도움안됨	5.9	56.8	25.3	11.9	319
	전혀 도움안됨	4.6	42.8	30.9	21.7	114
		$\chi^2= 132.057$		$p<0.001$		



## 2.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통일 인식

### 1)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통일의 필요성

대북포용정책 기조 하에 우리 정부는 2000년 이후로 북한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으며,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10년 동안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남북관계가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재검토의 기로에 서 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2000년 1차 정상회담과 2007년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통일의 필요성과 어떤 계가 있는지 교차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 I-3>에서 보이듯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에서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정상회담을 '대체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모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모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61.4%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7.0%만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1차 정상회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45.7%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5.8%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2차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61.1%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6.2%만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2차 정상회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44.5%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6.2%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며, 반대로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는 통일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통일의 필요성

(단위: %, 명)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함	반반/그저그렇다	필요하지 않음	
1차 정상회담 (2000년)	매우 긍정적	61.4	21.1	17.4	200
	대체로 긍정적	53.7	23.7	22.7	608
	대체로 부정적	43.9	24.7	31.5	204
	매우 부정적	45.7	8.6	45.8	52
	잘 모름	43.0	28.8	28.2	150
		$\chi^2=78.410$	$p<0.001$		
2차 정상회담 (2007년)	매우 긍정적	61.1	22.7	16.2	160
	대체로 긍정적	53.5	23.8	22.8	621
	대체로 부정적	46.2	24.0	29.8	228
	매우 부정적	44.5	9.3	46.2	48
	잘 모름	44.6	26.3	29.2	156
		$\chi^2=72.643$	$p<0.001$		





## 2)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통일의 추진속도

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통일의 추진속도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I -4>에서 나타나듯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통일을 가능한 빨리 이루어야 한다거나 여건이 성숙되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현재 상태가 더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더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통일을 가능한 빨리 이루어야 한다거나 여건이 성숙되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15.7%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3.5%만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차 정상회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12.8%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13.2%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보다 6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차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0%, 20.6%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2차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17.1%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8%만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10.9%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3.6%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3%, 17.9%로 10% 이상 격차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을 해야 한다는 쪽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현재 상태가 좋다는 쪽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통일의 추진속도에 대한 인식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4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통일의 추진속도

(단위: %, 명)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통일의 추진속도				N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 되면 통일	현재 상태가 좋음	통일에 관심 없음	
1차 정상회담 (2000년)	매우 긍정적	15.7	72.8	8.0	3.5	200
	대체로 긍정적	8.1	68.8	16.6	6.5	607
	대체로 부정적	7.0	57.9	21.9	13.3	204
	매우 부정적	12.8	53.4	20.6	13.2	53
	잘 모름	6.8	59.5	17.3	16.4	150
		$\chi^2=59.728$		$p<0.001$		
2차 정상회담 (2007년)	매우 긍정적	17.1	71.8	7.3	3.8	160
	대체로 긍정적	7.1	69.6	16.9	6.4	621
	대체로 부정적	10.9	58.5	19.9	10.7	227
	매우 부정적	10.9	57.6	17.9	13.6	49
	잘 모름	6.2	58.2	17.6	18.1	156
		$\chi^2=57.400$		$p<0.001$		



### 3.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과 통일 인식

#### 1)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과 통일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정부간 합의는 체결한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남북한 간 합의는 일반 국제관계의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왔다. 보수정당의 집권이후 현재 과거 정부의 최고위급 관계자가 북한의 최고위급 정부관계자와 맺은 합의를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재협상할 것인가는 남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가 체결한 남북간 합의를 계승하는 문제가 통일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사결과 남북합의의 계승에 대한 견해는 통일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I -5>에서 나타나듯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를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데 매우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52.5%)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14.9%)에 비해 훨씬 높았다. 반대로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를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40.4%)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33.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I-5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과 통일의 필요성 (단위: %, 명)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함	반반/그저그렇다	필요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52.5	22.6	14.9	98
다소 동의함	57.6	23.0	19.3	411
별로 동의하지 않음	49.4	22.4	28.3	386
전혀 동의하지 않음	33.4	16.2	40.4	129
잘 모름	43.4	31.7	25.0	189
$\chi^2=81.301$		$p<0.001$		

## 2)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과 통일의 추진속도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는 통일의 추진 속도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표 2-I-6>에서 보듯, 과거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를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데 매우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통일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재 상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과거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를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정부가 한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데 매우 동의를 하는 응답자 중에서 16.7%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재상태가 좋다고 한 응답률과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 응답률은 각각 6.1%와 5.7%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 정부가 한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서 19.3%는 현재상태가 좋다고, 16.3%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고 불과 4.2%만이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과거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의 계승에 대한 견해 차이는 통일인식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I-6**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 계승과 통일의 추진속도 (단위: %, 명)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 계승	통일의 추진속도				N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되면 통일	현재 상태가 좋음	통일에 관심 없음	
매우 동의함	16.7	71.5	6.1	5.7	98
다소 동의함	11.1	71.9	13.7	3.3	410
별로 동의하지 않음	7.4	67.1	15.0	10.5	385
전혀 동의하지 않음	4.2	60.1	19.3	16.3	128
잘 모름	8.3	51.0	28.0	12.7	190
		$\chi^2=74.511$	$p<0.001$		

#### 4. 통일인식의 경제적 접근

##### 1)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남한사회 또는 개인 자신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가는 통일 인식 태도에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 <표 2-I-7>는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이 통일의 필요성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이 남한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반대로 통일이 남한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남한 사회에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86.1%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6.3%만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통일이 남한 사회에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55.3%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에 22.3%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88.6%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9%만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44.9%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에, 26.3%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이 통일인식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과 통일의 필요성

(단위: %, 명)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함	반반/그저그렇다	필요하지 않음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매우 이익이 됨	86.1	7.6	6.3	145
	다소 이익이 됨	66.5	21.3	12.1	431
	별로 이익안됨	37.7	30.7	31.5	468
	전혀 이익안됨	22.3	22.2	55.5	169
		$\chi^2=365.900$		$p<0.001$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매우 이익이 됨	88.6	2.3	9.0	40
	다소 이익이 됨	75.7	13.4	11.0	296
	별로 이익안됨	52.3	27.0	20.6	525
	전혀 이익안됨	26.3	28.8	44.9	353
		$\chi^2=259.431$		$p<0.001$	



## 2)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과 통일의 추진속도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은 통일의 추진속도에 대한 견해에 관계를 갖는다. <표 2- I -8>에서 나타나듯 통일이 남한 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현재 상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통일이 남한 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남한 사회에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23.8%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3.8%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고 6.1%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통일이 남한 사회에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39.3%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또 17.1%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불과 4.3%만이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38%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7.3%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고 3.2%만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자 중에서 31.1%는 현재상태가 좋다고 응답했고 16.7%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불과 3.8%만이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이 통일의 추진 속도에 대한 인식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과 통일의 추진속도

(단위: %, 명)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		통일의 추진속도				N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 되면 통일	현재 상태가 좋음	통일에 관심 없음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매우 이익이 됨	23.8	66.3	3.8	6.1	145
	다소 이익이 됨	10.1	75.5	9.6	4.8	432
	별로 이익안됨	5.6	66.2	18.3	9.9	468
	전혀 이익안됨	4.3	39.4	39.3	17.1	169
		$\chi^2=174.267$		$p<0.001$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매우 이익이 됨	38.0	51.5	7.3	3.2	40
	다소 이익이 됨	13.3	74.5	7.2	5.0	296
	별로 이익안됨	8.3	73.8	12.3	5.7	525
	전혀 이익안됨	3.8	48.3	31.1	16.7	352
		$\chi^2=187.389$		$p<0.001$		

## 5.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인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사업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반대로 대북사업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대북사업 가운데서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사업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의 추진 속도에 대





한 견해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대로 대북사업의 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을수록 현상유지나 통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또 대북사업 중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사회문화교류사업이 통일에 기여한다고 보은 응답자의 경우가 경제협력이나 남북회담 보다 상대적으로 통일의 추진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연관성을 갖는다.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며, 반대로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을 해야 한다는 쪽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현재 상태가 좋다는 쪽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거 정부가 한 남북합의를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하는 문제는 통일인식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반대로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 정부의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는 통일의 추진속도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자 경우에는 통일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재 상태

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통일을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과거 정부가 한 남북합의를 현 정부가 계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이 통일인식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남한 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반대로 통일이 남한 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통일의 이익 기대수준은 통일의 추진 속도에 대한 견해도 관계를 갖는다. 통일이 남한 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현재 상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통일이 남한 사회 및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경제적 사고가 통일에 대한 인식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Ⅱ. 대북인식 변화의 시계열 비교분석

### 1. 서론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진보정권이 보수정권으로 바뀐에 따라 지난 1년 사이에 대북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끌려 다니는 듯한 남북관계와 일방적으로 주기만하는 대북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기조 하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민족을 앞세웠던 것과는 달리,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능력 등 경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대북정책에서의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남북간에 설전과 과격한 행동을 야기하며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남한 당국자를 추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逆徒)’라고 비난하였으며, 급기야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사건(08.7)까지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은 중단되고 남북관계의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처럼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에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커졌으며,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북한과 관련한 객관적 경험도 응답자들은 축소하여 보고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북한방송·소설을 접해본 경험자는 40.8%→31.2%로 낮아졌고, 북한방문경험자는 4.5%→3.5%로, 지원단체참여 경험자는 2.8%→2.4%로 각각 줄었다.

이러한 대북인식의 변화는 남한 사회 내부적으로 상당한 파열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공간에서 북한을 여전히 경계하고 적대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제는 북한과 화해하고 대화·협력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끊임없이 대립과 마찰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 내에 이른바 반공과 통일, 북한인권·민주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담론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변화한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15여 년 동안 대북인식의 변화흐름에서 어떤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2007년 자료와 2008년 자료를 비교하고, 1993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와 비교하면서 15년간의 대북인식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변화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 본다.

## 2.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의 시계열 추이

지난 1년 동안 한국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대상인식은 작년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지원대상이나 경쟁대상,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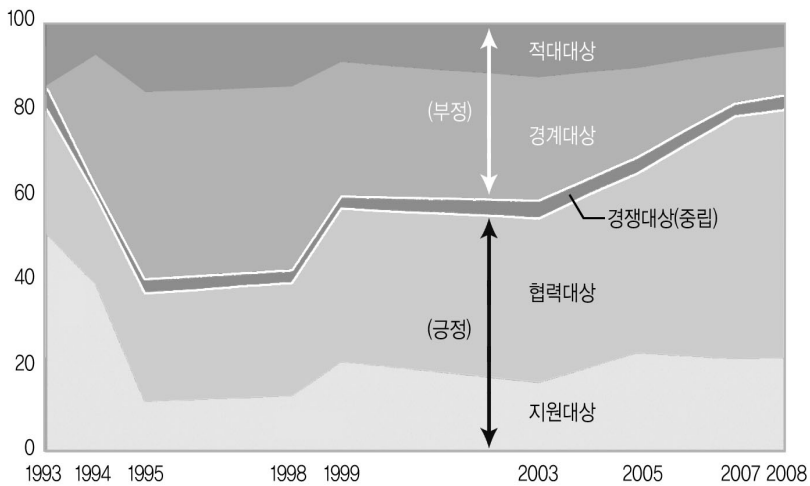


과 거의 동일하고,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에서 1%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을 ‘긍정’ 인식으로 묶고,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을 ‘부정’ 인식으로 묶은 긍정-부정 인식에서도 작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이 79.5%, 부정인식이 16.6%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인식이 1.1% 늘었고 부정인식이 1.8%가 줄어든데 그쳤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나 대북지원과 같은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한에 대한 대상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권변동과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렇지 않았다면 더 커졌을 긍정적 인식의 증가폭이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5여 년간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원대상’의 경우 1993년 50.8%로 높았다가 94년에 39.2%로 낮아졌고, 1995년에는 11.7%로 최저로 떨어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12.4%(98)→19.3%(99)→15.6%(03)→23.1%(05)로 증가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1.8%, 21.9%로 다시 낮아졌다. ‘협력대상’의 경우에도 추세는 비슷하다. 93년에 28.7%에서 94년 20.4%로 낮아졌고 95년에 25.2%로 증가한 이후 24.8%(98)→32.5%(99)→36.9%(03)→41.8%(05)→56.6%(07)→57.6%(08)로 계속 늘어났다.

반대로, ‘경계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93년에는 선택지로 경계대상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살펴본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의 추세를 미루어 짐작할 때 ‘경계대상’의 비율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93년에 낮은 수치에서 출발하여 1994년에 30.7%로 높아졌고 95년까지 43.7%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그 이

후부터 40.6%(98)→28.6%(99)→27.7%(03)→20.9%(05)→11.8%(07)로 조금씩 감소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적대대상’의 경우, 1993년에는 선택항목의 오류로 높게 나왔지만, 경쟁대상이라는 선택지가 포함되었으면 적대대상에 응답한 수치는 매우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993년에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1994년과 1995년을 거치면서 7.1%→15.9%로 높아졌다가 98년 99년에 각각 13.8%→8.1%로 감소했고, 2003년에 12.0%로 증가한 후, 다시 10.2%(05)→6.6%(07)→6.3%(08)로 감소하였다.



[그림 2-II-1] 대북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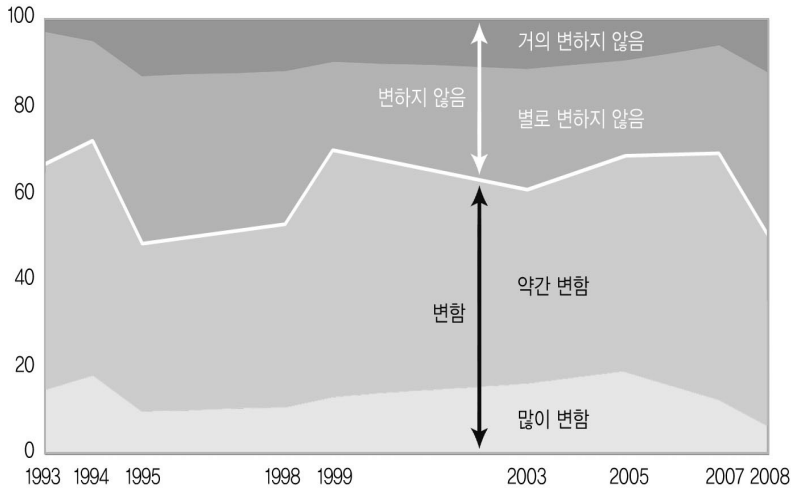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대북인식을 ‘긍정’과 ‘부정’으로 크게 구분해 보면 그 추세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즉 ‘긍정’인식은 1993년에 79.5%로 높은 상태에서 1994년과 95년에 59.6%→36.9%로 낮아지고, 1998년까지도 37.2%로 낮았다가 1999년부터 51.8%→52.5%(03)→65.7%(05)→78.4(07)



→79.5%)로 높아졌다. 여기서 대북인식의 변화는 1993년에 가장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를수록 ‘부정적’ 인식이 커졌으며, 1998년을 지나면서 ‘긍정적’ 인식이 다시 강화되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북한의 변화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변하고 있다”는 우호적 의견이 지난 15년간 65.7%(93)→71.8%(94)→48.2%(95)→50.2%(98)→65.5%(99)→59.8%(03)→68.4%(05)→68.9(07)%로 변화하였다. 1995년에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전의 70%대에서 48%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1999년도에 60%대로, 2005년에 70%에 가깝게 높아졌다. 이러한 우호적 의견은 2007년까지 유지되었으나 2008년에는 50%로 급격히 낮아졌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변하고 있다”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우호적 의견과 비판적 의견을 대비시켜 보면,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66:33→72:28→48:52로 급변하였다가 점차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져 2007년에는 69:31로 달라졌다. 일괄하여 살펴보면 1995~98년까지 “변하고 있다”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50:50정도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가 1999년에 65:35로 역전되고, 2000년대 초반 60:40으로 낮아졌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0:30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08년 다시 50:50으로 내려앉았다.



[그림 2-II-2]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 추세는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대상 인식’의 추이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상황과 사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1998년에야 비로소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북한의 변화정도’에 대한 인식은 1993년보다 1994년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지난 15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기록된다. 이는 1994년 7월의 김일성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나 변화가 임박한 것으로 한국국민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기대가 북한변화 정도를 72%까지 끌어 올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

1995년에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48.2%로 가장 낮아졌고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51.9%로 높아졌다. 이는 엄청난 수해





를 당한 북한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북한의 변화를 비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은 1995년에 51.9%에서 1998년에 45.4%로 낮아졌고, 1999년에는 28.2%로 더 낮아졌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 인식은 2008년에 다시 49.5%로 높아졌다. 최근 1년 사이에 북한에 대한 대상인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은 31.1%에서 49.5%로 18.4%나 높아졌다.

이러한 대북인식 변화의 시계열 추이는 탈냉전 이후 시작된 남북관계의 지형변화와 관계가 깊다. 남한에서 대북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8년이다. 당시까지 공산권과 외교관계가 없었던 한국은 서울올림픽에 공산주의 국가를 초청하기 위해 ‘7.7선언’을 발표하며 공산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북방정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1989년 6월 한국정부는 공산주의 북한 방문과 북한주민 접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소련 및 중국과도 수교를 단행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의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남북간에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기본합의서를 타결하는 등 회담과 교류가 붓물터지듯 진행되었다.

남북간의 정치회담과 접촉·교류의 빈도로 따지면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한 1992년에 가장 활발하였다. 이러한 급진화된 남북관계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며 우호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초에는 남북간에 일반국민들이 실제로 방북하거나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정부간 대화와 접촉이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냉전시대로부터 ‘북한바로알기’ 운동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등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고조되

있던 시기였다. 교류가 전혀 없던 냉전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빨달린 괴물” 혹은 “빨갱이”로 획일화되었지만, 교류와 접촉이 시작되면서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북한주민의 정치와 경제, 삶과 문화 등 사회전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다. 남북교류의 초기에는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적은 상태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하여 북한에 대한 긍정적, 우호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 인식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5년 자연재해, 식량난 등 북한으로부터 현실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시 부정적 인식으로 변화되었다. 1996~97년의 의식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식량난과 탈북자가 발생했고, 남북관계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정적 인식이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에 긍정인식이 36.9%로 낮아졌고 1998년에도 37.2%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1996년과 1997년의 북한인식은 1995년보다 더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이후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을 실시하면서 긍정적 인식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폭증하였다. 정부차원에서 정치회담과 경제협력, 철도·도로연결, 이산가족상봉 등 폭넓은 교류가 진행되었고, 민간차원에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 등으로 남북간에 매우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이러한 긍정인식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이 한풀 꺾인 듯 보이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난 15년 내지 20년의 탈냉전시기 대북인식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 변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냉전에서 탈냉전시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북한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상태에서 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힘입어 북한에 대한 자료공개와 대중매체를 통한 북한소개 및 남북대화가 진전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우호적이었던 북한의 이미지가 대북지원 선원 억류, 김일성 사망과 대홍수, 식량난, 탈북자 등의 중요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로 변화되는 시기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나올 수는 없다”는 담론으로 민족공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좋았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왕래와 접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불안하고 어두운 이미지로 전달되었다.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생겨났던 북한에 대한 신선한 첫인상은 이러한 사건들을 현실로 접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을 구사하면서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가 활발해지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고, 그에 따라 대북인식도 다시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 각 분야의 실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직접적으로 부딪힘으로써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이러한 갈등이 커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강화되고 있다.

2008년의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둔화세를 보인 것은 새 정부의 정책전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남북주민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교류협력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남북간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시 부정적으로 선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3. 전쟁위기의식의 증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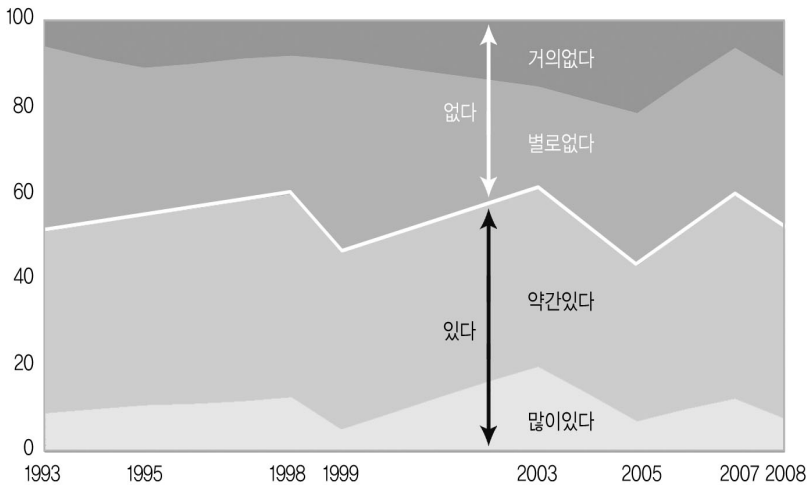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점진적 순환 사이클로 변화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2008년의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있다’(52.2%)는 의견이 ‘없다’(47.8%)는 의견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7.5% 포인트 높아져 지난 1년 사이에 전쟁위기의식은 많이 해소되었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도 61.3%로 여전히 높지만 작년에 비해 6.8% 포인트 낮아졌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는 의견이 56.8%로 ‘있다’(42.9)는 의견을 넘어섰으며, 작년과 비교하면 전쟁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10.2% 포인트 높아져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낮을 때는 43~44%, 높을 때는 60%로 등락을 반복한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의 변화는 아래의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다. 15년간의 추이로 볼 때 전쟁 위기의식을 가장 심각하게 느낄 때는 60%로 나타나고, 안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는 43~44%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기의식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면 40.1%~47.0%를 안정적 단계, 47.1%~54.0%는 약한 불안정 단계, 54.1%~61.0%는 심각한 불안정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국민들의 전쟁불안감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평가하면, 1993년에는 47.7%로 약한 불안정 단계로 들어섰고, 1995년과 1998년에는 54.8%, 57.7%로 심각한 불안정 단계로 진입했다. 1999년에 다시 44.2%로 낮아져 안정감을 회복했으나, 2003년에는 60.4%로 높아져 지난 15년 동안 불안감이 가장 높아졌다. 2005년에는 다시 43%로 낮아졌고 2007년 7월에는 다시 59.7%로 전쟁불안감이 고조되었으며, 2008년 9월에는 52.2%로 낮아졌으나 약한 불안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림 2-II-3]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식은 일관된 경향으로 변화하기보다 남북관계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짐작컨대, 이러한 등락의 배경에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3년에는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북미간의 갈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으나, 1991년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 회담이 1992년에 활발하였고, 1993년에도 남북간 회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불안감은 약간 높아지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4년 3월 남북회담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높아졌고, 전쟁발생이 임박했다는 ‘6월 위기설’이 나돌면서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해졌다. 다행히 지미 카터의 중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었고 긴장은 누그러졌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94.7)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긴장은 다시 커졌고, 이러한 분위기는 1995년까지 이어졌다. 1995년에 54.8%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57.7%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것은 1998년 7월에 발생한 동해안 속초의 잠수정 침투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의식조사가 98년 10월에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1999년에는 44.2%로 낮아져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는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에 60.4%로 높아져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2002년 6월 서해사태가 발생하여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진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위기의식이 43.0%로 낮아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다. 이는 6·15와 8·15를 계기로 남북의 민·관이 함께하는 민족행사를 치르는 등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발표



되는 등 다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던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59.7%로 북한의 도발위기 의식이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 2006년에 실시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07년 9월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60%대로 높았던 전쟁위기의식이 2달만에 48%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2007년 7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전쟁위기의식이 59.7%로 매우 높았었는데, 8월 초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소식이 나왔고 9월에 조사한 자료에서는 48%로 낮아진 것이다.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서 약한 불안정 상태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른바 ‘정상회담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당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전쟁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 개최 발표라는 정치적 사건이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남북관계의 평온상태에 나타나는 ‘안정감’의 단계로까지 끌어 내리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남북회담이나 공동행사와 같은 정치적 사건이 국민들의 전쟁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단기간(1~2개월)에 10% 포인트의 한반도 안정 효과 내지 전쟁위기의식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9월의 48% 전쟁위기의식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낮아진 전쟁위기의식은 2008년 9월 52.2%로 약간 높아졌는데, 이는 새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들어 남북간에 기싸움을 벌이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개성과 금강산에서 남한 당국자들의 퇴거조치, 금

강산 관광객 피살사건(08.7) 등으로 남북관계가 한층 긴장되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형성되면서 북한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나 생각된다.

요컨대, 북한에 의한 전쟁 위기의식은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40%에서 60%의 사이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비교적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40% 정도로 보고,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는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60%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평온할 때에도 국민들의 40%는 전쟁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남북관계가 긴장되더라도 40%의 국민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4. 대북인식 변화의 배경 요인

대북인식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세대간의 의식변화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 경향을 띠었지만, 2000년대 들어 성인인구로 새로 유입되는 20대는 30대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즉, 1990년대까지는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더 ‘긍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2000년대에는 20대가 30대에 비해 오히려 북한을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새로 유입되는 20대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20대의 이러한 전쟁위기의식은 최근에 이를수록 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커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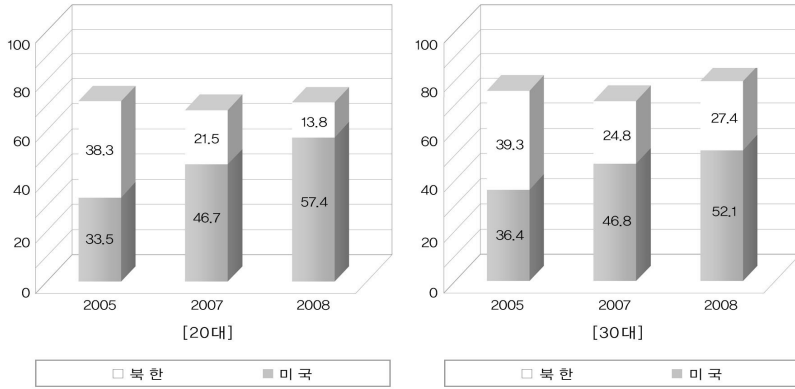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2000년대 들어 20대의 젊은층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이 많았는데, 2000년대 들어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세력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386세대가 40대 연령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0년대에는 40대가 가장 북한의 변화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20대는 가장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20대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보며 북한의 변화에 불만과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에 20대 젊은층의 북한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된다.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별 선호도에서 20대와 30대가 2005년까지는 북한을 미국보다 더 가까운 나라로 인식했으나, 2007년에는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북한을 두 배 가량 압도했다. 북한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2005년에는 20대의 33.5%가 미국을 선호한 반면, 38.3%가 북한을 선호했고, 30대도 미국(36.4%)보다 북한(39.3%)을 선호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이 모두 북한보다 미국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20대의 21.5%가 북한을 선호한 반면, 미국을 선호하는 사람은 46.7%로 많았으며, 30대도 북한을 선호하는 비율은 24.8%인데 비해 미국선호도는 46.8%로 높았다.



[그림 2-II-4]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세대별 인식

2008년도에도 20대와 30대의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20대의 북한선호도는 13.8%로 더 낮아졌고, 미국 선호도는 57.4%로 북한선호도를 4배나 앞질렀다. 30대의 경우에는 북한선호도가 24.8%→27.4%로 다소 높아졌으나, 미국선호도는 46.8%→52.1%로 높아져 결과적으로 미국선호도가 북한선호도 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진 것은 20~30대에서, 특히 20대에서 북한선호도가 낮아진 반면, 미국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대북인식의 변화는 북한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접촉 경험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의 경험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고난의 행군, 아리랑축전 등의 인지도와 유의도 0.01 수준에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촛불시위의 의견과



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촛불시위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김정일 정권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주체사상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높게 평가하고, 천리마운동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띤다. 또한 새터민 접촉 경험이 있거나 북한방송 및 영화, 소설을 접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북인식은 통일 및 대북정책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전쟁촉발과 같은 위기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즉,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통일이 5~10년이라는 머지않은 시기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통일이 가져올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통일 후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의 이슈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또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나 북한의 개혁개방, 군사적 긴장해소, 미군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의 인권개선 등의 대북사안에 대해 시급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대북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및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대북인식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대북인식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요인들이 대부분 북한도발 가능성과는 반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비해,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북한의 대상인식과 북한에 의한 전쟁가능성 모두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을 ‘긍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대북인식의 이중성을 해독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지는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은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함으로써 인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

다섯째, 대북인식은 우리 사회 내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정치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인식은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2000년 정상회담 및 2007년 정상회담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5·16이나 10월 유신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및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을 ‘긍정’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북한변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반면, 대북인식은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와는 역상관관계로 나타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북인식은 촛불시위에 대한 의견과도 매



우 높은 관련성을 보여, 북한을 긍정의 이미지로 보는 사람일수록 촛불 시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졌는데, 이는 보수-진보의 지형이 정권의 변동으로 크게 달라진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비교할 때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인식이 31.1%에서 49.5%로 18.4%나 높아졌고, 김정일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이 37.8%→50.3%로 1년 사이에 12.5% 포인트나 늘어났다. 이러한 비판적 의식은 20대와 50대이상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서 빠르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함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이념적 지형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진보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았고 보수가 ‘지원대상’으로 북한을 간주한데 반해, 올해는 보수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진보가 ‘지원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는 현 정부들어 인도주의 지원문제가 대북정책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진보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5. 소결

대북인식 변화 추이의 특징을 보면 북한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인식은 1993년 80%라는 높은 ‘긍정인식’으로 시작하여 1995~97년에 36~37%까지 낮아졌으며, 1998년을 지나면서 ‘긍정인식’이 다시 강화되어 2008년 80%로 높아져 지난 10년 동안 긍정적 인식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협력’과 ‘지원’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된 것과는 달리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전쟁위기의식 등은 남북관계의 상황과 사건의 발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은 1995년에 51.9%로 가장 높았으며, 1999년에 28.2%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은 최근 1년 사이에 31.1%(07)에서 49.5%(08)로 18.4%나 높아졌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전쟁위기의식은 지난 15년 동안 40%~60% 사이를 반복하는 양상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인식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성인인구에 새로 유입되는 20대 연령층이 북한을 부정적,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보수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진보층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진보-보수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북인식은 북한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활동의 경험, 대북정책의 변화, 통일을 위한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며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대북활동 및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며 우호적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남북회담의 정례화나 미군철수, 북한인권개선 등 여러 대북사안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및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한반도 통일에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촛불시위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평가에 대해 부정적



---

일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이며 우호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Ⅲ. 민주화 선호집단의 통일의식 분석

#### 1.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 통일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만일 구성비 면에서 다수를 점하는 중도성향 국민들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남남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도 집단은 남남갈등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도 정치성향 집단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대체로 보수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진보 대 비진보’ 형 대립구도가 형성되곤 한다. 이에 남남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성향별로 의견차이가 없거나, 정치성향별로는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한 바 있다<sup>6</sup>.

그러나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정책만을 대북정책으로 추진한다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그 폭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책일수록 보수와 진보 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할 것이고, 정부가 남남갈등을 두려워해서 해당 정책을 회피하면 결국에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주변적인 정책만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여론 흐름을 의식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 대북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실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상해본다면, 정부의 적절한 통일정책과 함께 통일에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의 특정집단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통일여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집단은 현재와 같은 진보-보수 축 상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었으면 한다. 현재와 같이 정치성향별 의견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특정 정치성향이 옹호하는 통일정책을 채택하면 다른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남북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집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게 한 시민사회의 민주화 역량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한국사회 구성원이 민주화를 열망하고, 일부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달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도 통일을 열망하고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집단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리

---

<sup>6</sup> 보수, 중도, 진보 등 모든 정치성향 집단에서 70%이상이 동의하는 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김병로·김병조·박명규·서호철·은기수·정은미.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1(2007). 서울: 도서출판 늘봄.

고 과거 민주화를 추진했던 시민사회의 그 역량이 통일을 이루는데 마찬가지로 작용할 수 없을까? 민주화를 이룬 한국 국민의 시민의식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어떤가?<sup>7)</sup>

이에 이 글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을 추출하고, 이들이 통일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타집단과 비교한 다음, 이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았다.

## 2. 민주화 선호집단의 추출과 기본 특성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은 누구인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당위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성향처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추출하기 힘들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적 발전이나 민주화와 크게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나열하고, 각 사건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2-Ⅲ-1>은 한국 현대사 제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제시한 것이다.<sup>8)</sup> 각 사건이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순으로 제시

7-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7년 통일외식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특히 박명규 통일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2007년도 통일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 차례 분석한 바 있다(김병조,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선호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2007). pp. 25-52.). 따라서 이 글은 완전히 새롭다기보다 한번 시도했던 분석방식을 2008년도 자료에 적용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다만, 2007년도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발표 때 토론을 해주신 함인희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여 ‘민주화 선호’ 변수를 조작화하는데 사용한 변수를 약간 수정하였다.

8- 각 사건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지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이라는 5응답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하면, 4.19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고, 이어서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5.16 순이다. 10월 유신이 한국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대응하게 존재함을 말해 준다.

**표 2-III-1**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사건	(사례)	평균	표준편차
4.19	1213	.3139	.51565
5.16	1213	.1514	.56939
10월 유신	1213	-.0037	.57238
광주민주화 운동	1213	.2552	.60185
6월 항쟁	1213	.2137	.51783

점수부여: '매우 긍정적=1.0', '대체로 긍정적=0.5', '잘 모름=0.0', '대체로 부정적=-0.5', '매우 부정적=-1.0'

통상 4·19,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5.16이나 10월 유신은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 확립과 연계시키지만, 질문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민주화'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가 무엇인지 추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Eigen Value 1이상)이 추출되었고(<표 2-III-2>), 변수와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 카이저(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막스 회전을 통해 회전된 성분행렬을 구하였다(<표 2-III-3>). [그림 2-III-1]은 '성분1'이 '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분2'가 '5·16', '10월 유신'을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III-2 요인분석 : 설명된 총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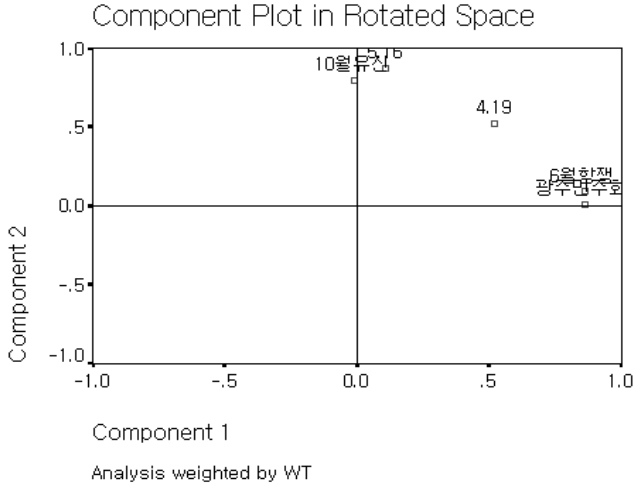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된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누적 %	합계	% 분산	누적 %	합계	% 분산	누적 %
1	2.176	43.528	43.528	2.176	43.528	43.528	1.770	35.404	35.404
2	1.280	25.597	69.126	1.280	25.597	69.126	1.686	33.722	69.126
3	0.729	14.584	83.710						
4	0.431	8.627	92.337						
5	0.383	7.663	100.000						

표 2-III-3 성분행렬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		성분	
	1	2	1	2
4.19	.736	.040	.517	.525
5.16	.669	.574	.109	.875
10월 유신	.530	.597	-.010	.798
광주민중화 운동	.646	-.573	.863	.011
6월 항쟁	.699	-.514	.863	.090

a 추출된 2성분

b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 3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그림 2-III-1]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후)

그리고 성분1에 대해 ‘민주화 선호’라는 변수 명을 붙였다.<sup>9</sup> ‘민주화 선호’ 변수의 변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계수행렬을 제시하면 [수식1]과 같다. 개인별 민주화 선호 변수의 변수 값은 4.19에서 6월 항쟁까지 개별 사건에 응답한 점수에 각각 0.255(4.19)에서 0.508(광주민주화)까지의 계수를 곱해서 더하며 된다.

$$\begin{aligned} \text{민주화 선호} &= 0.229 \times (4.19) - 0.074 \times (5.16) - 0.134 \times (10\text{월 유신}) \\ &\quad + 0.521 \times (\text{광주민주화}) + 0.508 \times (6\text{월 항쟁}) \end{aligned} \text{ [수식1]}$$

<sup>9</sup> ‘성분2’는 ‘안정 선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결국 한국사회의 주요 사건을 민주화라 측면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발전 선호의 계수 행렬을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안정선호} &= 0.229 \times (5.16) + 0.509 \times (10\text{월유신}) - 0.132 \times (\text{광주민주화}) - 0.081 \times (6\text{월 항쟁}) \end{aligned} \text{ [수식2]}$$

민주화 선호 변수는 평균이 0.00, 표준편차가 1.00이고 최소가 -2.67, 최대가 2.10이다. 이에 민주화 선호 값이 0.5이상인 국민을 ‘강한 민주화 선호 집단(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0.5이상 집단을 ‘중간정도 민주화 선호 집단(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집단을 ‘약한 민주화 선호 집단(민주화 선호 ‘약’)'으로 구분하였다.<sup>10</sup>

<표 2-Ⅲ-4>는 민주화 선호 집단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제시한 표이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의 민주화 선호도 평균은 1.07로 민주화 선호 ‘중’ 집단 0.11 및 민주화 선호 ‘약’ 집단 -1.09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2-Ⅲ-4 민주화 선호 집단의 특성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n)
구성비	32.4	32.6	35.0	100.0(1,213)
민주화선호 평균	1.07	0.11	-1.09	
성별				
남자	38.5	33.3	28.2	100.0( 610)
여자	26.2	31.8	42.0	100.0( 603)
연령				
20대 이하	33.2	32.9	33.9	100.0( 304)
30대	31.9	35.6	32.5	100.0( 320)
40대	35.3	32.7	32.0	100.0( 309)
50대 이상	29.2	28.5	42.3	100.0( 281)

(계속)

10. 민주화선호 변수의 변수 값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1.0을 기준으로 3분할 수도 있다. ±1.0을 기준으로 해보니 각각의 집단 구성이 14.9%, 68.5%, 16.5%였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집단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정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0.5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n)
교육수준 중졸이하	23.6	29.2	47.2	100.0( 144)
고졸	27.2	32.9	39.9	100.0( 547)
대재이상	40.3	33.1	26.6	100.0( 523)
소득수준 200만미만	30.6	34.1	35.3	100.0( 232)
200-299만	31.8	29.8	38.3	100.0( 399)
300-399만	30.4	34.8	34.8	100.0( 339)
400만이상	38.5	32.7	28.8	100.0( 226)
정치성향 진보	45.3	31.1	23.5	100.0( 289)
중도	27.6	36.6	35.8	100.0( 587)
보수	29.6	26.9	43.5	100.0( 338)

남자는 민주화 선호가 강한 비율이 높고, 여성의 경우는 민주화 선호가 약한 비율이 높지만,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분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집단이 특정 집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지 않다. 모든 하위 집단에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이 상당수 존재한다. 각 하위 집단마다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이 있었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가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또한 실현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정치성향별 민주화 선호도 분포이다. 비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비율이 높지만, 중도나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1/4이상이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중도 정치성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의 정치 성향별 구성비는 '진보 :

중도 : 보수= 33.3% : 41.2% : 25.5%이다. 통상 ‘민주화 선호자→진보’라는 식으로 간주되었지만,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 구성에서 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3는 중도와 보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1</sup>

민주화 선호변수와 정치성향 변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표 2-III-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에 따른 응답분포와 정치성향에 따른 응답분포가 크게 다르다. 민주화 선호도와 정치지향이 서로 중첩되지만, 두 변수가 같은 차원에 있는 변수는 아니다.

**표 2-III-5** ‘민주화 선호’ 및 ‘정치성향’ 별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단위: %)

		민주화 선호			정치성향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진보	중도	보수
4.19	긍정적 영향	90.9	76.7	35.4	73.8	66.5	61.4
	잘모름	3.8	11.4	33.5	9.6	19.3	18.2
	부정적 영향	5.3	11.8	30.1	16.7	14.2	20.4
5.16	긍정적 영향	58.0	66.1	36.9	51.8	56.1	49.3
	잘모름	5.1	15.7	33.4	13.8	21.0	18.2
	부정적 영향	36.9	18.3	29.8	34.5	22.9	32.5
10월 유신	긍정적 영향	34.8	55.3	28.0	38.4	43.0	33.1
	잘모름	11.4	19.3	37.6	17.4	25.6	23.9
	부정적 영향	53.9	25.4	34.4	44.2	31.5	43.1

(계속)

<sup>11</sup>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사회로 발전하는 데 진보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성향이 중도나 보수라 할지라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역으로 진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민주화를 약하게 선호하는 비율이 23.5%정도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진보→민주주의 선호’라고 단정해서도 곤란하다.





		민주화 선호			정치성향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진보	중도	보수
광주민주화 운동	긍정적 영향	99.7	80.0	9.6	73.7	60.5	53.8
	잘모름	0.3	7.1	32.0	7.0	14.9	17.0
	부정적 영향	0.0	12.9	58.4	19.3	24.7	29.2
6월 항쟁	긍정적 영향	97.2	64.2	8.9	66.0	54.3	47.7
	잘모름	2.8	24.5	41.9	16.9	25.1	26.4
	부정적 영향	0.0	12.4	49.2	17.0	20.5	25.9

원래는 4 단계로 제시되었으나,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하여 제시하였다.

두 변수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이 나타나지만, 민주화 선호도의 차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민주화 선호에 따른 집단구분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집단이라기보다 연구자가 응답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한 가상의 범주이다.<sup>12</sup> 그리고 현재 구성한 3 집단구분은 집단 간에 민주화 선호에 대한 '양적' 차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집단 간에 '질적' 차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에 대한 선호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가 한국사회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민주화 선호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라면, 그리고 이들의 관심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된다면, 이들은 남북통일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끌 수

<sup>12</sup> 정치성향은 응답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민주화 선호도는 응답 특성에 따라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만든 범주이다.

있는 기반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표 2-III-6 정치에 대한 관심

(단위: %)

		민주화 선호			정치성향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진보	중도	보수
정치에 대한 관심	관심이 있다	50.1	37.3	37.2	60.8	31.9	41.2
	관심이 없다	49.9	62.7	62.8	39.2	68.1	58.8

원래는 4 단계로 제시되었으나,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하여 제시하였다.

### 3. 민주화 선호 집단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먼저 민주화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통일과 관련된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차이가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 특히 민주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통일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표 2-III-7>은 남북통일의 필요성, 통일가능시기,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을 민주화에 대한 선호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sup>13</sup>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III-7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단위: %)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37.0	23.5	17.9
	약간 필요하다	20.2	28.9	28.1
	반반/그저 그렇다	20.4	27.6	22.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1	17.0	23.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3	3.0	8.7
통일가능시기	5년 이내	4.1	1.0	1.7
	10년 이내	13.5	13.9	11.8
	20년 이내	25.4	23.0	17.9
	30년 이내	16.8	15.9	13.9
	30년 이내	24.2	25.8	24.8
	불가능하다	16.0	20.3	30.0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가능한 빨리 통일	11.0	8.9	7.8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73.2	67.1	57.9
	현재대호가 좋다	10.2	17.5	20.9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5.6	6.6	13.4
통일이 되어야할 가장 큰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51.8	62.1	59.4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22.3	12.9	16.3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14.5	14.6	14.4
	이산가족 고통 해결하기 위해	6.6	8.3	5.7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3.6	1.3	3.3
	기타/무응답	1.2	0.8	0.9

최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현재대호가 좋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나마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화 '강'의 경우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 대호가 좋다거나(10.2%),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5.6%)는 의견이 합해서 20%미만

이다. 이는 민주화 선호 ‘중’ 집단의 24.1%나 민주화 선호 ‘약’ 집단의 34.39%와 크게 대비 된다. 민주화를 선호할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11.0%)은 소수이고,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73.6%)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오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민주화를 이루려고 노력한 이들의 특성이 통일 과정에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민주화 선호 집단은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표 2-Ⅲ-8>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화 선호 집단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원하는 가장 큰 원천은 ‘민족주의(같은 민족이니까)’적 감정이다.<sup>14</sup> 하지만 ‘발전주의(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입장에서 통일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22.3%)이 타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다. 통일 의식이 문화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타 집단에 비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판단은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견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통일이 국가(19.6%)나 개인(6.4%)에게 매우 큰 이익을 가져줄 것이라는 생각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 높다는 점이다.<sup>15</sup>

14. 조사 시점에 따라 변동 폭이 존재하지만, 한국 국민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문화적 민족주의이다.

15. 현실적으로 통일이 되면 경제적 부담 등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표 2-III-8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단위: %)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통일이 되어야할 가장 큰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51.8	62.1	59.4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22.3	12.9	16.3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14.5	14.6	14.4
	이산가족 고통 해결하기 위해	6.6	8.3	5.7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3.6	1.3	3.3
	기타/무응답	1.2	0.8	0.9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9.6	10.6	6.1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5.2	37.8	33.9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36.2	37.8	41.4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8.9	13.9	18.6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6.4	1.8	1.9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7.2	26.2	20.0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43.8	42.0	44.0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22.6	30.1	34.1

#### 4. 민주화 선호 집단의 북한에 대한 인식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 2-III-9>).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화 선호에 관계없이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수이며, 이어서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대신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2-III-9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지원대상	22.4	22.3	20.9
협력대상	60.6	56.7	55.6
경쟁대상	3.6	3.8	4.2
경계대상	8.4	13.7	12.0
적대대상	5.1	3.5	7.3
계	100.0 (393)	100.0 (395)	100.0 (426)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합하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13.5%인데 반해, '중' 집단은 17.2%, '약' 집단은 19.3%이다. 대략 그 정도 차이만큼 민주화선호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다.

민주화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집단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타 집단에 비해 약간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다(<표 2-III-9>). 타 집단보다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10.7%)나 통일희망정도(12.4%)를 다소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그 비율은 10% 남짓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 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85.0%)이 타 집단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을 '친북'세력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표 2-III-10 북한 체제 및 정권에 대한 인식

(단위: %)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	신뢰한다	10.7	5.4	4.2
	신뢰하지 않는다	89.7	94.6	95.8
김정일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	원한다	12.4	10.1	6.6
	원하지 않는다	87.6	19.9	93.4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	시급하다	85.0	71.9	71.7
	시급하지 않다	15.0	28.1	28.3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	변하고 있다	58.7	48.4	44.7
	변하지 않고 있다	41.3	51.6	55.3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 도움이 되는 정도	도움이 된다	49.3	41.7	41.8
	도움이 되지 않는다	50.7	58.3	58.2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도움이 된다	72.5	59.8	49.1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5	40.2	50.9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있다	52.2	52.6	51.9
	없다	47.8	47.4	48.1
북한 핵무기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위협을 느낀다	60.8	57.2	66.1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39.2	43.8	33.9
북한 핵무기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한다	76.8	71.1	68.5
	동의하지 않는다	20.6	25.3	27.1
	잘모름	2.5	3.6	5.3

원래는 4 단계로 제시되었으나,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하여 제시하였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나 통일의지를 타 집단보다 조금 높게 평가한 이유는, 이들이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58.7%)이 높고,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비율(49.3%)이나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72.5%)가 높은 데서 짐작할 수 있다.<sup>16</sup>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통일을 위해서는 '교류와 지원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을 현실적인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북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현실, 북한을 한국 체제를 위협하는 실체로 보는 관점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60.8%)는 민주화 선호가 약한 집단 보다 작지만,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52.2%)에 대한 의견은 다른 집단과 유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76.8%)에 대한 의견은 다른 집단보다 많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김정일 정권의 현실적인 위협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김정일 정권을 통일을 위한 협의대상으로 보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난다(<표 2-Ⅲ-11>).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경제발전수준 및 정치제도에서 남북한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치(선거), 경제발전수준(생활수준), 언어 사용 등에 있어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보다 남북한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남북한 간의 법률제도 차이나 생활풍습 등 일상생활의 차이에 대한 의견은 타 집단과 유사하거나 작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문화보다 정치 및 경제적 차이를 크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민주화 선호 집단은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제도적 차이 극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6.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대한 관용성(tolerance)이 높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나타난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새터민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17. 민주화 선호도가 높은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사회인지도(주체사상, 천리마





표 2-III-11 남북한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

(단위: %)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남북한 선거방식 차이	많이 있다	72.8	68.7	70.0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	27.2	31.3	30.0
남북한 생활수준 차이	많이 있다.	79.6	69.9	70.6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	20.4	30.1	29.4
남북한 법률제도 차이	많이 있다	65.4	65.6	64.9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	34.6	35.4	35.1
남북한 언어사용 차이	많이 있다	45.0	38.9	42.7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	55.0	61.1	57.3
남북한 생활풍습 (관혼상제 등) 차이	많이 있다	35.4	36.7	41.4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	64.6	63.3	58.6

## 5. 민주화 선호 집단의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민주화 선호집단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얼핏 언급하였지만, 민주화 선호집단은 접촉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집단보다 그간의 여러 대북정책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그리고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제반 현안 역시 타

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 축전 등)도 높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것은 타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18. 여기 포함된 정책은 인도적 지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 남북 간 회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기적인 남북간 대화가 통일에 가장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집단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표 2-Ⅲ-12>. 민주화 선호 ‘강’ 집단은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78.9%), 군사적 긴장해소(78.6%), 북한의 개혁과 개방(76.3%),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72.2%)에 대해 70%이상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타 집단에 비해 10%이상 높은 것이다.<sup>19</sup>

표 2-Ⅲ-12 통일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사안별 시급성

(단위: %)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시급하다	72.2	61.5	52.2
	시급하지 않다	27.2	38.5	47.8
북한의 개방과 개혁	시급하다	76.3	67.2	63.7
	시급하지 않다	23.7	32.8	36.3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시급하다	78.9	69.9	68.0
	시급하지 않다	21.1	30.1	32.0
군사적 긴장해소	시급하다	78.6	68.7	64.6
	시급하지 않다	21.4	31.3	35.4

원래는 4 단계로 제시되었으나,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에 대해 타 집단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표 2-Ⅲ-13>).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86.5%)이나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82.7%)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sup>20</sup>

19- 질문 문항에는 남향에서의 미국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화 선호 집단은 남향에서의 미군철수(35.2%)에 대해서도 타 집단에 비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40%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타 집단과의 차이도 타 분야보다 크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철수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20- 특기할 것은 민주화 ‘약’ 집단에서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긍



그러한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지난 정부가 체결한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과반수(57.9%)가 계승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32.0%)와 잘 모름(10.2%)을 합치면 40%가 넘기 때문에 절대 다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화 ‘중’ 집단(40.1%)이나 민주화 ‘약’ 집단(29.0%)에 비해서는 남북 정부 간 합의사항은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이 글은 민주화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향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해왔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23.2%)가 낮고,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의견을 반영한다(16.0%)는 의견 역시 적다.<sup>21</sup>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이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열의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의 의견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각각 39.8%, 38.9%인데 정치성향이 보수인 집단에서 각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8%, 55.0%였다는 점이다. 역으로 민주화 선호가 ‘약’한 집단은 통일과정 중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이다.

<sup>21</sup>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오고 있다. 타 집단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나 국민 의견 반영정도도 절대수치 면에서 높다고 할 수 없다.

표 2-III-13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긍정적	86.5	75.3	39.8
	부정적	14.5	24.7	60.2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긍정적	82.7	73.6	38.9
	부정적	17.3	26.4	61.1
지난 정부 체결한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	동의한다	57.9	40.1	29.0
	동의하지 않는다	32.0	43.1	51.4
	잘모름	10.2	16.8	19.6
현 정부(2008년) 대북정책 만족도	만족	23.2	33.9	41.9
	불만족	76.8	66.1	58.1
대북정책결정시 국민의견반영정도	반영하고 있다	16.0	24.3	29.7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84.0	75.7	70.3

원래는 긍정, 부정이 각각 2단계로 제시되었으나 합쳐 제시하였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보고,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08년 10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주요 요인의 하나가 '북한 변수'가 발생한 것 때문인데, 북한군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북한정부의 '북핵문제의 해결의지 미약'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이다.

<표 2-III-14>는 이상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화 선호도별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표 2-III-14 대북 정책 현안 관련 찬반의견

(단위: %)

		민주화 '강'	민주화 '중'	민주화 '약'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	북한	41.2	44.3	48.5
	적대적 남북관계	28.0	25.1	22.9
	관광객본인	22.3	22.5	21.7
	현대아산	8.4	8.1	6.9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찬성	65.9	62.7	60.2
	반반/그저그렇다	23.7	28.2	26.6
	반대	10.4	9.1	11.7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한다	찬성	39.8	37.0	47.3
	반반/그저그렇다	34.7	43.0	40.0
	반대	25.5	20.0	12.7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찬성	36.1	36.1	42.6
	반반/그저그렇다	36.1	43.2	42.6
	반대	27.8	20.7	14.9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한다	찬성	51.3	38.1	28.0
	반반/그저그렇다	28.1	37.1	38.8
	반대	20.6	24.8	33.2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도별로 의견 차이가 없었다. 모든 집단에서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적대적인 남북관계, 관광객 본인의 순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든 집단에서 60%를 넘고 있다.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도 북한정권이 공동조사에 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수의 한국 국민은 '금강산 관광'이 남북교류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관광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일반국민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거나 하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 측 태도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기타 제반 여건이 정비되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광 사업이라고 보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견은 민주화 선호도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은 반면, 민주화 선호도가 약한 집단은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하지만 어느 입장도 50%가 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 내에서도 북핵문제를 대북관계에 직접 연계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분리 대응해야하는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sup>22</sup>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관계에 ‘북한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여기서는 북한정권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북한 정권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한과 남한국민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북 지원정책이나 경제협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은 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지만, 북한 정부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하다.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제반 정책이 비민주적 원칙이나 행태를 지속하는 한,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도 남북교류를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제반 정책이

<sup>22</sup>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경제협력을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 형성은 30-40%정도 되는 ‘반반/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지만, 민주화 선호집단은 한국 정부가 보다 활발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으로 제시할 것이 예상된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동일한 ‘민주주의’ 잣대로 남북한 정책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점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에서 민주화와 통일이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표 2-III-15>). 아쉽게도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었다. 만일 포함되었다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북한의 민주화가 통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다.<sup>23</sup>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통일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표 2-III-15**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단위:%)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1.4	18.0	20.0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7.2	24.8	20.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1.4	57.2	59.5
계	100.0 (393)	100.0 (395)	100.0 (426)

<sup>23</sup>-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의 인권개선이 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표10> 참조).

## 6. 소결

이 글은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했다면, 이들 집단이 통일과정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선호’라는 변수를 추출하였고, 변수 값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서 살펴 보았다. 민주화 선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보니 민주화 선호도와 정치 지향이 서로 중첩되지만, 같은 차원에 있는 변수는 아니었다.

민주화 선호 집단은 통일에 대한 욕구가 큰 집단이다. 타 집단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통일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타 집단에 비해 북한 정권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이들이 소위 통일 지상주의나 북한을 낭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남북대치상황에 대해서는 타 집단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한 가운데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집단은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제반 남북교류 사업을 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집단은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된 데, 한국정부 보다 북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북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전에는 대북교류 확대를 크게 지지하였으나, 현재는 대북교류가 무조건 활발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체제는 상당부분 변하였지만, 북한정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북한정부의 태도나 반응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했던 집단이 북한정권이나 체제도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양쪽의 교류정책이나 통일정책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할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관심이 많았던 집단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사회를 넘어 북한사회도 민주주의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통일을 위해 이들의 역량을 활성화하려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새터민에 대한 인식과 대북·통일 인식의 상호성

우리 정부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sup>24</sup>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교육은 2007년부터 통일 환경 및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요소를 접목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통일교육의 전환은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교

<sup>24</sup> 통일부, 『통일백서 2008』, p.272.



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교육의 대상이 일반 사회성원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여전히 청소년과 교사, 정부기관 및 공기업 간부로 한정되어 있다.

향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과 해결,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인식이다. 남한 사회로 새터민의 입국 행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 12월 말 현재 12만명이 넘는 새터민이 우리 이웃에서 살고 있다. 1997년 1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새터민 관련 법률은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를 지원하는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남한지역 출신의 주민들이 이웃에, 같은 지역에, 한 조직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은 아직은 주된 관심의 영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 위상과 지위를 갖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이 통일의 최종 목표라는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1부 기초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새터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매우 배타적이고 이중적이다. 동포애 차원에서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편견과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보다 거리감을 더 느낀다든가, 결혼상대자로 새터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라든가, 선택적으로 새터민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라든가하는 결과들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하여 준다.

그렇다면 새터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어떤 요인들과 관계를 갖는 것일까?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동포애, 민족의식, 선입견, 편견, 몰이해, 낯섬, 이질감, 이데올로기 등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형성된다. 그런데 분석 결과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 관련 경험 및 인지도 등이 새터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 1. 대북인식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 1) 대북인식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의 차이는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과 관계가 있다. <표 2-IV-1>에 나타나듯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42.5%는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반면 57.5%는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36.4%는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63.5%는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북한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불과 23.9%만이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했으며 76.1%는 새터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32.6%는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67.4%는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23.8%만이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했으며, 76.2%는 새터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은 북한을 경쟁대상이나 경계대상, 또는 적대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보다 새터민과 정서적 친밀감을 더 느끼고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 사업이나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뿐만 아니라 새터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2-IV-1** 대북인식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명)

대북인식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낌	친근하게 느끼지 않음	모름/무응답	
지원대상	42.5	57.5	-	266
협력대상	36.4	63.5	-	699
경쟁대상	23.9	76.1	-	46
경계대상	32.6	67.4	-	138
적대대상	23.8	76.2	-	65

$\chi^2=32.525$        $p<0.001$

## 2) 대북인식과 새터민 수용

대북인식은 새터민의 수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표 2-IV-2>에서 보이듯,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새터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에,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더 이

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새터민은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이고, 반대로 새터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였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48.6%는 입국을 원하는 모든 새터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불과 5.4%만이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또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45.9%는 입국을 원하는 모든 새터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0%만이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북한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39.4%가 모든 새터민의 수용을, 17%는 새터민의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경우에는 불과 28.8%만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새터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55.5%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새터민을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이 14.9%로 북한을 경쟁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33.3%는 모든 새터민의 수용 입장을, 27.1%는 새터민의 수용 불가 입장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북인식은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IV-2** 대북인식과 새터민 수용

(단위: %, 명)

대북인식	새터민의 수용				N
	모두 수용	선택적 수용	수용 불가	모름/무응답	
지원대상	48.6	45.6	5.4	0.5	265
협력대상	45.9	46.0	8.0	0.1	699
경쟁대상	39.4	40.9	17.0	2.8	46
경계대상	28.8	55.5	14.9	0.8	138
적대대상	33.3	39.5	27.1	-	66

$\chi^2=56.378$        $p<0.001$

### 3) 대북인식과 새터민 지원정책

대북인식은 정부의 새터민 지원정책과 관계를 갖는다. <표 2-IV-3>에 나타나듯,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북한을 경쟁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48.1%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고, 51.9%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47.1%가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고, 52.9%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북한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39.9%만이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에 동의하였고, 60.1%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36.1%는 새터민 지원규모 확대를 동의한 반면, 63.9%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는 33.9%만이 새터민 지원규모 확대에 동의하였고, 66.1%는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IV-3** 대북인식과 새터민 지원정책

(단위: %, 명)

대북인식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N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지원대상	48.1	51.9	-	266
협력대상	47.1	52.9	-	699
경쟁대상	39.9	60.1	-	46
경계대상	36.1	63.9	-	138
적대대상	33.9	66.1	-	65

$\chi^2=32.433$        $p<0.001$

## 2.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 1)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과 관련된 경험은 새터민에 대한 정서적 감정과 관계를 갖는다. 새터민과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만난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 지원활동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2.5%는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반면에,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는 34.5%만이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대북 지원활동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54.1%가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낀 반면에,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는 35.7%만이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분석 결과 북한지역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의 방문 경험과 북한 관련 북한 방송,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역시 약한 수준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이 새터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IV-4**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명)

북한 관련 경험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음	모름/무응답	
새터민 접촉 경험	있다	52.5	47.5	-	113
	없다	34.5	65.5	-	1,099
		$\chi^2=33.306$ $p<0.001$			
대북 지원활동 및 지원단체 참가 경험	있다	54.1	45.9	-	30
	없다	35.7	64.3	-	1,183
		$\chi^2=20.345$ $p<0.001$			

## 2)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 지원 정책

북한 관련 경험은 새터민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계를 갖는다. 금강산, 개성공단 등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북한의 방송,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강산·개성공단 등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 58.1%는 새터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데 동의하였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44.7%가 동의하였다. 또 북한 방송·영화·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55.7%가 새터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데 동의한 반면에,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40.4%만이 동의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체험이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좀더 관대한 태도를 갖는데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IV-5 북한 관련 경험과 새터민 지원정책

(단위: %, 명)

북한 관련 경험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음	모름/무응답	
새터민 접촉 경험	있다	52.5	47.5	-	113
	없다	34.5	65.5	-	1,099
		$\chi^2=33.306$ $p<0.001$			
대북 지원활동 및 지원단체 참가 경험	있다	54.1	45.9	-	30
	없다	35.7	64.3	-	1,183
		$\chi^2=20.345$ $p<0.001$			

### 3. 북한사회의 인지도와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북한사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새터민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 <표 2-IV-6>에 나타나듯,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인지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군정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응답자의 52.6%, ‘조금 안다’는 응답자의 59.8%,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1.2%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선군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37.9%만이 새터민 지원규모 확대에 동의하였다.

또 주체사상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자의 56.7%, ‘조금 안다’는 응답자의 57.7%는 새터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였다. 반면에 주체사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39.7%,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의 38.3%만이 새터민 지원규모 확대에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천리마운동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자의 57.3%, ‘조금 안다’는 응답자의 53.4%가 새터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천리마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41.3%,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의 41.3%만이 새터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IV-6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 지원정책

(단위: %, 명)

북한사회 인지도		새터민 지원규모 확대			N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선군정치	잘 안다	52.6	47.4	-	35
	조금 안다	59.8	40.2	-	161
	들어본 적 있다	51.2	48.8	-	354
	전혀 모른다	37.9	62.1	-	661
		$\chi^2=39.467$		$p<0.001$	
주체사상	잘 안다	56.7	43.3	-	85
	조금 안다	57.7	42.3	-	307
	들어본 적 있다	39.7	60.3	-	555
	전혀 모른다	38.3	61.7	-	264
		$\chi^2=46.498$		$p<0.001$	
천리마운동	잘 안다	57.3	42.7	-	71
	조금 안다	53.4	46.6	-	292
	들어본 적 있다	41.3	58.7	-	587
	전혀 모른다	41.3	58.7	-	263
		$\chi^2=32.302$		$p<0.001$	

#### 4. 통일 인식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성

##### 1) 통일 인식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조사 분석 결과 통일 인식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IV-7>에 나타나듯,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45.9%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54.1%는 친근하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34.1%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끼며 65.9%는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에는 불과 32.7%의 응답자만이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67.3%의 응답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에는 30%의 응답자만이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무려 70%의 응답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표 2-IV-7 통일의 필요성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명)

통일의 필요성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낌	친근하게 느끼지 않음	모름/무응답	
매우 필요하다	45.9	54.1	-	314
약간 필요하다	34.1	65.9	-	312
반반/그저그렇다	32.0	68.0	-	284
별로 필요하지 않다	32.7	67.3	-	237
전혀 필요하지 않다	30.0	70.0	-	65

$\chi^2=47.292$     $p<0.001$

## 2) 통일 인식과 새터민 수용

통일인식은 새터민 수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표 2-IV-8>에서 보듯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대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록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자의 49.8%는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새터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자는 4.7%에 불과했다. 또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라는 응답자의 41%는 모든 새터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10.2%의 응답자만이 새터민의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21.7%만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새터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36.9%의 응답자는 더 이상 새터민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새터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54.9%로 통일인식의 태도 중에서 조건부 수용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IV-8 통일의 필요성과 새터민 수용

(단위: %, 명)

통일의 필요성	새터민 수용				N
	모두 수용	선택적 수용	수용 불가	모름/무응답	
매우 필요하다	59.8	35.2	4.7	0.4	314
약간 필요하다	41.0	48.9	10.2	-	313
반반/그저그렇다	38.2	54.9	6.2	-	28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6	52.1	11.8	0.7	238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7	31.5	36.9	0.5	67
$\chi^2 = 109.376$ $p < 0.001$					



## 5. 소결

조사 분석 결과 대북인식 및 통일인식은 새터민에 대한 인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은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보다 새터민과 정서적 친밀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새터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대북 지원이나 남북경협이 일정하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북인식은 새터민의 수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새터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에,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북인식은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대북인식과 정부의 새터민 지원정책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 관련 경험은 새터민에 대한 정서적 감정과 관계를 갖는다. 새터민과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만난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 지원 활동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

터민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들이 새터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 관련 경험은 새터민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계를 갖는다. 금강산, 개성공단 등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북한의 방송,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체험이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 관대한 태도를 갖는데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는 새터민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인지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인식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과 새터민의 수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대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앞서 제1부 기초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인식의 약화는 새터





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타성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일수록, 북한과 관련된 직접 경험이 많을수록, 통일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 또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터민의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과 관련된 직접 경험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현실주의적 변화

### 1. ‘민족주의적’ 정서의 변화와 주변국 관계 인식의 차이

남북한이 분단된 지 60년이 넘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각각의 발전과정을 걸어 왔으며,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 6.25 전쟁의 경험과 그 이후 끊이지 않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은 반드시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적 문화를 공유하고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률은 2007년 50.6%에서 2008년 57.9%로 더 늘어났다. 반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



해서”나 “남북 간에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떨어져 15% 안팎에 머물렀으며, “이산가족의 공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미치지 못하였다.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통일을 현실적인 문제로서 보다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며, 같은 비율로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10명 중 7명 이상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보는 인식과는 매우 대비된다. 통일을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 그 추진과정에서 대화의 대상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극히 불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10명 중 3명 이상의 비율로 주변 4국과 북한의 5개국 중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에 비해서는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서 갖는 친근감보다는 1/3정도의 비중에만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적 친화성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4강의 신화를 달성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응원의 열기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북한과 미국이 월드컵대회에서 맞대결하는 것을 상정하여,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를 질문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팀을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이 2007년 80.8%였으며, 2008년에는 다소 줄었으나 76.1%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미국

팀을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기껏해야 4-6% 수준에 머물렀다. 양 팀을 모두 응원하겠다는 응답도 6% 정도였으며,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07년에 8.8%, 2008년에 10.9%였다. 운동경기가 인간의 정서적 친화성을 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5% 줄어들었으나, 미국 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팀 응원’과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음’으로 절반씩 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팀에 대한 응원을 거두어들이더라도 미국 팀을 응원하는 쪽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보는 인식에 있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표 2-V-1 북·미 간 월드컵 축구시합 시 응원 국가

(단위: %)

구분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80.8	76.1	4.0	6.6	6.1	6.4	8.8	10.9	0.3	0.1

북한 팀과 미국 팀 간의 경기에서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에 사회인 구학적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20대 연령층에서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동시에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현 시대 한국 사회의 20대 연령층에서는 ‘정서적 민족주의’의 경향이 상대



적으로 열어지면서 보다 자유로운 사고(思考) 양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북한 팀을 선택한 비율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미국 팀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 팀과 미국 팀 간의 선택지는 큰 차이가 없다.

다른 변수에 비해 지역별 변수를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축구시합 시에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2007년과 2008년에 다소의 차이가 나타난다. 제주를 제외하면, 2007년에 수도권, 중부권 및 영남권은 모두 80% 정도로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고 한 반면 호남권은 90%를 넘었다. 또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다른 권역의 절반 이하의 비율을 보였으며, 미국 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그런데 2008년에는 호남권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전년도에 비해 16% 이상 감소했으며, 동시에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6% 이상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정서적 민족의식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2007년에 호남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더욱 강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08년에는 호남권도 다른 권역과 거의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미국 팀 응원’을 선택한 응답이 강원 다음으로 두 번째이며, ‘양 팀 모두 응원’ 및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음’으로 변화율을 보면 200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 민족의식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V-2 지역별 북·미 간 월드컵 축구시합 시 응원 국가 (단위: %)

구분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음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지역	수도권	79.0	75.2	3.9	6.5	7.6	6.4	9.1	11.8
	중부권	82.2	84.1	3.4	4.1	3.4	4.3	11.0	7.5
	호남권	90.8	74.5	2.5	8.7	2.5	5.6	4.2	11.2
	영남권	80.8	76.5	4.6	6.5	5.9	7.3	8.7	9.8
	강 원	80.6	69.1	8.3	9.3	2.8	6.5	8.3	15.1
	제 주	61.5	73.1	0.0	7.7	7.7	11.5	23.1	7.7
전체	80.8	76.1	4.0	6.6	6.1	6.4	8.8	10.9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북한과 미국에 대한 상대적 관계 정도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또 각종 여론 조사에 주요 문항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등장한 이후이다. 그 이전 냉전 시기에는 한국, 북한, 미국의 3자 관계는 한국과 미국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관계였다. 한편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이 시작되면서 그 이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 서서히 진화하기 시작했다. 북핵 문제 등장 이후에는 동 문제를 비롯하여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공조의 문제가 주요 사안이 되었으며, 때로는 남북관계 문제와 갈등을 빚는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한국, 북한, 미국의 3자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의 기회가 늘어나고 북한과의 접촉 및 교류·협력이 늘어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서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를 대치적인 관계로 부각시키려는 현상도 등장하였다. 또한 한·미공조를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쟁점화 하려는 현상도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친미’이고 ‘반북’인 것으로 폄하하는 현상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강조가 ‘친북’이 아닌 것처럼 ‘한미공조’의 강조가 ‘친미’는 아닌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문제는 그 본질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의 수단이자 과정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포괄적 의미에서 정책 목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07년과 2008년에 두 사안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선택적인 사항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의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다수가 두 문제를 선택적으로 보기 보다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007년에는 그 비율이 44%정도였고, 2008년에는 더 늘어나 10명 중 5명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2008년은 2007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인다. 2007년에 ‘남북관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은 ‘한미공조’를 선택한 비율의 두 배를 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9%정도 크게 줄어든 대신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 늘어난 반면, “한미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5%만 증가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응답률 간의 간격도 크게 축소됐다. 즉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를 선택적인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증대된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 민족주의’가 반드시 그대로 투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V-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		모름/무응답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38.2	29.5	17.6	20.1	43.9	49.8	0.3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면, 2007년에는 교육수준 변수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이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반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2007년에 자신을 진보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남북관계 개선'(46.9%), '똑같이 중요'(35.0%), '한미공조'(18.2%)의 순으로 응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공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자신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똑같이 중요'(52.0%), '남북관계 개선'(28.4%), '한미공조'(19.0%)의 순으로 두 사안이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2008년에 보수층의 응답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진보층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1.3%로 증가하여 '남북관계 개선'(41.2%)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여전히 '한미공조'가 17.2%로 '남북관계 개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보수층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선택하는 데 반해서, 진보층은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공조'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역별 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할 경우 2007년에 호남권에서 다른 권역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부권에서는 '한미공조'를 선택한 비율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선택한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8년에는 호남권과 중부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한미공조’를 선택한 비율의 2-3배 이상이었던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를 선택한 비율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다른 권역에 비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를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사안이 공히 중요하다는 균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2-V-4 지역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		모름/무응답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지역	수도권	37.6	24.6	17.1	21.4	44.7	52.9	0.7	1.0
	중부권	39.8	46.1	22.0	13.7	38.1	40.2	0.0	0.0
	호남권	45.4	43.7	16.8	17.8	37.8	37.7	0.0	0.8
	영남권	34.7	28.0	17.3	20.2	48.0	51.7	0.0	0.0
	강원	61.1	23.4	16.7	29.0	22.2	47.6	0.0	0.0
	제주	7.7	29.5	15.4	7.7	76.9	62.8	0.0	0.0
전체		38.2	76.1	17.6	6.6	43.9	49.8	0.3	0.6

## 2.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과 주변국의 위협 인식 관계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힘의 각축장이 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외교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으로부터 확고한 협력을 확보하는 일 또

한 마찬가지로이다. 통일은 그 상대방인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일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국이 이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이익과의 관계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통일에 우호적인 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에서 우선 순위나 정책 목표, 수단 등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어떠한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변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통일을 향한 외교적 목표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표 2-V-5**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명)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N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미국	5.3	19.9	24.6	10.1	0.7	726
	일본	3.5	1.7	3.0	1.3	0.2	115
	북한	4.6	9.1	3.9	2.8	0.1	246
	중국	2.2	2.8	2.4	0.3	0.1	93
	러시아	0.6	0.6	0.0	0.5	0.0	20
N		193	408	407	180	12	1200

Chi-Square = 137.109 p < 0.001

2008년 조사에서 한반도 주변 4국과 북한의 5개국 중 우리 국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순이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미국을 선택했으며, 10명 중 2명은 북한을, 10명 중 1명은 일본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다소 미치지 못했으며, 러시아를 선택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국가는 일본,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순이었다. 일본과 북한은 모두 우리 국민 10명 중 3-4명의 비율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5%내외의 비율로 지적되었으며 러시아를 선택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가 반드시 한반도를 가장 위협하지 않는 국가가 아니며, 가장 가깝게 느끼지 않는 국가가 반드시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두 항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교차하여 분석해보면, 우리의 주변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유효한 응답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 북한을 동일한 비중으로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두 나라에 대한 응답자의 수는 단지 1명의 차이가 날뿐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계 설정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와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조합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조합이 가장 많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의 비율로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보고 있다. 오랜 기간의 한·미동맹관계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수준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 등의 조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의 비율로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동시에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과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 자국의 안보적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또 한국 및 일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안정과 평화의 질서 구축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한국으로서는 당면한 과제인 북핵 문제의 해결, 향후 대규모 남북경협이 추진될 경우 동원되어야 할 국제자본의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에 우호적인 외적 환경의 조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결되어야 하는 외교적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중국의 위협을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우리 국민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크다. 10명 중 1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미 관계 못지않게 한·중 관계의 발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동북아지역 질서에 차지하고 있는 미·중의 역할을 고려할 때, 역시 한국 정부에 외교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일본, 미국, 북한의 순이다. 특히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동시에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는 국민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 북·일 관계의 개선 및 정상화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장차 통일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당장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일본의 참여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과 일본이 각각 상대방에 느끼는 적대감의 해결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외교 정책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그리고 동일한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느끼는 비율은 각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크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준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분석해보면, 두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배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우리 국민의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을 ‘친미-반북’이나 ‘반미-친북’처럼 상호 영향을 주면서도 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2008년의 조사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라는 두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을 비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역(逆)의 상관관계도 없었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면 동시에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정(正)의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관계도 통일외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탈냉전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진보층은 ‘반미적’이며 보수층은 ‘친미적’이라고 분류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진보층은 북한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반면, 보수층은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이 나 이념적 성향을 흔히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하지만 그 기준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으며 또 보수, 중도, 진보의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부족하다. 심지어 학문적 논의에서조차도 개념에 대한 정의에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미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 간

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2007년의 조사에서 “미국, 북한, 일본 등에 대한 태도에서 소위 진보와 보수의 의미가 유의미하게 구분되곤 한다”는 주장 아래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및 가장 위협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든 사람들의 비율은 보수층이 가장 높았으며, 진보층의 경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는 나라의 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수층은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분석됐다.

표 2-V-6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 및 주변국의 위협 인식 관계

(단위: %)

정치적 성향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진보적	미국	8.3	13.9	24.7	7.6	1.4
	일본	4.9	0.7	2.8	2.1	0.3
	북한	5.2	10.8	5.2	3.5	0.3
	중국	2.1	2.1	1.7	0.0	0.0
	러시아	1.0	0.7	0.0	0.7	0.0
	계	21.5	28.1	34.4	13.9	2.1
중 도	미국	4.5	22.6	24.5	9.7	0.5
	일본	3.4	1.7	3.4	0.7	0.3
	북한	4.7	7.6	3.1	2.8	0.2
	중국	1.7	3.3	2.8	0.7	0.2
	러시아	0.5	0.7	0.0	0.5	0.0
	계	14.8	35.9	33.8	14.3	1.2

(계속)



정치적 성향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보수적	미국	4.2	20.2	24.4	12.8	0.6
	일본	2.4	2.4	2.4	1.5	0.0
	북한	3.9	10.1	4.2	2.4	0.0
	중국	3.0	2.4	2.4	0.3	0.0
	러시아	0.3	0.0	0.0	0.3	0.0
	계	13.7	35.1	33.3	17.3	0.6

진보적 Chi-Square= 42.691 p < 0.001

중도 Chi-Square= 72.075 p < 0.001

보수적 Chi-Square= 46.081 p < 0.001

그러나 2008년의 경향은 2007년과는 매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 중도, 또는 보수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보고 있으며,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본 사람들은 역시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서 북한과 일본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든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더 느끼거나 덜 느끼지 않는 것이다. 2007년에 비해 진보층의 변화 비율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비해 폭이 상당히 크다. 다만, 보수층에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진보층에서는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드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차이가 크다.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국이 가장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많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일본의 비율이 거의 같다. 또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한반도 평

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지적한 나라는 북한과 미국이다. 다른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로 선택되었을 경우,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로 동일한 국가가 선택된 비율은 북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만큼 북한은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친북 = 반미’이고 ‘반미 = 친북’이라는 식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7년과는 달리 모든 정치적 성향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와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조합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소결

기초분석에서와 같이 심층분석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이 주변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2007년과 2008년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국내정치적 차원에서는 이념적 정향이 다른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주변국에 대한 정책, 특히 한·미 동맹과 대북정책에서의 변화가 현실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가 우리 국민의 통일 관련 인식에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심층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민족주의의 반영으로 본다면, 이러한 정서적 민족주의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나 통일문제를 보는 입장에서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





나 정서적 민족주의는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설 때 정서적 민족주의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방인 북한 정권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친근감은 미국에 대한 친근감의 1/3정도 비중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를 양자택일의 선택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서 두 가지 사안이 공히 중요하다는 균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08년에는 주변 4국 중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큰 폭으로 증대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 북한을 동일한 비중으로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계 설정의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의 비율로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보고 있다. 한·미동맹 관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수준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의 과제를 제기한다. 한편, 우리 국민은 미국, 북한 두 나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친미-반북’ 또는 ‘반미-친북’처럼 상호 배타적 또는 이분법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셋째,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본 사람들은 역시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서 북한과 일본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든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볼 때, 2008년에 진보층의 변화 비율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비해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성향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와 가장 위협적인 국가의 조합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북한과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현실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그들 5개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서 공유의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2008년에 일본에 대한 인식이 무척 악화된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변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신뢰관계에 머물고 있다.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특히 한반도 주변 4국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인 하나라고 할 때, 그들과의 관계 발전이 더욱 세련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2008  
통일의식조사

## 결론

---







이 조사는 거의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지난 1년 사이에 북한,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를 확인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한 사회의 집합적인 의식은 단기간에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어떤 역사적 전환기에는 비교적 단기간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발견된다. 2007년과 2008년은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 전환기였다. 따라서 의식상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이 조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결론에서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이번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첫째는 변화에 나타나는 특징과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이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현실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 1. 변화의 특징과 성격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보수적 경향의 심화이다. 통일 및 북한관련 의식에서의 보수화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통일이라는 목표,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새터민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경향이 발견된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가까운 미래에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비율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북한체제 및 지도부를 보는 시선도 전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이 커졌고,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도 증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이런 보수적 지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항목들에서 또 여러 범주들에서 동일한 성격, 유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일관성은 한국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일종의 큰 흐름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주의 경향의 증대이다. 이제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를 그 자체 독립된 목적가치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경제문제나 안보문제와 같은 다른 현실적 과제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념적인 평가보다는 그것이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변화가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경향이 증대하였다. 이런 현실주의적 태도는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 없이는 통일이 어렵다는 생각에서도 발견되고,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따져보려는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즉 남북관계는 그것이 어떤 실질적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입각하여 판단되는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의 몫과 책임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있다. 통일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북한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성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대북정책을 한국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쌍방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도 어떤 통일이 중요한지, 통일을 위해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체제나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도 일부 상통하는데, 북한이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과 북한의 체제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통일이나 남북관계의 확실한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식은 그 자체로서는 딜레마를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북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지만 그것은 한국정부의 정책선택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한변수가 어쩔 수 없는 외부조건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중요한 내부변수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현저해지고 있다. 미국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이 급속하게 증대했다. 또한 미국은 장차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제일의 주변국으로 꼽혔다. 많은 응답자들이 한반도의 주변강국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가장 통일에 우호적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흥미있는 것은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도 미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이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남북관계와 국제협력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90%에 가까운 정도로 절대적이다. 동시에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리라는 냉정한 인식도 높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국제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결국 냉정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에 긍정적이 되도록 활용하고 동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 하겠다.

## 2. 변화의 요인

불과 1년 만에 이처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학습효과를 들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전은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켰지만, 그 중에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국 햇볕정책으로 지

칭되는 지난 10년의 대북정책기조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 내지 상징적 대립점이 되었던 것이다. 논쟁적이고 정략적인 언론의 보도경향이 덧붙여져 2007년도의 대북 정책관련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정치적인 담론이 되었다. 특히, 정권교체를 바라는 심리를 표현한 ‘잃어버린 십년’이라는 슬로건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선거는 이런 생각을 가능케 할 이유나 근거, 필요한 자료와 개념들을 확산시키는 일종의 대중적 학습과정이 되었다. 북한문제가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대선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담론과 보도가 여론과 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로는, 정권교체효과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그 자체가 보수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특히, 선거전의 논리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부담에 의해서도 보수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원칙을 표방하는 데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은 전면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통일부의 존치를 둘러싼 초기의 논란,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승계여부, 북핵폐기에 대한 철저한 강조, 그리고 북한의 개방과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표명 등 새 정부가 표방한 정책과 주장들이 대중들의 의식과 태도에 꽤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점차 초기의 차별화와 달리 “상생·공영”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내세우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도 6·15선언과 10·4 선언을 포함하여 연속적인 승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지적,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 북한인권문제에 소홀했다는 논의





등은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보수적인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는 민간영역, 시민사회 공간의 담론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했다. 정권의 변화는 이들 민간영역에서도 헤게모니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소외되었거나 억압받았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지식인 및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되었다. 이들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정권의 비효율성과 비인도성을 공격하는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해 내고 있다. 이 중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반복정서에 입각한 것도 있지만 나름의 사실성과 진정성을 지닌 비판적 담론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나 정권의 비효율성 내지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통미봉남적 전략에의 비판 등은 대중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 북한의 반응이 매우 경직되었고 급기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이러한 보수적 담론의 영향력이 수용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한국사회 전반적인 현실주의적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념이나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고자 하는 태도는 최근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구현된 지금 사회전반의 문제를 단일한 이념적 지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 정교한 정책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확대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현실주의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0년의 남북교류의 진전이 가져온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접촉이 진전되는 만큼 북한사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

다는 생각도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북한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식변화를 반영한다. 현실주의적인 경향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경제회생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것에서도 보듯 경제의 안정화와 생활수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대중적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지원이나 남북관계 역시 그러한 경제적 관심에 종속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동반되는 대북정책에 대해 유보적인 응답이 증대하고 있고,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정치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신시켜주는 일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식인 사회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도 큰 배경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되지만, 이제 21세기 미래를 위해 어떤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화, 다양화, 정보화, 민주화 등 다양한 가치들이 논의되면서 이런 맥락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경제권이나 동북아 지역통합, 남북연합적 체제구상과 같은 것은 모두가 미래 한국의 큰 틀을 모색하려는 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 미래의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어떤 가치와 원칙이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 개선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북한정권의 부담과 책임을 강조하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은 그런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게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은 미래지향적이며 가치지향적인 성향이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진보집단이 북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꺼려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이런 부분에 변화가 감지된다. 2007년 민노당 내부에서 진행된 ‘중북주의’ 논쟁과 뒤이은 분당사태에서 보듯, 북한문제와 진보적 지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생기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만으로 진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이런 의식의 변화에는 한국사회의 이런 흐름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 3. 현실정책적 함의

의식조사로부터 바로 현실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중의 의식이 꼭 정확한 정책평가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적 기호에 맞는 정책이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의 의식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실재이고 고려해야 할 현실이다. 또 그 의식의 내면에 담긴 여러 가지 지향과 갈등의 요소들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 및 관성화된 의식에 대한 성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지난 1년간 보수화와 현실주의화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10년의 정책효과와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의지나 남북교류의

선협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적 기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교류의 증대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 역시 교류의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를 또 다른 보편적인 과제들, 예컨대 경제성장, 안보, 핵폐기,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기획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둘째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감당해야 할 몫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듯 남북관계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요인으로 북한의 미흡한 대응을 꼽는 반응이 증대하고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에 이 조사가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의식이 다소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핵문제나 인권문제, 북한의 경제제도 문제 등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모두 북한이라는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본질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인 만큼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 변화가 남북관계와 선순환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또 어디까지 북한과 더불어 수행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딪치게 된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응, 남한의 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창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의식의 보수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식의 보수화는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지 대립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여전



히 다수의 국민은 남북관계가 바람직하게 진전되는 것을 옹호하며 대북 지원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조사에서 발견된 응답자들의 태도는 대북정책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태도를 나타내기 보다는 실제로 그 정책이 가져다준 효과에 입각하여 판단하려는 현실적 실용주의에 가깝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정책의 입안과 수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가 한반도 안정과 북한문제의 개선, 통일에의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책임론을 강조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북한에 넘기고 기다리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도 곤란하다. 조사결과에 담긴 미묘한 균형은 정부의 정교하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실상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 북한방문의 경험, 대북관련 사업에의 참여, 탈북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경험이 전체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통일의식 그 자체도 현실의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의식의 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와 교류, 접촉의 빈도를 늘리는 일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의식을 창출하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남북관계나 통일논의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구상이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가치가 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되리라는 기대도 약화되고 현재의 북한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통일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커지고 있다. 남북교류의 증대와 대북지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통일을 가능케 하리라는 생각에도 유보적 태도가 점차 증대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생산과 시장이라는 경제제도의 문제, 공동체의 복지책임과 개인의 권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앞으로 통일한국을 구상하는데 어떻게 개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나아가 점차 긴밀해지는 국제관계와 개방화된 현실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접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교한 구상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은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종합적인 지혜, 정책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집합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자산과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그것이 큰 전략적 목표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해석이나 이념적인 자기정당화로 오용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정책구상과 지혜를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로 이 조사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

통일의식조사

## 부 록

---









1.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213)	100.0
성별		
남자	(610)	50.3
여자	(603)	49.7
연령별		
20대	(304)	25.1
30대	(319)	26.3
40대	(309)	25.5
50대 이상	(281)	23.2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4)	11.8
고졸	(547)	45.1
대졸 이상	(522)	43.1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3
자영업	(214)	17.6
블루 칼라	(245)	20.2
화이트칼라	(245)	20.2
전업 주부	(299)	24.6
학생/무직/기타	(182)	15.0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32)	19.1
200~299만원	(400)	33.0
300~399만원	(339)	27.9
400만원 이상	(226)	18.6
모름 / 무응답	(17)	1.4
지역별		
수도권	(603)	49.7
중부권	(119)	9.8
호남권	(119)	9.8
영남권	(323)	26.6
강원	(36)	3.0
제주	(13)	1.1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3.7
중도	(588)	48.4
보수적	(338)	27.8

2.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표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13)	25.9	25.7	51.6	23.4	19.6	5.4	24.9	100.0
■ 성별									
남자	(610)	33.3	24.8	58.1	20.1	17.4	4.4	21.7	100.0
여자	(603)	18.4	26.7	45.0	26.8	21.8	6.4	28.2	100.0
■ 연령별									
20대	(304)	18.1	27.5	45.6	23.1	22.0	9.3	31.3	100.0
30대	(319)	24.5	26.6	51.2	29.2	16.1	3.6	19.7	100.0
40대	(309)	29.1	25.4	54.5	21.5	20.2	3.8	24.0	100.0
50대이상	(281)	32.3	23.3	55.6	19.3	20.1	5.0	25.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4.9	22.7	47.6	25.0	18.9	8.5	27.4	100.0
고졸	(547)	22.9	22.5	45.4	24.1	24.0	6.5	30.5	100.0
대졸이상	(522)	29.3	30.0	59.3	22.2	15.0	3.4	18.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 28)	20.5	30.4	50.9	41.9	7.1	0	7.1	100.0
자영업	(214)	28.0	27.8	55.9	19.8	20.3	4.0	24.3	100.0
블루칼라	(245)	32.5	21.2	53.8	18.5	20.4	7.4	27.8	100.0
화이트칼라	(245)	27.7	28.7	56.4	25.5	13.9	4.2	18.1	100.0
전업주부	(299)	20.2	22.4	42.6	27.1	24.4	5.9	30.3	100.0
학생/무직/기타	(182)	22.1	30.2	52.3	22.6	19.1	6.0	25.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32)	32.6	20.4	53.1	25.6	14.6	6.7	21.4	100.0
200~299만원	(400)	23.9	27.1	51.1	20.7	22.8	5.4	28.2	100.0
300~399만원	(339)	19.6	31.0	50.6	27.2	18.7	3.5	22.3	100.0
400만원 이상	(226)	30.6	22.2	52.9	20.3	20.0	6.8	26.8	100.0
모름/무응답	(17)	41.5	8.4	50.0	23.9	20.2	5.8	26.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7.7	19.6	47.2	25.6	21.9	5.3	27.2	100.0
충부권	(119)	24.5	27.3	51.8	13.3	23.8	11.1	34.9	100.0
호남권	(119)	37.0	32.0	69.1	20.9	8.9	1.1	10.0	100.0
영남권	(323)	17.7	35.9	53.7	23.4	18.0	4.9	22.9	100.0
강원	( 36)	33.4	15.0	48.4	25.5	20.0	6.2	26.1	100.0
제주	(13)	35.9	16.7	52.6	32.1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5.3	27.7	63.0	17.5	14.7	4.7	19.5	100.0
중도	(588)	23.9	23.5	47.4	29.2	19.0	4.4	23.4	100.0
보수적	(338)	21.3	28.0	49.3	18.5	24.6	7.7	32.3	100.0



표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없다	계
		%	%	%	%	%
■ 전체	(1213)	65.8	16.3	9.2	8.6	100.0
■ 성별						
남자	(610)	65.0	14.4	12.5	8.1	100.0
여자	(603)	66.6	18.3	5.9	9.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3.3	15.6	9.4	11.7	100.0
30대	(319)	66.0	17.5	7.7	8.7	100.0
40대	(309)	68.6	15.7	8.2	7.5	100.0
50세이상	(281)	65.3	16.6	11.7	6.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61.7	14.2	9.3	14.8	100.0
고졸	(547)	61.3	21.7	7.8	9.2	100.0
대재이상	(522)	71.7	11.4	10.6	6.3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8.4	10.0	11.8	9.8	100.0
자영업	(214)	64.9	15.2	12.1	7.8	100.0
블루칼라	(245)	66.1	17.5	8.4	8.0	100.0
화이트칼라	(245)	67.2	12.6	12.6	7.6	100.0
전업주부	(299)	64.0	20.5	5.8	9.7	100.0
무직 / 기타	(182)	67.4	15.4	7.3	9.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62.5	14.5	13.8	9.2	100.0
200~299만원	(400)	65.3	16.3	8.1	10.3	100.0
300~399만원	(339)	68.1	17.1	7.2	7.6	100.0
400만원 이상	(226)	66.2	17.6	9.0	7.2	100.0
모름 / 무응답	(17)	4.3	11.2	14.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1.7	20.3	9.1	8.8	100.0
충부권	(119)	60.7	18.0	10.0	11.2	100.0
호남권	(119)	72.5	6.1	17.7	3.7	100.0
영남권	(323)	70.1	13.9	5.8	10.2	100.0
강원	(36)	79.5	6.1	12.9	1.5	100.0
제주	(13)	100.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9.0	11.1	14.9	5.0	100.0
중도	(588)	64.3	18.6	6.9	10.2	100.0
보수적	(338)	65.8	16.9	8.3	9.0	100.0

표 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계
		%	%	%	%	%	%	%
■ 전체	(1213)	2.3	13.0	22.1	15.5	24.9	22.3	100.0
■ 성별								
남자	(610)	2.9	14.2	25.5	14.4	22.7	20.3	100.0
여자	(603)	1.6	11.8	18.5	16.7	27.2	24.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9	9.6	18.6	17.7	28.2	23.9	100.0
30대	(319)	1.7	12.5	23.5	15.2	26.9	20.1	100.0
40대	(309)	3.0	17.3	24.3	14.2	20.6	20.6	100.0
50세이상	(281)	2.4	12.6	21.6	14.8	23.8	24.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5	9.8	11.6	14.5	23.4	38.1	100.0
고졸	(547)	2.1	11.9	21.4	13.6	27.2	23.8	100.0
대재이상	(522)	2.4	15.0	25.6	17.8	22.9	16.3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	14.2	16.0	10.5	37.1	19.9	100.0
자영업	(214)	2.3	11.5	31.3	11.9	23.1	19.8	100.0
블루칼라	(245)	2.6	13.5	20.8	15.5	26.1	21.6	100.0
화이트칼라	(245)	1.7	15.5	28.9	13.2	19.3	21.3	100.0
전업주부	(299)	2.5	11.9	14.4	18.5	25.7	27.0	100.0
무직 / 기타	(182)	2.2	12.4	17.2	18.7	29.7	19.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9	16.7	17.9	12.9	27.1	22.5	100.0
200~299만원	(400)	2.4	11.4	20.8	14.2	26.4	24.8	100.0
300~399만원	(339)	1.9	11.4	25.9	18.9	21.4	20.5	100.0
400만원 이상	(226)	1.6	14.3	22.6	14.7	25.3	21.4	100.0
모름 / 무응답	(17)	6.6	14.0	24.5	25.4	23.7	5.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1	9.5	21.6	16.2	25.3	25.3	100.0
중부권	(119)	.4	19.2	20.7	16.7	25.6	17.4	100.0
호남권	(119)	8.0	17.5	26.0	13.1	20.6	14.8	100.0
영남권	(323)	.8	15.6	21.9	15.3	24.8	21.5	100.0
강원	(36)	5.0	14.1	16.1	15.1	37.4	12.3	100.0
제주	(13)	.0	11.5	38.5	.0	7.7	4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1	19.1	24.8	14.6	21.9	15.6	100.0
중도	(588)	1.9	10.5	21.2	16.3	26.5	23.6	100.0
보수적	(338)	1.3	12.2	21.3	15.0	24.6	25.6	100.0



표 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13)	8.5	43.3	51.8	35.1	13.1	48.2	100.0
■ 성별								
남자	(610)	9.2	47.4	56.6	31.1	12.3	43.4	100.0
여자	(603)	7.8	39.1	47.0	39.1	13.9	53.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9.0	41.9	50.8	36.9	12.3	49.2	100.0
30대	(319)	9.6	44.0	53.6	33.2	13.2	46.4	100.0
40대	(309)	8.5	47.2	55.6	32.4	12.0	44.4	100.0
50세이상	(281)	6.8	39.8	46.7	38.3	15.0	53.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4	38.1	42.4	40.8	16.7	57.6	100.0
고졸	(547)	6.9	39.9	46.9	36.9	16.2	53.1	100.0
대재이상	(522)	11.3	48.3	59.6	31.5	8.9	40.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9.4	24.8	34.2	53.2	12.6	65.8	100.0
자영업	(214)	9.8	42.4	52.2	33.5	14.4	47.8	100.0
블루칼라	(245)	7.3	45.5	52.8	34.9	12.3	47.2	100.0
화이트칼라	(245)	9.1	48.4	57.5	32.0	10.5	42.5	100.0
전업주부	(299)	7.4	39.4	46.8	37.4	15.8	53.2	100.0
무직 / 기타	(182)	9.6	43.9	53.5	34.7	11.8	46.5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0.7	38.9	49.6	36.6	13.8	50.4	100.0
200~299만원	(400)	6.7	43.8	50.4	33.0	16.5	49.6	100.0
300~399만원	(339)	7.4	47.6	55.0	34.2	10.8	45.0	100.0
400만원 이상	(226)	10.7	41.2	51.9	38.2	9.9	48.1	100.0
모름 / 무응답	(17)	15.1	35.1	50.2	37.8	12.0	49.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8.6	45.4	54.0	32.0	14.0	46.0	100.0
충부권	(119)	5.1	41.0	46.1	44.2	9.6	53.9	100.0
호남권	(119)	17.0	46.1	63.0	31.1	5.9	37.0	100.0
영남권	(323)	6.2	41.4	47.7	37.1	15.2	52.3	100.0
강원	(36)	13.0	25.7	38.7	52.7	8.6	61.3	100.0
제주	(13)	5.1	35.9	41.0	30.8	28.2	59.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5.3	50.1	65.4	27.0	7.6	34.6	100.0
중도	(588)	7.3	41.7	49.0	36.2	14.9	51.0	100.0
보수적	(338)	4.8	40.4	45.2	40.1	14.7	54.8	100.0

표 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④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전체	(1213)	12.5	47.4	59.9	28.4	11.6	40.1	100.0
■ 성별								
남자	(610)	14.6	48.2	62.8	26.2	11.0	37.2	100.0
여자	(603)	10.4	46.6	57.0	30.7	12.3	43.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1.6	50.7	62.3	25.4	12.4	37.7	100.0
30대	(319)	15.2	43.2	58.4	30.6	11.0	41.6	100.0
40대	(309)	14.4	49.4	63.8	25.2	11.1	36.2	100.0
50세이상	(281)	8.4	46.4	54.8	32.9	12.2	45.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5	43.0	50.6	35.9	13.5	49.4	100.0
고졸	(547)	10.4	45.8	56.2	30.4	13.5	43.8	100.0
대재이상	(522)	16.1	50.3	66.4	24.4	9.2	33.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6.4	49.3	55.7	37.2	7.0	44.3	100.0
자영업	(214)	18.4	42.1	60.5	27.8	11.7	39.5	100.0
블루칼라	(245)	11.0	47.5	58.5	30.6	10.9	41.5	100.0
화이트칼라	(245)	12.7	53.6	66.3	23.9	9.9	33.7	100.0
전업주부	(299)	10.3	43.8	54.1	32.0	13.9	45.9	100.0
무직 / 기타	(182)	11.8	50.8	62.7	25.2	12.1	37.3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6.2	46.9	63.2	25.6	11.3	36.8	100.0
200~299만원	(400)	10.7	45.4	56.1	30.6	13.4	43.9	100.0
300~399만원	(339)	9.0	48.5	57.5	32.4	10.1	42.5	100.0
400만원 이상	(226)	16.7	50.3	67.1	21.2	11.7	32.9	100.0
모름 / 무응답	(17)	18.0	40.1	58.1	35.8	6.2	41.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2.1	42.3	54.4	30.7	14.9	45.6	100.0
충부권	(119)	7.7	62.2	69.9	24.9	5.2	30.1	100.0
호남권	(119)	22.0	51.3	73.3	23.2	3.5	26.7	100.0
영남권	(323)	10.2	48.6	58.8	28.7	12.5	41.2	100.0
강원	(36)	17.7	58.1	75.8	24.2	.0	24.2	100.0
제주	(13)	33.3	51.3	84.6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9.8	54.5	74.3	19.0	6.7	25.7	100.0
중도	(588)	10.1	43.9	54.0	33.2	12.7	46.0	100.0
보수적	(338)	10.4	47.4	57.8	28.2	14.0	42.2	100.0



표 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전체	(1213)	12.1	45.2	57.3	29.5	13.2	42.7	100.0
■ 성별								
남자	(610)	13.4	48.0	61.4	26.1	12.5	38.6	100.0
여자	(603)	10.7	42.5	53.2	33.0	13.8	46.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3.6	43.7	57.3	31.8	10.9	42.7	100.0
30대	(319)	12.2	46.6	58.8	26.4	14.8	41.2	100.0
40대	(309)	12.9	45.8	58.7	30.0	11.3	41.3	100.0
50세이상	(281)	9.4	44.7	54.0	30.1	15.9	46.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5.9	45.4	51.3	32.0	16.7	48.7	100.0
고졸	(547)	10.6	44.7	55.3	29.0	15.8	44.7	100.0
대재이상	(522)	5.2	45.8	61.0	29.5	9.5	39.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4.7	50.1	54.8	32.9	12.3	45.2	100.0
자영업	(214)	13.7	42.4	56.1	29.6	14.3	43.9	100.0
블루칼라	(245)	11.8	48.1	59.9	25.5	14.7	40.1	100.0
화이트칼라	(245)	15.0	47.7	62.6	28.2	9.1	37.4	100.0
전업주부	(299)	9.0	42.2	51.2	32.9	15.9	48.8	100.0
무직 / 기타	(182)	12.7	45.7	58.4	30.7	10.9	41.6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4.1	42.6	56.7	30.3	13.0	43.3	100.0
200~299만원	(400)	8.7	43.7	52.4	29.4	18.2	47.6	100.0
300~399만원	(339)	11.7	50.8	62.4	28.4	9.2	37.6	100.0
400만원 이상	(226)	15.8	43.6	59.4	30.6	10.0	40.6	100.0
모름 / 무응답	(17)	21.8	29.8	51.6	28.2	20.2	48.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2.0	42.1	54.1	28.5	17.4	45.9	100.0
중부권	(119)	9.1	53.8	62.9	31.3	5.7	37.1	100.0
호남권	(119)	22.9	43.8	66.7	25.9	7.4	33.3	100.0
영남권	(323)	9.2	46.3	55.5	32.6	11.9	44.5	100.0
강원	(36)	8.0	61.6	69.6	30.4	.0	30.4	100.0
제주	(13)	24.4	52.6	76.9	15.4	7.7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9.0	53.4	72.4	20.2	7.4	27.6	100.0
중도	(588)	9.8	43.3	53.1	32.1	14.8	46.9	100.0
보수적	(338)	9.9	41.7	51.7	33.0	15.3	48.3	100.0

표 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13)	18.4	45.9	64.3	26.3	9.4	35.7	100.0
■ 성별								
남자	(610)	17.8	50.7	68.5	22.8	8.8	31.5	100.0
여자	(603)	19.0	41.1	60.1	29.8	10.0	39.9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0.1	43.7	63.8	26.0	10.2	36.2	100.0
30대	(319)	20.3	42.3	62.6	27.3	10.1	37.4	100.0
40대	(309)	18.3	49.4	67.7	26.3	6.0	32.3	100.0
50세이상	(281)	14.6	48.6	63.2	25.3	11.5	36.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9.0	51.8	60.9	26.9	12.3	39.1	100.0
고졸	(547)	15.7	44.7	60.3	29.5	10.2	39.7	100.0
대재이상	(522)	23.8	45.6	69.5	22.8	7.8	30.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1.1	42.5	53.7	42.8	3.5	46.3	100.0
자영업	(214)	18.6	47.4	66.0	23.7	10.3	34.0	100.0
블루칼라	(245)	15.4	51.3	66.7	24.0	9.3	33.3	100.0
화이트칼라	(245)	20.7	47.7	68.4	25.6	6.0	31.6	100.0
전업주부	(299)	18.6	38.2	56.7	32.4	10.8	43.3	100.0
무직 / 기타	(182)	19.9	47.9	67.9	20.5	11.6	32.1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0.0	44.4	64.3	26.8	8.9	35.7	100.0
200~299만원	(400)	15.4	44.5	59.9	28.4	11.7	40.1	100.0
300~399만원	(339)	16.4	49.2	65.6	26.1	8.3	34.4	100.0
400만원 이상	(226)	24.7	45.2	69.9	22.5	7.6	30.1	100.0
모름 / 무응답	(17)	23.8	46.0	69.8	24.0	6.2	30.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6.5	40.9	57.4	30.0	12.6	42.6	100.0
중부권	(119)	17.9	58.1	76.0	22.3	1.7	24.0	100.0
호남권	(119)	31.1	46.2	77.4	17.1	5.5	22.6	100.0
영남권	(323)	17.1	50.1	67.2	23.9	8.9	32.8	100.0
강원	(36)	14.2	52.3	66.5	32.0	1.5	33.5	100.0
제주	(13)	41.0	43.6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1.8	45.1	76.9	19.2	3.9	23.1	100.0
중도	(588)	13.8	44.7	58.5	29.5	12.0	41.5	100.0
보수적	(338)	14.9	48.8	63.7	26.7	9.7	36.3	100.0





표 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13)	14.8	46.8	61.7	32.3	6.0	38.3	100.0
■ 성별								
남자	(610)	14.9	49.6	64.5	29.8	5.6	35.5	100.0
여자	(603)	14.8	44.0	58.8	34.8	6.4	41.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4.0	45.9	60.0	33.8	6.2	40.0	100.0
30대	(319)	14.7	47.8	62.5	30.0	7.6	37.5	100.0
40대	(309)	15.2	48.8	64.0	32.0	4.0	36.0	100.0
50세이상	(281)	15.4	44.6	60.1	33.5	6.4	39.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0.5	42.7	53.2	39.7	7.2	46.8	100.0
고졸	(547)	12.6	46.3	58.9	33.8	7.3	41.1	100.0
대재이상	(522)	18.4	48.6	67.0	28.7	4.4	33.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0.5	36.6	57.1	42.9	.0	42.9	100.0
자영업	(214)	15.7	48.8	64.6	29.7	5.8	35.4	100.0
블루칼라	(245)	9.4	47.0	56.4	38.4	5.2	43.6	100.0
화이트칼라	(245)	17.4	50.0	67.4	27.9	4.7	32.6	100.0
전업주부	(299)	17.3	42.5	59.8	33.2	7.0	40.2	100.0
무직 / 기타	(182)	12.6	48.8	61.4	29.8	8.7	38.6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4.4	48.4	62.8	32.1	5.1	37.2	100.0
200~299만원	(400)	13.5	43.9	57.4	34.5	8.1	42.6	100.0
300~399만원	(339)	14.1	49.4	63.5	31.2	5.3	36.5	100.0
400만원 이상	(226)	18.6	47.6	66.2	28.9	4.9	33.8	100.0
모름 / 무응답	(17)	16.8	33.7	50.5	49.5	.0	49.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2.4	40.1	52.5	36.2	1.3	47.5	100.0
중부권	(119)	17.8	49.9	67.6	31.8	.6	32.4	100.0
호남권	(119)	25.0	57.4	82.3	16.6	1.0	17.7	100.0
영남권	(323)	12.4	53.7	66.1	32.9	.9	33.9	100.0
강원	(36)	25.2	48.4	73.6	26.4	.0	26.4	100.0
제주	(13)	37.2	62.8	00.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5.4	47.3	72.7	24.7	2.6	27.3	100.0
중도	(588)	10.4	48.0	58.4	33.7	7.8	41.6	100.0
보수적	(338)	13.6	44.4	58.0	36.2	5.8	42.0	100.0

표 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④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13)	25.0	43.9	68.9	25.6	5.4	31.0	.1	100.0
■ 성별									
남자	(610)	27.2	44.5	71.7	23.6	4.7	28.3	.0	100.0
여자	(603)	22.8	43.4	66.1	27.6	6.1	33.7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8.2	37.5	65.8	27.7	6.5	34.2	.0	100.0
30대	(319)	24.6	45.3	69.9	24.6	5.2	29.8	.3	100.0
40대	(309)	23.1	49.2	72.3	22.3	5.3	27.7	.0	100.0
50세이상	(281)	24.0	43.5	67.5	28.0	4.6	32.5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9.0	44.9	63.8	31.6	4.6	36.2	.0	100.0
고졸	(547)	20.2	46.3	66.5	28.2	5.3	33.5	.0	100.0
대재이상	(522)	31.7	41.2	72.9	21.1	5.8	26.9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2.3	40.5	72.8	23.7	3.5	27.2	.0	100.0
자영업	(214)	26.5	45.7	72.1	21.4	6.5	27.9	.0	100.0
블루칼라	(245)	17.5	46.2	63.7	31.2	5.1	36.3	.0	100.0
화이트칼라	(245)	29.3	45.0	74.2	20.3	5.4	25.8	.0	100.0
전업주부	(299)	23.0	43.0	66.0	27.4	6.3	33.7	.3	100.0
무직 / 기타	(182)	29.9	39.4	69.3	27.3	3.4	30.7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6.5	38.6	65.1	29.7	5.1	34.9	.0	100.0
200~299만원	(400)	23.7	45.4	69.1	24.6	6.3	30.9	.0	100.0
300~399만원	(339)	22.7	45.1	67.8	27.1	5.2	32.2	.0	100.0
400만원 이상	(226)	28.9	45.1	74.0	21.1	4.5	25.6	.4	100.0
모름 / 무응답	(17)	27.1	43.8	70.9	22.1	7.0	29.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1.0	36.2	57.2	32.9	9.7	42.6	.2	100.0
중부권	(119)	39.6	39.2	78.8	19.2	2.0	21.2	.0	100.0
호남권	(119)	31.0	52.4	83.4	16.6	.0	16.6	.0	100.0
영남권	(323)	21.4	56.3	77.6	20.9	1.5	22.4	.0	100.0
강원	(36)	46.0	48.9	94.9	5.1	.0	5.1	.0	100.0
제주	(13)	51.3	48.7	.0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6.6	41.5	78.1	18.4	3.5	21.9	.0	100.0
중도	(588)	18.9	46.0	64.9	27.6	7.4	35.0	.2	100.0
보수적	(338)	25.8	42.4	68.2	28.3	3.6	31.8	.0	100.0



표 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13)	26.5	44.1	70.6	22.6	6.4	29.0	.4	100.0
■ 성별									
남자	(610)	27.2	44.7	71.9	21.4	6.6	28.0	.2	100.0
여자	(603)	25.8	43.5	69.4	23.8	6.2	30.0	.6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1.9	39.3	71.2	22.1	6.8	28.8	.0	100.0
30대	(319)	25.8	45.5	71.3	20.5	7.3	27.7	1.0	100.0
40대	(309)	22.8	49.2	72.0	22.4	5.1	27.5	.5	100.0
50세이상	(281)	25.5	42.3	67.8	25.8	6.4	32.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2.8	47.1	69.9	22.3	7.8	30.1	.0	100.0
고졸	(547)	21.3	43.9	65.2	26.9	7.6	34.5	.4	100.0
대재이상	(522)	33.0	43.6	76.6	18.2	4.7	22.9	.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3.0	44.9	77.9	22.1	.0	22.1	.0	100.0
자영업	(214)	28.5	44.0	72.5	22.1	5.4	27.5	.0	100.0
블루칼라	(245)	20.8	41.6	62.4	28.8	8.4	37.2	.4	100.0
화이트칼라	(245)	31.7	46.8	78.5	17.9	3.6	21.5	.0	100.0
전업주부	(299)	24.7	43.9	68.6	22.8	7.3	30.1	1.3	100.0
무직 / 기타	(182)	26.8	44.4	71.2	20.8	8.0	28.8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5.1	44.2	69.3	21.9	8.5	30.3	.4	100.0
200~299만원	(400)	25.7	42.1	67.7	24.0	8.0	32.0	.2	100.0
300~399만원	(339)	24.5	47.6	72.0	22.2	5.2	27.5	.5	100.0
400만원 이상	(226)	31.3	43.7	75.1	21.3	3.1	24.4	.5	100.0
모름 / 무응답	(17)	41.2	28.9	70.1	24.0	5.8	29.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9.9	38.6	58.5	30.3	10.7	41.0	.5	100.0
중부권	(119)	40.8	41.5	82.3	15.2	2.5	17.7	.0	100.0
호남권	(119)	36.3	47.3	83.6	12.6	3.8	16.4	.0	100.0
영남권	(323)	25.9	54.4	80.3	17.6	1.6	19.1	.5	100.0
강원	(36)	49.0	45.9	94.9	5.1	.0	5.1	.0	100.0
제주	(13)	64.1	35.9	100.0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7.5	44.0	81.5	15.7	2.5	18.1	.3	100.0
중도	(588)	21.4	43.3	64.7	27.0	7.7	34.7	.5	100.0
보수적	(338)	26.0	45.6	71.6	20.8	7.4	28.2	.2	100.0

표 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13)	5.9	24.7	30.6	52.4	16.7	69.1	.3	100.0
■ 성별									
남자	(610)	5.2	24.8	30.1	49.5	20.0	69.6	.3	100.0
여자	(603)	6.6	24.6	31.2	55.3	13.4	68.6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9.5	24.2	33.8	48.0	18.2	66.2	.0	100.0
30대	(319)	4.8	26.2	31.0	54.2	14.2	68.4	.6	100.0
40대	(309)	6.6	24.7	31.3	53.3	15.1	68.4	.3	100.0
50세이상	(281)	2.5	23.7	26.2	54.1	19.8	73.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7	27.3	29.0	51.6	19.4	71.0	.0	100.0
고졸	(547)	4.2	23.3	27.5	56.3	16.2	72.5	.0	100.0
대재이상	(522)	8.9	25.5	34.4	48.6	16.5	65.0	.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2	18.6	25.8	59.8	14.4	74.2	.0	100.0
자영업	(214)	5.2	21.9	27.1	53.3	19.6	72.9	.0	100.0
블루칼라	(245)	2.8	23.0	25.8	56.5	17.2	73.8	.4	100.0
화이트칼라	(245)	8.3	26.2	34.5	48.7	15.9	64.6	.8	100.0
전업주부	(299)	5.1	25.8	30.8	56.6	12.5	69.2	.0	100.0
무직 / 기타	(182)	8.8	27.6	36.4	42.7	20.9	63.6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7.7	20.3	28.0	54.1	17.4	71.5	.5	100.0
200~299만원	(400)	5.1	27.3	32.4	50.1	17.5	67.6	.0	100.0
300~399만원	(339)	4.6	26.1	30.7	55.9	13.1	69.0	.3	100.0
400만원 이상	(226)	6.9	22.7	29.6	50.9	19.1	69.9	.4	100.0
모름 / 무응답	(17)	13.9	24.7	38.6	33.3	28.1	61.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5.0	25.6	30.5	54.1	15.3	69.3	.2	100.0
중부권	(119)	5.8	29.1	34.9	56.4	7.8	64.2	.8	100.0
호남권	(119)	11.3	18.2	29.5	49.0	21.5	70.5	.0	100.0
영남권	(323)	5.6	25.3	30.9	49.6	19.2	68.8	.3	100.0
강원	(36)	7.2	13.6	20.8	45.0	34.2	79.2	.0	100.0
제주	(13)	5.1	23.1	28.2	59.0	12.8	71.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0.5	25.8	36.3	47.7	15.6	63.4	.4	100.0
중도	(588)	5.1	24.2	29.3	56.0	14.3	70.3	.3	100.0
보수적	(338)	3.4	24.7	28.1	50.1	21.8	71.9	.0	100.0



표 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13)	24.4	47.8	72.2	23.5	4.2	27.8	.1	100.0
■ 성별									
남자	(610)	24.8	49.0	73.8	21.9	4.2	26.0	.2	100.0
여자	(603)	23.9	46.6	70.5	25.2	4.3	29.5	.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5.0	46.0	71.0	24.4	4.2	28.6	.3	100.0
30대	(319)	22.4	47.1	69.5	25.6	4.9	30.5	.0	100.0
40대	(309)	23.2	51.1	74.2	21.7	4.1	25.8	.0	100.0
50세이상	(281)	27.1	46.9	74.1	22.2	3.8	25.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9.8	50.0	69.8	25.1	5.1	30.2	.0	100.0
고졸	(547)	22.7	48.4	71.2	24.3	4.6	28.8	.0	100.0
대재이상	(522)	27.3	46.5	73.8	22.3	3.7	26.0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9	65.7	89.6	6.9	3.5	10.4	.0	100.0
자영업	(214)	23.4	47.4	70.8	24.0	4.7	28.7	.5	100.0
블루칼라	(245)	19.3	46.9	66.2	29.0	4.8	33.8	.0	100.0
화이트칼라	(245)	26.8	48.5	75.2	21.9	2.8	24.8	.0	100.0
전업주부	(299)	26.4	44.3	70.7	24.6	4.7	29.3	.0	100.0
무직 / 기타	(182)	25.9	51.5	77.3	18.4	4.3	22.7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7.5	43.5	71.1	23.4	5.5	28.9	.0	100.0
200~299만원	(400)	20.0	49.2	69.1	25.9	4.7	30.6	.3	100.0
300~399만원	(339)	24.8	47.3	72.1	23.8	4.1	27.9	.0	100.0
400만원 이상	(226)	27.8	50.5	78.3	19.1	2.6	21.7	.0	100.0
모름 / 무응답	(17)	30.4	46.9	77.3	22.7	.0	22.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3.1	41.0	64.1	28.3	7.4	35.7	.2	100.0
중부권	(119)	27.1	51.5	78.6	20.9	.6	21.4	.0	100.0
호남권	(119)	27.7	54.0	81.7	16.2	2.1	18.3	.0	100.0
영남권	(323)	19.8	58.4	78.2	20.7	1.1	21.8	.0	100.0
강원	(36)	46.5	42.7	89.2	10.8	.0	10.8	.0	100.0
제주	(13)	79.5	20.5	100.0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4.6	46.3	80.9	15.6	3.5	19.1	.0	100.0
중도	(588)	20.1	48.1	68.2	26.9	4.8	31.6	.2	100.0
보수적	(338)	23.1	48.5	71.6	24.4	4.0	28.4	.0	100.0

표 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13)	31.8	44.2	76.0	20.3	3.7	23.9	.1	100.0
■ 성별									
남자	(610)	32.6	44.7	77.4	18.2	4.2	22.5	.2	100.0
여자	(603)	31.0	43.6	74.6	22.3	3.1	25.4	.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3.3	41.5	74.8	20.6	4.3	24.9	.3	100.0
30대	(319)	30.6	43.7	74.3	20.8	4.9	25.7	.0	100.0
40대	(309)	31.7	46.7	78.4	19.2	2.4	21.6	.0	100.0
50세이상	(281)	31.8	44.8	76.6	20.5	3.0	23.4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5.4	46.1	71.5	25.4	3.1	28.5	.0	100.0
고졸	(547)	27.8	45.6	73.4	21.9	4.6	26.6	.0	100.0
대재이상	(522)	37.8	42.1	79.9	17.1	2.8	19.9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7.5	49.3	76.9	19.6	3.5	23.1	.0	100.0
자영업	(214)	33.7	42.5	76.2	18.1	5.2	23.3	.5	100.0
블루칼라	(245)	24.5	47.3	71.9	24.5	3.6	28.1	.0	100.0
화이트칼라	(245)	35.9	46.1	82.0	15.0	3.1	18.0	.0	100.0
전업주부	(299)	33.2	41.5	74.7	22.3	3.0	25.3	.0	100.0
무직 / 기타	(182)	32.4	42.8	75.2	20.9	3.9	24.8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9.7	39.1	68.8	26.3	4.9	31.2	.0	100.0
200~299만원	(400)	28.8	44.9	73.6	20.6	5.5	26.1	.3	100.0
300~399만원	(339)	32.0	44.6	76.5	20.6	2.8	23.5	.0	100.0
400만원 이상	(226)	38.8	47.0	85.8	13.4	.7	14.2	.0	100.0
모름 / 무응답	(17)	36.6	50.7	87.3	12.7	.0	12.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8.8	38.7	67.5	26.9	5.5	32.4	.2	100.0
중부권	(119)	34.0	54.0	87.9	11.2	.8	12.1	.0	100.0
호남권	(119)	34.2	51.2	85.4	10.9	3.8	14.6	.0	100.0
영남권	(323)	30.3	50.8	81.1	17.2	1.7	18.9	.0	100.0
강원	(36)	62.0	31.4	93.4	5.1	1.5	6.6	.0	100.0
제주	(13)	87.2	12.8	100.0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0.6	44.5	85.1	13.0	1.9	14.9	.0	100.0
중도	(588)	27.2	45.8	73.0	22.7	4.1	26.8	.2	100.0
보수적	(338)	32.5	41.0	73.4	22.1	4.5	26.6	.0	100.0



표 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남북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위해	이산가족 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수 있도록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 전체	(1213)	57.9	17.1	14.5	6.8	2.8	.1	.4	.4	100.0
■ 성별										
남자	(610)	54.2	19.9	16.6	5.4	2.6	.2	.7	.6	100.0
여자	(603)	61.7	14.4	12.4	8.3	2.9	.0	.1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5.2	23.9	18.2	8.6	2.2	.0	1.3	.4	100.0
30대	(319)	60.5	16.4	13.8	6.4	1.9	.3	.0	.6	100.0
40대	(309)	58.3	17.7	13.3	6.4	3.6	.0	.3	.4	100.0
50세이상	(281)	68.2	10.1	12.7	5.8	3.3	.0	.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67.8	8.4	12.0	7.3	4.5	.0	.0	.0	100.0
고졸	(547)	61.9	13.6	12.2	8.0	3.3	.2	.6	.2	100.0
대재이상	(522)	51.0	23.3	17.6	5.5	1.7	.0	.3	.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2.0	9.5	9.1	7.0	2.3	.0	.0	.0	100.0
자영업	(214)	60.3	15.7	13.2	5.3	4.5	.0	.4	.6	100.0
블루칼라	(245)	55.8	16.2	15.5	8.6	2.1	.4	1.0	.4	100.0
화이트칼라	(245)	52.6	24.7	13.4	6.0	2.5	.0	.0	.9	100.0
전업주부	(299)	65.9	10.7	12.9	7.2	3.3	.0	.0	.0	100.0
무직 / 기타	(182)	49.7	21.7	19.7	6.8	1.2	.0	.9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59.6	18.4	12.7	6.2	2.1	.4	.0	.5	100.0
200~299만원	(400)	63.3	14.0	12.1	7.1	2.9	.0	.6	.0	100.0
300~399만원	(339)	55.4	19.2	15.3	6.5	3.0	.0	.0	.6	100.0
400만원 이상	(226)	52.2	17.4	19.4	7.0	2.8	.0	.7	.4	100.0
모름 / 무응답	(17)	34.7	29.9	17.1	13.3	.0	.0	5.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2.8	15.1	11.3	6.7	3.4	.0	.1	.6	100.0
중부권	(119)	52.3	14.6	21.9	6.8	2.3	.0	2.1	.0	100.0
호남권	(119)	39.3	29.2	18.5	9.0	3.1	.8	.0	.0	100.0
영남권	(323)	61.5	15.6	16.1	4.9	1.1	.0	.5	.3	100.0
강원	(36)	28.9	28.9	22.5	13.6	6.1	.0	.0	.0	100.0
제주	(13)	42.3	29.5	.0	23.1	5.1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54.7	19.3	17.2	4.4	3.1	.0	.9	.4	100.0
중도	(588)	62.4	15.2	11.6	7.9	2.0	.2	.4	.3	100.0
보수적	(338)	52.9	18.6	17.3	7.1	3.7	.0	.0	.4	100.0

표 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전체	(1213)	11.9	35.6	47.5	38.6	13.9	52.5	100.0
■ 성별								
남자	(610)	15.7	36.2	51.9	34.4	13.8	48.1	100.0
여자	(603)	8.2	35.0	43.2	42.8	14.0	56.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3.8	38.8	52.5	35.8	11.7	47.5	100.0
30대	(319)	13.5	34.4	48.0	38.0	14.0	52.0	100.0
40대	(309)	11.6	37.8	49.4	39.0	11.6	50.6	100.0
50세이상	(281)	8.5	31.2	39.7	41.7	18.6	60.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5.5	37.3	42.9	41.7	15.4	57.1	100.0
고졸	(547)	9.5	32.1	41.6	40.1	18.3	58.4	100.0
대재이상	(522)	16.2	38.8	55.1	36.1	8.8	44.9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9.4	27.8	37.2	52.3	10.5	62.8	100.0
자영업	(214)	13.6	33.0	46.6	38.4	14.9	53.4	100.0
블루칼라	(245)	11.6	36.5	48.1	34.9	17.0	51.9	100.0
화이트칼라	(245)	14.3	40.4	54.6	36.8	8.6	45.4	100.0
전업주부	(299)	8.5	31.8	40.3	43.1	16.6	59.7	100.0
무직 / 기타	(182)	13.3	38.6	51.9	36.4	11.7	48.1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4.7	33.6	48.3	37.9	13.8	51.7	100.0
200~299만원	(400)	8.9	38.9	47.8	36.4	15.9	52.2	100.0
300~399만원	(339)	10.4	35.8	46.2	41.5	12.3	53.8	100.0
400만원 이상	(226)	15.6	32.8	48.4	39.1	12.5	51.6	100.0
모름 / 무응답	(17)	28.7	19.8	48.5	33.6	17.9	51.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1.7	33.9	45.6	37.5	16.9	54.4	100.0
중부권	(119)	10.2	36.5	46.7	38.8	14.5	53.3	100.0
호남권	(119)	19.3	33.9	53.2	36.7	10.0	46.8	100.0
영남권	(323)	9.3	38.0	47.3	41.6	11.1	52.7	100.0
강원	(36)	15.7	48.5	64.2	34.2	1.5	35.8	100.0
제주	(13)	24.4	29.5	53.8	38.5	7.7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1.0	44.0	65.0	27.7	7.3	35.0	100.0
중도	(588)	10.1	34.2	44.3	39.1	16.6	55.7	100.0
보수적	(338)	7.4	30.9	38.3	46.9	14.8	61.7	100.0





표 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전체	(1213)	3.3	24.4	27.7	43.3	29.0	72.3	100.0
■ 성별								
남자	(610)	5.9	29.9	35.8	39.8	24.4	64.2	100.0
여자	(603)	.7	18.8	19.4	46.8	33.8	80.6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9	26.8	31.6	41.9	26.5	68.4	100.0
30대	(319)	4.3	26.4	30.6	41.4	28.0	69.4	100.0
40대	(309)	3.0	23.9	26.9	45.5	27.6	73.1	100.0
50세이상	(281)	.9	20.0	20.9	44.4	34.7	79.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4	21.8	23.2	39.9	36.9	76.8	100.0
고졸	(547)	2.0	19.4	21.4	44.6	34.1	78.6	100.0
대재이상	(522)	5.2	30.3	35.5	42.8	21.6	64.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18.0	18.0	27.4	54.6	82.0	100.0
자영업	(214)	2.4	24.8	27.2	43.3	29.5	72.8	100.0
블루칼라	(245)	3.9	26.6	30.5	41.6	27.9	69.5	100.0
화이트칼라	(245)	4.6	28.2	32.8	45.1	22.1	67.2	100.0
전업주부	(299)	.8	17.8	18.6	44.7	36.7	81.4	100.0
무직 / 기타	(182)	6.5	27.6	34.0	43.2	22.8	66.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5.4	27.5	33.0	37.1	29.9	67.0	100.0
200~299만원	(400)	2.2	24.0	26.2	42.6	31.2	73.8	100.0
300~399만원	(339)	3.1	22.5	25.6	43.9	30.5	74.4	100.0
400만원 이상	(226)	2.0	24.9	27.0	50.6	22.5	73.0	100.0
모름 / 무응답	(17)	22.1	20.6	42.7	32.9	24.4	57.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2	23.5	26.7	43.0	30.3	73.3	100.0
중부권	(119)	.0	29.1	29.1	40.2	30.7	70.9	100.0
호남권	(119)	9.0	23.3	32.3	40.8	26.9	67.7	100.0
영남권	(323)	2.4	24.2	26.6	44.8	28.6	73.4	100.0
강원	(36)	4.2	34.1	38.3	44.1	17.7	61.7	100.0
제주	(13)	7.7	10.3	17.9	66.7	15.4	82.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7.0	35.7	42.7	36.4	20.9	57.3	100.0
중도	(588)	2.1	21.6	23.8	43.6	32.6	76.2	100.0
보수적	(338)	2.2	19.5	21.7	48.5	29.8	78.3	100.0

표 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체	(1213)	2.5	8.1	10.6	15.9	33.9	39.5	73.4	100.0
■ 성별									
남자	(610)	2.6	9.5	12.0	14.9	35.2	37.8	73.0	100.0
여자	(603)	2.5	6.7	9.2	17.0	32.6	41.3	73.9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6	11.9	14.4	15.3	30.4	39.9	70.2	100.0
30대	(319)	3.5	5.8	9.3	16.8	40.5	33.4	73.9	100.0
40대	(309)	2.2	8.5	10.7	17.3	31.6	40.4	72.0	100.0
50세이상	(281)	1.8	6.2	7.9	14.1	32.8	45.1	78.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8	4.7	8.5	18.6	26.4	46.5	72.9	100.0
고졸	(547)	2.2	6.5	8.7	13.0	37.4	41.0	78.4	100.0
대재이상	(522)	2.5	10.7	13.2	18.3	32.3	36.1	68.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5.0	5.0	27.2	20.8	47.0	67.8	100.0
자영업	(214)	1.4	6.1	7.5	16.3	34.2	42.0	76.2	100.0
블루칼라	(245)	3.3	9.4	12.7	13.1	35.1	39.1	74.2	100.0
화이트칼라	(245)	1.7	9.4	11.1	22.4	30.3	36.2	66.5	100.0
전업주부	(299)	3.6	5.6	9.2	13.7	35.2	42.0	77.2	100.0
무직 / 기타	(182)	2.6	11.5	14.1	12.6	36.9	36.4	73.3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6	9.3	11.0	21.0	30.5	37.5	68.0	100.0
200~299만원	(400)	3.3	7.5	10.9	16.3	36.3	36.5	72.8	100.0
300~399만원	(339)	2.3	8.9	11.1	14.2	32.0	42.8	74.7	100.0
400만원 이상	(226)	2.1	6.0	8.2	13.7	35.2	42.9	78.1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15.1	22.1	2.9	44.8	30.2	75.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9	7.4	11.4	13.6	28.9	46.1	75.1	100.0
충부권	(119)	.0	6.7	6.7	16.1	35.9	41.3	77.3	100.0
호남권	(119)	.7	12.0	12.7	25.5	32.2	29.6	61.8	100.0
영남권	(323)	1.6	8.9	10.5	16.1	43.6	29.8	73.4	100.0
강원	(36)	2.8	6.4	9.2	23.3	23.0	44.5	67.5	100.0
제주	(13)	.0	.0	.0	12.8	51.3	35.9	87.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5	10.9	14.4	16.4	34.4	34.8	69.2	100.0
중도	(588)	2.0	6.8	8.8	15.5	34.2	41.5	75.7	100.0
보수적	(338)	2.7	7.8	10.6	16.3	33.0	40.1	73.1	100.0



표 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체	(1213)	3.1	11.4	14.5	17.2	37.5	30.8	68.3	100.0
■ 성별									
남자	(610)	3.5	11.3	14.8	17.6	37.7	29.9	67.6	100.0
여자	(603)	2.8	11.4	14.2	16.8	37.3	31.7	69.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0	11.9	15.9	19.0	31.0	34.2	65.1	100.0
30대	(319)	3.2	10.2	13.4	17.5	40.8	28.3	69.1	100.0
40대	(309)	3.7	11.5	15.2	14.7	41.3	28.8	70.1	100.0
50세이상	(281)	1.6	11.9	13.5	17.8	36.6	32.1	68.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6	8.4	12.0	24.5	34.1	29.5	63.6	100.0
고졸	(547)	2.5	10.0	12.5	14.9	42.3	30.3	72.6	100.0
대재이상	(522)	3.7	13.6	17.2	17.7	33.4	31.6	65.1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9.7	9.7	19.6	38.1	32.6	70.7	100.0
자영업	(214)	1.6	13.1	14.7	15.1	39.0	31.2	70.2	100.0
블루칼라	(245)	5.7	11.1	16.8	15.1	36.0	32.1	68.1	100.0
화이트칼라	(245)	3.2	13.6	16.8	18.6	38.3	26.4	64.6	100.0
전업주부	(299)	2.7	10.3	13.0	16.2	38.1	32.7	70.8	100.0
무직 / 기타	(182)	2.6	8.7	11.4	22.0	35.5	31.1	66.6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3.3	10.3	13.6	24.0	34.3	28.2	62.4	100.0
200~299만원	(400)	2.5	11.8	14.4	18.4	41.9	25.4	67.2	100.0
300~399만원	(339)	4.9	13.9	18.9	13.2	34.6	33.4	68.0	100.0
400만원 이상	(226)	1.6	8.5	10.2	14.3	36.4	39.1	75.5	100.0
모름 / 무응답	(17)	.0	.0	.0	16.9	50.6	32.5	83.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4.0	8.5	12.6	13.8	40.5	33.1	73.6	100.0
충부권	(119)	2.1	14.5	16.6	16.8	34.8	31.8	66.6	100.0
호남권	(119)	.7	13.6	14.3	21.8	47.2	16.8	63.9	100.0
영남권	(323)	2.0	14.8	16.9	22.7	30.8	29.6	60.5	100.0
강원	(36)	11.1	11.0	22.1	14.5	26.1	37.3	63.5	100.0
제주	(13)	.0	7.7	7.7	7.7	32.1	52.6	84.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7	14.0	20.6	16.5	32.9	30.0	62.9	100.0
중도	(588)	2.1	9.3	11.4	16.3	41.9	30.3	72.3	100.0
보수적	(338)	2.0	12.6	14.6	19.4	33.7	32.3	66.0	100.0

표 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체	(1213)	3.7	17.3	21.0	15.8	31.3	31.9	63.2	100.0
■ 성별									
남자	(610)	4.6	18.5	23.1	15.3	30.9	30.7	61.6	100.0
여자	(603)	2.8	16.1	18.9	16.3	31.7	33.1	64.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7	21.0	24.7	17.7	26.4	31.2	57.6	100.0
30대	(319)	5.3	19.6	25.0	14.5	32.4	28.2	60.5	100.0
40대	(309)	3.7	16.7	20.3	14.4	33.4	31.9	65.2	100.0
50세이상	(281)	1.7	11.5	13.2	16.8	32.9	37.1	7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5	8.7	13.2	24.6	30.0	32.2	62.2	100.0
고졸	(547)	3.0	15.5	18.4	12.6	33.4	35.5	69.0	100.0
대재이상	(522)	4.2	21.7	25.8	16.7	29.3	28.1	57.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19.3	19.3	26.3	24.3	30.0	54.4	100.0
자영업	(214)	5.5	16.3	21.8	13.9	33.9	30.4	64.3	100.0
블루칼라	(245)	4.5	18.0	22.5	15.0	27.5	35.0	62.5	100.0
화이트칼라	(245)	3.6	20.1	23.7	16.7	32.5	27.1	59.6	100.0
전업주부	(299)	2.3	14.2	16.5	15.4	31.7	36.5	68.2	100.0
무직 / 기타	(182)	3.4	18.8	22.2	17.0	32.0	28.9	60.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3.2	15.9	19.1	17.0	29.1	34.8	63.9	100.0
200~299만원	(400)	4.1	17.0	21.1	16.8	32.4	29.6	62.1	100.0
300~399만원	(339)	4.3	16.5	20.9	15.2	31.5	32.4	64.0	100.0
400만원 이상	(226)	2.7	20.4	23.1	14.5	31.0	31.4	62.4	100.0
모름 / 무응답	(17)	.0	18.8	18.8	6.6	31.7	42.9	74.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8	15.0	18.8	14.4	30.3	36.5	66.8	100.0
충부권	(119)	.7	18.7	19.4	21.4	26.4	32.8	59.2	100.0
호남권	(119)	5.9	23.2	29.1	21.1	35.0	14.8	49.8	100.0
영남권	(323)	3.6	17.0	20.6	15.0	33.9	30.5	64.4	100.0
강원	(36)	2.2	29.5	31.7	14.1	23.4	30.8	54.2	100.0
제주	(13)	7.7	34.6	42.3	7.7	42.3	7.7	5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0	20.7	26.7	17.8	29.5	26.0	55.4	100.0
중도	(588)	2.4	15.7	18.1	14.0	33.1	34.8	67.9	100.0
보수적	(338)	3.9	17.3	21.2	17.3	29.6	32.0	61.5	100.0



표 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 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전체	(1213)	1.8	4.5	6.3	19.1	45.3	29.1	74.4	.2	100.0
■ 성별										
남자	(610)	2.0	5.2	7.2	20.3	43.4	28.9	72.3	.2	100.0
여자	(603)	1.6	3.8	5.3	17.9	47.2	29.4	76.5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7	7.5	10.1	18.0	42.4	29.0	71.4	.4	100.0
30대	(319)	1.7	4.3	6.1	23.6	45.9	24.4	70.3	.0	100.0
40대	(309)	1.0	4.1	5.0	16.5	46.1	32.0	78.0	.4	100.0
50세이상	(281)	1.8	1.9	3.7	18.0	46.7	31.5	78.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8	1.6	5.4	20.5	42.8	31.3	74.1	.0	100.0
고졸	(547)	1.5	3.7	5.2	17.8	45.2	31.3	76.6	.4	100.0
대재이상	(522)	1.5	6.1	7.7	20.2	46.0	26.2	72.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2.3	2.3	24.8	48.7	24.2	72.8	.0	100.0
자영업	(214)	1.3	5.0	6.3	18.9	44.4	30.4	74.8	.0	100.0
블루칼라	(245)	1.3	6.1	7.5	18.3	41.7	31.4	73.2	1.0	100.0
화이트칼라	(245)	1.2	8.5	9.7	20.7	43.4	26.2	69.6	.0	100.0
전업주부	(299)	2.0	1.8	3.8	16.9	48.8	30.4	79.3	.0	100.0
무직 / 기타	(182)	3.7	1.1	4.8	21.1	47.1	27.1	74.2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0	5.0	7.0	20.0	47.0	26.0	73.0	.0	100.0
200~299만원	(400)	1.9	4.9	6.9	22.2	42.2	28.2	70.4	.6	100.0
300~399만원	(339)	2.0	5.0	7.0	17.8	44.5	30.7	75.1	.0	100.0
400만원 이상	(226)	1.2	2.7	3.8	15.4	50.1	30.7	80.8	.0	100.0
모름 / 무응답	(17)	.0	.0	.0	12.4	45.3	42.3	87.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0	4.8	6.8	14.3	44.4	34.0	78.5	.4	100.0
중부권	(119)	.0	6.8	6.8	28.0	38.2	27.0	65.2	.0	100.0
호남권	(119)	1.5	4.6	6.1	31.2	51.9	10.8	62.7	.0	100.0
영남권	(323)	2.5	3.0	5.5	19.1	46.7	28.7	75.4	.0	100.0
강원	(36)	.0	4.3	4.3	28.6	41.0	26.1	67.1	.0	100.0
제주	(13)	.0	5.1	5.1	24.4	62.8	7.7	70.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3	4.9	7.1	22.3	46.8	23.7	70.6	.0	100.0
중도	(588)	1.3	3.9	5.2	16.1	47.3	31.2	78.5	.2	100.0
보수적	(338)	2.3	5.2	7.5	21.7	40.4	30.1	70.5	.4	100.0

표 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213)	1.8	6.4	8.2	20.1	40.5	31.1	71.6	.1	100.0
■ 성별										
남자	(610)	1.6	6.9	8.5	21.8	41.1	28.6	69.7	.0	100.0
여자	(603)	2.0	5.9	7.9	18.4	39.9	33.7	73.5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3	6.5	9.8	17.8	42.5	29.9	72.4	.0	100.0
30대	(319)	.9	9.4	10.3	19.7	37.5	32.5	70.0	.0	100.0
40대	(309)	1.4	4.5	5.9	21.0	44.4	28.5	72.8	.4	100.0
50세이상	(281)	1.5	5.0	6.5	22.1	37.5	33.9	71.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9	7.9	8.7	23.9	33.8	33.6	67.3	.0	100.0
고졸	(547)	1.9	4.3	6.2	19.1	42.6	31.9	74.5	.2	100.0
대재이상	(522)	1.9	8.2	10.1	20.1	40.2	29.6	69.8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11.1	11.1	37.8	24.3	26.8	51.1	.0	100.0
자영업	(214)	1.9	7.0	8.9	16.8	47.5	26.8	74.3	.0	100.0
블루칼라	(245)	2.2	7.5	9.6	19.9	36.4	34.1	70.4	.0	100.0
화이트칼라	(245)	1.0	6.9	7.9	24.9	36.7	30.5	67.3	.0	100.0
전업주부	(299)	2.0	4.8	6.8	18.9	38.0	35.9	73.9	.4	100.0
무직 / 기타	(182)	2.1	5.5	7.5	17.2	49.4	25.9	75.3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0	4.7	6.8	24.2	38.2	30.8	69.0	.0	100.0
200~299만원	(400)	2.2	7.1	9.3	20.4	40.6	29.4	70.0	.3	100.0
300~399만원	(339)	2.3	7.0	9.3	19.7	37.2	33.8	71.0	.0	100.0
400만원 이상	(226)	.0	5.7	5.7	16.8	47.4	30.2	77.5	.0	100.0
모름 / 무응답	(17)	.0	10.3	10.3	11.1	44.9	33.7	78.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2	5.5	7.7	13.5	40.6	38.3	78.9	.0	100.0
충부권	(119)	.7	5.0	5.7	41.9	30.8	21.6	52.4	.0	100.0
호남권	(119)	1.5	7.6	9.1	25.7	46.8	18.4	65.1	.0	100.0
영남권	(323)	1.5	7.2	8.7	23.0	41.7	26.3	68.0	.4	100.0
강원	(36)	2.8	8.5	11.3	21.7	32.0	35.1	67.1	.0	100.0
제주	(13)	.0	23.1	23.1	3.8	60.3	12.8	73.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3	9.9	13.2	20.3	41.1	25.5	66.6	.0	100.0
중도	(588)	1.6	4.6	6.2	19.9	41.0	32.6	73.7	.2	100.0
보수적	(338)	.8	6.5	7.3	20.4	39.0	33.3	72.4	.0	100.0



표 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213)	2.4	5.6	8.0	14.8	40.8	36.4	77.2	.1	100.0
■ 성별										
남자	(610)	2.1	6.4	8.5	14.3	41.8	35.5	77.2	.0	100.0
여자	(603)	2.7	4.8	7.5	15.2	39.9	37.2	77.1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9	5.5	7.4	14.3	44.3	34.0	78.3	.0	100.0
30대	(319)	2.9	7.0	9.9	16.8	37.5	35.8	73.3	.0	100.0
40대	(309)	3.5	4.5	8.0	14.4	41.7	35.6	77.3	.3	100.0
50세이상	(281)	1.1	5.3	6.4	13.4	39.9	40.3	80.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1	5.0	7.0	15.9	40.3	36.1	76.4	.6	100.0
고졸	(547)	1.4	4.0	5.4	14.9	42.2	37.5	79.8	.0	100.0
대재이상	(522)	3.6	7.5	11.0	14.3	39.5	35.2	74.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7.5	7.5	34.6	28.4	29.5	57.9	.0	100.0
자영업	(214)	2.3	4.4	6.8	13.2	43.7	36.3	80.0	.0	100.0
블루칼라	(245)	2.2	5.2	7.4	13.9	42.7	36.0	78.7	.0	100.0
화이트칼라	(245)	3.0	6.4	9.4	16.0	38.8	35.8	74.6	.0	100.0
전업주부	(299)	3.0	5.2	8.2	14.9	34.9	41.6	76.5	.3	100.0
무직 / 기타	(182)	1.2	6.9	8.1	12.7	49.3	30.0	79.3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4	6.7	9.0	16.6	39.8	34.6	74.4	.0	100.0
200~299만원	(400)	3.3	5.4	8.6	13.9	41.0	36.3	77.3	.2	100.0
300~399만원	(339)	2.1	6.0	8.1	15.4	38.6	37.9	76.5	.0	100.0
400만원 이상	(226)	1.1	4.4	5.5	13.4	45.1	36.0	81.1	.0	100.0
모름 / 무응답	(17)	5.7	4.5	10.3	16.8	37.9	35.0	73.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8	4.1	6.9	10.3	41.6	41.0	82.6	.2	100.0
중부권	(119)	2.2	5.7	7.9	25.2	32.6	34.3	66.9	.0	100.0
호남권	(119)	2.4	10.6	13.1	25.3	40.1	21.5	61.7	.0	100.0
영남권	(323)	2.0	5.9	7.9	16.6	41.2	34.3	75.5	.0	100.0
강원	(36)	.0	5.9	5.9	7.3	44.2	42.5	86.7	.0	100.0
제주	(13)	.0	19.2	19.2	5.1	67.9	7.7	75.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5.1	7.0	12.1	14.1	44.5	29.0	73.5	.3	100.0
중도	(588)	2.0	4.8	6.9	14.8	41.5	36.9	78.3	.0	100.0
보수적	(338)	.8	5.7	6.5	15.2	36.6	41.7	78.3	.0	100.0

표 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 전체	(1213)	19.7	24.1	56.1	100.0
■ 성별					
남자	(610)	19.5	23.8	56.7	100.0
여자	(603)	20.0	24.5	55.6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9.5	31.4	49.0	100.0
30대	(319)	17.5	23.7	58.8	100.0
40대	(309)	19.9	25.0	55.2	100.0
50세이상	(281)	22.4	15.9	61.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2.7	15.4	61.8	100.0
고졸	(547)	19.5	21.0	59.5	100.0
대재이상	(522)	19.1	29.8	51.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5.0	27.0	58.1	100.0
자영업	(214)	20.7	21.7	57.6	100.0
블루칼라	(245)	22.4	16.7	60.9	100.0
화이트칼라	(245)	16.6	33.5	49.9	100.0
전업주부	(299)	19.2	22.4	58.4	100.0
무직 / 기타	(182)	20.9	26.8	52.3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1.1	26.0	53.0	100.0
200~299만원	(400)	19.8	24.1	56.1	100.0
300~399만원	(339)	18.9	22.4	58.7	100.0
400만원 이상	(226)	20.1	24.5	55.4	100.0
모름 / 무응답	(17)	13.2	30.2	56.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1.1	22.5	56.4	100.0
중부권	(119)	14.2	27.4	58.4	100.0
호남권	(119)	11.4	44.0	44.6	100.0
영남권	(323)	22.3	16.6	61.0	100.0
강원	(36)	18.1	34.1	47.8	100.0
제주	(13)	25.6	46.2	28.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0.5	30.9	48.6	100.0
중도	(588)	21.4	21.5	57.1	100.0
보수적	(338)	16.2	22.9	60.9	100.0





표 11.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이념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 전체	(1213)	79.6	1.5	16.9	1.9	100.0
■ 성별						
남자	(610)	79.0	1.2	17.5	2.3	100.0
여자	(603)	80.2	1.8	16.4	1.6	100.0
■ 연령별						
19~29세	(304)	73.3	2.1	23.1	1.4	100.0
30대	(319)	75.5	1.6	21.3	1.6	100.0
40대	(309)	85.2	1.9	11.0	1.9	100.0
50세이상	(281)	84.9	.5	11.7	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80.5	.0	15.0	4.5	100.0
고졸	(547)	82.5	1.8	14.1	1.7	100.0
대재이상	(522)	76.3	1.7	20.4	1.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85.2	.0	12.2	2.6	100.0
자영업	(214)	81.6	.9	14.7	2.8	100.0
블루칼라	(245)	76.4	.7	20.2	2.7	100.0
화이트칼라	(245)	81.5	1.0	16.7	.8	100.0
전업주부	(299)	84.3	2.7	12.0	1.0	100.0
무직 / 기타	(182)	70.7	2.3	24.1	2.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77.4	.8	19.1	2.7	100.0
200~299만원	(400)	80.4	1.3	16.1	2.2	100.0
300~399만원	(339)	78.3	3.1	16.1	2.5	100.0
400만원 이상	(226)	82.7	.4	17.0	.0	100.0
모름 / 무응답	(17)	77.0	.0	23.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81.8	2.4	13.5	2.4	100.0
중부권	(119)	68.3	.0	31.2	.6	100.0
호남권	(119)	76.1	1.7	18.7	3.4	100.0
영남권	(323)	80.8	.8	17.4	1.1	100.0
강원	(36)	78.5	.0	18.7	2.8	100.0
제주	(13)	87.2	.0	12.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74.9	2.0	21.8	1.4	100.0
중도	(588)	83.1	1.3	13.3	2.3	100.0
보수적	(338)	77.5	1.6	19.1	1.8	100.0

표 1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 전체	(1213)	21.9	57.6	3.8	11.3	5.3	100.0
■ 성별							
남자	(610)	21.6	57.4	3.7	11.2	6.1	100.0
여자	(603)	22.3	57.7	3.9	11.5	4.6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9.1	59.0	5.2	9.5	7.3	100.0
30대	(319)	22.0	60.0	5.4	7.9	4.6	100.0
40대	(309)	20.6	57.6	2.5	14.1	5.2	100.0
50세이상	(281)	26.3	53.3	1.9	14.3	4.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6.3	50.0	4.1	15.6	4.1	100.0
고졸	(547)	22.0	57.1	3.1	13.1	4.7	100.0
대재이상	(522)	20.6	60.2	4.5	8.4	6.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4.8	55.1	.0	7.1	2.9	100.0
자영업	(214)	22.7	61.0	1.4	11.6	3.3	100.0
블루칼라	(245)	21.6	55.8	6.1	10.7	5.9	100.0
화이트칼라	(245)	23.9	56.6	3.6	9.5	6.3	100.0
전업주부	(299)	20.8	55.8	3.6	14.7	5.0	100.0
무직 / 기타	(182)	18.5	60.6	4.8	9.5	6.6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2.2	61.0	3.9	10.4	2.5	100.0
200~299만원	(400)	22.5	55.4	3.3	12.9	5.9	100.0
300~399만원	(339)	23.8	56.7	4.0	10.5	4.9	100.0
400만원 이상	(226)	18.4	61.0	3.8	9.9	7.0	100.0
모름 / 무응답	(17)	14.5	35.5	10.7	22.6	16.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8.7	59.1	4.8	10.6	6.8	100.0
중부권	(119)	24.9	60.8	4.3	7.3	2.7	100.0
호남권	(119)	23.9	59.7	.8	12.6	2.9	100.0
영남권	(323)	26.1	52.7	3.1	13.3	4.8	100.0
강원	(36)	14.3	59.1	2.8	19.5	4.3	100.0
제주	(13)	43.6	56.4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0.6	64.6	3.5	8.0	3.3	100.0
중도	(588)	23.8	57.5	2.7	10.8	5.1	100.0
보수적	(338)	19.7	51.7	6.0	15.1	7.5	100.0



표 13. 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님은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계	(평균 점)
		%	%	%	%	%	%	%	%	%	%	
■ 전체	(1213)	45.9	26.5	15.2	5.9	3.8	1.5	.6	.5	.1	100.0	(2.05)
■ 성별												
남자	(610)	47.1	26.3	14.5	5.3	3.9	1.5	.6	.7	.0	100.0	(2.03)
여자	(603)	44.6	26.7	15.9	6.6	3.6	1.4	.6	.3	.2	100.0	(2.08)
■ 연령별												
19~29세	(304)	39.4	26.1	15.4	8.5	6.5	2.3	1.3	.0	.4	100.0	(2.31)
30대	(319)	45.9	27.0	13.3	7.0	4.3	1.2	.6	.7	.0	100.0	(2.06)
40대	(309)	45.9	29.4	15.1	3.7	2.6	2.0	.4	.8	.0	100.0	(1.99)
50세이상	(281)	52.9	23.1	17.3	4.3	1.5	.3	.0	.6	.0	100.0	(1.82)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8.9	25.9	17.0	4.2	2.4	1.6	.0	.0	.0	100.0	(1.90)
고졸	(547)	46.2	28.2	14.7	4.8	3.9	1.0	.7	.5	.0	100.0	(2.00)
대재이상	(522)	44.7	24.9	15.3	7.6	4.0	1.9	.7	.7	.2	100.0	(2.15)
■ 직업별												
농/수/축업	(28)	38.1	32.3	15.6	4.7	9.4	.0	.0	.0	.0	100.0	(2.15)
자영업	(214)	49.9	24.2	15.1	6.0	2.4	1.8	.0	.6	.0	100.0	(1.95)
블루칼라	(245)	44.3	28.4	14.4	6.8	4.4	1.2	.0	.5	.0	100.0	(2.05)
화이트칼라	(245)	50.6	25.5	14.5	3.9	2.4	1.1	1.2	.8	.0	100.0	(1.94)
전업주부	(299)	45.7	27.1	17.1	3.8	3.9	1.3	.3	.7	.0	100.0	(2.02)
무직 / 기타	(182)	38.5	26.1	14.2	1.1	5.3	2.2	1.9	.0	.7	100.0	(2.37)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49.5	27.2	11.3	6.2	2.4	1.9	1.5	.0	.0	100.0	(1.97)
200~299만원	(400)	44.4	28.6	17.3	4.8	3.1	.7	.0	.8	.3	100.0	(2.02)
300~399만원	(339)	40.8	23.8	18.8	8.2	5.6	2.2	.0	.6	.0	100.0	(2.23)
400만원 이상	(226)	51.5	25.8	11.1	4.2	4.0	1.2	1.7	.6	.0	100.0	(1.97)
모름 / 무응답	(17)	58.2	31.5	2.9	7.4	.0	.0	.0	.0	.0	100.0	(1.59)
■ 지역별												
수도권	(603)	45.5	27.3	14.5	4.9	3.5	2.3	.8	1.1	.2	100.0	(2.10)
중부권	(119)	50.7	24.3	16.5	6.5	1.1	1.0	.0	.0	.0	100.0	(1.86)
호남권	(119)	55.0	25.6	7.7	7.2	4.4	.0	.0	.0	.0	100.0	(1.80)
영남권	(323)	39.3	27.6	19.3	8.2	4.4	.7	.5	.0	.0	100.0	(2.15)
강원	(36)	60.9	21.0	4.2	.0	1.1	.0	2.8	.0	.0	100.0	(1.90)
제주	(13)	59.0	7.7	33.3	.0	.0	.0	.0	.0	.0	100.0	(1.74)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4.1	25.4	15.6	3.5	5.9	3.0	1.4	1.1	.0	100.0	(2.22)
중도	(588)	45.9	27.7	13.8	6.8	3.8	1.1	.4	.6	.0	100.0	(2.02)
보수적	(338)	47.3	25.4	17.3	6.5	2.0	.8	.4	.0	.4	100.0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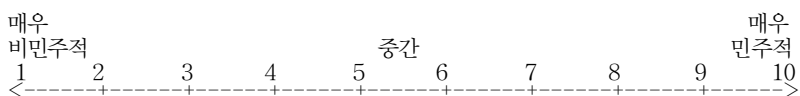


표 14.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그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모름/ 무응답	계	(평균)
		%	%	%	%	%	%	%	%	%	%	%	%	점
■ 전체	(1213)	.5	.8	3.2	4.2	11.9	14.9	25.4	23.6	11.5	3.9	.1	100.0	(6.87)
■ 성별														
남자	(610)	.7	1.0	3.5	4.6	12.1	13.6	28.5	21.4	10.9	3.7	.0	100.0	(6.80)
여자	(603)	.2	.6	3.0	3.8	11.7	16.2	22.2	25.8	12.1	4.1	.2	100.0	(6.95)
■ 연령별														
19~29세	(304)	.4	1.0	2.6	4.7	16.8	15.8	24.8	21.1	11.0	1.7	.0	100.0	(6.66)
30대	(319)	.9	.3	5.5	3.8	11.9	13.2	26.1	22.1	12.8	3.2	.3	100.0	(6.80)
40대	(309)	.5	.3	1.5	4.5	11.3	16.7	25.7	23.1	12.2	4.2	.0	100.0	(6.97)
50세이상	(281)	.0	1.7	3.3	3.9	7.2	13.9	24.9	28.4	9.8	6.9	.0	100.0	(7.07)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0	1.7	1.7	5.0	8.0	11.6	21.0	31.5	9.8	6.7	.0	100.0	(6.95)
고졸	(547)	.0	.8	3.5	3.4	10.6	13.0	25.6	24.5	13.2	5.3	.2	100.0	(7.04)
대재이상	(522)	.3	.6	3.4	4.8	14.3	17.8	26.4	20.5	10.2	1.8	.0	100.0	(6.67)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0	7.0	5.9	4.3	25.7	35.9	10.9	6.2	4.2	.0	100.0	(6.56)
자영업	(214)	1.7	.6	1.4	5.1	5.4	12.9	29.8	25.4	13.0	4.6	.0	100.0	(7.08)
블루칼라	(245)	.0	.8	4.5	5.3	13.6	13.2	23.3	22.8	9.5	7.0	.0	100.0	(6.84)
화이트칼라	(245)	.0	.0	1.8	4.8	13.5	17.1	28.3	19.2	12.7	2.6	.0	100.0	(6.87)
전업주부	(299)	.5	.8	3.8	3.1	12.0	14.3	19.9	29.1	12.3	4.0	.3	100.0	(6.96)
무직/기타	(182)	.4	2.3	4.1	2.7	15.9	15.8	26.4	21.3	10.5	.6	.0	100.0	(6.58)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5	.9	4.1	1.9	12.9	14.7	23.6	22.4	12.2	6.9	.0	100.0	(6.97)
200~299만원	(400)	.8	1.2	2.6	4.7	9.5	13.4	24.5	23.5	14.9	4.6	.2	100.0	(6.99)
300~399만원	(339)	.0	.0	2.8	4.4	12.8	17.1	23.4	27.6	9.8	2.0	.0	100.0	(6.86)
400만원 이상	(226)	.3	.5	3.8	5.3	14.1	13.8	32.4	18.9	8.0	2.9	.0	100.0	(6.66)
모름/무응답	(17)	3.9	9.4	6.6	5.7	7.0	22.8	18.3	22.8	3.7	.0	.0	100.0	(5.80)
■ 지역별														
수도권	(603)	.9	.4	4.0	3.9	11.9	11.8	22.9	26.3	12.4	5.4	.2	100.0	(6.96)
중부권	(119)	.0	.0	4.0	6.2	14.7	21.8	25.0	17.9	8.4	2.0	.0	100.0	(6.55)
호남권	(119)	.0	.8	2.5	7.0	12.9	14.9	31.8	19.6	8.7	1.7	.0	100.0	(6.66)
영남권	(323)	.0	2.0	1.8	2.5	10.2	17.8	26.9	23.9	12.5	2.3	.0	100.0	(6.93)
강원	(36)	.0	.0	.0	11.4	18.9	16.4	25.1	6.8	12.3	9.3	.0	100.0	(6.71)
제주	(13)	.0	.0	11.5	.0	.0	15.4	48.7	24.4	.0	.0	.0	100.0	(6.63)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	.5	4.5	7.0	15.2	12.3	25.2	22.5	11.1	1.3	.0	100.0	(6.63)
중도	(588)	.3	.7	2.8	3.2	10.4	13.9	25.7	26.7	12.9	3.3	.2	100.0	(7.02)
보수적	(338)	1.0	1.3	2.9	3.6	11.6	18.8	25.0	19.0	9.3	7.3	.0	100.0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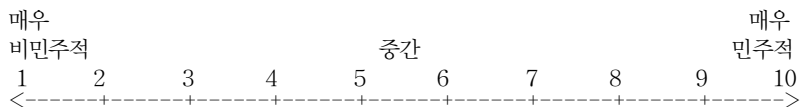




표 15.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문)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13)	1.2	5.4	6.6	43.0	50.3	93.4	100.0
■ 성별								
남자	(610)	1.6	6.8	8.4	42.7	48.9	91.6	100.0
여자	(603)	.9	4.0	4.9	43.4	51.8	95.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7	3.4	5.0	47.8	47.2	95.0	100.0
30대	(319)	1.6	5.9	7.5	47.5	45.0	92.5	100.0
40대	(309)	.7	8.1	8.8	38.3	52.9	91.2	100.0
50세이상	(281)	.8	4.2	5.0	38.1	57.0	95.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9	5.3	8.2	32.3	59.5	91.8	100.0
고졸	(547)	1.3	4.0	5.3	41.9	52.7	94.7	100.0
대재이상	(522)	.7	6.9	7.6	47.2	45.3	92.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2.9	2.9	30.2	66.9	97.1	100.0
자영업	(214)	1.4	7.8	9.2	38.1	52.7	90.8	100.0
블루칼라	(245)	2.1	5.7	7.7	48.2	44.1	92.3	100.0
화이트칼라	(245)	.4	5.8	6.3	44.6	49.2	93.7	100.0
전업주부	(299)	.9	4.0	4.9	41.0	54.1	95.1	100.0
무직 / 기타	(182)	1.6	4.6	6.2	45.3	48.6	93.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0	8.3	10.3	39.8	50.0	89.7	100.0
200~299만원	(400)	1.1	5.3	6.4	43.0	50.6	93.6	100.0
300~399만원	(339)	1.7	4.7	6.4	45.1	48.6	93.6	100.0
400만원 이상	(226)	.0	4.3	4.3	43.9	51.8	95.7	100.0
모름 / 무응답	(17)	.0	.0	.0	35.6	64.4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6	3.5	5.0	47.0	48.0	95.0	100.0
중부권	(119)	.8	6.6	7.5	41.5	51.1	92.5	100.0
호남권	(119)	1.9	10.8	12.7	42.6	44.7	87.3	100.0
영남권	(323)	.3	6.5	6.7	38.6	54.7	93.3	100.0
강원	(36)	2.8	4.2	6.9	26.8	66.3	93.1	100.0
제주	(13)	.0	15.4	15.4	33.3	51.3	84.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5	8.9	10.5	43.3	46.2	89.5	100.0
중도	(588)	1.2	4.6	5.8	43.4	50.8	94.2	100.0
보수적	(338)	1.0	3.9	4.8	42.2	52.9	95.2	100.0

표 16. 김정일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13)	1.2	8.4	9.6	42.4	48.0	90.4	100.0
■ 성별								
남자	(610)	1.1	7.9	9.0	41.0	50.0	91.0	100.0
여자	(603)	1.2	9.0	10.2	43.8	46.0	89.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0	6.0	8.0	50.1	41.8	92.0	100.0
30대	(319)	1.2	9.6	10.8	43.1	46.1	89.2	100.0
40대	(309)	1.2	8.2	9.4	38.9	51.7	90.6	100.0
50세이상	(281)	.2	9.8	10.0	37.0	52.9	9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	9.7	10.1	38.4	51.5	89.9	100.0
고졸	(547)	.8	7.3	8.1	40.4	51.5	91.9	100.0
대재이상	(522)	1.8	9.2	11.0	45.6	43.4	89.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12.3	12.3	38.0	49.7	87.7	100.0
자영업	(214)	.5	10.5	11.0	44.1	44.9	89.0	100.0
블루칼라	(245)	.8	11.2	12.1	38.0	49.9	87.9	100.0
화이트칼라	(245)	.8	5.5	6.3	46.9	46.8	93.7	100.0
전업주부	(299)	1.2	8.3	9.5	37.6	52.9	90.5	100.0
무직 / 기타	(182)	3.1	5.6	8.7	48.7	42.6	91.3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9	13.3	15.2	42.5	42.3	84.8	100.0
200~299만원	(400)	.5	6.8	7.3	40.5	52.2	92.7	100.0
300~399만원	(339)	1.5	7.5	9.0	42.1	49.0	91.0	100.0
400만원 이상	(226)	1.3	7.1	8.3	46.2	45.5	91.7	100.0
모름 / 무응답	(17)	.0	16.9	16.9	38.6	44.5	83.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0	8.4	9.4	40.8	49.8	90.6	100.0
중부권	(119)	.0	7.5	7.5	47.4	45.1	92.5	100.0
호남권	(119)	3.6	15.7	19.3	45.6	35.0	80.7	100.0
영남권	(323)	.6	5.8	6.4	43.1	50.5	93.6	100.0
강원	(36)	5.0	4.2	9.2	39.1	51.7	90.8	100.0
제주	(13)	.0	28.2	28.2	32.1	39.7	71.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7	13.6	15.3	42.9	41.8	84.7	100.0
중도	(588)	1.1	7.3	8.4	44.0	47.6	91.6	100.0
보수적	(338)	.8	6.0	6.8	39.1	54.1	93.2	100.0



표 17.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	%	%	%	%
■ 전체	(1213)	6.1	44.3	50.4	37.7	11.8	49.6	100.0
■ 성별								
남자	(610)	8.1	44.9	53.0	36.0	11.0	47.0	100.0
여자	(603)	4.2	43.7	47.8	39.5	12.7	52.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5.8	39.4	45.2	39.9	14.9	54.8	100.0
30대	(319)	3.3	47.0	50.4	38.9	10.8	49.6	100.0
40대	(309)	8.2	46.6	54.8	37.0	8.2	45.2	100.0
50세이상	(281)	7.3	44.0	51.3	35.0	13.7	48.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2	41.2	48.4	37.4	14.2	51.6	100.0
고졸	(547)	6.8	42.4	49.2	41.1	9.7	50.8	100.0
대재이상	(522)	5.1	47.1	52.3	34.3	13.4	47.7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54.4	54.4	39.5	6.1	45.6	100.0
자영업	(214)	5.8	48.3	54.1	36.3	9.6	45.9	100.0
블루칼라	(245)	9.3	37.8	47.0	40.4	12.6	53.0	100.0
화이트칼라	(245)	4.6	45.5	50.1	36.5	13.4	49.9	100.0
전업주부	(299)	4.0	43.2	47.2	39.1	13.7	52.8	100.0
무직 / 기타	(182)	8.8	47.0	55.8	35.0	9.1	44.2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1.8	40.3	52.1	35.8	12.1	47.9	100.0
200~299만원	(400)	5.3	45.3	50.6	38.5	10.9	49.4	100.0
300~399만원	(339)	3.8	45.4	49.3	37.9	12.9	50.7	100.0
400만원 이상	(226)	5.3	44.4	49.7	38.9	11.4	50.3	100.0
모름 / 무응답	(17)	5.8	52.0	57.8	29.0	13.2	42.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0	43.7	49.7	36.9	13.4	50.3	100.0
중부권	(119)	2.4	38.2	40.6	51.9	7.5	59.4	100.0
호남권	(119)	8.8	47.7	56.5	35.7	7.9	43.5	100.0
영남권	(323)	6.1	47.1	53.2	36.0	10.8	46.8	100.0
강원	(36)	9.7	45.6	55.3	23.9	20.8	44.7	100.0
제주	(13)	12.8	24.4	37.2	47.4	15.4	62.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8.7	49.4	58.1	31.8	10.1	41.9	100.0
중도	(588)	6.0	41.5	47.5	41.8	10.7	52.5	100.0
보수적	(338)	4.1	44.9	49.0	35.7	15.3	51.0	100.0

표 18.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체	(1213)	7.6	44.5	52.2	34.7	13.1	47.8	100.0
■ 성별								
남자	(610)	8.0	40.1	48.1	35.1	16.9	51.9	100.0
여자	(603)	7.3	49.0	56.3	34.4	9.3	43.7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3.8	50.3	64.1	27.2	8.7	35.9	100.0
30대	(319)	7.6	44.2	51.8	37.0	11.1	48.2	100.0
40대	(309)	4.8	44.1	48.9	36.1	14.9	51.1	100.0
50세이상	(281)	4.2	39.1	43.2	38.7	18.1	56.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5	35.9	39.5	46.1	14.4	60.5	100.0
고졸	(547)	5.7	44.5	50.3	34.0	15.7	49.7	100.0
대재이상	(522)	10.8	46.9	57.7	32.4	10.0	42.3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4.9	21.9	26.7	53.9	19.3	73.3	100.0
자영업	(214)	4.7	42.1	46.7	33.5	19.8	53.3	100.0
블루칼라	(245)	4.9	47.5	52.4	30.1	17.5	47.6	100.0
화이트칼라	(245)	10.5	38.0	48.5	41.3	10.2	51.5	100.0
전업주부	(299)	7.7	47.0	54.7	36.6	8.7	45.3	100.0
무직 / 기타	(182)	11.4	51.6	63.0	27.6	9.4	37.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7.8	43.4	51.2	31.3	17.5	48.8	100.0
200~299만원	(400)	7.4	41.6	49.0	38.1	12.9	51.0	100.0
300~399만원	(339)	5.1	45.5	50.6	35.0	14.4	49.4	100.0
400만원 이상	(226)	10.3	50.1	60.4	32.3	7.3	39.6	100.0
모름 / 무응답	(17)	27.2	34.8	62.0	27.7	10.3	38.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3	39.7	46.1	37.2	16.7	53.9	100.0
중부권	(119)	14.5	51.7	66.2	26.9	6.9	33.8	100.0
호남권	(119)	9.6	55.5	65.1	26.7	8.3	34.9	100.0
영남권	(323)	4.7	46.5	51.2	37.4	11.4	48.8	100.0
강원	(36)	29.6	42.0	71.6	25.6	2.8	28.4	100.0
제주	(13)	.0	59.0	59.0	25.6	15.4	4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9.2	48.0	57.1	31.8	11.1	42.9	100.0
중도	(588)	6.4	45.9	52.3	36.4	11.4	47.7	100.0
보수적	(338)	8.5	39.3	47.8	34.3	17.9	52.2	100.0





표 19-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2.9	13.3	29.2	54.5	.1	100.0
■ 성별							
남자	(610)	4.7	19.0	33.6	42.7	.0	100.0
여자	(603)	1.1	7.5	24.7	66.5	.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6	12.2	30.6	54.6	.0	100.0
30대	(319)	2.9	14.1	27.5	55.5	.0	100.0
40대	(309)	3.5	15.1	32.5	48.6	.3	100.0
50세이상	(281)	2.6	11.5	26.0	59.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7	7.3	20.5	70.4	.0	100.0
고졸	(547)	1.4	10.9	31.5	56.1	.2	100.0
대재이상	(522)	4.8	17.5	29.1	48.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0	13.9	17.9	61.1	.0	100.0
자영업	(214)	3.1	21.1	28.3	47.5	.0	100.0
블루칼라	(245)	2.2	8.1	32.2	57.5	.0	100.0
화이트칼라	(245)	3.5	17.9	32.4	46.2	.0	100.0
전업주부	(299)	1.0	6.4	25.9	66.3	.3	100.0
무직 / 기타	(182)	5.2	16.1	29.1	49.6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4.3	9.1	30.4	56.2	.0	100.0
200~299만원	(400)	1.7	13.8	25.4	58.9	.2	100.0
300~399만원	(339)	2.4	13.1	31.5	53.1	.0	100.0
400만원 이상	(226)	4.5	16.4	31.2	47.9	.0	100.0
모름 / 무응답	(17)	.0	21.9	30.4	47.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3	11.7	28.3	57.6	.1	100.0
충무권	(119)	3.4	20.5	34.6	41.4	.0	100.0
호남권	(119)	3.6	12.2	28.9	55.2	.0	100.0
영남권	(323)	2.3	12.7	30.2	54.9	.0	100.0
강원	(36)	16.4	19.1	30.0	34.5	.0	100.0
제주	(13)	.0	28.2	.0	71.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9	18.3	26.0	52.8	.0	100.0
중도	(588)	2.2	10.2	30.3	57.3	.0	100.0
보수적	(338)	4.1	14.4	30.0	51.2	.3	100.0

표 19-2. 북한 사회 인지도 - ㉠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13)	7.1	25.4	45.7	21.8	100.0
■ 성별						
남자	(610)	10.0	28.1	46.1	15.7	100.0
여자	(603)	4.1	22.5	45.3	28.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7	25.6	41.1	26.6	100.0
30대	(319)	6.7	29.8	46.5	17.0	100.0
40대	(309)	9.4	24.2	49.9	16.4	100.0
50세이상	(281)	5.4	21.3	45.2	28.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3	14.4	39.0	44.3	100.0
고졸	(547)	5.3	22.8	49.6	22.4	100.0
대재이상	(522)	10.3	31.1	43.5	15.1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0	21.4	37.4	34.2	100.0
자영업	(214)	9.1	28.2	44.5	18.2	100.0
블루칼라	(245)	4.3	20.3	56.4	19.1	100.0
화이트칼라	(245)	9.7	32.0	42.0	16.3	100.0
전업주부	(299)	4.4	21.7	47.1	26.9	100.0
무직 / 기타	(182)	9.4	26.6	36.9	27.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5.4	22.9	41.6	30.1	100.0
200~299만원	(400)	5.7	25.9	46.1	22.3	100.0
300~399만원	(339)	5.9	24.4	52.0	17.8	100.0
400만원 이상	(226)	13.1	28.6	40.1	18.3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21.9	44.7	26.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2	22.0	50.0	21.8	100.0
중부권	(119)	13.3	41.6	29.1	16.1	100.0
호남권	(119)	7.7	31.7	36.5	24.0	100.0
영남권	(323)	4.7	20.9	50.4	24.1	100.0
강원	(36)	15.8	48.2	29.1	6.9	100.0
제주	(13)	20.5	23.1	15.4	4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9.5	33.4	42.4	14.7	100.0
중도	(588)	5.6	22.0	45.5	26.9	100.0
보수적	(338)	7.6	24.4	48.8	19.1	100.0



표 19-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13)	6.0	24.0	48.3	21.7	100.0
■ 성별						
남자	(610)	7.9	27.5	46.7	17.9	100.0
여자	(603)	4.0	20.5	49.9	25.6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2	18.2	45.2	34.5	100.0
30대	(319)	6.0	28.8	49.9	15.4	100.0
40대	(309)	9.2	28.3	47.5	14.9	100.0
50세이상	(281)	6.5	20.2	50.7	22.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4	17.8	44.7	36.0	100.0
고졸	(547)	5.5	23.0	53.1	18.5	100.0
대재이상	(522)	7.7	26.8	44.3	21.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1.7	35.3	18.8	34.2	100.0
자영업	(214)	7.9	28.1	49.2	14.8	100.0
블루칼라	(245)	2.5	21.8	52.1	23.5	100.0
화이트칼라	(245)	8.7	25.4	50.2	15.7	100.0
전업주부	(299)	4.9	20.3	50.7	24.2	100.0
무직 / 기타	(182)	5.5	24.8	40.1	29.6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6.0	19.7	49.8	24.4	100.0
200~299만원	(400)	5.5	24.1	49.3	21.1	100.0
300~399만원	(339)	4.1	22.7	52.4	20.8	100.0
400만원 이상	(226)	9.4	31.0	38.9	20.7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14.9	45.3	32.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4.8	19.5	55.1	20.5	100.0
중부권	(119)	10.8	38.0	36.6	14.6	100.0
호남권	(119)	11.3	29.0	29.7	30.0	100.0
영남권	(323)	3.4	21.3	50.3	24.9	100.0
강원	(36)	16.0	54.4	26.8	2.8	100.0
제주	(13)	.0	43.6	15.4	4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8.0	29.9	44.9	17.1	100.0
중도	(588)	4.2	21.9	48.6	25.3	100.0
보수적	(338)	7.3	22.8	50.6	19.4	100.0

표 19-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2.7	12.5	30.5	54.1	.3	100.0
■ 성별							
남자	(610)	3.3	17.5	32.9	46.0	.2	100.0
여자	(603)	2.0	7.5	28.0	62.2	.4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2	9.9	27.6	60.6	.8	100.0
30대	(319)	2.2	14.3	31.9	51.7	.0	100.0
40대	(309)	5.5	15.2	32.3	46.7	.3	100.0
50세이상	(281)	1.8	10.4	30.0	57.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0	5.2	24.2	70.6	.0	100.0
고졸	(547)	1.7	10.7	33.6	53.3	.6	100.0
대재이상	(522)	4.4	16.4	28.9	50.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5.9	10.4	26.8	56.9	.0	100.0
자영업	(214)	2.5	17.7	34.3	45.4	.0	100.0
블루칼라	(245)	1.5	12.6	28.3	57.1	.5	100.0
화이트칼라	(245)	3.9	14.7	39.9	41.5	.0	100.0
전업주부	(299)	1.8	7.3	26.8	63.7	.3	100.0
무직 / 기타	(182)	3.7	12.0	22.7	60.9	.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6	11.0	27.8	58.6	.0	100.0
200~299만원	(400)	1.0	10.9	30.4	57.2	.5	100.0
300~399만원	(339)	2.9	12.3	31.0	53.8	.0	100.0
400만원 이상	(226)	5.0	17.5	32.4	44.6	.6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9.1	33.3	50.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7	8.2	29.0	59.6	.6	100.0
중부권	(119)	1.5	26.7	31.3	40.4	.0	100.0
호남권	(119)	3.6	17.5	19.4	59.6	.0	100.0
영남권	(323)	1.8	10.7	36.3	51.2	.0	100.0
강원	(36)	12.2	25.7	42.3	19.9	.0	100.0
제주	(13)	.0	43.6	15.4	41.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4	17.3	33.8	44.5	.0	100.0
중도	(588)	1.4	11.2	28.6	58.6	.2	100.0
보수적	(338)	3.5	10.7	30.9	54.3	.6	100.0



표 19-5.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꽃제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3.3	10.9	23.3	62.4	.1	100.0
■ 성별							
남자	(610)	4.3	13.7	25.4	56.7	.0	100.0
여자	(603)	2.4	8.0	21.1	68.3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9	9.1	19.3	68.7	.0	100.0
30대	(319)	2.9	11.2	23.6	62.4	.0	100.0
40대	(309)	5.1	14.3	25.7	54.9	.0	100.0
50세이상	(281)	2.3	8.7	24.6	63.9	.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0	8.5	20.3	71.2	.0	100.0
고졸	(547)	2.0	9.1	24.0	64.9	.0	100.0
대재이상	(522)	5.6	13.4	23.3	57.4	.3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5	12.8	31.3	52.4	.0	100.0
자영업	(214)	3.8	14.2	26.4	55.6	.0	100.0
블루칼라	(245)	3.1	10.4	18.6	67.9	.0	100.0
화이트칼라	(245)	4.3	11.9	32.2	51.7	.0	100.0
전업주부	(299)	1.7	8.1	22.6	67.1	.5	100.0
무직 / 기타	(182)	4.3	10.5	13.7	71.4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5	10.0	19.2	69.3	.0	100.0
200~299만원	(400)	3.6	8.6	21.2	66.6	.0	100.0
300~399만원	(339)	2.4	10.7	26.7	60.2	.0	100.0
400만원 이상	(226)	6.3	15.2	26.0	51.7	.6	100.0
모름 / 무응답	(17)	.0	21.9	22.0	56.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2	8.4	23.0	65.2	.2	100.0
중부권	(119)	6.7	23.6	22.1	47.7	.0	100.0
호남권	(119)	3.1	7.1	21.9	68.0	.0	100.0
영남권	(323)	1.6	9.4	23.3	65.6	.0	100.0
강원	(36)	10.9	29.1	38.5	21.6	.0	100.0
제주	(13)	.0	30.8	15.4	53.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7	14.1	25.3	55.9	.0	100.0
중도	(588)	2.2	9.3	21.4	66.9	.2	100.0
보수적	(338)	4.1	10.8	24.8	60.3	.0	100.0

표 19-6.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아리랑 축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3.9	21.4	40.9	33.8	.1	100.0
■ 성별							
남자	(610)	5.4	24.5	40.8	29.3	.0	100.0
여자	(603)	2.3	18.3	41.0	38.3	.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3	20.7	33.1	43.9	.0	100.0
30대	(319)	2.7	23.4	40.8	33.1	.0	100.0
40대	(309)	8.1	22.1	44.6	24.9	.3	100.0
50세이상	(281)	2.3	19.1	45.5	33.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	12.2	44.6	42.5	.0	100.0
고졸	(547)	2.0	21.0	45.7	31.1	.2	100.0
대재이상	(522)	6.7	24.3	34.9	34.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5	15.7	56.4	24.4	.0	100.0
자영업	(214)	5.2	21.8	46.1	26.8	.0	100.0
블루칼라	(245)	1.8	19.2	41.4	37.6	.0	100.0
화이트칼라	(245)	6.5	23.2	38.5	31.8	.0	100.0
전업주부	(299)	1.8	18.9	43.2	35.8	.3	100.0
무직 / 기타	(182)	5.0	26.4	31.2	37.5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1	18.2	42.6	37.1	.0	100.0
200~299만원	(400)	2.3	17.9	46.6	32.9	.2	100.0
300~399만원	(339)	3.7	21.5	40.2	34.5	.0	100.0
400만원 이상	(226)	8.3	30.7	30.4	30.6	.0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19.5	37.7	35.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7	17.2	41.9	37.0	.1	100.0
중부권	(119)	4.9	33.7	34.2	27.1	.0	100.0
호남권	(119)	5.8	24.2	34.4	35.6	.0	100.0
영남권	(323)	2.5	20.1	45.1	32.3	.0	100.0
강원	(36)	10.1	42.7	39.4	7.8	.0	100.0
제주	(13)	.0	51.3	15.4	33.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5.3	28.1	35.9	30.7	.0	100.0
중도	(588)	2.2	19.1	41.6	37.1	.0	100.0
보수적	(338)	5.6	19.7	44.0	30.5	.3	100.0



표 20-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13)	3.5	96.5	100.0
■ 성별				
남자	(610)	3.1	96.9	100.0
여자	(603)	3.8	96.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1	95.9	100.0
30대	(319)	1.5	98.5	100.0
40대	(309)	2.9	97.1	100.0
50세이상	(281)	5.6	94.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2	95.8	100.0
고졸	(547)	2.2	97.8	100.0
대재이상	(522)	4.6	95.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5.0	95.0	100.0
자영업	(214)	4.2	95.8	100.0
블루칼라	(245)	1.5	98.5	100.0
화이트칼라	(245)	3.8	96.2	100.0
전업주부	(299)	3.7	96.3	100.0
무직 / 기타	(182)	4.1	95.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3.5	96.5	100.0
200~299만원	(400)	3.0	97.0	100.0
300~399만원	(339)	3.1	96.9	100.0
400만원 이상	(226)	4.8	95.2	100.0
모름 / 무응답	(17)	2.9	97.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9	96.1	100.0
충부권	(119)	3.6	96.4	100.0
호남권	(119)	6.4	93.6	100.0
영남권	(323)	2.0	98.0	100.0
강원	(36)	.0	100.0	100.0
제주	(13)	.0	10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8	96.2	100.0
중도	(588)	3.9	96.1	100.0
보수적	(338)	2.3	97.7	100.0

표 2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13)	9.3	90.7	100.0
■ 성별				
남자	(610)	11.3	88.7	100.0
여자	(603)	7.2	92.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7.9	92.1	100.0
30대	(319)	8.2	91.8	100.0
40대	(309)	10.6	89.4	100.0
50세이상	(281)	10.5	89.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8.8	91.2	100.0
고졸	(547)	6.6	93.4	100.0
대재이상	(522)	12.2	87.8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6	92.4	100.0
자영업	(214)	10.6	89.4	100.0
블루칼라	(245)	9.1	90.9	100.0
화이트칼라	(245)	11.0	89.0	100.0
전업주부	(299)	7.4	92.6	100.0
무직 / 기타	(182)	9.0	91.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7.9	92.1	100.0
200~299만원	(400)	7.7	92.3	100.0
300~399만원	(339)	9.8	90.2	100.0
400만원 이상	(226)	12.9	87.1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93.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8.1	91.9	100.0
충부권	(119)	14.2	85.8	100.0
호남권	(119)	12.2	87.8	100.0
영남권	(323)	7.7	92.3	100.0
강원	(36)	17.4	82.6	100.0
제주	(13)	12.8	87.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0.3	89.7	100.0
중도	(588)	8.0	92.0	100.0
보수적	(338)	10.6	89.4	100.0





표 20-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13)	31.2	68.8	100.0
■ 성별				
남자	(610)	33.5	66.5	100.0
여자	(603)	28.9	71.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3.3	66.7	100.0
30대	(319)	35.9	64.1	100.0
40대	(309)	31.3	68.7	100.0
50세이상	(281)	23.6	76.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7.7	82.3	100.0
고졸	(547)	28.4	71.6	100.0
대재이상	(522)	37.9	62.1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9.2	60.8	100.0
자영업	(214)	30.9	69.1	100.0
블루칼라	(245)	29.2	70.8	100.0
화이트칼라	(245)	32.9	67.1	100.0
전업주부	(299)	26.5	73.5	100.0
무직 / 기타	(182)	38.5	61.5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34.6	65.4	100.0
200~299만원	(400)	26.5	73.5	100.0
300~399만원	(339)	30.3	69.7	100.0
400만원 이상	(226)	35.8	64.2	100.0
모름 / 무응답	(17)	53.0	47.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6.2	73.8	100.0
중부권	(119)	36.4	63.6	100.0
호남권	(119)	46.3	53.7	100.0
영남권	(323)	33.4	66.6	100.0
강원	(36)	29.2	70.8	100.0
제주	(13)	28.2	71.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9.8	60.2	100.0
중도	(588)	27.0	73.0	100.0
보수적	(338)	31.2	68.8	100.0

표 20-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13)	2.4	97.6	100.0
■ 성별				
남자	(610)	2.6	97.4	100.0
여자	(603)	2.3	97.7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9	98.1	100.0
30대	(319)	2.2	97.8	100.0
40대	(309)	2.8	97.2	100.0
50세이상	(281)	2.8	97.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	99.3	100.0
고졸	(547)	1.9	98.1	100.0
대재이상	(522)	3.5	96.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	97.7	100.0
자영업	(214)	3.0	97.0	100.0
블루칼라	(245)	2.8	97.2	100.0
화이트칼라	(245)	1.5	98.5	100.0
전업주부	(299)	3.2	96.8	100.0
무직 / 기타	(182)	1.3	98.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4	99.6	100.0
200~299만원	(400)	2.8	97.2	100.0
300~399만원	(339)	3.8	96.2	100.0
400만원 이상	(226)	2.1	97.9	100.0
모름 / 무응답	(17)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2	96.8	100.0
충부권	(119)	1.6	98.4	100.0
호남권	(119)	2.2	97.8	100.0
영남권	(323)	1.2	98.8	100.0
강원	(36)	5.4	94.6	100.0
제주	(13)	.0	10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9	96.1	100.0
중도	(588)	2.1	97.9	100.0
보수적	(338)	1.9	98.1	100.0



표 21-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전체	(1213)	70.6	23.6	94.2	3.6	2.1	5.7	.1	100.0
■ 성별									
남자	(610)	71.5	23.1	94.5	3.1	2.2	5.3	.1	100.0
여자	(603)	69.7	24.2	93.9	4.2	2.0	6.1	.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6.8	26.7	93.5	4.6	2.0	6.5	.0	100.0
30대	(319)	70.2	23.5	93.7	4.3	2.0	6.3	.0	100.0
40대	(309)	72.4	23.6	96.0	.9	3.1	4.0	.0	100.0
50세이상	(281)	73.1	20.5	93.5	4.8	1.4	6.2	.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67.7	23.6	91.3	5.0	3.8	8.7	.0	100.0
고졸	(547)	70.8	23.0	93.9	4.3	1.7	6.0	.1	100.0
대재이상	(522)	71.1	24.3	95.4	2.5	2.1	4.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87.0	7.2	94.1	5.9	.0	5.9	.0	100.0
자영업	(214)	73.1	22.9	96.0	1.7	2.3	4.0	.0	100.0
블루칼라	(245)	71.8	21.9	93.7	3.8	2.2	6.0	.3	100.0
화이트칼라	(245)	68.7	28.0	96.7	1.8	1.5	3.3	.0	100.0
전업주부	(299)	69.1	23.4	92.5	5.1	2.4	7.5	.0	100.0
무직 / 기타	(182)	68.3	23.8	92.1	5.4	2.4	7.9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70.9	20.2	91.2	7.2	1.4	8.5	.3	100.0
200~299만원	(400)	68.8	25.3	94.1	3.2	2.7	5.9	.0	100.0
300~399만원	(339)	67.5	26.9	94.5	2.0	3.5	5.5	.0	100.0
400만원 이상	(226)	77.1	19.4	96.6	3.4	.0	3.4	.0	100.0
모름 / 무응답	(17)	79.7	20.3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8.2	23.4	91.6	5.1	3.2	8.4	.0	100.0
중부권	(119)	76.9	19.7	96.6	1.8	1.5	3.4	.0	100.0
호남권	(119)	76.4	17.6	94.0	2.5	2.9	5.4	.6	100.0
영남권	(323)	67.9	30.0	97.9	1.8	.3	2.1	.0	100.0
강원	(36)	88.9	5.6	94.4	5.6	.0	5.6	.0	100.0
제주	(13)	84.6	15.4	100.0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7.4	26.3	93.8	4.6	1.7	6.2	.0	100.0
중도	(588)	72.9	22.0	94.9	2.6	2.4	4.9	.1	100.0
보수적	(338)	69.2	24.1	93.3	4.6	2.1	6.7	.0	100.0

표 21-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수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	%		
■ 전체	(1213)	73.3	22.1	95.4	3.5	1.1	4.6	100.0
■ 성별								
남자	(610)	73.8	22.0	95.7	3.7	.5	4.3	100.0
여자	(603)	72.8	22.2	95.0	3.2	1.8	5.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8.3	26.6	94.9	3.6	1.6	5.1	100.0
30대	(319)	73.6	22.5	96.1	3.1	.9	3.9	100.0
40대	(309)	74.8	20.5	95.3	3.3	1.4	4.7	100.0
50세이상	(281)	76.7	18.5	95.2	4.1	.8	4.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4.7	18.6	93.4	4.6	2.1	6.6	100.0
고졸	(547)	73.5	21.6	95.1	3.9	1.0	4.9	100.0
대재이상	(522)	72.6	23.6	96.2	2.8	1.0	3.8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88.0	5.9	93.8	6.2	.0	6.2	100.0
자영업	(214)	77.0	17.2	94.3	5.7	.0	5.7	100.0
블루칼라	(245)	71.8	25.3	97.1	2.5	.4	2.9	100.0
화이트칼라	(245)	69.4	26.2	95.6	2.4	2.0	4.4	100.0
전업주부	(299)	74.5	20.3	94.8	3.3	1.9	5.2	100.0
무직 / 기타	(182)	71.7	23.5	95.2	3.5	1.3	4.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77.1	17.2	94.3	4.3	1.4	5.7	100.0
200~299만원	(400)	72.0	21.9	93.8	4.4	1.8	6.2	100.0
300~399만원	(339)	68.4	27.6	95.9	3.4	.6	4.1	100.0
400만원 이상	(226)	79.5	18.5	98.0	1.5	.5	2.0	100.0
모름 / 무응답	(17)	68.7	31.3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72.2	21.4	93.5	4.6	1.9	6.5	100.0
중부권	(119)	76.1	21.5	97.6	.8	1.5	2.4	100.0
호남권	(119)	78.0	21.4	99.4	.6	.0	.6	100.0
영남권	(323)	69.5	26.7	96.1	3.6	.3	3.9	100.0
강원	(36)	97.2	.0	97.2	2.8	.0	2.8	100.0
제주	(13)	84.6	15.4	100.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73.2	21.8	95.0	3.4	1.6	5.0	100.0
중도	(588)	74.5	21.5	95.9	3.5	.6	4.1	100.0
보수적	(338)	71.3	23.4	94.7	3.5	1.8	5.3	100.0



표 21-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법률제도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체	(1213)	65.2	29.9	95.1	3.8	1.1	4.9	.1	100.0
■ 성별									
남자	(610)	64.4	31.7	96.0	3.0	.9	3.9	.1	100.0
여자	(603)	66.1	28.0	94.1	4.5	1.4	5.9	.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1.9	31.6	93.5	4.9	1.6	6.5	.0	100.0
30대	(319)	67.6	28.9	96.6	2.9	.6	3.4	.0	100.0
40대	(309)	63.2	32.4	95.6	3.6	.8	4.4	.0	100.0
50세이상	(281)	68.3	26.2	94.5	3.7	1.6	5.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66.5	24.4	90.8	5.6	3.6	9.2	.0	100.0
고졸	(547)	66.0	28.9	94.9	4.2	.7	5.0	.1	100.0
대재이상	(522)	64.1	32.4	96.4	2.7	.8	3.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91.7	8.3	100.0	.0	.0	.0	.0	100.0
자영업	(214)	66.3	30.2	96.6	3.0	.4	3.4	.0	100.0
블루칼라	(245)	62.9	32.6	95.5	4.5	.0	4.5	.0	100.0
화이트칼라	(245)	62.8	33.2	96.0	2.5	1.2	3.7	.3	100.0
전업주부	(299)	66.6	25.7	92.3	5.5	2.2	7.7	.0	100.0
무직 / 기타	(182)	63.7	31.5	95.2	3.0	1.8	4.8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71.3	24.6	95.9	3.5	.5	4.1	.0	100.0
200~299만원	(400)	62.6	30.2	92.7	5.5	1.6	7.1	.2	100.0
300~399만원	(339)	61.2	35.0	96.2	2.3	1.5	3.8	.0	100.0
400만원 이상	(226)	69.7	26.5	96.2	3.3	.5	3.8	.0	100.0
모름 / 무응답	(17)	66.1	33.9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0.5	33.4	93.9	4.1	1.9	6.0	.1	100.0
충부권	(119)	71.0	26.6	97.6	2.4	.0	2.4	.0	100.0
호남권	(119)	77.2	20.8	98.0	2.0	.0	2.0	.0	100.0
영남권	(323)	63.9	30.6	94.5	4.9	.6	5.5	.0	100.0
강원	(36)	93.8	6.2	100.0	.0	.0	.0	.0	100.0
제주	(13)	75.6	24.4	100.0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5.2	28.5	93.6	4.6	1.5	6.1	.3	100.0
중도	(588)	65.9	30.3	96.2	3.0	.9	3.8	.0	100.0
보수적	(338)	64.0	30.4	94.4	4.4	1.2	5.6	.0	100.0

표 21-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체	(1213)	42.2	40.2	82.4	16.1	1.4	17.5	.1	100.0
■ 성별									
남자	(610)	42.5	40.7	83.3	15.7	1.1	16.7	.0	100.0
여자	(603)	41.9	39.7	81.6	16.5	1.7	18.2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8.6	44.0	82.6	15.7	1.6	17.4	.0	100.0
30대	(319)	41.5	40.0	81.6	17.6	.9	18.4	.0	100.0
40대	(309)	40.4	42.8	83.1	15.7	1.2	16.9	.0	100.0
50세이상	(281)	48.8	33.7	82.5	15.1	2.0	17.1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7.5	37.4	84.9	10.6	3.8	14.3	.8	100.0
고졸	(547)	39.1	38.8	77.9	21.0	1.1	22.1	.0	100.0
대재이상	(522)	44.0	42.6	86.6	12.4	1.0	13.4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4.7	21.8	96.5	3.5	.0	3.5	.0	100.0
자영업	(214)	44.0	39.8	83.8	15.9	.4	16.2	.0	100.0
블루칼라	(245)	35.6	42.1	77.7	21.6	.7	22.3	.0	100.0
화이트칼라	(245)	43.5	43.1	86.6	12.0	1.4	13.4	.0	100.0
전업주부	(299)	41.9	38.7	80.7	16.9	2.1	19.0	.4	100.0
무직 / 기타	(182)	42.7	39.9	82.6	14.9	2.5	17.4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50.3	32.8	83.1	15.4	1.5	16.9	.0	100.0
200~299만원	(400)	41.3	38.0	79.3	18.6	2.1	20.7	.0	100.0
300~399만원	(339)	34.8	45.8	80.6	18.6	.8	19.4	.0	100.0
400만원 이상	(226)	45.6	43.6	89.3	9.1	1.2	10.2	.5	100.0
모름 / 무응답	(17)	55.3	37.7	93.0	7.0	.0	7.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5.0	37.3	72.3	24.8	2.7	27.5	.2	100.0
충부권	(119)	47.3	49.4	96.6	3.4	.0	3.4	.0	100.0
호남권	(119)	65.3	30.9	96.2	3.8	.0	3.8	.0	100.0
영남권	(323)	42.4	46.1	88.6	11.2	.3	11.4	.0	100.0
강원	(36)	64.4	35.6	100.0	.0	.0	.0	.0	100.0
제주	(13)	51.3	43.6	94.9	5.1	.0	5.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2.1	45.7	87.8	11.6	.6	12.2	.0	100.0
중도	(588)	41.7	38.2	79.9	18.8	1.3	20.1	.0	100.0
보수적	(338)	43.1	39.1	82.2	15.2	2.3	17.4	.3	100.0



표 21-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전체	(1213)	37.9	44.5	82.4	16.6	1.0	17.6	100.0
■ 성별								
남자	(610)	37.6	44.9	82.5	16.7	.8	17.5	100.0
여자	(603)	38.2	44.0	82.2	16.6	1.2	17.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1.1	48.7	79.8	19.0	1.2	20.2	100.0
30대	(319)	38.0	43.6	81.6	17.9	.6	18.4	100.0
40대	(309)	38.7	45.1	83.9	15.3	.8	16.1	100.0
50세이상	(281)	44.2	40.1	84.3	14.2	1.5	15.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7.5	39.4	87.0	11.0	2.1	13.0	100.0
고졸	(547)	36.5	43.6	80.1	19.0	.9	19.9	100.0
대재이상	(522)	36.7	46.7	83.4	15.8	.8	16.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62.3	37.7	100.0	.0	.0	.0	100.0
자영업	(214)	45.0	40.0	85.0	14.6	.4	15.0	100.0
블루칼라	(245)	34.4	44.5	78.9	20.1	1.0	21.1	100.0
화이트칼라	(245)	36.4	50.9	87.3	11.1	1.6	12.7	100.0
전업주부	(299)	37.6	40.8	78.4	20.3	1.3	21.6	100.0
무직 / 기타	(182)	33.1	47.9	81.0	18.3	.7	19.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43.7	39.5	83.3	14.8	1.9	16.7	100.0
200~299만원	(400)	39.7	42.0	81.7	17.3	1.0	18.3	100.0
300~399만원	(339)	30.6	48.5	79.0	20.2	.8	21.0	100.0
400만원 이상	(226)	38.7	48.5	87.1	12.4	.5	12.9	100.0
모름 / 무응답	(17)	51.9	35.4	87.3	12.7	.0	12.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2.1	41.1	73.2	25.1	1.7	26.8	100.0
중부권	(119)	46.1	48.5	94.5	4.6	.8	5.5	100.0
호남권	(119)	49.2	46.5	95.7	4.3	.0	4.3	100.0
영남권	(323)	38.6	49.8	88.4	11.3	.3	11.6	100.0
강원	(36)	60.4	31.8	92.2	7.8	.0	7.8	100.0
제주	(13)	47.4	47.4	94.9	5.1	.0	5.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5.8	46.7	82.5	16.6	1.0	17.5	100.0
중도	(588)	38.4	43.6	82.0	17.2	.8	18.0	100.0
보수적	(338)	38.9	44.0	82.9	15.7	1.4	17.1	100.0

표 22.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13)	15.9	45.5	61.3	30.2	8.4	38.6	.1	100.0
■ 성별									
남자	(610)	14.0	42.5	56.5	31.7	11.8	43.5	.0	100.0
여자	(603)	17.7	48.5	66.2	28.6	5.0	33.6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7.2	51.6	68.8	25.2	5.9	31.2	.0	100.0
30대	(319)	15.0	40.0	55.0	36.1	9.0	45.0	.0	100.0
40대	(309)	14.3	46.2	60.5	28.6	10.9	39.5	.0	100.0
50세이상	(281)	17.1	44.2	61.3	30.5	7.7	38.2	.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4.9	48.2	63.2	28.5	7.4	35.9	1.0	100.0
고졸	(547)	16.1	43.4	59.5	30.7	9.8	40.5	.0	100.0
대재이상	(522)	15.9	46.8	62.7	30.1	7.2	37.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4.2	43.6	67.8	28.7	3.5	32.2	.0	100.0
자영업	(214)	18.8	42.1	60.9	26.9	12.2	39.1	.0	100.0
블루칼라	(245)	13.6	42.9	56.5	33.0	10.5	43.5	.0	100.0
화이트칼라	(245)	11.4	51.4	62.8	29.4	7.8	37.2	.0	100.0
전업주부	(299)	17.1	44.6	61.6	32.0	5.9	37.9	.5	100.0
무직 / 기타	(182)	18.1	46.7	64.8	28.3	6.8	35.2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8.6	43.6	62.2	27.1	10.8	37.8	.0	100.0
200~299만원	(400)	14.5	41.3	55.8	35.7	8.2	43.9	.4	100.0
300~399만원	(339)	11.9	48.2	60.1	31.2	8.8	39.9	.0	100.0
400만원 이상	(226)	21.5	49.7	71.2	22.7	6.2	28.8	.0	100.0
모름 / 무응답	(17)	15.2	59.7	74.9	21.3	3.7	25.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2.8	41.3	54.1	33.8	11.8	45.6	.2	100.0
중부권	(119)	20.9	44.3	65.2	32.1	2.7	34.8	.0	100.0
호남권	(119)	27.9	38.6	66.5	27.9	5.6	33.5	.0	100.0
영남권	(323)	11.4	58.1	69.5	24.8	5.7	30.5	.0	100.0
강원	(36)	39.8	34.2	74.0	26.0	.0	26.0	.0	100.0
제주	(13)	47.4	26.9	74.4	10.3	15.4	25.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8.3	41.3	59.6	31.0	9.4	40.4	.0	100.0
중도	(588)	12.4	46.4	58.8	32.4	8.6	41.0	.2	100.0
보수적	(338)	19.7	47.5	67.2	25.6	7.2	32.8	.0	100.0





표 23.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는다			
		%	%	%	%	%	%	%	%
■ 전체	(1213)	34.9	36.8	71.7	19.1	5.3	24.4	3.9	100.0
■ 성별									
남자	(610)	35.3	36.4	71.7	19.1	6.3	25.3	3.0	100.0
여자	(603)	34.5	37.2	71.7	19.1	4.4	23.5	4.9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0.0	41.1	71.1	18.3	7.0	25.3	3.6	100.0
30대	(319)	38.9	36.9	75.8	17.1	3.5	20.6	3.6	100.0
40대	(309)	35.1	34.5	69.6	21.2	5.4	26.6	3.8	100.0
50세이상	(281)	35.5	34.4	69.9	19.8	5.6	25.4	4.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8.2	39.9	68.0	18.3	3.4	21.6	10.4	100.0
고졸	(547)	36.7	31.8	68.4	21.5	6.5	28.0	3.5	100.0
대재이상	(522)	34.9	41.2	76.1	16.7	4.7	21.4	2.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9.1	38.8	67.8	15.9	9.4	25.3	6.9	100.0
자영업	(214)	34.7	33.8	68.5	19.9	8.0	27.9	3.6	100.0
블루칼라	(245)	32.6	38.3	70.9	22.2	3.9	26.1	3.0	100.0
화이트칼라	(245)	32.6	38.5	71.2	20.7	4.9	25.5	3.3	100.0
전업주부	(299)	39.8	34.0	73.8	16.8	4.1	20.9	5.3	100.0
무직 / 기타	(182)	34.2	40.1	74.2	15.8	6.3	22.1	3.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32.0	34.7	66.6	19.4	7.5	26.9	6.4	100.0
200~299만원	(400)	32.8	38.6	71.4	19.3	4.7	24.0	4.5	100.0
300~399만원	(339)	34.9	36.5	71.5	20.5	5.5	26.0	2.5	100.0
400만원 이상	(226)	40.4	37.2	77.6	15.7	4.0	19.7	2.7	100.0
모름 / 무응답	(17)	51.0	20.8	71.8	22.3	5.8	28.2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8.1	29.9	68.0	21.5	6.6	28.0	4.0	100.0
중부권	(119)	36.9	43.1	80.0	16.0	.8	16.8	3.2	100.0
호남권	(119)	30.2	40.6	70.7	17.1	7.3	24.4	4.9	100.0
영남권	(323)	28.0	47.5	75.5	15.8	4.3	20.2	4.3	100.0
강원	(36)	46.4	22.5	68.9	31.1	.0	31.1	.0	100.0
제주	(13)	53.8	33.3	87.2	.0	12.8	12.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0.9	40.0	70.8	20.5	5.6	26.2	3.0	100.0
중도	(588)	35.3	36.7	72.0	18.5	4.7	23.2	4.8	100.0
보수적	(338)	37.7	34.2	71.8	18.7	6.2	24.9	3.2	100.0

표 24.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전체	(1213)	4.4	38.5	42.9	41.2	15.7	56.8	.3	100.0
■ 성별									
남자	(610)	4.5	33.6	38.1	43.6	18.3	61.9	.0	100.0
여자	(603)	4.3	43.4	47.6	38.7	13.0	51.7	.7	100.0
■ 연령별									
19~29세	(304)	8.7	42.7	51.4	38.1	10.5	48.6	.0	100.0
30대	(319)	3.8	38.3	42.1	43.4	14.2	57.6	.3	100.0
40대	(309)	1.5	39.3	40.8	41.3	17.4	58.6	.6	100.0
50세이상	(281)	3.6	33.1	36.7	41.8	21.1	62.9	.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0	32.7	34.7	47.4	16.9	64.3	.9	100.0
고졸	(547)	2.4	36.9	39.3	40.8	19.6	60.4	.3	100.0
대재이상	(522)	7.2	41.7	48.8	39.8	11.2	51.0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	34.4	36.8	48.6	14.6	63.2	.0	100.0
자영업	(214)	2.3	36.9	39.3	40.6	19.7	60.3	.4	100.0
블루칼라	(245)	5.2	35.9	41.1	40.5	18.4	58.9	.0	100.0
화이트칼라	(245)	5.7	36.7	42.4	45.4	12.2	57.6	.0	100.0
전업주부	(299)	3.8	42.6	46.4	37.7	14.8	52.5	1.1	100.0
무직 / 기타	(182)	5.4	39.8	45.1	41.5	13.3	54.9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4.7	38.0	42.7	36.5	20.2	56.7	.6	100.0
200~299만원	(400)	3.1	36.5	39.7	42.7	17.2	59.9	.5	100.0
300~399만원	(339)	3.1	38.7	41.8	42.2	15.8	58.0	.3	100.0
400만원 이상	(226)	6.6	44.3	50.9	40.7	8.4	49.1	.0	100.0
모름 / 무응답	(17)	27.2	7.4	34.6	53.1	12.3	65.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9	34.2	38.1	40.7	20.6	61.3	.7	100.0
충부권	(119)	6.6	50.1	56.7	39.6	3.6	43.3	.0	100.0
호남권	(119)	5.5	45.3	50.8	38.3	10.9	49.2	.0	100.0
영남권	(323)	3.0	39.1	42.1	43.7	14.2	57.9	.0	100.0
강원	(36)	15.6	39.0	54.6	42.6	2.8	45.4	.0	100.0
제주	(13)	.0	51.3	51.3	35.9	12.8	48.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1	39.6	45.6	42.5	11.9	54.4	.0	100.0
중도	(588)	2.7	39.4	42.1	41.3	15.9	57.2	.7	100.0
보수적	(338)	5.9	35.9	41.7	39.8	18.5	58.3	.0	100.0



표 25.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	%	%	%	%	%	%	%
■ 전체	(1213)	6.0	38.2	44.1	41.2	14.5	55.7	2	100.0
■ 성별									
남자	(610)	6.4	43.0	49.4	37.5	12.9	50.4	.2	100.0
여자	(603)	5.5	33.3	38.8	44.8	16.2	61.1	.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5.9	41.7	47.6	36.6	15.4	52.0	.4	100.0
30대	(319)	6.1	41.3	47.4	41.1	11.6	52.6	.0	100.0
40대	(309)	6.1	35.1	41.2	45.4	13.2	58.6	.3	100.0
50세이상	(281)	5.7	34.3	40.0	41.5	18.5	60.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5.2	36.9	42.1	42.8	15.1	57.9	.0	100.0
고졸	(547)	4.7	33.4	38.1	44.6	17.3	61.9	.0	100.0
대재이상	(522)	7.4	43.6	51.0	37.1	11.5	48.6	.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5	18.0	21.5	75.6	2.9	78.5	.0	100.0
자영업	(214)	7.1	39.5	46.6	39.1	14.4	53.4	.0	100.0
블루칼라	(245)	7.5	38.0	45.5	41.1	12.8	54.0	.5	100.0
화이트칼라	(245)	4.7	45.7	50.3	35.9	13.7	49.7	.0	100.0
전업주부	(299)	4.8	30.2	35.0	47.4	17.3	64.7	.3	100.0
무직 / 기타	(182)	6.5	43.0	49.5	35.0	15.5	50.5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4.7	35.8	40.5	43.0	16.0	59.0	.5	100.0
200~299만원	(400)	4.8	38.3	43.1	41.0	15.9	56.9	.0	100.0
300~399만원	(339)	6.8	38.9	45.7	43.5	10.5	54.0	.3	100.0
400만원 이상	(226)	8.3	38.9	47.1	36.7	16.1	52.9	.0	100.0
모름 / 무응답	(17)	2.9	44.2	47.2	31.5	21.4	52.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5.1	39.6	44.7	40.7	14.3	54.9	.4	100.0
중부권	(119)	3.0	40.4	43.4	37.1	19.5	56.6	.0	100.0
호남권	(119)	15.5	37.7	53.2	42.7	4.1	46.8	.0	100.0
영남권	(323)	5.8	33.6	39.4	45.1	15.5	60.6	.0	100.0
강원	(36)	.0	43.4	43.4	28.0	28.6	56.6	.0	100.0
제주	(13)	5.1	55.1	60.3	24.4	15.4	39.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8.4	44.7	53.0	33.9	13.1	47.0	.0	100.0
중도	(588)	4.4	36.8	41.2	46.3	12.2	58.4	.4	100.0
보수적	(338)	6.6	35.0	41.6	38.5	19.9	58.4	.0	100.0

표 26-1.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문)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	%
■ 전체	(1213)	2.5	12.8	15.4	45.3	26.0	13.3	39.3	100.0
■ 성별									
남자	(610)	3.2	14.9	18.1	46.2	21.5	14.1	35.7	100.0
여자	(603)	1.9	10.8	12.7	44.3	30.5	12.4	43.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1	13.2	15.3	48.9	23.9	11.9	35.8	100.0
30대	(319)	3.6	15.2	18.8	45.5	25.5	10.2	35.8	100.0
40대	(309)	3.1	13.2	16.3	40.7	27.7	15.3	43.0	100.0
50세이상	(281)	1.2	9.4	10.6	46.2	27.1	16.1	43.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2	9.6	10.8	44.7	27.8	16.7	44.5	100.0
고졸	(547)	1.9	11.0	12.8	43.8	29.1	14.3	43.4	100.0
대재이상	(522)	3.6	15.7	19.3	47.1	22.3	11.3	33.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	11.4	13.7	44.4	34.1	7.8	41.9	100.0
자영업	(214)	2.4	16.2	18.7	38.8	25.7	16.8	42.5	100.0
블루칼라	(245)	2.7	14.1	16.8	48.2	23.8	11.2	35.0	100.0
화이트칼라	(245)	4.5	14.8	19.3	48.0	19.2	13.5	32.6	100.0
전업주부	(299)	.8	9.2	10.0	42.1	32.7	15.2	47.9	100.0
무직 / 기타	(182)	2.6	10.8	13.4	50.8	26.4	9.3	35.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3.8	13.4	17.2	42.3	27.2	13.4	40.6	100.0
200~299만원	(400)	2.0	11.1	13.1	45.9	24.5	16.5	41.0	100.0
300~399만원	(339)	2.5	12.8	15.2	49.9	27.4	7.5	34.9	100.0
400만원 이상	(226)	2.5	15.2	17.7	42.2	25.3	14.7	40.0	100.0
모름 / 무응답	(17)	.0	16.6	16.6	21.5	28.2	33.7	61.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6	13.9	16.5	45.8	23.6	14.1	37.7	100.0
중부권	(119)	.7	12.1	12.8	43.9	20.6	22.8	43.3	100.0
호남권	(119)	6.1	18.0	24.1	45.0	26.1	4.7	30.8	100.0
영남권	(323)	1.3	9.0	10.3	43.8	33.4	12.5	45.9	100.0
강원	(36)	5.1	17.9	23.0	53.2	17.2	6.5	23.7	100.0
제주	(13)	5.1	7.7	12.8	51.3	28.2	7.7	35.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5.3	19.5	24.9	43.4	20.0	11.8	31.7	100.0
중도	(588)	2.1	11.0	13.1	47.2	29.4	10.4	39.7	100.0
보수적	(338)	.9	10.4	11.3	43.6	25.4	19.7	45.1	100.0



표 26-2.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문) 현대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된 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타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체	(477)	48.3	25.8	12.9	11.3	1.3	.3	100.0
■ 성별								
남자	(218)	46.1	22.8	16.3	13.4	1.3	.0	100.0
여자	(259)	50.2	28.3	9.9	9.6	1.4	.5	100.0
■ 연령별								
19~29세	(109)	48.5	23.4	15.5	11.5	1.1	.0	100.0
30대	(114)	43.3	29.5	11.5	12.6	3.1	.0	100.0
40대	(133)	47.0	26.6	15.1	11.3	.0	.0	100.0
50세이상	(121)	54.3	23.7	9.3	10.1	1.4	1.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64)	42.4	30.8	9.4	15.8	1.6	.0	100.0
고졸	(238)	49.3	27.5	13.9	7.9	.7	.6	100.0
대재이상	(175)	49.2	21.7	12.7	14.3	2.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12)	64.8	9.7	8.4	17.1	.0	.0	100.0
자영업	(91)	44.3	21.0	16.9	15.0	2.7	.0	100.0
블루칼라	(86)	47.3	18.7	18.3	13.7	2.0	.0	100.0
화이트칼라	(80)	45.7	28.0	12.8	13.6	.0	.0	100.0
전업주부	(143)	50.3	31.9	8.2	8.0	.7	1.0	100.0
무직 / 기타	(65)	51.5	28.9	11.2	6.6	1.8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94)	48.3	28.8	9.5	12.4	1.1	.0	100.0
200~299만원	(164)	49.9	22.9	16.6	10.7	.0	.0	100.0
300~399만원	(118)	42.1	33.5	13.2	10.0	.0	1.2	100.0
400만원 이상	(90)	54.1	18.6	10.0	11.3	6.0	.0	100.0
모름 / 무응답	(11)	46.1	20.6	6.0	27.2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227)	47.0	26.6	12.7	12.3	.8	.6	100.0
중부권	(52)	32.8	38.9	20.8	7.4	.0	.0	100.0
호남권	(37)	43.9	36.5	1.7	11.1	6.8	.0	100.0
영남권	(148)	56.3	17.6	13.1	11.6	1.4	.0	100.0
강원	(9)	65.9	24.7	9.4	.0	.0	.0	100.0
제주	(5)	35.7	21.4	21.4	21.4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91)	46.0	21.6	18.1	14.3	.0	.0	100.0
중도	(233)	45.8	31.0	10.0	12.4	.8	.0	100.0
보수적	(152)	53.6	20.4	14.1	7.9	3.0	.9	100.0

표 27.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	%	%	%	%	%	%
■ 전체	(1213)	8.1	52.0	60.2	35.5	4.3	39.8	100.0
■ 성별								
남자	(610)	9.5	52.7	62.3	33.6	4.1	37.7	100.0
여자	(603)	6.7	51.3	58.0	37.5	4.5	42.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5.7	57.0	62.7	33.4	3.9	37.3	100.0
30대	(319)	8.4	53.7	62.0	33.9	4.1	38.0	100.0
40대	(309)	12.6	46.7	59.3	36.1	4.6	40.7	100.0
50세 이상	(281)	5.5	50.7	56.2	39.1	4.7	43.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4)	6.4	46.6	53.0	41.2	5.9	47.0	100.0
고졸	(547)	5.8	46.8	52.6	42.7	4.7	47.4	100.0
대재 이상	(522)	11.0	59.1	70.1	26.5	3.5	29.9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2	61.8	63.0	37.0	.0	37.0	100.0
자영업	(214)	9.5	46.7	56.1	38.5	5.4	43.9	100.0
블루칼라	(245)	6.4	51.9	58.3	37.6	4.1	41.7	100.0
화이트칼라	(245)	12.0	51.2	63.2	31.5	5.3	36.8	100.0
전업주부	(299)	7.9	48.9	56.8	39.0	4.1	43.2	100.0
무직 / 기타	(182)	5.0	63.3	68.3	28.8	2.9	31.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8.9	52.0	60.8	33.6	5.6	39.2	100.0
200~299만원	(400)	7.8	48.7	56.5	37.7	5.9	43.5	100.0
300~399만원	(339)	8.0	51.5	59.5	39.1	1.4	40.5	100.0
400만원 이상	(226)	7.8	61.0	68.8	26.8	4.4	31.2	100.0
모름 / 무응답	(17)	12.7	23.2	36.0	57.9	6.2	64.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8.8	46.9	55.7	38.3	6.0	44.3	100.0
중부권	(119)	6.8	53.6	60.4	37.2	2.5	39.6	100.0
호남권	(119)	16.5	61.1	77.7	21.5	.8	22.3	100.0
영남권	(323)	5.0	55.3	60.2	36.3	3.4	39.8	100.0
강원	(36)	4.6	61.8	66.4	30.8	2.8	33.6	100.0
제주	(13)	.0	84.6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2.5	59.6	72.1	25.4	2.5	27.9	100.0
중도	(588)	5.1	50.4	55.5	40.2	4.3	44.5	100.0
보수적	(338)	9.6	48.5	58.1	36.1	5.8	41.9	100.0



표 2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	%	%	%	%	%
■ 전체	(1213)	3.3	30.0	33.3	48.9	17.4	66.3	.4	100.0
■ 성별									
남자	(610)	3.7	28.6	32.3	48.3	18.9	67.3	.5	100.0
여자	(603)	2.9	31.4	34.3	49.5	15.9	65.4	.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0	26.0	28.0	48.1	23.5	71.6	.4	100.0
30대	(319)	2.5	27.8	30.3	52.6	16.8	69.4	.3	100.0
40대	(309)	4.0	30.8	34.8	49.5	15.2	64.7	.6	100.0
50세이상	(281)	4.7	36.0	40.7	45.0	14.0	59.0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8	32.8	36.5	49.9	13.6	63.5	.0	100.0
고졸	(547)	3.9	31.7	35.6	48.2	15.5	63.7	.6	100.0
대재이상	(522)	2.5	27.4	29.9	49.3	20.5	69.8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14.6	14.6	50.9	34.5	85.4	.0	100.0
자영업	(214)	3.1	31.6	34.7	45.7	19.7	65.3	.0	100.0
블루칼라	(245)	4.5	28.6	33.1	50.8	14.9	65.7	1.2	100.0
화이트칼라	(245)	3.6	28.5	32.0	44.4	23.5	68.0	.0	100.0
전업주부	(299)	3.5	31.6	35.1	53.0	11.4	64.4	.6	100.0
무직 / 기타	(182)	1.7	31.9	33.7	49.1	17.2	66.3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0	28.5	29.5	51.5	18.0	69.5	1.0	100.0
200~299만원	(400)	5.4	29.3	34.7	49.7	15.5	65.3	.0	100.0
300~399만원	(339)	3.2	29.4	32.6	47.0	19.9	66.9	.5	100.0
400만원이상	(226)	1.8	32.5	34.3	49.5	15.8	65.3	.3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43.4	50.5	21.6	27.9	49.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0	26.0	29.0	51.6	18.6	70.2	.8	100.0
중부권	(119)	7.9	21.9	29.8	48.4	21.8	70.2	.0	100.0
호남권	(119)	.0	16.1	16.1	54.3	29.5	83.9	.0	100.0
영남권	(323)	3.9	45.7	49.6	41.5	8.9	50.4	.0	100.0
강원	(36)	.0	33.1	33.1	41.3	25.6	66.9	.0	100.0
제주	(13)	.0	15.4	15.4	84.6	.0	84.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8	25.8	27.6	51.4	21.0	72.4	.0	100.0
중도	(588)	2.7	29.5	32.2	51.1	16.0	67.1	.7	100.0
보수적	(338)	5.6	34.4	40.0	42.9	16.9	59.8	.2	100.0

표 29.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문) ○○님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 전체	(1213)	1.7	21.7	23.4	57.5	19.1	76.6	100.0
■ 성별								
남자	(610)	1.6	22.6	24.2	54.4	21.4	75.8	100.0
여자	(603)	1.9	20.8	22.7	60.5	16.7	77.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8	16.1	16.9	60.4	22.7	83.1	100.0
30대	(319)	.7	21.2	21.9	59.8	18.3	78.1	100.0
40대	(309)	3.0	22.8	25.8	57.3	16.9	74.2	100.0
50세이상	(281)	2.5	27.2	29.7	51.9	18.5	70.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6	26.0	26.6	52.1	21.3	73.4	100.0
고졸	(547)	2.4	21.8	24.2	56.2	19.6	75.8	100.0
대재이상	(522)	1.4	20.5	21.8	60.3	17.9	78.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17.5	17.5	42.9	39.5	82.5	100.0
자영업	(214)	1.8	22.8	24.6	58.0	17.4	75.4	100.0
블루칼라	(245)	2.2	24.0	26.2	55.0	18.8	73.8	100.0
화이트칼라	(245)	1.7	21.1	22.8	56.9	20.3	77.2	100.0
전업주부	(299)	1.8	21.3	23.2	59.2	17.6	76.8	100.0
무직 / 기타	(182)	1.2	19.4	20.6	60.2	19.1	79.4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3	22.8	24.1	55.1	20.8	75.9	100.0
200~299만원	(400)	2.8	22.1	24.8	55.6	19.6	75.2	100.0
300~399만원	(339)	1.0	21.0	22.1	58.3	19.6	77.9	100.0
400만원 이상	(226)	1.1	21.3	22.3	62.2	15.5	77.7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17.8	24.9	53.5	21.6	75.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4	17.9	20.3	58.8	20.9	79.7	100.0
중부권	(119)	2.7	22.0	24.8	54.4	20.9	75.2	100.0
호남권	(119)	.0	6.0	6.0	72.4	21.6	94.0	100.0
영남권	(323)	1.0	34.4	35.4	50.2	14.4	64.6	100.0
강원	(36)	.0	24.7	24.7	52.9	22.4	75.3	100.0
제주	(13)	.0	15.4	15.4	79.5	5.1	84.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7	18.9	20.6	57.8	21.6	79.4	100.0
중도	(588)	1.8	20.9	22.7	59.6	17.6	77.3	100.0
보수적	(338)	1.7	25.5	27.2	53.4	19.5	72.8	100.0





표 30.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전체	(1213)	8.1	33.9	42.0	31.8	10.6	42.4	15.6	100.0
■ 성별									
남자	(610)	10.0	34.1	44.1	30.8	11.9	42.8	13.2	100.0
여자	(603)	6.2	33.7	39.8	32.8	9.3	42.1	18.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9	33.6	40.5	32.5	10.5	43.0	16.5	100.0
30대	(319)	8.6	34.3	42.9	32.0	9.9	41.8	15.3	100.0
40대	(309)	10.0	35.7	45.7	30.9	11.2	42.0	12.3	100.0
50세이상	(281)	6.7	31.8	38.4	31.9	11.0	42.9	18.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4	28.2	31.6	31.3	11.6	42.9	25.5	100.0
고졸	(547)	7.7	33.8	41.5	31.8	10.6	42.4	16.1	100.0
대재이상	(522)	9.7	35.5	45.3	31.9	10.4	42.3	12.4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0.2	24.2	34.4	19.5	18.2	37.7	27.9	100.0
자영업	(214)	7.0	33.9	40.9	34.8	10.4	45.2	13.9	100.0
블루칼라	(245)	8.6	33.3	41.9	32.7	10.3	43.0	15.2	100.0
화이트칼라	(245)	10.3	35.5	45.9	32.1	9.8	41.9	12.2	100.0
전업주부	(299)	5.9	33.6	39.4	32.3	10.7	43.0	17.6	100.0
무직 / 기타	(182)	8.9	34.5	43.4	27.7	11.2	38.9	17.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9.3	36.0	45.3	26.6	11.4	38.0	16.7	100.0
200~299만원	(400)	5.8	32.5	38.3	31.8	14.8	46.6	15.1	100.0
300~399만원	(339)	7.7	33.9	41.6	34.5	7.5	42.0	16.4	100.0
400만원 이상	(226)	11.2	34.9	46.1	32.4	6.5	38.9	15.1	100.0
모름 / 무응답	(17)	11.6	23.8	35.4	43.2	17.8	61.0	3.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1	29.6	35.7	30.9	13.2	44.0	20.3	100.0
중부권	(119)	5.6	30.3	36.0	35.1	10.4	45.4	18.6	100.0
호남권	(119)	23.8	41.3	65.1	19.3	2.8	22.1	12.8	100.0
영남권	(323)	6.1	40.2	46.2	34.8	9.9	44.7	9.1	100.0
강원	(36)	9.7	30.1	39.8	54.9	5.3	60.2	.0	100.0
제주	(13)	25.6	50.0	75.6	20.5	.0	20.5	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5.3	42.5	57.9	26.8	7.0	33.7	8.4	100.0
중도	(588)	5.6	33.1	38.7	32.5	9.2	41.6	19.7	100.0
보수적	(338)	6.2	27.9	34.1	34.9	16.3	51.2	14.7	100.0

표 31-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전체	(1213)	11.5	30.0	41.5	39.2	16.3	2.9	19.3	100.0
■ 성별									
남자	(610)	12.0	29.4	41.4	37.2	17.4	4.0	21.4	100.0
여자	(603)	11.0	30.6	41.6	41.3	15.2	1.9	17.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9.6	28.6	38.2	43.9	15.3	2.5	17.8	100.0
30대	(319)	11.2	30.4	41.6	35.8	17.2	5.4	22.6	100.0
40대	(309)	12.6	31.4	44.0	38.7	15.4	1.9	17.3	100.0
50세 이상	(281)	12.5	29.6	42.2	38.6	17.4	1.8	19.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4)	10.8	31.7	42.5	39.3	15.7	2.5	18.2	100.0
고졸	(547)	12.8	32.6	45.4	37.7	14.8	2.1	16.9	100.0
대재 이상	(522)	10.3	26.9	37.1	40.9	18.1	3.9	22.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2.0	23.1	35.1	36.1	26.4	2.3	28.8	100.0
자영업	(214)	11.5	32.7	44.2	35.6	17.9	2.3	20.2	100.0
블루칼라	(245)	10.8	25.8	36.6	44.5	16.9	2.0	18.8	100.0
화이트칼라	(245)	14.7	27.3	42.0	42.6	10.7	4.7	15.4	100.0
전업주부	(299)	10.8	34.9	45.6	35.7	15.9	2.7	18.6	100.0
무직 / 기타	(182)	9.3	29.1	38.4	38.2	20.2	3.2	23.4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3.3	24.4	37.8	37.9	19.3	5.0	24.3	100.0
200~299만원	(400)	11.9	31.9	43.8	39.1	15.0	2.1	17.1	100.0
300~399만원	(339)	9.2	33.8	42.9	39.1	15.4	2.6	18.0	100.0
400만원 이상	(226)	10.7	27.8	38.5	41.9	16.9	2.7	19.7	100.0
모름 / 무응답	(17)	33.8	15.4	49.2	28.4	16.8	5.7	22.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0.7	27.7	38.5	43.5	14.7	3.3	18.0	100.0
충부권	(119)	16.1	34.3	50.3	34.4	14.2	1.1	15.3	100.0
호남권	(119)	7.1	21.2	28.3	38.2	24.8	8.6	33.5	100.0
영남권	(323)	13.7	36.2	49.8	32.2	17.2	.7	17.9	100.0
강원	(36)	5.9	32.4	38.2	41.3	17.7	2.8	20.4	100.0
제주	(13)	7.7	16.7	24.4	62.8	5.1	7.7	12.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9.0	30.4	39.4	34.2	21.0	5.4	26.4	100.0
중도	(588)	10.3	28.8	39.1	43.2	15.5	2.2	17.7	100.0
보수적	(338)	15.7	31.7	47.4	36.7	13.7	2.2	15.9	100.0



표 31-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전체	(1213)	9.0	29.4	38.4	40.7	17.2	3.7	20.9	100.0
■ 성별									
남자	(610)	9.5	25.9	35.3	41.1	19.1	4.5	23.6	100.0
여자	(603)	8.4	33.0	41.5	40.4	15.3	2.9	18.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7.0	27.4	34.4	43.2	18.8	3.5	22.4	100.0
30대	(319)	9.3	27.3	36.6	38.3	18.3	6.7	25.0	100.0
40대	(309)	9.5	33.1	42.6	40.1	15.0	2.3	17.3	100.0
50세 이상	(281)	10.1	29.9	40.0	41.5	16.5	2.1	18.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0.0	27.9	37.9	42.6	16.2	3.3	19.5	100.0
고졸	(547)	9.5	34.3	43.9	38.2	16.1	1.9	18.0	100.0
대재 이상	(522)	8.1	24.7	32.8	42.9	18.6	5.8	24.3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	21.6	24.0	42.9	30.8	2.3	33.1	100.0
자영업	(214)	11.4	28.7	40.1	39.0	18.3	2.6	20.9	100.0
블루칼라	(245)	9.7	26.1	35.8	45.6	16.9	1.7	18.6	100.0
화이트칼라	(245)	11.2	28.0	39.3	42.4	12.1	6.2	18.3	100.0
전업주부	(299)	7.2	35.9	43.1	37.3	16.2	3.4	19.6	100.0
무직 / 기타	(182)	6.1	27.1	33.2	39.0	22.6	5.2	27.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8.3	27.1	35.4	38.0	20.7	5.9	26.6	100.0
200~299만원	(400)	10.6	31.2	41.9	40.2	15.6	2.3	17.9	100.0
300~399만원	(339)	7.1	31.2	38.3	43.3	15.0	3.4	18.4	100.0
400만원 이상	(226)	8.8	26.5	35.3	40.7	19.7	4.3	24.0	100.0
모름 / 무응답	(17)	18.5	20.7	39.3	38.3	16.8	5.7	22.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9	27.6	34.5	44.6	16.5	4.4	20.9	100.0
충부권	(119)	12.1	30.6	42.7	41.6	13.9	1.7	15.6	100.0
호남권	(119)	6.9	21.1	28.0	35.9	28.0	8.1	36.1	100.0
영남권	(323)	12.9	35.9	48.8	34.5	15.4	1.3	16.8	100.0
강원	(36)	5.9	33.9	39.8	36.9	18.3	5.0	23.3	100.0
제주	(13)	7.7	3.8	11.5	62.8	17.9	7.7	2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5	29.8	36.3	37.2	21.4	5.1	26.5	100.0
중도	(588)	7.8	29.4	37.2	43.3	16.6	2.9	19.5	100.0
보수적	(338)	13.1	29.2	42.2	39.3	14.5	4.0	18.5	100.0

표 32.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

문) ○○님은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북한	적대적 남북관계	관광객 본인	현대아산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44.7	25.1	22.2	7.7	.2	100.0
■ 성별							
남자	(610)	43.9	24.2	23.2	8.6	.2	100.0
여자	(603)	45.6	26.1	21.3	6.8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3.1	29.2	19.3	8.4	.0	100.0
30대	(319)	43.6	27.2	21.1	8.1	.0	100.0
40대	(309)	44.0	26.2	22.0	7.8	.0	100.0
50세 이상	(281)	48.5	17.3	26.8	6.4	.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4)	45.5	17.1	30.2	6.7	.4	100.0
고졸	(547)	44.0	25.9	23.1	6.8	.3	100.0
대재 이상	(522)	45.3	26.6	19.2	8.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44.4	20.1	19.6	15.8	.0	100.0
자영업	(214)	43.2	24.0	25.2	7.6	.0	100.0
블루칼라	(245)	44.0	22.4	27.7	5.3	.6	100.0
화이트칼라	(245)	45.0	24.4	17.4	13.2	.0	100.0
전업주부	(299)	46.5	24.6	22.5	6.0	.4	100.0
무직 / 기타	(182)	44.1	32.9	17.8	5.2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42.9	26.6	21.7	8.5	.3	100.0
200~299만원	(400)	43.6	28.5	20.6	7.4	.0	100.0
300~399만원	(339)	44.2	22.3	25.2	8.0	.3	100.0
400만원 이상	(226)	48.8	21.6	22.6	6.6	.3	100.0
모름 / 무응답	(17)	51.7	30.1	5.3	12.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42.9	29.3	21.6	5.8	.4	100.0
충부권	(119)	52.9	23.5	20.9	2.8	.0	100.0
호남권	(119)	40.1	21.9	28.2	9.8	.0	100.0
영남권	(323)	45.6	20.6	21.6	12.1	.0	100.0
강원	(36)	52.3	13.7	24.5	9.4	.0	100.0
제주	(13)	50.0	21.8	20.5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1.5	25.8	23.4	9.3	.0	100.0
중도	(588)	45.2	27.6	20.8	6.0	.4	100.0
보수적	(338)	46.6	20.3	23.7	9.4	.0	100.0



표 33.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13)	3.1	33.1	36.2	57.2	6.6	63.8	100.0
■ 성별								
남자	(610)	2.7	37.6	40.3	53.8	5.9	59.7	100.0
여자	(603)	3.4	28.6	32.0	60.7	7.3	68.0	100.0
■ 연령별								
19~29 세	(304)	3.0	30.3	33.4	57.7	9.0	66.6	100.0
30대	(319)	1.5	35.2	36.7	56.9	6.4	63.3	100.0
40대	(309)	3.7	35.4	39.0	54.9	6.0	61.0	100.0
50세 이상	(281)	4.2	31.4	35.6	59.6	4.8	64.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5.0	29.8	34.9	59.9	5.3	65.1	100.0
고졸	(547)	2.3	34.4	36.7	56.4	6.9	63.3	100.0
대재 이상	(522)	3.3	32.7	36.0	57.4	6.6	64.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23.4	23.4	76.6	.0	76.6	100.0
자영업	(214)	2.8	34.5	37.4	55.2	7.4	62.6	100.0
블루칼라	(245)	4.2	36.9	41.1	52.4	6.6	58.9	100.0
화이트칼라	(245)	1.2	34.3	35.4	60.2	4.4	64.6	100.0
전업주부	(299)	3.4	28.3	31.7	60.6	7.7	68.3	100.0
무직 / 기타	(182)	4.3	34.4	38.6	53.6	7.8	61.4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3.5	43.8	47.3	48.6	4.0	52.7	100.0
200~299만원	(400)	2.5	28.8	31.3	60.9	7.8	68.7	100.0
300~399만원	(339)	4.2	32.3	36.5	57.3	6.2	63.5	100.0
400만원 이상	(226)	1.5	32.5	34.0	59.1	6.9	66.0	100.0
모름 / 무응답	(17)	7.0	17.0	24.0	59.7	6.2	76.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8	34.4	37.2	54.4	8.4	62.8	100.0
중부권	(119)	2.7	27.4	30.1	67.8	2.2	69.9	100.0
호남권	(119)	3.8	28.7	32.5	59.5	8.0	67.5	100.0
영남권	(323)	2.5	36.0	38.5	56.9	4.6	61.5	100.0
강원	(36)	0.0	26.1	26.1	57.4	6.4	63.8	100.0
제주	(13)	7.7	16.7	24.4	75.6	.0	7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7	35.9	38.6	54.7	6.7	61.4	100.0
중도	(588)	3.7	31.8	35.6	57.8	6.6	64.4	100.0
보수적	(338)	2.2	33.1	35.2	58.4	6.4	64.8	100.0

표 34-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전체	(1213)	2.1	18.3	20.4	36.3	33.9	9.4	43.3	100.0
■ 성별									
남자	(610)	2.4	14.3	16.7	35.4	36.1	11.8	47.9	100.0
여자	(603)	1.7	22.3	24.1	37.2	31.6	7.1	38.7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8	20.1	21.9	37.7	29.9	10.6	40.5	100.0
30대	(319)	1.6	15.7	17.3	39.6	35.3	7.8	43.1	100.0
40대	(309)	2.4	16.3	18.7	38.1	33.8	9.4	43.2	100.0
50세 이상	(281)	2.5	21.5	24.0	29.2	36.7	10.1	46.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4)	.8	23.4	24.2	29.6	35.2	11.0	46.2	100.0
고졸	(547)	1.3	19.5	20.7	36.2	33.1	10.0	43.1	100.0
대재 이상	(522)	3.3	15.7	18.9	38.3	34.3	8.5	42.7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44.6	44.6	26.2	29.2	.0	29.2	100.0
자영업	(214)	3.2	16.0	19.2	35.9	34.6	10.3	44.9	100.0
블루칼라	(245)	2.9	13.7	16.6	33.4	36.4	13.5	49.9	100.0
화이트칼라	(245)	1.5	18.5	20.0	38.0	33.1	8.8	42.0	100.0
전업주부	(299)	1.3	24.0	25.4	38.2	30.9	5.5	36.4	100.0
무직 / 기타	(182)	1.7	13.4	15.1	37.0	36.1	11.8	47.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3	18.0	19.3	38.3	32.6	9.8	42.4	100.0
200~299만원	(400)	2.3	19.4	21.7	36.2	33.3	8.8	42.2	100.0
300~399만원	(339)	2.1	20.1	22.1	32.9	34.5	10.5	45.0	100.0
400만원 이상	(226)	1.8	14.5	16.3	39.2	35.6	8.9	44.5	100.0
모름 / 무응답	(17)	8.8	13.6	22.4	42.3	29.6	5.7	35.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0	22.3	24.3	35.3	28.6	11.8	40.4	100.0
중부권	(119)	1.4	9.2	10.6	41.5	43.8	4.1	47.9	100.0
호남권	(119)	4.8	15.8	20.6	38.9	32.5	8.0	40.5	100.0
영남권	(323)	1.4	13.9	15.2	37.4	40.8	6.6	47.4	100.0
강원	(36)	.0	32.6	32.6	23.7	28.0	15.7	43.7	100.0
제주	(13)	7.7	12.8	20.5	19.2	44.9	15.4	60.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6	15.4	18.0	31.9	41.0	9.2	50.2	100.0
중도	(588)	1.8	19.4	21.2	39.4	30.5	9.0	39.5	100.0
보수적	(338)	2.1	18.9	21.0	34.8	33.8	10.4	44.2	100.0



표 34-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④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전체	(1213)	3.2	17.6	20.9	34.6	35.9	8.6	44.5	100.0
■ 성별									
남자	(610)	3.4	15.1	18.5	31.4	39.7	10.5	50.1	100.0
여자	(603)	3.0	20.2	23.3	37.9	32.1	6.7	38.9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4	17.5	21.9	34.6	33.7	9.8	43.6	100.0
30대	(319)	1.9	15.4	17.3	36.5	40.0	6.1	46.2	100.0
40대	(309)	2.5	16.5	19.0	39.4	31.2	10.3	41.6	100.0
50세이상	(281)	4.2	21.7	25.9	27.2	38.8	8.1	46.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5	19.8	24.3	30.2	35.8	9.6	45.5	100.0
고졸	(547)	1.9	19.4	21.2	35.7	34.3	8.7	43.1	100.0
대재이상	(522)	4.3	15.2	19.5	34.7	37.6	8.2	45.8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37.5	37.5	33.3	29.2	.0	29.2	100.0
자영업	(214)	3.6	17.6	21.2	33.5	37.3	8.0	45.3	100.0
블루칼라	(245)	3.1	15.4	18.4	33.3	35.7	12.6	48.3	100.0
화이트칼라	(245)	3.9	14.9	18.8	35.4	38.8	7.0	45.8	100.0
전업주부	(299)	3.4	22.7	26.0	36.0	31.7	6.2	38.0	100.0
무직 / 기타	(182)	2.3	13.2	15.5	34.6	38.6	11.3	49.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7	18.3	20.9	32.2	38.6	8.3	46.8	100.0
200~299만원	(400)	3.5	17.4	20.9	35.3	35.6	8.2	43.8	100.0
300~399만원	(339)	3.3	20.8	24.1	31.8	34.6	9.5	44.1	100.0
400만원 이상	(226)	2.9	13.5	16.5	40.2	34.8	8.5	43.3	100.0
모름 / 무응답	(17)	5.8	7.0	12.9	32.0	49.4	5.7	55.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4.6	19.8	24.4	34.4	30.5	10.7	41.3	100.0
중부권	(119)	.6	9.3	9.8	40.5	47.5	2.2	49.7	100.0
호남권	(119)	3.1	20.8	24.0	26.6	40.8	8.7	49.5	100.0
영남권	(323)	1.9	14.7	16.6	37.8	39.7	5.9	45.6	100.0
강원	(36)	.0	22.4	22.4	25.4	36.4	15.7	52.1	100.0
제주	(13)	7.7	24.4	32.1	11.5	41.0	15.4	56.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8	15.2	18.0	29.3	44.1	8.6	52.7	100.0
중도	(588)	3.2	17.6	20.8	37.9	31.6	9.7	41.3	100.0
보수적	(338)	3.6	19.8	23.4	33.4	36.4	6.7	43.1	100.0

표 34-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전체	(1213)	9.8	28.4	38.2	34.2	21.0	6.5	27.5	100.0
■ 성별									
남자	(610)	8.3	23.8	32.2	35.5	23.9	8.4	32.3	100.0
여자	(603)	11.3	33.1	44.4	32.9	18.1	4.6	22.7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1.9	29.1	40.9	33.2	19.8	6.1	25.8	100.0
30대	(319)	8.3	23.8	32.1	36.5	24.9	6.5	31.4	100.0
40대	(309)	8.3	29.9	38.2	36.0	18.7	7.1	25.8	100.0
50세 이상	(281)	10.9	31.4	42.3	30.8	20.6	6.4	26.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4)	13.8	31.7	45.5	29.1	20.7	4.7	25.4	100.0
고졸	(547)	7.7	29.1	36.8	35.9	20.3	7.1	27.3	100.0
대재 이상	(522)	10.9	26.8	37.7	33.9	21.9	6.4	28.3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3.6	41.8	55.4	20.7	23.9	.0	23.9	100.0
자영업	(214)	11.7	24.4	36.1	36.6	16.5	10.7	27.3	100.0
블루 칼라	(245)	7.9	28.3	36.2	30.8	23.9	9.1	33.0	100.0
화이트칼라	(245)	8.0	24.2	32.2	40.8	22.3	4.7	27.0	100.0
전업 주부	(299)	13.1	32.4	45.5	32.0	19.3	3.3	22.6	100.0
무직 / 기타	(182)	6.7	30.3	37.1	33.1	23.0	6.9	29.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9.4	27.9	37.3	30.0	27.6	5.1	32.7	100.0
200~299만원	(400)	9.4	29.1	38.5	34.8	20.1	6.5	26.6	100.0
300~399만원	(339)	11.1	28.7	39.8	31.3	21.5	7.3	28.8	100.0
400만원 이상	(226)	8.7	28.0	36.7	41.4	15.1	6.8	21.9	100.0
모름 / 무응답	(17)	12.0	18.9	31.0	39.7	23.6	5.7	29.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0.4	27.9	38.3	32.7	21.0	8.0	29.0	100.0
충부권	(119)	10.9	19.6	30.5	45.4	22.7	1.4	24.1	100.0
호남권	(119)	8.2	34.0	42.2	28.8	20.0	8.9	29.0	100.0
영남권	(323)	8.9	29.7	38.6	35.3	21.3	4.8	26.1	100.0
강원	(36)	10.2	31.2	41.4	35.6	17.6	5.3	22.9	100.0
제주	(13)	7.7	43.6	51.3	23.1	17.9	7.7	2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0.7	22.4	33.1	33.0	27.4	6.5	33.9	100.0
중도	(588)	7.8	31.6	39.4	34.8	18.0	7.8	25.7	100.0
보수적	(338)	12.5	28.0	40.5	34.2	20.9	4.3	25.3	100.0





표 34-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전체	(1213)	20.7	28.3	49.0	27.4	15.4	8.2	23.7	100.0
■ 성별									
남자	(610)	15.5	23.7	39.2	29.6	19.8	11.4	31.2	100.0
여자	(603)	25.8	33.0	58.9	25.1	11.0	5.1	16.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6.2	29.2	55.5	25.3	12.7	6.6	19.2	100.0
30대	(319)	15.9	27.8	43.8	28.2	18.4	9.6	28.1	100.0
40대	(309)	18.0	28.3	46.3	28.8	17.2	7.7	24.9	100.0
50세이상	(281)	22.9	28.0	50.9	27.1	13.0	9.1	2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3.5	27.9	51.4	23.9	13.5	11.2	24.7	100.0
고졸	(547)	19.2	28.8	48.0	28.1	17.1	6.9	24.0	100.0
대재이상	(522)	21.4	28.0	49.4	27.6	14.2	8.8	23.1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1.5	35.2	56.7	21.2	22.1	.0	22.1	100.0
자영업	(214)	19.0	26.0	45.0	27.1	15.8	12.1	27.9	100.0
블루칼라	(245)	17.7	24.8	42.5	25.1	19.6	12.8	32.4	100.0
화이트칼라	(245)	19.0	24.6	43.6	32.4	17.3	6.6	23.9	100.0
전업주부	(299)	26.3	32.1	58.4	25.9	11.6	4.1	15.7	100.0
무직 / 기타	(182)	19.4	33.5	52.9	27.3	12.0	7.8	19.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6.7	30.4	47.1	23.4	21.1	8.4	29.5	100.0
200~299만원	(400)	19.9	30.5	50.5	28.5	13.3	7.7	21.1	100.0
300~399만원	(339)	24.0	24.6	48.6	26.9	15.8	8.7	24.5	100.0
400만원이상	(226)	21.6	28.1	49.7	28.8	13.3	8.3	21.6	100.0
모름 / 무응답	(17)	12.0	27.2	39.2	44.2	7.9	8.6	16.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3.3	26.0	49.3	27.4	14.3	9.0	23.3	100.0
중부권	(119)	15.8	26.4	42.3	33.6	20.3	3.8	24.1	100.0
호남권	(119)	11.6	44.3	55.9	11.4	19.7	13.0	32.7	100.0
영남권	(323)	20.6	26.8	47.4	32.9	13.9	5.8	19.6	100.0
강원	(36)	24.8	26.8	51.7	10.4	22.2	15.7	37.9	100.0
제주	(13)	15.4	48.7	64.1	23.1	5.1	7.7	12.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6.5	25.2	41.7	26.4	21.8	10.1	31.9	100.0
중도	(588)	19.7	30.4	50.0	27.5	14.2	8.2	22.5	100.0
보수적	(338)	25.9	27.4	53.3	28.0	12.1	6.7	18.7	100.0

표 35.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13)	43.6	46.4	9.6	.4	100.0
■ 성별						
남자	(610)	46.2	45.3	8.1	.4	100.0
여자	(603)	41.0	47.5	11.1	.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3.2	55.3	11.1	.4	100.0
30대	(319)	47.2	43.7	9.0	.0	100.0
40대	(309)	50.0	41.3	8.1	.7	100.0
50세이상	(281)	43.8	45.5	10.3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6.2	37.9	15.8	.0	100.0
고졸	(547)	45.3	43.4	10.5	.8	100.0
대재이상	(522)	41.1	51.9	7.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44.1	41.6	14.3	.0	100.0
자영업	(214)	47.4	42.6	9.6	.4	100.0
블루칼라	(245)	46.8	42.8	10.0	.5	100.0
화이트칼라	(245)	42.6	51.3	6.1	.0	100.0
전업주부	(299)	42.7	44.2	12.7	.4	100.0
무직 / 기타	(182)	37.8	53.7	7.9	.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45.4	45.5	8.1	1.0	100.0
200~299만원	(400)	42.2	45.7	11.8	.3	100.0
300~399만원	(339)	45.1	47.7	7.0	.3	100.0
400만원이상	(226)	42.7	45.9	11.4	.0	100.0
모름 / 무응답	(17)	36.9	57.8	5.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43.9	45.2	10.1	.7	100.0
중부권	(119)	40.7	38.1	21.2	.0	100.0
호남권	(119)	28.7	66.7	4.6	.0	100.0
영남권	(323)	50.7	42.2	7.1	.0	100.0
강원	(36)	44.7	53.9	1.4	.0	100.0
제주	(13)	15.4	76.9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7.0	47.4	5.3	.3	100.0
중도	(588)	38.5	50.7	10.3	.4	100.0
보수적	(338)	49.6	38.1	12.0	.3	100.0



표 36-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동의 하지않음	전혀동의 하지않음	%	%
■ 전체	(1213)	2.9	42.8	45.6	49.0	5.3	54.4	100.0
■ 성별								
남자	(610)	3.0	47.4	50.4	45.6	4.0	49.6	100.0
여자	(603)	2.7	38.1	40.8	52.5	6.7	59.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2	45.4	47.7	47.3	5.0	52.3	100.0
30대	(319)	3.9	41.6	45.5	51.2	3.2	54.5	100.0
40대	(309)	3.7	46.4	50.1	43.5	6.4	49.9	100.0
50세이상	(281)	1.4	37.1	38.6	54.5	6.9	6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9	36.7	37.6	53.0	9.4	62.4	100.0
고졸	(547)	2.5	39.1	41.6	52.9	5.5	58.4	100.0
대재이상	(522)	3.8	48.2	52.0	43.9	4.1	48.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34.9	34.9	55.6	9.5	65.1	100.0
자영업	(214)	3.0	44.2	47.2	48.3	4.5	52.8	100.0
블루칼라	(245)	2.8	44.1	47.0	48.5	4.5	53.0	100.0
화이트칼라	(245)	2.9	48.0	50.9	45.3	3.9	49.1	100.0
전업주부	(299)	2.9	35.6	38.5	53.6	7.9	61.5	100.0
무직/기타	(182)	3.0	45.2	48.2	47.2	4.6	51.8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3.5	41.4	45.0	49.0	6.0	55.0	100.0
200~299만원	(400)	2.4	44.6	47.0	46.8	6.2	53.0	100.0
300~399만원	(339)	2.8	41.1	44.0	51.2	4.8	56.0	100.0
400만원이상	(226)	3.3	43.2	46.5	49.3	4.2	53.5	100.0
모름/무응답	(17)	.0	42.3	42.3	54.8	2.9	57.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4.2	39.3	43.5	50.4	6.1	56.5	100.0
중부권	(119)	1.0	49.5	50.5	47.9	1.7	49.5	100.0
호남권	(119)	2.1	43.3	45.4	47.8	6.8	54.6	100.0
영남권	(323)	1.7	45.2	46.9	47.7	5.4	53.1	100.0
강원	(36)	.0	45.6	45.6	52.2	2.2	54.4	100.0
제주	(13)	.0	69.2	69.2	30.8	.0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0	54.3	58.3	39.7	2.0	41.7	100.0
중도	(588)	3.2	39.5	42.7	49.8	7.5	57.3	100.0
보수적	(338)	1.2	38.6	39.9	55.7	4.5	60.1	100.0

표 36-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㉞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동의 하지않음	전혀동의 하지않음	%	%
■ 전체	(1213)	5.4	39.7	45.2	45.0	9.8	54.8	100.0
■ 성별								
남자	(610)	6.4	41.6	48.0	43.0	9.0	52.0	100.0
여자	(603)	4.4	37.8	42.2	47.1	10.7	57.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7.9	44.1	52.0	40.3	7.7	48.0	100.0
30대	(319)	5.5	42.3	47.8	41.6	10.6	52.2	100.0
40대	(309)	5.4	39.1	44.4	45.2	10.4	55.6	100.0
50세이상	(281)	2.7	32.8	35.5	53.8	10.7	64.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5	25.4	28.9	57.4	13.7	71.1	100.0
고졸	(547)	4.7	38.0	42.7	46.7	10.7	57.3	100.0
대재이상	(522)	6.7	45.5	52.2	39.9	7.9	47.8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38.9	38.9	47.5	13.6	61.1	100.0
자영업	(214)	5.1	38.4	43.5	44.4	12.1	56.5	100.0
블루칼라	(245)	5.8	35.5	41.3	51.3	7.5	58.7	100.0
화이트칼라	(245)	7.1	44.2	51.3	40.3	8.4	48.7	100.0
전업주부	(299)	4.0	35.3	39.4	49.0	11.6	60.6	100.0
무직 / 기타	(182)	6.3	48.3	54.5	36.7	8.7	45.5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5.3	38.5	43.8	46.0	10.1	56.2	100.0
200~299만원	(400)	6.1	42.0	48.1	40.2	11.7	51.9	100.0
300~399만원	(339)	4.5	34.4	38.9	53.0	8.0	61.1	100.0
400만원이상	(226)	6.1	45.7	51.8	39.1	9.1	48.2	100.0
모름 / 무응답	(17)	.0	30.2	30.2	63.9	5.8	69.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5	37.4	44.0	42.3	13.7	56.0	100.0
중부권	(119)	3.6	47.8	51.4	42.9	5.7	48.6	100.0
호남권	(119)	8.0	44.5	52.5	38.8	8.6	47.5	100.0
영남권	(323)	3.6	36.4	40.1	54.2	5.7	59.9	100.0
강원	(36)	2.2	53.1	55.3	42.5	2.2	44.7	100.0
제주	(13)	.0	73.1	73.1	26.9	.0	26.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9.4	46.0	55.4	39.7	4.9	44.6	100.0
중도	(588)	4.4	36.1	40.5	47.0	12.5	59.5	100.0
보수적	(338)	3.8	40.7	44.5	46.0	9.4	55.5	100.0



표 36-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동의 하지않음	전혀동의 하지않음			
		%	%	%	%	%	%	%	%
■ 전체	(1213)	2.2	23.4	25.7	60.7	13.4	74.1	.2	100.0
■ 성별									
남자	(610)	2.2	24.0	26.2	59.0	14.7	73.6	.2	100.0
여자	(603)	2.2	22.9	25.2	62.5	12.2	74.6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6	22.1	24.7	57.2	18.1	75.3	.0	100.0
30대	(319)	1.8	25.2	27.0	59.0	14.0	73.0	.0	100.0
40대	(309)	3.1	19.8	22.9	65.8	10.9	76.7	.4	100.0
50세이상	(281)	1.3	26.9	28.2	60.8	10.6	71.4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1	25.0	26.1	62.9	10.2	73.1	.8	100.0
고졸	(547)	2.2	22.5	24.8	62.2	12.8	75.0	.2	100.0
대재이상	(522)	2.5	24.0	26.5	58.5	15.0	73.5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39.8	39.8	57.8	2.3	60.2	.0	100.0
자영업	(214)	2.3	20.1	22.4	65.8	11.3	77.1	.6	100.0
블루칼라	(245)	1.5	23.7	25.2	57.1	17.7	74.8	.0	100.0
화이트칼라	(245)	2.6	25.9	28.5	60.5	11.0	71.5	.0	100.0
전업주부	(299)	3.2	24.4	27.6	60.4	11.6	72.0	.4	100.0
무직 / 기타	(182)	1.4	19.5	20.9	60.7	18.3	79.1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3.0	22.5	25.5	61.2	13.3	74.5	.0	100.0
200~299만원	(400)	2.8	25.1	27.9	59.5	12.6	72.1	.0	100.0
300~399만원	(339)	1.8	22.4	24.3	63.8	11.9	75.7	.0	100.0
400만원이상	(226)	.7	23.3	24.0	58.5	16.4	74.9	1.1	100.0
모름 / 무응답	(17)	5.8	19.5	25.4	48.9	25.8	74.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9	24.1	26.9	58.7	14.1	72.9	.2	100.0
중부권	(119)	.7	26.8	27.5	66.0	6.5	72.5	.0	100.0
호남권	(119)	2.5	25.4	27.9	60.2	11.8	72.1	.0	100.0
영남권	(323)	1.2	21.2	22.4	63.8	13.5	77.3	.4	100.0
강원	(36)	5.6	16.7	22.3	48.0	29.7	77.7	.0	100.0
제주	(13)	.0	20.5	20.5	66.7	12.8	79.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4	22.0	24.4	57.0	18.5	75.6	.0	100.0
중도	(588)	2.2	23.3	25.5	61.2	12.8	74.1	.4	100.0
보수적	(338)	2.1	24.9	26.9	62.9	10.1	73.1	.0	100.0

표 36-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동의 하지않음	전혀동의 하지않음	%	%	%
		%	%	%	%	%	%	%	%
■ 전체	(1213)	18.3	45.2	63.5	33.5	2.8	36.4	.1	100.0
■ 성별									
남자	(610)	18.8	45.8	64.6	32.7	2.7	35.4	.0	100.0
여자	(603)	17.9	44.6	62.4	34.5	2.9	37.4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7.7	43.6	61.3	34.6	4.1	38.7	.0	100.0
30대	(319)	18.8	46.1	65.0	32.9	2.1	35.0	.0	100.0
40대	(309)	19.1	48.7	67.8	28.5	3.7	32.2	.0	100.0
50세이상	(281)	17.6	41.9	59.5	38.7	1.3	40.0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3.9	43.8	57.8	40.0	1.4	41.4	.8	100.0
고졸	(547)	22.5	44.4	66.9	30.2	2.9	33.1	.0	100.0
대재이상	(522)	15.2	46.4	61.6	35.3	3.1	38.4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0.4	55.1	65.5	34.5	.0	34.5	.0	100.0
자영업	(214)	19.9	50.1	70.0	28.4	1.6	30.0	.0	100.0
블루칼라	(245)	23.9	39.2	63.0	33.0	4.0	37.0	.0	100.0
화이트칼라	(245)	11.1	53.2	64.2	32.3	3.5	35.8	.0	100.0
전업주부	(299)	20.5	39.2	59.7	37.0	2.9	39.9	.4	100.0
무직 / 기타	(182)	16.6	45.1	61.6	36.2	2.2	38.4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9.2	45.3	64.5	34.4	1.1	35.5	.0	100.0
200~299만원	(400)	20.1	46.9	67.1	27.7	5.2	32.9	.0	100.0
300~399만원	(339)	17.1	42.7	59.8	38.5	1.7	40.2	.0	100.0
400만원이상	(226)	17.5	44.2	61.7	36.1	1.7	37.8	.5	100.0
모름 / 무응답	(17)	.0	66.2	66.2	27.7	6.2	33.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5.1	38.4	63.6	33.3	3.1	36.4	.0	100.0
중부권	(119)	12.2	49.5	61.6	35.6	2.7	38.4	.0	100.0
호남권	(119)	15.8	48.3	64.1	34.7	1.1	35.9	.0	100.0
영남권	(323)	7.4	53.3	60.7	36.1	2.8	38.9	.4	100.0
강원	(36)	28.5	52.9	81.4	14.0	4.5	18.6	.0	100.0
제주	(13)	28.2	66.7	94.9	5.1	.0	5.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4.0	46.7	60.8	36.1	3.1	39.2	.0	100.0
중도	(588)	21.3	43.2	64.5	32.4	2.9	35.3	.2	100.0
보수적	(338)	16.8	47.3	64.2	33.4	2.5	35.8	.0	100.0



표 37.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13)	59.9	20.3	9.6	7.7	1.6	.5	.3	100.0
■ 성별									
남자	(610)	61.6	19.9	8.6	6.6	2.3	.7	.3	100.0
여자	(603)	58.2	20.8	10.6	8.9	1.0	.2	.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57.4	13.8	18.0	6.3	3.4	.8	.3	100.0
30대	(319)	52.1	27.4	7.7	11.3	.9	.3	.3	100.0
40대	(309)	56.7	26.1	7.3	7.3	1.6	.7	.3	100.0
50세이상	(281)	75.2	13.0	5.2	5.8	.6	.0	.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64.3	20.2	7.1	8.1	.3	.0	.0	100.0
고졸	(547)	60.1	20.0	8.8	8.5	1.4	.6	.7	100.0
대재이상	(522)	58.6	20.7	11.1	6.9	2.2	.4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2.2	15.8	2.6	7.6	1.8	.0	.0	100.0
자영업	(214)	59.8	20.4	7.5	10.7	.6	1.1	.0	100.0
블루칼라	(245)	56.8	23.7	11.3	5.2	1.6	1.4	.0	100.0
화이트칼라	(245)	64.7	18.3	7.0	7.7	1.7	.0	.7	100.0
전업주부	(299)	60.1	22.5	7.5	8.5	.7	.0	.7	100.0
무직 / 기타	(182)	55.7	15.4	17.9	6.6	4.4	.0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63.5	18.9	9.1	6.6	1.4	.0	.4	100.0
200~299만원	(400)	61.8	19.2	8.5	8.0	1.5	.6	.5	100.0
300~399만원	(339)	56.9	21.7	11.5	6.9	2.1	.7	.2	100.0
400만원이상	(226)	56.6	21.9	9.5	10.2	1.3	.5	.0	100.0
모름 / 무응답	(17)	72.7	16.6	6.2	.0	4.5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2.8	18.8	9.0	6.5	1.7	1.0	.3	100.0
중부권	(119)	45.4	32.5	5.6	13.4	3.1	.0	.0	100.0
호남권	(119)	50.7	21.9	10.6	15.1	1.8	.0	.0	100.0
영남권	(323)	60.9	19.4	12.0	6.2	1.2	.0	.3	100.0
강원	(36)	76.9	16.4	4.3	2.3	.0	.0	.0	100.0
제주	(13)	71.8	.0	20.5	.0	.0	.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55.7	25.1	10.3	5.9	2.3	.4	.2	100.0
중도	(588)	61.0	17.9	9.5	8.4	1.9	.8	.5	100.0
보수적	(338)	61.6	20.3	9.2	8.1	.7	.0	.0	100.0

표 38.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일본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13)	34.1	33.6	16.2	15.0	1.0	.1	.2	100.0
■ 성별									
남자	(610)	35.0	34.3	15.0	14.4	1.0	.1	.1	100.0
여자	(603)	33.1	32.8	17.4	15.5	1.0	.0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1.3	31.6	20.9	14.8	1.0	.0	.4	100.0
30대	(319)	35.9	32.3	17.8	13.7	.3	.0	.0	100.0
40대	(309)	34.1	34.1	15.6	14.2	1.8	.3	.0	100.0
50세이상	(281)	35.0	36.5	9.9	17.4	1.0	.0	.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7.6	38.9	10.2	13.2	.0	.0	.0	100.0
고졸	(547)	37.3	31.1	14.6	15.9	.9	.2	.1	100.0
대재이상	(522)	29.7	34.7	19.5	14.4	1.4	.0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9.9	40.9	3.7	10.2	2.3	2.9	.0	100.0
자영업	(214)	37.1	39.1	14.0	9.0	.8	.0	.0	100.0
블루칼라	(245)	39.9	31.2	16.4	11.5	1.0	.0	.0	100.0
화이트칼라	(245)	27.2	32.8	18.1	20.4	1.3	.0	.3	100.0
전업주부	(299)	35.1	32.3	13.6	18.2	.8	.0	.0	100.0
무직 / 기타	(182)	29.3	32.2	22.2	14.7	.9	.0	.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29.8	34.3	20.0	15.2	.8	.0	.0	100.0
200~299만원	(400)	34.9	35.3	13.1	16.3	.3	.0	.0	100.0
300~399만원	(339)	35.3	31.5	18.1	12.9	1.4	.2	.6	100.0
400만원이상	(226)	34.9	32.4	15.5	15.3	1.9	.0	.0	100.0
모름 / 무응답	(17)	35.5	38.1	9.5	16.9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6.2	33.5	13.3	16.6	.2	.0	.3	100.0
충부권	(119)	52.1	15.8	15.2	15.9	1.1	.0	.0	100.0
호남권	(119)	32.4	33.3	22.7	7.2	4.5	.0	.0	100.0
영남권	(323)	25.1	38.2	20.2	15.1	1.2	.3	.0	100.0
강원	(36)	31.8	45.6	8.5	12.6	1.5	.0	.0	100.0
제주	(13)	15.4	55.1	24.4	5.1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8.0	34.4	22.1	13.6	1.7	.0	.2	100.0
중도	(588)	36.4	33.3	14.8	14.4	.9	.1	.0	100.0
보수적	(338)	35.2	33.2	13.7	17.1	.5	.0	.4	100.0





표 39.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팀	미국팀	양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76.1	6.6	6.4	10.9	.1	100.0
■ 성별							
남자	(610)	76.4	6.6	6.8	10.2	.0	100.0
여자	(603)	75.8	6.6	6.0	11.5	.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8.8	8.7	5.1	17.4	.0	100.0
30대	(319)	80.3	3.8	6.1	9.7	.0	100.0
40대	(309)	80.9	4.6	6.9	7.4	.3	100.0
50세이상	(281)	73.9	9.6	7.6	8.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2.9	12.0	7.2	7.8	.0	100.0
고졸	(547)	78.1	6.8	6.0	9.0	.2	100.0
대재이상	(522)	75.0	4.8	6.6	13.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1.7	5.0	17.2	6.2	.0	100.0
자영업	(214)	77.7	5.7	6.4	10.2	.0	100.0
블루칼라	(245)	78.6	8.5	4.8	8.1	.0	100.0
화이트칼라	(245)	77.6	5.5	5.7	11.2	.0	100.0
전업주부	(299)	74.8	7.5	6.2	11.1	.3	100.0
무직 / 기타	(182)	71.7	5.0	8.1	15.2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71.7	10.1	8.8	9.4	.0	100.0
200~299만원	(400)	75.8	5.1	6.3	12.5	.2	100.0
300~399만원	(339)	77.4	6.0	6.1	10.5	.0	100.0
400만원이상	(226)	80.7	5.3	4.9	9.1	.0	100.0
모름 / 무응답	(17)	57.3	19.8	.0	22.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75.2	6.5	6.4	11.8	.1	100.0
중부권	(119)	84.1	4.1	4.3	7.5	.0	100.0
호남권	(119)	74.5	8.7	5.6	11.2	.0	100.0
영남권	(323)	76.5	6.5	7.3	9.8	.0	100.0
강원	(36)	69.1	9.3	6.5	15.1	.0	100.0
제주	(13)	73.1	7.7	11.5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78.5	6.9	5.3	9.2	.0	100.0
중도	(588)	76.6	6.7	6.3	10.2	.1	100.0
보수적	(338)	73.2	5.9	7.5	13.4	.0	100.0

표 40-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13)	70.2	13.0	14.7	2.1	100.0
■ 성별						
남자	(610)	69.5	13.2	15.7	1.7	100.0
여자	(603)	71.0	12.9	13.6	2.5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4.7	16.6	15.1	3.6	100.0
30대	(319)	65.2	16.2	17.1	1.5	100.0
40대	(309)	74.0	9.3	14.9	1.8	100.0
50세이상	(281)	77.7	9.6	11.2	1.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3.2	11.0	13.0	2.7	100.0
고졸	(547)	72.3	12.8	13.8	1.0	100.0
대재이상	(522)	67.2	13.8	16.0	3.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79.3	4.0	16.7	.0	100.0
자영업	(214)	69.6	13.3	14.9	2.2	100.0
블루칼라	(245)	70.2	14.3	14.2	1.3	100.0
화이트칼라	(245)	67.1	15.1	15.5	2.2	100.0
전업주부	(299)	75.0	9.7	14.0	1.4	100.0
무직 / 기타	(182)	66.0	15.2	14.6	4.2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74.1	11.5	12.3	2.1	100.0
200~299만원	(400)	71.7	11.6	15.7	1.1	100.0
300~399만원	(339)	68.0	12.9	16.1	3.0	100.0
400만원이상	(226)	66.8	18.0	12.6	2.7	100.0
모름 / 무응답	(17)	74.5	3.9	21.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77.1	10.2	11.6	1.2	100.0
중부권	(119)	48.0	21.7	29.3	1.0	100.0
호남권	(119)	60.5	12.4	20.2	6.9	100.0
영남권	(323)	68.1	16.2	12.9	2.8	100.0
강원	(36)	76.2	8.6	15.2	.0	100.0
제주	(13)	79.5	5.1	15.4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62.3	14.7	20.5	2.5	100.0
중도	(588)	72.4	13.1	11.9	2.6	100.0
보수적	(338)	73.3	11.5	14.5	.8	100.0



표 40-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17.1	35.7	30.4	16.6	2	100.0
■ 성별							
남자	(610)	16.8	34.9	32.1	16.1	.1	100.0
여자	(603)	17.5	36.5	28.7	17.2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0.0	37.3	24.3	18.3	.0	100.0
30대	(319)	16.0	38.4	30.8	14.8	.0	100.0
40대	(309)	17.4	33.8	32.2	16.3	.3	100.0
50세이상	(281)	15.0	32.9	34.6	17.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1.3	27.4	41.6	19.7	.0	100.0
고졸	(547)	15.0	34.7	31.8	18.2	.3	100.0
대재이상	(522)	21.0	39.0	25.9	14.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3.6	22.0	57.0	7.5	.0	100.0
자영업	(214)	15.7	33.6	33.2	17.5	.0	100.0
블루칼라	(245)	15.4	35.8	27.4	20.9	.4	100.0
화이트칼라	(245)	18.1	38.7	32.6	10.6	.0	100.0
전업주부	(299)	18.3	35.8	29.9	15.7	.3	100.0
무직 / 기타	(182)	18.4	35.7	25.0	20.9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3.8	33.6	34.9	17.7	.0	100.0
200~299만원	(400)	17.1	32.7	32.2	17.7	.2	100.0
300~399만원	(339)	17.9	39.2	25.1	17.8	.0	100.0
400만원이상	(226)	19.3	37.7	30.2	12.3	.4	100.0
모름 / 무응답	(17)	16.9	37.3	35.4	10.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9.9	32.3	28.9	18.7	.3	100.0
중부권	(119)	6.5	33.9	40.9	18.7	.0	100.0
호남권	(119)	14.9	35.9	30.5	18.6	.0	100.0
영남권	(323)	15.1	40.6	31.5	12.8	.0	100.0
강원	(36)	25.2	46.3	19.3	9.2	.0	100.0
제주	(13)	35.9	56.4	7.7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8.3	38.4	27.0	16.4	.0	100.0
중도	(588)	16.9	33.6	31.5	17.7	.3	100.0
보수적	(338)	16.6	37.0	31.5	15.0	.0	100.0

표 40-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24.3	38.2	32.3	4.9	.3	100.0
■ 성별							
남자	(610)	22.1	38.7	33.8	5.1	.3	100.0
여자	(603)	26.7	37.7	30.7	4.6	.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3.5	37.5	33.1	5.6	.3	100.0
30대	(319)	26.3	40.9	29.8	3.0	.0	100.0
40대	(309)	25.1	39.4	28.4	6.5	.6	100.0
50세이상	(281)	22.2	34.6	38.4	4.4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2.9	37.6	34.1	5.4	.0	100.0
고졸	(547)	20.0	39.4	35.9	4.1	.5	100.0
대재이상	(522)	29.3	37.1	27.9	5.5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0	46.2	25.6	5.3	.0	100.0
자영업	(214)	27.3	37.7	29.9	5.1	.0	100.0
블루칼라	(245)	21.1	40.9	33.6	4.0	.4	100.0
화이트칼라	(245)	21.7	37.1	37.0	4.2	.0	100.0
전업주부	(299)	25.7	38.1	30.8	4.8	.6	100.0
무직 / 기타	(182)	26.7	35.5	30.3	6.9	.6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9.4	41.1	34.9	4.6	.0	100.0
200~299만원	(400)	22.5	39.2	32.1	5.8	.4	100.0
300~399만원	(339)	25.7	37.6	31.4	5.3	.0	100.0
400만원이상	(226)	30.1	35.0	30.6	3.4	.9	100.0
모름 / 무응답	(17)	31.0	29.7	39.3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4.7	36.4	32.5	5.7	.6	100.0
중부권	(119)	8.6	39.2	46.6	5.6	.0	100.0
호남권	(119)	38.8	27.3	29.4	4.5	.0	100.0
영남권	(323)	21.9	45.6	28.5	4.0	.0	100.0
강원	(36)	28.9	37.7	33.3	.0	.0	100.0
제주	(13)	66.7	28.2	5.1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6.7	35.0	33.7	4.6	.0	100.0
중도	(588)	22.7	40.3	31.7	4.6	.6	100.0
보수적	(338)	25.2	37.3	32.0	5.6	.0	100.0



표 40-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29.4	35.2	31.1	4.0	.3	100.0
■ 성별							
남자	(610)	29.9	36.0	30.1	3.7	.3	100.0
여자	(603)	29.0	34.3	32.2	4.3	.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1.3	35.2	28.6	4.6	.3	100.0
30대	(319)	32.1	36.9	28.3	2.7	.0	100.0
40대	(309)	31.4	33.4	30.9	3.9	.3	100.0
50세이상	(281)	22.2	35.0	37.4	4.7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2.6	34.8	36.5	6.1	.0	100.0
고졸	(547)	24.9	35.7	35.8	3.1	.5	100.0
대재이상	(522)	36.0	34.7	24.8	4.3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3.6	40.9	29.4	6.2	.0	100.0
자영업	(214)	31.2	33.4	31.1	4.3	.0	100.0
블루칼라	(245)	27.0	35.1	33.0	4.5	.4	100.0
화이트칼라	(245)	32.7	33.6	31.5	2.3	.0	100.0
전업주부	(299)	27.4	36.2	32.0	3.7	.7	100.0
무직 / 기타	(182)	30.4	36.9	27.1	5.0	.6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24.0	40.0	31.7	4.3	.0	100.0
200~299만원	(400)	26.7	34.8	35.0	3.4	.2	100.0
300~399만원	(339)	30.7	33.8	29.6	6.0	.0	100.0
400만원이상	(226)	38.1	33.5	25.4	2.0	.9	100.0
모름 / 무응답	(17)	27.4	26.1	40.0	.0	6.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7.0	34.8	33.1	4.5	.7	100.0
중부권	(119)	15.5	33.9	49.3	1.3	.0	100.0
호남권	(119)	42.3	26.0	27.9	3.8	.0	100.0
영남권	(323)	29.8	40.6	24.9	4.6	.0	100.0
강원	(36)	51.9	31.6	16.5	.0	.0	100.0
제주	(13)	79.5	20.5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3.9	32.8	29.1	4.2	.0	100.0
중도	(588)	26.6	36.4	32.0	4.3	.7	100.0
보수적	(338)	30.4	34.9	31.4	3.2	.0	100.0

표 41-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익에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 전체	(1213)	56.8	1.4	37.9	3.9	100.0
■ 성별						
남자	(610)	59.8	.5	37.4	2.4	100.0
여자	(603)	53.9	2.4	38.3	5.4	100.0
■ 연령별						
19~29세	(304)	54.0	2.5	38.2	5.4	100.0
30대	(319)	55.9	.3	40.3	3.5	100.0
40대	(309)	58.7	1.4	37.2	2.7	100.0
50세이상	(281)	59.0	1.5	35.5	4.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52.5	1.0	39.0	7.6	100.0
고졸	(547)	59.8	1.7	35.2	3.3	100.0
대재이상	(522)	55.0	1.2	40.4	3.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49.7	2.6	47.6	.0	100.0
자영업	(214)	57.7	1.8	35.8	4.7	100.0
블루칼라	(245)	59.9	1.9	35.7	2.5	100.0
화이트칼라	(245)	52.1	.5	44.8	2.6	100.0
전업주부	(299)	56.9	1.4	35.8	5.9	100.0
무직 / 기타	(182)	59.1	1.4	35.6	3.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55.4	1.2	38.0	5.4	100.0
200~299만원	(400)	56.4	1.6	37.7	4.2	100.0
300~399만원	(339)	56.3	2.0	37.6	4.1	100.0
400만원이상	(226)	59.4	.5	38.7	1.4	100.0
모름 / 무응답	(17)	63.2	.0	33.1	3.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5.2	2.2	27.8	4.8	100.0
충부권	(119)	42.5	.4	50.3	6.8	100.0
호남권	(119)	45.7	.6	52.5	1.2	100.0
영남권	(323)	52.3	.8	44.3	2.6	100.0
강원	(36)	57.4	.0	41.0	1.5	100.0
제주	(13)	12.8	.0	87.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55.8	1.5	40.5	2.3	100.0
중도	(588)	55.7	1.6	37.6	5.1	100.0
보수적	(338)	59.7	1.0	36.0	3.2	100.0



표 41-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④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중립을	모름/ 무응답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익에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	%
■ 전체	(1213)	15.3	4.4	68.5	11.6	.1	100.0
■ 성별							
남자	(610)	17.8	3.6	67.7	10.8	.1	100.0
여자	(603)	12.9	5.3	69.4	12.4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9.6	7.7	60.9	11.8	.0	100.0
30대	(319)	13.8	3.6	72.2	10.4	.0	100.0
40대	(309)	17.0	3.2	68.8	10.7	.3	100.0
50세이상	(281)	10.6	3.2	72.3	13.6	.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9.2	1.9	79.7	8.8	.4	100.0
고졸	(547)	13.8	4.8	68.0	13.2	.2	100.0
대재이상	(522)	18.7	4.7	66.1	10.5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8.2	5.3	79.3	7.3	.0	100.0
자영업	(214)	16.3	3.3	71.3	9.1	.0	100.0
블루칼라	(245)	15.4	3.9	68.3	12.1	.3	100.0
화이트칼라	(245)	16.6	4.9	70.1	8.3	.0	100.0
전업주부	(299)	11.4	5.1	67.6	15.6	.3	100.0
무직 / 기타	(182)	20.1	4.5	63.3	12.1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1.9	6.9	71.5	9.3	.3	100.0
200~299만원	(400)	13.2	5.4	68.4	12.8	.2	100.0
300~399만원	(339)	18.4	2.7	64.1	14.8	.0	100.0
400만원이상	(226)	17.5	3.1	72.1	7.3	.0	100.0
모름 / 무응답	(17)	22.2	.0	73.9	3.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8.5	5.8	60.1	15.3	.3	100.0
중부권	(119)	15.4	3.5	72.4	8.8	.0	100.0
호남권	(119)	15.1	.8	79.1	4.9	.0	100.0
영남권	(323)	8.8	4.2	77.7	9.3	.0	100.0
강원	(36)	22.9	.0	75.7	1.4	.0	100.0
제주	(13)	12.8	.0	79.5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6.6	5.3	66.9	11.2	.0	100.0
중도	(588)	14.1	4.4	68.2	13.1	.2	100.0
보수적	(338)	16.4	3.7	70.5	9.1	.2	100.0

표 41-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중립을	모름/ 무응답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익에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
■ 전체	(1213)	4.6	29.4	52.9	13.0	.1	100.0
■ 성별							
남자	(610)	3.5	33.3	51.1	12.1	.0	100.0
여자	(603)	5.8	25.5	54.7	13.9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5.2	30.5	49.5	14.9	.0	100.0
30대	(319)	4.2	24.0	58.8	13.0	.0	100.0
40대	(309)	4.3	34.8	49.5	11.2	.3	100.0
50세이상	(281)	5.0	28.4	53.6	13.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5.0	22.4	56.1	16.5	.0	100.0
고졸	(547)	4.6	30.0	51.7	13.5	.2	100.0
대재이상	(522)	4.5	30.7	53.3	11.5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35.5	59.5	5.0	.0	100.0
자영업	(214)	5.9	30.0	49.3	14.7	.0	100.0
블루칼라	(245)	4.6	31.9	52.2	11.3	.0	100.0
화이트칼라	(245)	2.6	28.4	59.2	9.8	.0	100.0
전업주부	(299)	5.2	25.9	54.1	14.5	.3	100.0
무직 / 기타	(182)	5.8	31.4	46.4	16.3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4.5	28.4	54.8	12.3	.0	100.0
200~299만원	(400)	4.5	29.6	52.6	13.0	.2	100.0
300~399만원	(339)	5.2	31.2	51.4	12.2	.0	100.0
400만원이상	(226)	4.0	26.1	55.3	14.7	.0	100.0
모름 / 무응답	(17)	6.6	46.8	32.3	14.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4.9	33.0	46.7	15.2	.2	100.0
중부권	(119)	.8	30.2	52.4	16.6	.0	100.0
호남권	(119)	8.5	19.4	58.5	13.7	.0	100.0
영남권	(323)	4.7	27.2	59.4	8.7	.0	100.0
강원	(36)	.0	26.2	68.5	5.3	.0	100.0
제주	(13)	.0	12.8	87.2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6	31.7	51.9	13.8	.0	100.0
중도	(588)	4.6	28.6	53.6	12.9	.2	100.0
보수적	(338)	6.4	28.7	52.4	12.4	.0	100.0





표 41-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13)	6.5	20.4	54.0	19.0	.1	100.0
■ 성별							
남자	(610)	5.5	21.9	52.6	19.9	.1	100.0
여자	(603)	7.5	18.9	55.4	18.0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7.4	20.5	49.1	23.0	.0	100.0
30대	(319)	7.7	18.1	59.7	14.4	.0	100.0
40대	(309)	4.6	23.0	53.7	18.4	.3	100.0
50세이상	(281)	6.1	20.2	53.2	20.2	.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4.9	16.5	59.4	18.7	.4	100.0
고졸	(547)	6.5	20.5	53.1	19.8	.2	100.0
대재이상	(522)	6.8	21.5	53.5	18.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25.0	66.1	8.9	.0	100.0
자영업	(214)	5.5	21.7	51.9	20.9	.0	100.0
블루칼라	(245)	5.7	22.2	54.7	17.0	.3	100.0
화이트칼라	(245)	7.2	18.8	55.7	18.3	.0	100.0
전업주부	(299)	6.8	17.6	57.8	17.6	.3	100.0
무직 / 기타	(182)	8.1	22.7	45.3	23.9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5.8	20.4	54.3	19.2	.3	100.0
200~299만원	(400)	7.6	19.6	54.3	18.2	.2	100.0
300~399만원	(339)	5.4	23.8	51.4	19.3	.0	100.0
400만원이상	(226)	6.7	15.9	58.3	19.2	.0	100.0
모름 / 무응답	(17)	6.6	32.3	39.1	22.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6.8	23.3	47.3	22.3	.3	100.0
충부권	(119)	4.0	15.8	56.0	24.3	.0	100.0
호남권	(119)	8.9	21.7	59.3	10.1	.0	100.0
영남권	(323)	6.8	17.6	61.7	13.9	.0	100.0
강원	(36)	.0	16.7	58.1	25.1	.0	100.0
제주	(13)	.0	.0	94.9	5.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7.3	19.5	51.4	21.8	.0	100.0
중도	(588)	6.7	19.4	56.7	17.1	.2	100.0
보수적	(338)	5.3	23.1	51.7	19.8	.2	100.0

표 42-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13)	5.4	21.7	27.0	50.8	22.2	73.0	100.0
■ 성별								
남자	(610)	5.9	19.6	25.5	50.7	23.8	74.5	100.0
여자	(603)	4.8	23.8	28.6	50.8	20.6	71.4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8	22.4	27.1	48.3	24.6	72.9	100.0
30대	(319)	4.3	21.7	26.0	49.4	24.6	74.0	100.0
40대	(309)	4.6	23.0	27.6	50.4	22.0	72.4	100.0
50세이상	(281)	7.9	19.5	27.5	55.4	17.2	72.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7.1	22.7	29.8	56.0	14.2	70.2	100.0
고졸	(547)	4.9	21.1	26.0	48.4	25.7	74.0	100.0
대재이상	(522)	5.4	22.0	27.4	51.8	20.8	72.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25.8	25.8	69.3	4.9	74.2	100.0
자영업	(214)	5.6	27.8	33.4	45.5	21.2	66.6	100.0
블루칼라	(245)	4.2	19.4	23.6	46.8	29.6	76.4	100.0
화이트칼라	(245)	4.2	21.0	25.2	54.7	20.1	74.8	100.0
전업주부	(299)	6.8	18.3	25.1	53.5	21.4	74.9	100.0
무직 / 기타	(182)	6.6	23.4	30.0	49.6	20.4	70.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5.7	27.6	33.4	45.5	21.1	66.6	100.0
200~299만원	(400)	5.8	18.6	24.4	51.2	24.4	75.6	100.0
300~399만원	(339)	4.8	22.3	27.1	51.3	21.6	72.9	100.0
400만원이상	(226)	5.2	19.9	25.1	54.1	20.8	74.9	100.0
모름 / 무응답	(17)	2.9	23.7	26.7	57.2	16.1	73.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5.4	19.5	24.9	44.3	30.8	75.1	100.0
중부권	(119)	3.5	21.5	25.0	58.8	16.2	75.0	100.0
호남권	(119)	1.7	25.5	27.2	53.2	19.7	72.8	100.0
영남권	(323)	6.7	24.4	31.1	56.7	12.2	68.9	100.0
강원	(36)	9.9	19.7	29.5	68.2	2.2	70.5	100.0
제주	(13)	5.1	28.2	33.3	59.0	7.7	6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5.9	23.2	29.1	49.2	21.7	70.9	100.0
중도	(588)	5.7	21.7	27.4	49.4	23.2	72.6	100.0
보수적	(338)	4.2	20.5	24.7	54.4	21.0	75.3	100.0



표 42-2. 주변국가 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전체	(1213)	1.3	8.7	10.0	55.9	34.0	90.0	.1	100.0
■ 성별									
남자	(610)	1.2	6.3	7.5	56.4	36.1	92.5	.0	100.0
여자	(603)	1.3	11.1	12.4	55.4	32.0	87.4	.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1	11.2	13.2	51.9	34.9	86.8	.0	100.0
30대	(319)	.3	10.0	10.3	55.5	34.2	89.7	.0	100.0
40대	(309)	1.0	7.9	8.9	56.7	34.1	90.8	.3	100.0
50세이상	(281)	1.9	5.4	7.2	59.9	32.9	92.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0	9.8	10.8	61.4	27.8	89.2	.0	100.0
고졸	(547)	1.2	8.2	9.5	52.2	38.2	90.4	.2	100.0
대재이상	(522)	1.4	8.9	10.3	58.3	31.4	89.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0	4.4	4.4	85.0	10.6	95.6	.0	100.0
자영업	(214)	.8	10.7	11.5	57.3	31.1	88.5	.0	100.0
블루칼라	(245)	1.9	6.5	8.4	50.3	41.3	91.6	.0	100.0
화이트칼라	(245)	.4	7.9	8.3	60.3	31.4	91.7	.0	100.0
전업주부	(299)	1.9	9.2	11.1	53.6	35.0	88.7	.3	100.0
무직 / 기타	(182)	1.3	10.3	11.6	55.1	33.3	88.4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3	13.0	14.2	51.6	34.2	85.8	.0	100.0
200~299만원	(400)	1.7	8.2	9.9	54.9	35.2	90.1	.0	100.0
300~399만원	(339)	1.0	7.2	8.2	59.4	32.1	91.5	.3	100.0
400만원이상	(226)	.8	6.8	7.7	57.3	35.0	92.3	.0	100.0
모름 / 무응답	(17)	2.9	17.1	20.0	50.3	29.7	80.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8	10.0	11.7	48.2	39.9	88.1	.1	100.0
중부권	(119)	1.7	11.8	13.4	47.0	39.6	86.6	.0	100.0
호남권	(119)	.8	14.1	15.0	58.9	26.1	85.0	.0	100.0
영남권	(323)	.0	2.6	2.6	70.7	26.7	97.4	.0	100.0
강원	(36)	3.5	12.5	16.0	64.9	19.1	84.0	.0	100.0
제주	(13)	5.1	12.8	17.9	74.4	7.7	82.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7	10.6	12.2	56.4	31.4	87.8	.0	100.0
중도	(588)	1.4	7.1	8.5	56.1	35.2	91.3	.1	100.0
보수적	(338)	.7	9.8	10.6	55.2	34.2	89.4	.0	100.0

표 42-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 전체	(1213)	2.2	10.9	13.1	58.4	28.4	86.8	.1	100.0
■ 성별									
남자	(610)	2.3	10.0	12.3	57.7	30.0	87.7	.0	100.0
여자	(603)	2.0	11.8	13.8	59.2	26.8	86.0	.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4	14.7	17.1	54.5	28.4	82.9	.0	100.0
30대	(319)	2.4	11.6	14.0	58.0	28.0	86.0	.0	100.0
40대	(309)	2.2	8.1	10.2	58.5	31.0	89.5	.3	100.0
50세이상	(281)	1.6	9.3	10.9	63.1	26.0	89.1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2	13.9	16.1	64.5	19.5	83.9	.0	100.0
고졸	(547)	2.3	9.1	11.4	56.3	32.2	88.5	.2	100.0
대재이상	(522)	2.0	12.0	14.0	59.0	26.9	86.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5.9	5.3	11.1	84.8	4.1	88.9	.0	100.0
자영업	(214)	2.6	12.6	15.2	55.4	29.3	84.8	.0	100.0
블루칼라	(245)	1.3	10.3	11.6	54.5	33.8	88.4	.0	100.0
화이트칼라	(245)	1.5	9.6	11.1	61.4	27.4	88.9	.0	100.0
전업주부	(299)	2.8	9.7	12.5	59.3	27.9	87.2	.3	100.0
무직 / 기타	(182)	2.0	14.4	16.3	57.6	26.1	83.7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1	16.4	17.5	59.2	23.3	82.5	.0	100.0
200~299만원	(400)	4.7	9.1	13.8	54.4	31.8	86.2	.0	100.0
300~399만원	(339)	1.2	10.9	12.1	60.4	27.3	87.6	.3	100.0
400만원이상	(226)	.3	8.1	8.4	61.7	29.9	91.6	.0	100.0
모름 / 무응답	(17)	.0	17.7	17.7	60.0	22.2	82.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5	12.3	15.8	50.4	33.7	84.0	.1	100.0
중부권	(119)	.8	9.7	10.5	57.7	31.8	89.5	.0	100.0
호남권	(119)	1.8	13.4	15.2	68.6	16.2	84.8	.0	100.0
영남권	(323)	.4	8.9	9.3	66.0	24.8	90.7	.0	100.0
강원	(36)	.0	5.6	5.6	84.2	10.2	94.4	.0	100.0
제주	(13)	5.1	.0	5.1	87.2	7.7	94.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3	12.0	14.3	60.3	25.5	85.7	.0	100.0
중도	(588)	1.7	10.2	11.9	57.4	30.6	88.0	.1	100.0
보수적	(338)	2.9	11.3	14.2	58.7	27.1	85.8	.0	100.0



표 42-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13)	2.1	12.9	15.0	60.0	24.8	84.8	.2	100.0
■ 성별									
남자	(610)	2.5	11.3	13.8	60.1	25.9	86.0	.2	100.0
여자	(603)	1.8	14.5	16.2	60.0	23.7	83.6	.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1	17.0	19.1	57.0	23.9	80.9	.0	100.0
30대	(319)	2.1	14.3	16.5	58.9	24.7	83.5	.0	100.0
40대	(309)	2.6	10.3	12.8	59.3	27.3	86.6	.6	100.0
50세이상	(281)	1.8	9.5	11.4	65.5	23.1	88.6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9	13.0	13.9	67.8	18.3	86.1	.0	100.0
고졸	(547)	2.2	12.2	14.4	55.8	29.6	85.4	.2	100.0
대재이상	(522)	2.4	13.6	16.0	62.3	21.5	83.8	.2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5	7.0	10.5	84.8	4.7	89.5	.0	100.0
자영업	(214)	3.4	12.6	16.0	57.6	26.4	84.0	.0	100.0
블루칼라	(245)	1.7	10.4	12.1	55.8	32.1	87.9	.0	100.0
화이트칼라	(245)	.4	11.4	11.9	64.2	23.5	87.7	.4	100.0
전업주부	(299)	2.6	12.3	15.0	60.9	23.8	84.7	.3	100.0
무직 / 기타	(182)	2.6	20.2	22.8	57.8	19.4	77.2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2.7	16.5	19.2	58.5	21.8	80.3	.5	100.0
200~299만원	(400)	3.3	12.1	15.4	58.9	25.7	84.6	.0	100.0
300~399만원	(339)	1.8	11.6	13.4	61.4	25.0	86.4	.3	100.0
400만원이상	(226)	.3	11.3	11.6	61.6	26.9	88.4	.0	100.0
모름 / 무응답	(17)	.0	26.5	26.5	60.8	12.7	73.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5	13.6	17.1	51.4	31.2	82.6	.3	100.0
중부권	(119)	.8	12.0	12.8	65.4	21.8	87.2	.0	100.0
호남권	(119)	.8	17.5	18.4	66.0	15.7	81.6	.0	100.0
영남권	(323)	.7	10.6	11.3	69.1	19.7	88.7	.0	100.0
강원	(36)	.0	11.4	11.4	79.5	9.1	88.6	.0	100.0
제주	(13)	5.1	5.1	10.3	82.1	7.7	89.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3	14.2	17.6	61.1	21.0	82.1	.4	100.0
중도	(588)	1.4	12.9	14.3	58.0	27.5	85.6	.1	100.0
보수적	(338)	2.5	11.5	14.1	62.7	23.3	85.9	.0	100.0

표 43.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문)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13)	34.8	53.0	87.8	9.6	2.6	12.2	100.0
■ 성별								
남자	(610)	38.6	49.3	87.9	9.7	2.4	12.1	100.0
여자	(603)	31.0	56.7	87.7	9.4	2.8	12.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0.4	44.2	84.7	12.2	3.2	15.3	100.0
30대	(319)	30.5	56.3	86.8	8.9	4.4	13.2	100.0
40대	(309)	37.7	53.0	90.7	7.3	2.0	9.3	100.0
50세이상	(281)	30.6	58.6	89.2	10.1	.7	10.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6.6	54.5	81.1	14.5	4.3	18.9	100.0
고졸	(547)	30.2	56.2	86.4	10.7	2.9	13.6	100.0
대재이상	(522)	41.9	49.2	91.1	7.0	1.9	8.9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43.3	54.3	97.7	.0	2.3	2.3	100.0
자영업	(214)	33.9	54.7	88.6	9.5	1.9	11.4	100.0
블루칼라	(245)	33.4	56.1	89.5	9.4	1.0	10.5	100.0
화이트칼라	(245)	39.7	47.9	87.7	10.5	1.9	12.3	100.0
전업주부	(299)	28.3	57.5	85.8	10.0	4.2	14.2	100.0
무직 / 기타	(182)	40.7	45.8	86.5	9.5	4.0	13.5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33.5	49.3	82.7	13.8	3.5	17.3	100.0
200~299만원	(400)	34.5	54.8	89.2	7.8	3.0	10.8	100.0
300~399만원	(339)	32.8	55.7	88.5	8.9	2.6	11.5	100.0
400만원이상	(226)	39.4	50.4	89.8	9.0	1.2	10.2	100.0
모름 / 무응답	(17)	42.1	41.2	83.3	16.7	.0	16.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3.8	51.7	85.5	10.6	3.9	14.5	100.0
중부권	(119)	38.6	49.3	87.9	10.4	1.7	12.1	100.0
호남권	(119)	43.5	48.0	91.5	7.2	1.3	8.5	100.0
영남권	(323)	32.5	58.5	91.0	8.2	.8	9.0	100.0
강원	(36)	27.6	57.7	85.3	11.9	2.8	14.7	100.0
제주	(13)	46.2	42.3	88.5	3.8	7.7	1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38.0	51.2	89.2	8.6	2.2	10.8	100.0
중도	(588)	32.6	55.3	87.9	9.1	3.0	12.1	100.0
보수적	(338)	36.0	50.4	86.3	11.3	2.4	13.7	100.0



표 44-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13)	42.3	48.6	90.8	7.1	2.0	9.2	100.0
■ 성별								
남자	(610)	46.3	45.9	92.1	5.9	1.9	7.9	100.0
여자	(603)	38.2	51.3	89.5	8.3	2.1	10.5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2.4	45.1	87.5	8.6	3.9	12.5	100.0
30대	(319)	37.1	53.2	90.3	8.2	1.5	9.7	100.0
40대	(309)	44.5	48.1	92.7	5.5	1.8	7.3	100.0
50세이상	(281)	45.4	47.6	93.0	6.2	.8	7.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37.1	49.4	86.6	1.9	1.5	13.4	100.0
고졸	(547)	41.1	50.5	91.6	6.6	1.8	8.4	100.0
대재이상	(522)	44.9	46.3	91.2	6.4	2.4	8.8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6.9	59.0	95.9	.0	4.1	4.1	100.0
자영업	(214)	42.5	49.7	92.2	6.8	1.0	7.8	100.0
블루칼라	(245)	45.4	47.4	92.8	5.1	2.1	7.2	100.0
화이트칼라	(245)	42.1	50.3	92.4	6.0	1.6	7.6	100.0
전업주부	(299)	38.8	51.2	90.0	7.9	2.1	10.0	100.0
무직 / 기타	(182)	44.5	40.6	85.1	1.6	3.3	14.9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42.7	46.0	88.7	8.9	2.4	11.3	100.0
200~299만원	(400)	44.0	47.5	91.5	7.1	1.3	8.5	100.0
300~399만원	(339)	38.9	50.9	89.8	7.4	2.9	10.2	100.0
400만원이상	(226)	44.2	49.3	93.5	4.8	1.7	6.5	100.0
모름 / 무응답	(17)	35.4	55.0	90.5	9.5	.0	9.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50.7	40.5	91.2	6.1	2.7	8.8	100.0
중부권	(119)	26.0	61.6	87.6	9.9	2.5	12.4	100.0
호남권	(119)	33.2	56.3	89.4	7.9	2.6	10.6	100.0
영남권	(323)	34.2	58.1	92.3	7.0	.7	7.7	100.0
강원	(36)	57.8	33.0	90.8	9.2	.0	9.2	100.0
제주	(13)	38.5	42.3	80.8	9.2	.0	1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0.6	51.1	91.7	5.5	2.8	8.3	100.0
중도	(588)	42.1	47.5	89.6	8.4	2.0	10.4	100.0
보수적	(338)	44.0	48.3	92.3	6.3	1.4	7.7	100.0

표 44-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13)	18.7	53.0	71.7	22.2	6.1	28.3	100.0
■ 성별								
남자	(610)	21.6	49.0	70.6	23.0	6.4	29.4	100.0
여자	(603)	15.8	57.1	72.9	21.3	5.8	27.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9.5	48.6	68.1	24.3	7.6	31.9	100.0
30대	(319)	17.1	54.4	71.5	22.3	6.2	28.5	100.0
40대	(309)	22.1	53.3	75.4	18.0	6.6	24.6	100.0
50세이상	(281)	16.0	55.9	71.9	24.3	3.9	28.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3.3	49.0	62.3	30.6	7.1	37.7	100.0
고졸	(547)	16.7	55.0	71.7	22.1	6.2	28.3	100.0
대재이상	(522)	22.3	52.1	74.4	19.9	5.7	25.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29.8	66.1	95.9	.0	4.1	4.1	100.0
자영업	(214)	20.5	48.3	68.8	25.9	5.3	31.2	100.0
블루칼라	(245)	17.4	53.1	70.4	23.0	6.6	29.6	100.0
화이트칼라	(245)	17.5	55.4	72.9	21.7	5.4	27.1	100.0
전업주부	(299)	15.6	59.1	74.7	18.9	6.4	25.3	100.0
무직 / 기타	(182)	23.3	43.4	66.7	26.1	7.2	33.3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20.9	50.5	71.4	24.3	4.3	28.6	100.0
200~299만원	(400)	18.6	56.6	75.2	18.4	6.4	24.8	100.0
300~399만원	(339)	17.9	52.2	70.1	22.9	7.0	29.9	100.0
400만원이상	(226)	17.6	52.2	69.8	24.0	6.2	30.2	100.0
모름 / 무응답	(17)	22.5	31.2	53.8	41.7	4.5	46.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2.4	51.7	74.1	19.1	6.8	25.9	100.0
중부권	(119)	7.9	50.6	58.5	30.5	1.0	41.5	100.0
호남권	(119)	18.4	54.9	73.3	20.9	5.8	26.7	100.0
영남권	(323)	17.5	53.9	71.3	24.9	3.8	28.7	100.0
강원	(36)	12.1	61.4	73.5	24.2	2.3	26.5	100.0
제주	(13)	.0	75.6	75.6	24.4	.0	24.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8.1	56.7	74.7	18.6	6.6	25.3	100.0
중도	(588)	19.5	50.8	70.4	23.8	5.8	29.6	100.0
보수적	(338)	17.9	53.7	71.6	22.3	6.2	28.4	100.0





표 44-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13)	25.7	55.4	81.1	14.9	4.0	18.9	100.0
■ 성별								
남자	(610)	27.7	54.1	81.8	13.7	4.5	18.2	100.0
여자	(603)	23.6	56.8	80.3	16.1	3.5	19.7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5.3	53.1	78.4	17.1	4.6	21.6	100.0
30대	(319)	21.3	60.2	81.5	14.5	4.0	18.5	100.0
40대	(309)	27.5	53.9	81.4	13.0	5.7	18.6	100.0
50세이상	(281)	29.1	54.2	83.3	15.1	1.5	16.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9.7	56.2	75.8	20.2	3.9	24.2	100.0
고졸	(547)	23.2	56.0	79.2	16.5	4.3	20.8	100.0
대재이상	(522)	29.9	54.6	84.5	11.8	3.7	15.5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6.9	54.3	91.2	4.7	4.1	8.8	100.0
자영업	(214)	24.7	56.0	80.8	15.4	3.8	19.2	100.0
블루칼라	(245)	24.0	57.6	81.6	16.1	2.3	18.4	100.0
화이트칼라	(245)	25.6	57.3	82.9	11.1	6.1	17.1	100.0
전업주부	(299)	24.6	55.3	79.9	16.5	3.6	20.1	100.0
무직 / 기타	(182)	29.2	49.5	78.7	16.8	4.5	21.3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25.0	53.2	78.1	19.1	2.8	21.9	100.0
200~299만원	(400)	25.1	57.4	82.5	13.4	4.1	17.5	100.0
300~399만원	(339)	24.8	54.6	79.4	15.4	5.2	20.6	100.0
400만원이상	(226)	29.6	55.5	85.1	11.4	3.5	14.9	100.0
모름 / 무응답	(17)	16.4	53.6	70.0	30.0	.0	30.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9.7	52.7	82.4	12.3	5.3	17.6	100.0
중부권	(119)	11.6	55.0	66.5	27.3	6.2	33.5	100.0
호남권	(119)	22.5	59.3	81.8	14.3	3.9	18.2	100.0
영남권	(323)	23.8	59.8	83.6	15.2	1.3	16.4	100.0
강원	(36)	32.1	50.6	82.7	15.0	2.3	17.3	100.0
제주	(13)	25.6	55.1	80.8	19.2	.0	1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6.0	57.6	83.6	11.2	5.2	16.4	100.0
중도	(588)	24.7	54.7	79.4	17.1	3.5	20.6	100.0
보수적	(338)	27.1	54.9	81.9	14.2	3.9	18.1	100.0

표 44-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13)	17.2	58.1	75.3	20.7	3.9	24.6	.1	100.0
■ 성별									
남자	(610)	19.8	55.4	75.2	20.7	4.1	24.8	.0	100.0
여자	(603)	14.6	60.9	75.5	20.6	3.8	24.3	.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6.3	54.7	71.0	23.9	5.0	29.0	.0	100.0
30대	(319)	15.1	60.3	75.4	20.7	3.9	24.6	.0	100.0
40대	(309)	20.7	56.8	77.5	17.5	4.8	22.3	.2	100.0
50세이상	(281)	16.6	60.9	77.5	20.5	1.8	22.3	.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2.7	55.3	68.0	27.5	4.5	32.0	.0	100.0
고졸	(547)	15.8	59.4	75.2	20.6	4.0	24.6	.2	100.0
대재이상	(522)	19.8	57.6	77.5	18.9	3.7	22.5	.0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6.9	52.0	88.8	7.1	4.1	11.2	.0	100.0
자영업	(214)	18.2	59.0	77.2	19.9	2.9	22.8	.0	100.0
블루칼라	(245)	16.6	58.9	75.4	22.2	2.4	24.6	.0	100.0
화이트칼라	(245)	19.4	54.8	74.3	19.8	6.0	25.7	.0	100.0
전업주부	(299)	12.7	62.9	75.6	19.9	4.2	24.0	.3	100.0
무직 / 기타	(182)	18.1	53.7	71.8	24.0	4.2	28.2	.0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19.1	53.5	72.6	24.8	2.4	27.2	.2	100.0
200~299만원	(400)	16.3	62.1	78.4	18.1	3.3	21.4	.1	100.0
300~399만원	(339)	14.3	58.9	73.2	20.6	6.2	26.8	.0	100.0
400만원이상	(226)	21.2	55.4	76.6	19.9	3.6	23.4	.0	100.0
모름 / 무응답	(17)	16.4	49.1	65.5	34.5	.0	34.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9.0	59.0	78.0	16.7	5.3	22.0	.0	100.0
중부권	(119)	7.9	52.9	60.8	33.7	5.1	38.8	.4	100.0
호남권	(119)	17.7	57.8	75.5	21.5	2.6	24.1	.4	100.0
영남권	(323)	16.7	58.6	75.4	22.9	1.7	24.6	.0	100.0
강원	(36)	21.4	56.3	77.6	20.0	2.3	22.4	.0	100.0
제주	(13)	12.8	62.8	75.6	24.4	.0	24.4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4.9	60.9	75.8	19.3	4.8	24.1	.2	100.0
중도	(588)	17.5	57.8	75.3	20.7	3.9	24.6	.1	100.0
보수적	(338)	18.7	56.3	75.0	21.7	3.3	25.0	.0	100.0



표 45.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13)	29.5	20.1	49.8	.6	100.0
■ 성별						
남자	(610)	32.7	19.9	46.9	.5	100.0
여자	(603)	26.4	20.2	52.7	.7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2.5	18.1	49.1	.4	100.0
30대	(319)	29.9	18.7	50.8	.6	100.0
40대	(309)	30.1	21.4	48.2	.3	100.0
50세이상	(281)	25.4	22.3	51.3	1.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26.4	21.5	51.4	.7	100.0
고졸	(547)	26.6	18.3	54.6	.5	100.0
대재이상	(522)	33.5	21.5	44.3	.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33.6	7.5	59.0	.0	100.0
자영업	(214)	28.1	19.5	51.4	1.0	100.0
블루칼라	(245)	26.3	21.5	51.0	1.1	100.0
화이트칼라	(245)	37.2	18.5	44.3	.0	100.0
전업주부	(299)	26.0	23.8	49.8	.3	100.0
무직 / 기타	(182)	30.4	16.6	52.3	.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미만	(232)	34.7	14.7	49.7	.8	100.0
200~299만원	(400)	26.4	21.2	51.8	.6	100.0
300~399만원	(339)	27.9	21.8	49.8	.6	100.0
400만원이상	(226)	32.1	20.2	47.3	.3	100.0
모름 / 무응답	(17)	32.7	28.5	38.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24.6	21.4	52.9	1.0	100.0
중부권	(119)	46.1	13.7	40.2	.0	100.0
호남권	(119)	43.7	17.8	37.7	.8	100.0
영남권	(323)	28.0	20.2	51.7	.0	100.0
강원	(36)	23.4	29.0	47.6	.0	100.0
제주	(13)	29.5	7.7	62.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41.2	17.1	41.3	.3	100.0
중도	(588)	24.0	20.3	55.0	.7	100.0
보수적	(338)	29.2	22.1	48.1	.6	100.0

표 51. 정치적 성향

문)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중도	④ 약간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④+⑤	계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 전체	(1213)	2.6	21.1	23.7	48.4	24.0	3.8	27.8	100.0
■ 성별									
남자	(610)	3.1	23.7	26.8	44.6	24.4	4.2	28.6	100.0
여자	(603)	2.1	18.6	20.6	52.3	23.7	3.4	27.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2	25.9	30.2	50.4	16.2	3.2	19.4	100.0
30대	(319)	1.5	26.5	28.0	49.7	20.7	1.6	22.3	100.0
40대	(309)	2.7	18.8	21.5	44.3	28.6	5.6	34.2	100.0
50세이상	(281)	2.0	12.3	14.3	49.4	31.2	5.1	36.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1.5	11.5	13.0	50.7	33.5	2.8	36.3	100.0
고졸	(547)	1.9	16.9	18.8	51.5	24.6	5.0	29.7	100.0
대재이상	(522)	3.7	28.2	31.8	44.6	20.8	2.8	23.6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4.7	15.7	20.4	52.2	23.9	3.5	27.4	100.0
자영업	(214)	3.2	18.3	21.5	45.8	24.1	8.6	32.7	100.0
블루칼라	(245)	2.6	20.1	22.7	51.8	24.0	1.5	25.4	100.0
화이트칼라	(245)	1.6	25.9	27.5	43.3	23.5	5.8	29.2	100.0
전업주부	(299)	1.5	18.7	20.1	50.5	27.3	2.0	29.3	100.0
무직 / 기타	(182)	4.7	24.4	29.1	49.8	19.4	1.8	21.1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2.6	20.2	22.8	51.3	22.3	3.6	25.9	100.0
200~299만원	(400)	1.9	20.7	22.6	48.1	25.2	4.1	29.3	100.0
300~399만원	(339)	2.7	19.6	22.3	50.0	25.8	1.9	27.8	100.0
400만원 이상	(226)	3.5	25.6	29.1	43.0	22.1	5.8	27.9	100.0
모름 / 무응답	(17)	4.5	15.3	19.8	59.0	9.9	11.2	21.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3.4	19.4	22.8	51.2	20.7	5.3	26.0	100.0
충부권	(119)	.0	26.5	26.5	34.0	34.4	5.1	39.4	100.0
호남권	(119)	3.1	24.5	27.6	49.8	17.5	5.0	22.6	100.0
영남권	(323)	1.9	20.6	22.4	48.1	28.9	.5	29.4	100.0
강원	(36)	2.8	26.9	29.7	41.5	27.2	1.5	28.8	100.0
제주	(13)	.0	20.5	20.5	67.9	11.5	.0	1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10.9	89.1	100.0	.0	.0	.0	.0	100.0
중도	(588)	.0	.0	.0	100.0	.0	.0	.0	100.0
보수적	(338)	.0	.0	.0	.0	86.3	13.7	100.0	100.0



표 55. 촛불 시위의 역할에 대한 견해

문) ○○님은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다	매우 반대한다		
		%	%	%	%	%	%	%	%
■ 전체	(1213)	15.7	31.5	47.2	29.0	14.3	9.5	23.8	100.0
■ 성별									
남자	(610)	16.9	30.6	47.6	26.4	13.9	12.1	26.0	100.0
여자	(603)	14.4	32.4	46.8	31.7	14.7	6.8	21.6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8.9	37.6	56.6	26.3	11.2	6.0	17.1	100.0
30대	(319)	18.8	33.2	52.0	29.7	10.8	7.5	18.3	100.0
40대	(309)	16.1	28.8	44.9	29.6	15.9	9.6	25.5	100.0
50세이상	(281)	8.0	26.0	34.0	30.6	20.1	15.4	35.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4)	8.9	25.1	34.0	33.8	17.8	14.4	32.2	100.0
고졸	(547)	13.7	28.9	42.6	32.2	16.4	8.8	25.2	100.0
대재이상	(522)	19.5	36.0	55.6	24.4	11.3	8.8	20.1	100.0
■ 직업별									
농/수/축업	(28)	16.2	56.8	73.0	14.7	8.8	3.5	12.3	100.0
자영업	(214)	11.2	32.3	43.5	30.7	13.8	11.9	25.8	100.0
블루칼라	(245)	20.2	26.7	46.9	27.2	15.4	10.5	25.9	100.0
화이트칼라	(245)	19.3	31.6	50.8	28.8	11.9	8.5	20.4	100.0
전업주부	(299)	12.7	28.4	41.0	33.1	17.1	8.8	25.9	100.0
무직 / 기타	(182)	14.8	38.2	52.9	25.4	13.1	8.6	21.7	100.0
■ 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232)	17.0	33.7	50.7	29.5	13.6	6.1	19.7	100.0
200~299만원	(400)	14.8	30.3	45.1	28.6	14.9	11.4	26.3	100.0
300~399만원	(339)	17.7	32.6	50.3	27.9	12.3	9.5	21.9	100.0
400만원 이상	(226)	12.8	30.2	43.0	31.2	17.7	8.1	25.7	100.0
모름 / 무응답	(17)	15.7	25.0	40.6	25.6	5.3	28.4	33.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3)	13.0	27.0	40.0	31.5	17.7	10.8	28.5	100.0
중부권	(119)	24.6	27.1	51.7	28.1	14.2	6.1	20.2	100.0
호남권	(119)	29.8	48.2	78.0	17.3	2.9	1.9	4.7	100.0
영남권	(323)	11.5	36.9	48.4	26.8	12.9	11.9	24.9	100.0
강원	(36)	19.8	17.7	37.5	49.8	10.4	2.3	12.7	100.0
제주	(13)	23.1	30.8	53.8	26.9	11.5	7.7	1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88)	27.2	37.8	65.0	18.8	10.7	5.5	16.2	100.0
중도	(588)	13.1	30.5	43.6	35.2	12.8	8.4	21.2	100.0
보수적	(338)	10.3	27.9	38.1	27.1	20.1	14.7	34.8	100.0

3. 설문지

A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2008 통일외식조사

A1-5

Gallup 200816077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통일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기관:



소장: 박명규 교수  
전화: 880-4052

2008년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홍승효  
실사연구원 윤지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69

<p>☐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p> <p>☐ 지역크기 : 8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p> <p>☐ 성별 : 9 1. 남자 2. 여자</p>
---

SQ1) ○○님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조사중단
- 2. 없다

SQ2) ○○님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 광고회사나 조사회사에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 1. 있다 → 조사중단
- 2. 없다

SQ3)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13-14 만 \_\_\_\_\_ 세 → 만 19세 이상만 조사 진행하십시오

SQ4) 조사원 다음은 질문하지 말고 SQ3)에 따라 체크하십시오.  
연령대

- 15 1. 만 39세 이하
- 2. 만 40세 이상

SQ 5)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6-17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증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 (적을 것 : \_\_\_\_\_ )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86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87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세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8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10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11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12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13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14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15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16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17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18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20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을 것 : \_\_\_\_\_ )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1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2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반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23	㉠ 반부격차	1	2	3	4	5
24	㉡ 부동신투기	1	2	3	4	5
25	㉢ 실업문제	1	2	3	4	5
26	㉣ 범죄문제	1	2	3	4	5
27	㉤ 지역갈등	1	2	3	4	5
28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29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이념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30
1. 민주주의
  2. 사회주의
  3.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2) (보기카드 4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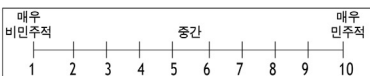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1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3)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32-33



문 14) (보기카드 5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34-35



문 15)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6
1. 매우 신뢰한다
  2. 다소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7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7)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8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8)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9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40	㉠ 선군정치	1	2	3	4
41	㉡ 주체사상	1	2	3	4
42	㉢ 천리마운동	1	2	3	4
43	㉣ 고난의 행군	1	2	3	4
44	㉤ 꽃제비	1	2	3	4
45	㉥ 이리랑 축전	1	2	3	4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46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	1	2
47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1	2
48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1	2
49	㉣ 대북 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1	2

문 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50	㉠ 선거방식	1	2	3	4
51	㉡ 생활수준	1	2	3	4
52	㉢ 법률제도	1	2	3	4
53	㉣ 언어사용	1	2	3	4
54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문 22)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5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3)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6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24)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7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5)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8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6)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9
1. 대폭 늘려야 한다
  2.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 조금 줄여야 한다
  5. 대폭 줄여야 한다

문 27)로 기입시오

문 26-1) (보기카드 11 제시)  
현재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60-61
1.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2.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 대북지원이 경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4.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 기타 (적용 것 : \_\_\_\_\_ )

문 27)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복합의 개혁·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2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8) ○○님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3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9) ○○님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4
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 30) ○○님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5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31)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66 ㉠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7 ㉡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1	2	3	4	5
68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69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문 32) ○○님은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70
1. 북한
  2. 관광객 본인
  3. 현대아산
  4. 적대적 남북관계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3)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71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4) (보기카드 12 제시)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72 ㉠ 동네 이웃	1	2	3	4	5
73 ㉡ 직장 동료	1	2	3	4	5
74 ㉢ 사업 동업자	1	2	3	4	5
7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5)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76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6)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77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78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79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80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7) (보기카드 13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66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8) (보기카드 13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7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9)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8-9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용 것 : \_\_\_\_\_ )

문 40) (보기카드 14 제시)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c10	㉠ 미국	1	2	3	4
11	㉡ 일본	1	2	3	4
12	㉢ 중국	1	2	3	4
13	㉣ 러시아	1	2	3	4

문 41) (보기카드 15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14	㉠ 미국	1	2	3	4
15	㉡ 일본	1	2	3	4
16	㉢ 중국	1	2	3	4
17	㉣ 러시아	1	2	3	4

문 42)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18	㉠ 미국	1	2	3	4
19	㉡ 일본	1	2	3	4
20	㉢ 중국	1	2	3	4
21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2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44)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 미국	1	2	3	4
24	㉡ 일본	1	2	3	4
25	㉢ 중국	1	2	3	4
26	㉣ 러시아	1	2	3	4

문 45)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7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6)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28	㉠ 4·19	1	2	3	4	5
29	㉡ 5·16	1	2	3	4	5
30	㉢ 10월 유신	1	2	3	4	5
31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32	㉤ 6월 항쟁	1	2	3	4	5
33	㉥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1	2	3	4	5
34	㉦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1	2	3	5	5

문 47)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5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5. 잘 모름

문 48) ○○님은 “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발전은 민주화를 희생한 반쪽짜리 경제발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6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49)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37	㉠ 빈부격차	1	2	3	4
38	㉡ 부동산투기	1	2	3	4
39	㉢ 실업문제	1	2	3	4
40	㉣ 범죄문제	1	2	3	4
41	㉤ 지역갈등	1	2	3	4
42	㉥ 이념갈등	1	2	3	4
43	㉦ 반미정서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50)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4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1)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5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2)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6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53)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7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54) ○○님은 다음의 행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가급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반드시 허용 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 되어야 한다	가급적 허용 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 되지 않아야 한다	
48	㉠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1	2	3	4
49	㉡ 형의 시위와 데모	1	2	3	4
50	㉢ 정부에 항의하는 전국 노동자 파업	1	2	3	4

문 55) ○○님은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1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조사원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52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2)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4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3)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56-57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 (적을 것 : \_\_\_\_\_ )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4)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64-65
- |                  |                   |
|------------------|-------------------|
| 1. 월 49만원 이하     | 7. 월 300 - 349만원  |
| 2. 월 50 - 99만원   | 8. 월 350 - 399만원  |
| 3. 월 100 - 149만원 | 9. 월 400 - 499만원  |
| 4. 월 150 - 199만원 | 10. 월 500 - 599만원 |
| 5. 월 200 - 249만원 | 11. 월 600 - 699만원 |
| 6. 월 250 - 299만원 | 12. 월 700만원 이상    |

D 5)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66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6) (보기카드 16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7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D 7)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68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8)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69-70
- |        |          |
|--------|----------|
| 1. 서울  | 10. 충청북도 |
| 2. 부산  | 11. 충청남도 |
| 3. 대구  | 12. 전라북도 |
| 4. 인천  | 13. 전라남도 |
| 5. 광주  | 14. 경상북도 |
| 6. 대전  | 15. 경상남도 |
| 7. 울산  | 16. 제주도  |
| 8. 경기도 | 17. 북한   |
| 9. 강원도 | 18. 외국   |

면접후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 72-74 ) - ( 75-78 ) - ( 79-82 ) 지역번호 83-85 국 86-89 번호 90-93 2. 휴대폰 ( ) - ( ) - ( )		
조사일시	94 월 95-96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97-98		
협조정도	1. 상	2. 중	3. 하 99
응답신뢰도	1. 상	2. 중	3. 하 100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101-105
Supervisor		검 증 원	
106-108			

# 2008 통일외식조사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